

본 논문집은 제13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응모한 논문중 입선한 논문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써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당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大學生統一論文集

1 9 9 4

統 一 院

차 례

최 우수 작

-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여건 조성방안 3
- 민족적·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
권 순 철(연세대 정치외교학과3)

우 수 작

-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47
배 진 우(충남대 행정학과4)
- 통일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79
정 인 경(서울교대 윤리교육과4)

가 작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145
권 해 숙(충남대 생화학과4)
-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179
- 법적근거와 독일사례 중심으로 -
이 창 숙(충북대 정치외교학과3)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233
정 승 래(동국대 행정학과3)
-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277
김 한 조(인하대 정치외교학과4)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323
- 공감대적 가치질서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최 우 식(숭실대 행정학과4)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여건 조성방안

—민족적·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권 순 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3)

《 목 차 》

I. 서 론

II. 평화통일의 조건

III.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조건상의 문제점

IV. 민족적-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V. 결 론

I. 서 론

1. 연구 목적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은 내부의 정치적 변화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냉전 이데올로기의 쇠퇴 그리고 각국의 경제이익 제일주의등 국제적 환경변화는 이데올로기와 정권적 대립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 되었던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주변적인 상황에 힘입어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에의 실질적인 접근을 위한 방법들이 국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통일에 대한 비관적 또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후의 북한 체제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통일시나리오와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접근을 통해 통일 문제의 객관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의 통일논의는 지나치게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통일을 위한 국내적 여건의 조성문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남한의 경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남한 사회가 통일한 국을 위해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는 그동안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외형적인 지표뒤에는 빈부격차의 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비단 경제 뿐만아니라 국민적 성향 또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민족의식 또한 약화되고 있다. 요컨대 양적인 제도적인 사회발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물질적 만족과 함께 정신적인 질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운용상의 문제등

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의 준비를 위해서 남한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활발히 진행중인 민주화 작업의 결실을 확고히 다지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지역, 세대간의 갈등 즉 남한 사회 “내부의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¹⁾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남한 사회 내부의 평화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그 방안으로서 민족과 민주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민족적-민주적 정당성 확보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대내적 해결책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선 그 범위를 통일과 관련지어 남한 사회 전체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는 평화통일을 논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점과 여러가지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떼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대한 범위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료의 부족함을 느끼며 주로 국내외에서 출판되었던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 각종 논문, 국내의 일간신문등의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우선 이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개념의 중요성 보다는 “평화”라는 개념을 더 중요시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이라는 의미를 정해보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필수적인 전제 조건들을 여러 학자들의 기전이 주장을 통해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통일의 4가지 조건은 대내적인 상황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1) 이호재, 『21세기를 향한 한국외교-이호재 외교 평론집Ⅳ-』 (서울: 화평사, 1990), p. 13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조건에 비추어 대내적 조건상의 문제점이 민족적 또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조건 조성 방안으로서 민족적-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연구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고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상세히 기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비록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한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해 국내에서 극복해야 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주제의 맥락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평화통일의 조건

다소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의 형태는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뒤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정권 안보용 통일교육 즉 반공을 통한 통일만이 평화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이라는 의미를 재정리해볼 필요성을 느끼며 간략하게나마 용어상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평화통일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통일관계 서적을 통해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해보고 기존의 평화통일의 조건을 참고로해서 민족과 민주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조건을 특히 국내적 개선상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평화와 평화통일의 개념

우선 평화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평

화”란 폭력을 배제한다. 합리적, 적극적으로는 대립·알력·충돌·투쟁을 협상·타협·조절·調整·調停·수정·절충등을 통하여 조화내지 협화를 이루어 안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대내적으로 국민의 총화단결을 향한 길이요, 남한의 재통합과 배달민족이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조화와 협화의 수단은 대화요, 대화는 대립을 화해시키는 길이라, 대립을 전제하지 않는 충돌과 전쟁은 없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은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 동포가 한데 모여 이 강산을 꽃피워야 할 것이다.²⁾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평화란 단지 전쟁의 결여만을 의미하지 않고 안정과 협력의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말할 때는 여러가지 형태의 통일 형태중 한가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평화통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대화를 통하여 양측이 합의를 이루어 통합된 민족국가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와같은 의미의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³⁾ 그러므로 평화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숙원인 통일이란 결코 낙관적이지마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남한과 북한은 50여년을 서로 다른 체제에서 대치해 왔고 또한 전쟁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상처는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없이 비관적인 자세만을 견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더이상 이런 상이한 두체제가 계속 존재한다면 그만큼 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 한반도의 대외적 또는 대내적 상황은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가지로 엿보이기 시작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평화통일이란 가장 힘든 민족적 과제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참된 의미의 평화통일은 실현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이란 끝보다는 처음이 중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2) 김영희, “평화의 제언” 『평화연구 제3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1978년 4월호), p. 2.

3) 안병준,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p. 561.

다. 특히 처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평화통일의 조건을 어느 정도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그 사회자체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평화통일의 공동의 조건을 얼마나 성숙시키고 있는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객관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해보건데 남한은 대부분의 면에서 북한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쪽은 아무래도 남한쪽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한의 상황도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 김일성 사망후에 전국에 몰아쳤던 조문논쟁⁴⁾은 통일관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건전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매도하는 이기주의가 아직도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 사회에서 평화통일의 준비를 위해서는 내부의 평화문제부터 해결해야하고 이는 민족과 민주라는 두가지 축을 바탕으로 사회가 통합·발전되어야 한다.

2. 평화통일의 조건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

여기에서는 몇몇 학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평화통일의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평화통일의 조건이라함은 다른 용어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데 이를테면 통일의 요건이나 양보할 수 없는 통일의 한계성, 평화통일의 기본적 가치규범, 극복해야할 통일의 저해요인등을 같은 범주로서 취급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우 교수는 통일의 요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일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초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한다. 첫째는 통일에 대한

4) 김일성 사후에 조문사절을 보내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각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심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고 조율할 뚜렷한 수단이나 방법들이 제시되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1994, 7. 16)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민족성원 모두이다. 이 성원 모두가 열망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처음부터 거론될 수 없다. 둘째는 통일한국의 양태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 서로 다른 양태의 통일한국을 설정하고 있는 한 적어도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민족성원내에서의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상주적 대립을 설득을 통하여 극복하든가 계급갈등자체의 해소를 통하여 논란의 근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째로 우리의 통일은 주변강대국에 위협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인용을 얻어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⁵⁾

그리고 김강녕 교수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하고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경제, 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단계적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통일은 평화적·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통일의 의미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민족의 후생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번영 그리고 문화적 성숙과 사회적 일체감을 이룬다는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다.⁶⁾

또한 정용석 교수는 평화통일의 기본적 가치규범으로써 몇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가 조성되어야 할 가치규범으로 민족주의를 제시한다. 둘째로 요구되는 가치규범으로 자유와 평등이다. 셋째로 지적하는 가치규범은 정의이다. 법적 절차와 질서가 확립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며 사회복지가 증대된다면 남북한은 내적 동질성을 그만큼 가깝게 접근시켜간 셈이다. 넷째는 번영이다. 개인이나 기업체 또는 민족이나 국가의 유기체적 목표는 생존과 번영에 있다.⁷⁾

5) 이상우, “하나의 한국을 향한 우리의 길 : 과제의 성격과 정책방향” 『통일한국의 모색-이념, 환경과 정책적 노력』 (서울: 박영사, 1988), p. 10~11.

6) 김강녕,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92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1)-통일환경·남북한 관계 분야-』 (서울: 통일원, 1992), p. 59.

7) 정용석, 『전환기의 통일논쟁』 (서울: 나남, 1989), p. 44.

마지막으로 이상두 교수는 주체적·평화적 통일노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립·경쟁하는 두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조정·조화시키며 접근·수렴·통합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통일의 주도세력 및 통일된 한국민족의 주체세력은 어느 계층이 되어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남북 두 체제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의 모색이라 하겠다. 네번째는 “통일무용론”과 “통일만능론”이 갖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통일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며 또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행복과 평화 및 번영·발전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통일은 민주화나 정치발전·경제건설등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⁸⁾

위에서 몇몇 학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조건을 살펴 보았다. 대체로 이들의 견해는 평화통일의 기본조건으로서 사회전체의 분야에서 통일의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견해 차이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우선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평화통일의 4가지 조건

위에서 언급되었던 평화통일의 조건들을 비판하고 보완해서 민족적-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4가지의 평화통일의 조건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이상우 교수는 통일의 기본조건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부를 지지한다면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의 통일정책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부도덕한 정권을 기반으로 했으므로 통일정책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기도

8) 이상두,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4집』 (서울: 건국대 부설 중국문제 연구소, 1986), p. 41.

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통일정책 입안시 소외감을 느꼈으며 통일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치의 민주화를 외쳤으며 이 과정에서 비록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지만 우리는 고귀한 교훈을 얻었는데 국민적 합의는 오직 민주화된 사회환경에서만 분출이 가능하며 이런 민주화의 바탕은 통일논의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사회를 살펴볼 때 과연 통일한국의 위상에 잘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민주화가 이루어졌는가?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직도 미흡하므로 평화통일의 첫번째 기본조건으로 국민적합의와 연관지어 정치적 민주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우 교수의 경우는 평화통일의 조건으로서 경제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 내부의 경제적 취약점 특히 사회보장 문제가 시급하며 남북한의 현격한 경제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로 상이한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인 경제교류이며,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당장에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남북의 경협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가 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생각할 것은 통일의 비용문제이다. 만약에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만큼 통일의 비용 또한 서서히 민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북경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맞으면 남한의 능력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차관을 제공받는다 하여도 그만큼 통일한국의 경제가 외세에 의존적인 경제로 변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두번째 조건으로 남한에서의 경제적 평등과 남북 단일경제권 실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강녕 교수는 평화통일에 이르는 방안적 조건으로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기능주의적 통일방안과 일맥상통하며 평화정착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것은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나 사회통합의 대내적 여건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한 것은 군사적 신뢰의 문제이다. 평화라는 의미가 무력의 반대라는 의미이듯이 평화통일의 조건을 말

함에 있어서 군사분야에 대한 해결책은 커다란 딜레마로 떠오른다. 왜냐하면 군대의 존재 이유는 -물론 통일 후에도 일정수준의 군대는 존재해야 하겠지만- 분단의 상황으로부터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으며 각종의 전략무기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포진해 있다.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군인들과 무기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우선 각각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므로 한국군의 위상정립이 되어야 하고 그런 바탕위에 신뢰를 구축시킨 다음 군비감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계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사적 대립완화를 세번째 조건으로서 제시하겠다.

또한 정용석 교수와 이상두 교수의 견해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교수들과 일치하므로 특별한 주장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단지 정용석 교수는 통일국가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주로 강조하였고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했으며 이상두 교수는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히 주목할 것은 통일의 주체세력으로서 남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남한에서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중산층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들의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인 증가는 통일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통일주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일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중산층의 역할은 앞에서 말한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의 조건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므로 독립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한 위에서 교수들이 제시한 평화통일의 조건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동질화 문제이다. 물론 동질화라는 의미는 여러 면에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최근에 들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통일비용등 많은 희생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분단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통일무용론”을 경계하고 우리의 전통사상을 근간으로 한 사회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질화된 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평화통일의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평화통일의 기본조건은 민족과 민주라는 두 축이 아직도 남한 사회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이 두 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과 남북 단일경제권 실현, 군사적 대립완화, 민족의 동질화라는 4개의 수레바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III.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조건상의 문제점

1. 정치발전의 미성숙

한국사회에서의 민주화 논쟁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민주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민주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면 한국의 민주화정도는 상대적으로 발전했지만 발전시켜야 할 요소가 아직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지난 날과 같은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숙원인 통일문제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다.⁹⁾ 민주화에는 여러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민주화로 한정해서 설명할 것이며 통일과 관련시켜 아래의 두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논하겠다.

(1)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한국의 민주화 수준이 아직도 저발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경직성에 있다. 근본적으로

9) 노동일, “한국민주화의 과제와 방향” 『평화연구 제15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1990), p. 27.

이데올로기란 국내에서 생성발전된 자생적인 이론이 아니라 국외로부터 수입된 외래사상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논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이로 인해서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초래했고 마침내 좌우익의 갈등은 분단의 고착화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어느 한쪽의 이데올로기만을 고집할 수 밖에 없고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또한 무리가 아니다. 한국내에서는 아직도 레드컴플렉스(Red complex)가 존재하는 데 문제는 개혁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뒷에 걸려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정치발전 측면에서 지금껏 보수일색의 여당과 야당만이 정권을 유지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미 한국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이데올로기는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으나 유독 한국에서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은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에서 이용되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를 들 수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한 남북 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민주화를 착실히 이루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반대로 비민주화의 길을 다져가면서 효율적인 남북대화를 내세웠던 것이다.¹⁰⁾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은 예외없이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체제간의 서로 접합점을 찾지못한 채 이데올로기적 평행선은 오늘날에도 그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상존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지나친 수출주도 산업정책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문민 정부 이후에도 계속해서 터져 나왔으며 기업주를 옹호하는 듯한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고 그 해결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이데올로기적 비난을 항상 의식해야만 했다. 또한 이데올로기체계의 경직화는 노동운동의 사상적·이념적 기반의 존립 근거를 취약하게 하였다. 이러한 편향적 배제논리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적대화는 사회성원 개개

10) 노동일, 앞의 글, p. 36

인의 퍼스넬리티까지 파고 들고 있다. 지배정권이 친정부세력이 아닌 정치·사회세력과 엘리트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제압해도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대중이 된 것이다.¹¹⁾ 전쟁세대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도 이미 사라졌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약 반세기간의 이데올로기적 단절을 어떻게 슬기로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2) 정부주도의 통일논의

분단이후부터 통일논의는 계속해왔다. 그 주체가 정부이건 민간이건 간에, 특히 정부는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통일정책을 국내외에 공표하였으며 그때 그때마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정책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면에서는 실질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정권홍보용으로 통일정책을 남발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통일정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6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교류 우선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그 이후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을 앞지르자 이번엔 우리측에서 기능주의적 통일정책만을 고집하였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통일노력을 창구단일화를 통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주도하는데 따른 문제이다. 남북분단 50년 가까이 분단사회 단극화의 첨단에 서있던 것이 양편의 정부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말할 나위가 없다.¹²⁾ 물론 여기서는 정부주도의 통일정책은 나쁘고 정부이외의 민간 부문의 통일정책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민간사회 단체나 정부를 구별하기 모호하고 한목소리를 내기에 일방적으로 남한에서만

11) 이봉철, “통일정책의 추진과 국민합의”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나남, 1993), p. 71.

12) 이봉철, 『통일과 통일논의-구조와 자율성의 정치 동학』 (서울: 인간사랑, 1993), p. 23~24.

정부와 민간이 분열하면 그들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존의 민간부분의 통일운동 특히 일부재야나 학생운동권의 통일논의는 지극히 감상적이고,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주장과 유사한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의 견해가 아니며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분단정치 현실하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다운 논의는 있을 수 없었고 기껏 국민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적 통일정책만이 존재해 왔다. 혹 통일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제약된 범위에 국한되었고 그나마 정부가 제시한 틀속에서 었다. 그 결과 체제나 정권을 건드리기 쉬운 논의(예로 통일정치, 사회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철저하게 배제된 방법론 즉 현상통합 방법론 중심의 논의일 수 밖에 없었다.¹³⁾ 아 물론 통일논의가 훨씬 더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확고하며 이에 대한 민간부분의 불만 역시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문제 만큼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는 정부나 국민이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

2. 경제적 불평등과 남북 경제의 이질성 심화

현대사회는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이익의 범주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각국은 경제분야에서 사활을 건 발전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에서 낙오되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전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경제논리 앞에는 이데올로기조차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통일과 연관지어 경제의 성공적 발전문제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므로 남북한의 경제통일을 대비하는 일은 남한 경제의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서는 경제적 민주화에 저해되는 남한경제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통일비용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3) 이봉철, “통일정책의 추진과 국민합의” 앞의 글, p. 68~69.

(1) 남한 경제의 취약점

남한 경제는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만큼 발전을 거듭해왔다. 실제로 외형적인 지표상으로도 세계의 경제 강대국 대열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 8천불시대, 세계12위의 무역대국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이런 외형적인 규모뒤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있다. 자원과 자본의 해외 의존도의 심각성등은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치더라도 한국내의 심각한 부의 편재 현상이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노사간의 갈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등은 통일을 대비하는 한국경제의 단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통일과 맞물려서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

〈표 1-1〉 사회보장 급여비의 국제 비교(1인당 소득 4~5천불 내외에서)

(단위 : %)

주요국가	한국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터어키
해당연도	1989	1968	1983	1983	1983
대 GDP 비율	2.6	4.7	16.5	9.0	3.7
1인당 사회보장비(미국 달러)	112	200	887	468	116
1인당 GNP(1985 불변 가격)	4,336	4,224	5,379	5,219	3,153

자료 : 유럽국가는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1978~80 및 OECD, National Accounts 참조하여 산출. 일본은 후생성, 『후생백서』 1982

(권순원, “소득 및 부의 재분배 현황과 분배구조 개선 방안” 『경제운용 과정에 관한 단기 정책 연구』 (서울 : 한국개발원, 1991. 7), p. 850. 재인용)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한국의 사회보장비는 비슷한 수준의 나라의 사회보장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물론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이므로 방위비지출로 인해 상대적인 사회보장비의 감소가 불가피 하지만 통일 이전의 남한 사회의 계층적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 소득 및 부의 분배구조 개선 노력이 미흡할 때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에게도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계획과 실천의 문제가 제기 된다.

(2) 경직된 남북경협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의 전파는 아마도 가장 확실한 첨병의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시장경제 원리보다 더 좋은 체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의 상황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북한도 시장경제 원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양측은 너무나 다른 사회·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경제교류는 정치기류에 제약을 받는다. 셋째, 정보부재에 의한 직접교류의 불가능성 및 소규모 간접교역에 따른 작은 이윤이 경제교류를 제약하고 있다.¹⁴⁾ 여기서 제시한 이유외에 남북한의 경제교류를 가로막는 것은 매우 많으며 국내적인 문제점도 발견된다. 그래서 경제인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일단 정치적 문제만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북한측이 경제를 전면 개방하는 데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한측은 경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남북한의 경제교류 실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① 무역하는 데 있어서 운송비가 적게드는 남북직항로가 절실한 문제이다. ② 우리국적 배의 자유로운 출입의 문제이다. ③ 통신제한 철폐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빠른 정보는 생명일 것이다. ④ 금융제도상의 문제이다. 현재는 송금을 위한 아

14) 연하청, 『동북아 경제환경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12.

무런 법적인 보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무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⑤ 간접교역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전달 문제이다. ⑥ 법적문제로써 북한과 무역분쟁시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남북교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면에서도 단순교역에 편중되어 있는 데다 반입물자도 아연피 등 금속류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에서도 원부재만을 들여보낼 뿐 생산기자재를 제공하는 좀 더 발전된 형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역은 대부분 제3국 특히 홍콩과 중국의 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본다. 위탁가공의 경우 북한에 원부재와 작업지시서를 보내고 완제품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개월. 운송수단도 제3국국적선을 이용한다. 육로를 이용하면 불과 몇시간이면 되는 데도 몇군데 들러 멀리 돌아가는 까닭에 반출물자가 북한에 도착하는 데만 무려 20~30일이 걸린다.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컨테이너 한개를 실어보내는 데 육로의 3~4배인 1천~1천5백달러가 든다. 일단 북한에 원부자재가 들어가면 완제품이 돼서 돌아올 때까지 직접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방법이 거의 없다.¹⁵⁾ 이러한 경직된 남북의 경험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통일을 얼마만큼 빨리 앞당길 수 있느냐의 물음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체제를 단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3) 통일비용 조성계획 부재

독일은 오래전부터 통일준비를 해왔고 또한 경제교류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비용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서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막상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서독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문이 경제부문으로 통일비용을 들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은 한반도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통일비용 마련을

15) 한겨레 신문. 1994. 7. 7.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김영삼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설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¹⁶⁾ 이것은 한반도 통일에서는 경제력 수준이 높은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에도 통일비용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정부내에서는 만약에 통일비용 조성계획을 발표하면 정부가 특정 통일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러한 우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도 통일비용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비용에 국가의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만약에 통일비용과 관련한 일련의 계획들을 과감히 공표한다면 통일비용은 엄청나고 장기적인 계획의 실천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한반도 통일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둘째, 한반도 통일의 경제력이 앞선 남한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북한을 도와야 하며, 셋째, 통일비용은 엄청난 액수에 이르기 때문이다.¹⁷⁾ 통일비용의 규모는 엄청난 액수라고들 한다. 비록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경제가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내의 저명한 연구소에서 발표된 통일비용을 알아봄으로써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해볼 수 있겠고 통일비용조성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16)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조선일보, 1994, 8. 16)

17) 박동운,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북방경제 연구 제5호』 (서울: 한국 북방경제 학회, 1994), p 68.

통일투자액¹⁸⁾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많게는 1조 2천억 달러에서 적게는 8백60억 달러까지 편차가 크다. 통일방식이나 통일투자액에 포함되는 재원의 범위등 가정이 다르면 투자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1세기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통일비용을 4천 4백 80억~1조 2천억 달러로 추정했다. 여기엔 북한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투자과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보조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업의 북한지역 설비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SOC투자를 포함하는 통일투자액은 통일이 극도로 점진적일 경우 8백59억~9백 71억 달러 급진적인 경우 2천3백 42억~2천4백 46억 달러로 각각 추정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배진영 박사는 통일이 될 경우 투자지원액을 4천4백80억 달러~7천 6백 21억 달러로 추정했다.¹⁹⁾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듯이 통일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일은 점진적으로 경제교류부터 시작해서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일비용은 덜 들 것이라는 견해 또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비용 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이 계획을 세우는 일은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3. 군비경쟁의 심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비감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의 당사자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신뢰구축을 이룬 다음 이를 근거로해서 효과적으로 군비를 통제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

18) 한국일보에서는 “통일비용”이라는 말대신에 “통일 투자액”으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재정지원(주로 사회 보장비)과 신규투자를 모두 포함해 통일비용이라고 쓰고 있으나 재정지원도 결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통일비용”보다 “통일 투자액”이 더 정확하고 긍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1994, 6. 10)

19) 한국일보 1994, 6. 10.

므로 우선 한국군의 위상 정립을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1) 한국군의 대미 의존성

효과적인 신뢰구축 속에서 군비감축을 하는 것은 남과 북의 양자가 진행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한국군의 입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몇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선 한국군의 통제문제인 데 효과적으로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군비감축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시 지휘권이 한국군에 있어서 독자적인 군비감축에 책임있게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정보체계의 미비는 독자적 방위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단점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간략히 한국군의 위상을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 간접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휴전 조약은 그 직접적인 당사자가 일방이 UN군 사령관이고 타방 당사자는 북한 인민군 사령관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조인하지 않았고 휴전기구에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1953년 이래 한국과 북한의 군사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UN이란 법적기구를 매개로 해서 북한의 군사력과의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휴전이후 지금까지 한국군에게는 많은 위상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우리군 쪽에서 맡고 그리고 평상시 지휘권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러한 한국군의 위상강화는 군사분야의 남북대화면에서 볼 때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으며 이러한 제문제의 해결은 그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남북한 군비감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남한으로의 지휘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은

20)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이론과 실제』 (서울 : 일신사, 1988), p. 271~272.

한반도의 전쟁억지 수행에 있어서 한·미공동으로 그 어떤 형태이든간에 당분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쟁억지 전략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미국의 공군과 해군 특히 지휘권에 뒤따라야 할 정보체계의 부족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전략적 의존성이 그 특성인 것이다.²¹⁾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당장에 한국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뭏든 확실한 것은 모든 군사분야의 통제권이 한국군에 주어질 때만이 책임있게 군비감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군의 위상정립 문제가 제기된다.

(2) 군사적 상호 불신감 증대

한국은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말까지 군사회담에 대해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북한은 국가의 정책목표상 최우선 순위를 군사력강화에 두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보를 경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의 안보지원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둬으로써 남북한 군사회담은 낮은 정책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우위, 지리적으로 불리한 한국의 여건·검증의 공평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 북한과의 군사회담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한국사회내의 “허위안보감(False of security)의 고취” 이에 따른 대북경각심의 약화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남북 군사회담이 부차적일 수 밖에 없었다. 셋째, 한국전쟁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행위는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불신과 거부감을 축적시켜왔기에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회담에 쉽게 호응할 수 없었다. 넷째, 미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하고 자주국방태세가 완비되지 못했던 한국으로서는 미군 군축을 목적으로하는 북한의 군사회담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²²⁾

21) 이기택, 위의 책, p. 277.

22) 김성훈,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유럽 군비통제 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p. 149~150.

확실히 한국은 국내의 미군의 존재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전쟁역지력을 발휘한 긍정적인 역할에 힘입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그들이 거두려했던 목적을 이루기 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한국민의 안보의식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 1980년대 말에 들어 오면서 국제환경의 변화, 한국의 자주국방역량의 강화, 국내정치발전등의 요인으로 군사회담에 한국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이 발표된 것은 1990년 9월 4~7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였다. 우선 1단계로 쌍방간의 적대감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적 신뢰구축단계” 그리고 전쟁발발을 줄이는 조치로서 2단계로 “군사적 신뢰구축” 마지막으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군비를 감축하는 3단계로 “군비감축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²³⁾ 그러나 이러한 군사회담의 진전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정지된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군비감축에서 어려운 문제는 상대방의 신뢰를 담보받을 수 있는 군사적 검증상의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력한 검증을 요구할수록 군비통제조약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또한 남북한의 군비통제협상을 위한 검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남북대화의 타분야에서의 진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군사회담의 진전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나 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됨에 틀림없고 군축은 많은 국방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한가지 해결로 두가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군축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민족의 이질화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고려, 조선을 거쳐

23)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1992), p. 148.

우리의 문화는 세계문명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극동의 작은 나라이지만 한 민족의 동질감은 유별했다. 그러나 분단의 약 반세기 동안의 결과는 몇천년 동안 기록해놓은 한민족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가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각 부분에서 이질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의 재통일작업을 해야한다.

(1) 민족의식의 쇠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단일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경우의 단일 민족국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민족이 살면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쌓아온 전통의 힘은 한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동시에 너무나 동질의식이 강했으므로 외국에 대해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금으로 해서 발전이 뒤진 역사적인 경험도 있다.

그런데 남북의 분단은 이러한 손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상태로 분단의 상태가 몇 십년만 더 지속된다면 2민족 2국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지 지배와 교묘한 분리·동화정책하에서도 맥퀸(G.M. Mc Qune)의 말처럼 한국민족의 “애국심의 저수지”는 고갈되지 않았고 동포애 또한 메마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이민족의 총독정치하에서도 지켰던 민족의 동질성이 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계기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역사적 아이러니와 민족적 비극이 있다 하겠다.²⁴⁾ 이러한 민족의식의 쇠퇴는 한국민의 통일관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는데 한국전쟁이후 이른바 “전쟁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산가족의 연령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

24) 이상두, “남북 이질화의 해결책” 『월간 조선』 (서울: 조선 일보사, 1985, 4), p. 296.

므로 민족의식도 쇠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민족의식 쇠퇴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북한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사상교육으로 말미암아 왜곡의 정도가 크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남한의 경우가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급격한 경제발전의 추구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가 우리 몸에 익숙해졌으며 이 합리주의는 우리에게 조곰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존재는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둘째는 더욱더 좁아지는 세계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이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계보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다. 셋째로 최근의 매스컴이나 통신의 전파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러한 남한 사회의 서구화 추세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실리적인 통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국민중에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 완전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수는 적다.²⁵⁾ 이렇게 볼 때 민족의식의 회복은 정신적인 민족 통일을 위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이질감 확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질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한과 북한의 부도덕한 정권의 정권 유지수단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적대적인 문화를 형성시켰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질감의 확산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데 남북한 사회는 분단 반세기 동안 지속된 단절에서 오는 교류의 부재로 상호학습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양측이 모두 자기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문화개조 운동”을 의식적으로 행하여 왔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상당한 문화적 이질감을 보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만일 문화 이질화가 동일 문화로의 복원이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면 통

25) 이상우, 『함께하는 통일』 (서울:나남, 1993), p. 170.

일을 위한 가장 험난한 과제로 문화 동질화 노력을 꼽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통일은 처음부터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²⁶⁾

그리고 남북의 이질화는 기존의 남북한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공통분모를 차례차례 사라지게 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 이질화는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 사회구조와 경제제도, 문화예술 분야와 주민생활실태, 종교, 윤리, 도덕, 세시풍속 나아가 언어 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심화되고 있는 편이다.²⁷⁾

최근에 발표된 남북 이질화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그 정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남북간 이질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연관된 언어, 전통관습, 식생활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동질적이라는 견해와 이질적이라는 견해가 대체로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49.0% : 50.5%, 48.7% : 50.9%, 45.4% : 53.7%) 그러나 교육내용이나 문학예술과 정치와 연관된 부분과 여가 생활에 있어서는 이질적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94.7%, 83.4%, 94.2%)²⁸⁾ 위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문제는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교류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6) 양호민외저,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 한림과학원 총서, 1992), p. 252~253.

27) 이상두,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에 관한 고찰” 앞의 글, p. 37.

28) 민족통일 연구원, 『1993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3. 7), p. 38.

IV. 민족적-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위에서 지적한 제문제들은 민족을 경시하고 아직도 민주화가 남한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앞서 남한 내부의 평화문제에 해결이 매우 시급한 데 이는 민족적-민주적 정당성의 기초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평화통일의 4가지 조건을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1. 정치적 민주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와 더불어 발전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통일과 관련지어 이데올로기의 개방화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통일정책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 이데올로기의 개방화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이 매우 깊어 있는 만큼 이데올로기를 개방하는 데도 또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고 남북한 모두 서로 국가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엄연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형법에서는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남한에서부터 이데올로기를 체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개방의 시작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온건 혁신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진보·혁신 세력이 헌정 구조내에 수용되면 체제를 상대로 제기되는 국민들의 요구를 보다 신축성있게 수렴할 수 있고 국민적 합의의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체제의 정통성 또한 강화되며 정부안정

과 제도화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²⁹⁾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은 이미 좌경급진세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통일후의 정치세계가 모든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하나의 시험대로서 경험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의 몰락, 냉전구조의 붕괴, 탈이데올로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결구조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과감한 희생과 발상의 전환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다양성과 함께 북한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내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서 체제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정치체제의 자신감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³⁰⁾

이러한 사상의 전환은 통일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데올로기의 개방화를 위해서 몇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 한다면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충실히 따르면서 우리상황 여건에 맞는 민주주의를 창조해야 한다. 둘째, 제한된 민주주의나 관주도의 정치적 안정보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정치적 안정과 단결을 유지하며 성장발전을 지속시켜야 한다. 셋째, 극단적인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정치이데올로기는 비정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민적 합의

한국에서 민주화가 어렵게 진행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민주화요구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없는 통일논의는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곧 국민적 합의는 민주화된 사회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일반국민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통일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노력

29) 김호진,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민주화 전망” 『한국정치의 민주화 통일방안』 (서울: 한국정치학회편, 을유문화사, 1990), p. 122.

30) 김상태, “통독이 남긴 교훈과 우리의 통일 과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 91자유논단 논문집』 (서울: 한국자유총연맹, 1991), p. 41.

의 정부단일 창구화는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만일 통일 실현의 현실적 방안으로서 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원화가 불가피하다면 창구 단일화는 그러한 방안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통일노력 창구를 다원화하고 정부는 이들 사이를 중개·조정하는 역할과 이들 노력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³¹⁾

그렇다고 해서 통일정책 입안시 그리고 남북회담시 민간대표단을 파견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영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정부의 기본입장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분열적인 통일논의 또한 경계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제기되는 통일논의에 대해서 아래로부터의 견해를 수렴해서 종합분석하여 현재 분열되고 있는 통일논의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찾아서 거국적이며 진실로 초당적인 정책을 정의하는 일이 요망되고 있다. 이처럼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광범위한 토론과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³²⁾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논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대북접촉에 앞서서 재야단체나 야당의원들과 접촉·대화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둘째, 민간인들의 대북 접촉과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북한등 공산국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홍보·교육해야 한다. 넷째, 정치불안은 정치체제 대립과 정치지도자들의 정권에 대한 야심에서 비롯되므로 정치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남한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2. 경제적 평등과 남북 단일경제권 실현

우선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31) 이봉철, “통일정책의 추진과 국민합의” 앞의 글, p. 76.

32) 안병준, “통일정책의 기초와 관계”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통일방안』 (서울: 한국정치학회 편, 을유문화사, 1990), p. 222.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제부문의 남북협력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은 당장의 이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민족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통일은 남북한 주민모두에게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전에라도 남한 사회만이라도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노사갈등과 계층간의 갈등을 개선하고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준비해야겠다.

우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진행 현황

연도	복지제도	보사부 예산(a)	보사부 예산(b)
1986	a) 최저 임금법 b) 국민 연금법	2.90%	—
1987	위의 a)b)의 시행령 시행규칙의료 보험법 개정	3.27%	3.7%
1988		3.88%	4.5%
1989	산재 보험법 개정	4.21%	5.2%
1990	장애인 고용촉진법	5.02%	6.6%
1992	노동은행 설립	4.66%	7.6%
1993	고용보험법(?)		

자료) 1) 보사부 예산 (a)=(보사부 예산/정부 전체 예산), 보사부 내부 자료

2) 보사부 (b)=(사회보장 예산/정부 일반 회계 예산), 보사부(1992)

*사회보장 예산=국민 연금, 의료보호 및 보험, 산재보험, 보훈 복지, 근로복지, 생활 보호, 복지 서비스등을 위한 예산

(김태경·성경룡 공저 『복지 국가론』(서울:나남, 1992), p. 319. 재인용)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 정도가 비록 미미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국가들에 비교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통일 이전 남한 내부의 사회적 갈등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³³⁾ 그러므로 한국의 경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2) 단계적 남북경협 실현

기존의 남북경협은 주변의 다른 남북간의 정치나 군사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정치문제의 해결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비록 음성적으로나마 해마다 조금씩 교역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교류는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활한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점진적 단계별 접근 방식을 택하여 쌍방의 수용이 용이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교역은 대외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국내교역으로 부문별 접근에서 출발하여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의 거래가 WTO(GATT)의 원칙인 상호주의 즉 국가간의 무역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으므로 동·서독이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받아야 한다.

33) 연하청,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통일 문제 연구 제4호』 (서울: 통일원, 1992, 여름), p. 104.

셋째,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재까지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간접교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남북한의 직·간접교역은 물론 각종 사업면에서 협력 및 합작투자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는 외채문제이므로 우리정부가 차관보증을 함으로써 북한을 도와야 한다. 여섯째,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제도화해서 기업들의 경험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남북경협의 안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데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들은 무역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우편이나 통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 해야하고 무역마찰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러한 제반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도 크나큰 이익이 되는 동시에 통일의 길은 그만큼 빨리 올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에 남북경협시 방북과 육로수송이 가능해지면 시간과 비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기업들의 채산성에도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을 어차피 통일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은 정부와 각 기업이 협력하고 항상 통일국가의 경제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통일비용 마련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통일비용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자체가 독일통일 이후에 우리앞에 갑자기 부각되어 온 사항인 만큼 적어도 통일논의에서 만큼은 가장 최근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 또한 미약한 편이다. 비록 뒤늦게 통일비용 문제를 연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패할 경우 통일한국의 장래는

오히려 통일전의 상태보다 궁핍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통일비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통일에 필요한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징세, 국공채발행, 외채도입 그리고 통화발행이다.³⁴⁾ 이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조세(가칭 통일세)를 통해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개개인의 경제적 합리주의는 이미 민족을 위해 개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통화발행은 쉬운 방법이기도 하나 물가불안등 안정적 경제를 위해서는 위험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국공채발행과 차관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비용의 마련방안을 제시해본다면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³⁵⁾ 이 법에 의하면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을 확대 발전시키면 통일비용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두번째는 국내에서의 방법으로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충당하기엔 부족함으로 국외적인 방법으로 차관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들여와야 하는 데 어느 한 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경제중속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제경제협력기구(예를 들자면 ADB, UNDP, IBRD, IMF등)가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들여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차관 도입은 그동안의 남한 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신용을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중심으로 통일비용 마련 계획을 세운다

34) 박동운, 앞의 책, p. 72.

35)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에의 출연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출연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아직 남북교역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정부출연금 위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통일문답』 (서울: 통일연수원, 1994), p. 67.

면 통일비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군사적 대립완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군의 위상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고 군비통제와 감축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1) 한국군의 위상 정립

한국군은 그동안 착실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의 현대화에 노력해왔고 남북의 군사력면에서도 결코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한 국가의 방위는 그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역설적으로 군축회담에도 나설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자신감있는 군축회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지휘권 이양문제가 중요한데 지휘권 이양은 한국측으로 볼 때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는 군사력 사용이라는 오랫동안 빼앗겼던 국가의 기본적인 고유의 군사력 사용권을 도로 찾는다는 말이 되며 이는 사실상 한국의 국가결정체계가 새로이 형성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지휘권이 이양된다는 말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특히 과거에 갖지 않았던 북한 군사력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³⁶⁾

현재로서는 전시 지휘권 이양문제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북 군축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담의 내용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항상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는 그동안 미군의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남북한 군축과 함께 점진적 철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북측에서도 미군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36) 이기택, 앞의 책, p. 275.

않을 것이다. 아 물론 현재로서는 한·미간에 협력을 바탕으로 전시지휘권 이양과 함께 뒤따라야 하는 고도의 정보체계를 한국군이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남북 군축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북한이 군사문제 해결에 있어 줄곧 주장하고 있는 워싱턴측과의 직접대화를 서울측과의 대화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남한의 핵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군기지의 사찰을 남한만이라도 과감하게 사찰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둘째, 전시지휘권을 비롯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북한도 우리의 자주성을 인정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한반도 이외의 방위비 분담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해야 한다.

(2) 군비통제와 감축방안

북한측의 자세가 어떻든 우리로서는 기습을 방지하고 단기간의 전쟁준비만으로는 대규모 공세작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며 남북한 간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군비통제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한국군의 위상정립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조치들을 내놓는다면 북한의 심한 경제사정에 비추어 북한도 북한주민의 궁핍을 외면한 채 군비증강에만 몰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군축문제는 잘 알려진 신뢰구축조치들과 함께 양측 대규모 부대 이동과 훈련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사력 감축을 통해 불균형을 제거하고 군사력 규모를 방어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체면을 살려주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제안에 동의한다.

국제평화안보연구소 최영소장은 남북한 군축시 한국이 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첫째로 남북한 기본조약 또는 평화조약 체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일관되

게 주장해온 대미평화협정을 대체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공격형 무기의 점진적 감축제안이다. 이것은 공격형 무기의 제거라는 마지막 수단 전의 단계로서 단계적 감축을 제시한다. 셋째는 남북한 군사요원의 현지 사찰이다. 한반도에서의 검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라는 논리로서 남과 북한이 상호인정하는 군사요원이 현지사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³⁷⁾ 이러한 위의 견해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신뢰를 바탕으로 군비감축까지 가는 것은 매우 험난한 과정이나 한국가의 군통제권과 외교권은 그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만큼 통일국가의 통합군을 지향하는 자세로 군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4. 민족의 동질화

한민족이 다시 문화적 중흥을 이룰 수 있는나의 문제는 민족의 통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평화통일의 기본조건과 더불어 민족의 동질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개방적 민족주의

지금의 세계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전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을 지향한다. 그래서 흔히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확실히 한국도 최근 들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화 경쟁에서 낙오되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을 무시한 채 고립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남북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한국의 정신적 주춧돌은 무엇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

37) 최영, “군축협상이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 『새로운 정치문화·국민의식과 민족 통일방안』 (서울: 국제문화연구소, 동진문화사, 1991), p. 96~98.

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것에 대한 해답은 민족주의³⁸⁾라고 말할 수 있는 데 비록 약 반세기 동안의 분단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몸에 배어 있는 민족적 동일성(Identity)은 이보다 더한 역사적 사건도 극복했으므로 반드시 민족의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족주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데 그것은 세계평화에 항상 기여한 민족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제화시대에도 모순되지 않고 국제화시대를 따르면서 통일한국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방적 민족주의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남북한의 통합이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첫째, 5천년의 동질적 역사를 창조한 역사의 민족이며 단일민족이라는 점이다. 둘째, 1천 200년간의 통일된 국가라는 정치적 경험을 하였다. 셋째, 공동언어를 사용하여온 단일 문화민족이다. 넷째, 동일한 생활양식을 누려왔던 민족이다. 끝으로 지리적으로 분단되 있지 않은 단일한 반도로 되어 있는 영토이다.³⁹⁾ 그러므로 이런 민족적 기반을 중심으로 세계사의 조류에 과감히 개방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겠다.

즉 한국민족주의는 세계 경제체제와 세계 국가체제 안에 한민족의 자립과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민족주의는 세계 체제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⁴⁰⁾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남한에서의 민족의식의 재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데 남한 사회

38)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국제적 요인으로서 민족자결을 뜻하며 국내적 요인으로서는 참정권과 소득분배의 적정화를 뜻하는 것이다. 냉전의 유산인 열광적,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당파적 이익을 민족이익에 종속시켜야 하고, 민족주의로서 민족내부의 모순, 갈등을 해소시키는 길 밖에 없다. 7·4남북공동 성명에서 사상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원칙과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세춘추, 1981, 5. 24)

39) 허만, “‘통합민족주의’ 이념으로 통일 구현”, 『월간 세계와 나』 (서울: 세계일보사, 1993, p. 196.

40) 박종철, “민족주의 개념 및 한국민족주의 특성”,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3), p. 46~47.

를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논리가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 틀내에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용해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서 한국사회의 내부역량을 신장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2) 민족의 동질성 회복

앞에서 살펴본 민족주의와 함께 민족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는 수단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한 사회의 생활관습과 생활양식의 동일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미 각 사회의 이질화 정책으로 인해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비록 같은 문화를 기반으로 생활했을 지라도 남북한은 전혀 왕래가 없었으며 서로의 사회·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TV나 라디오같은 방송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문화부분의 교류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서로가 적응의 과정을 가져야 하겠다.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 사회간의 문화접촉을 확대시켜야 한다. 남북 공동 예술제라든가, 남북영화제, 남북음악제등 기존에 이미 실시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접촉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제3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비록 공동대표단을 보내지는 못할 지라도 각각의 참석을 통해 우의를 다져야 한다. 셋째, 문화중에서 언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 언어의 재통일을 위해 남북한 국어사전 공동편찬등 언어의 통일에 진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남아있는 남북한의 전통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재확인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위의 방안들을 실천해간다면 남북은 그동안의 이질화를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신이 허용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문화통합은 강력히 추진화 될 것이다. 오늘날의 발달된 영상매체의 문화동질화 위력을 감안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주민의 문화동질화도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⁴¹⁾ 이러한

41) 이상우, 『함께하는 통일』 앞의 책, p. '78.

사회·문화분야의 이질성의 극복은 제2의 문화 재통일이 될 것이다.

V. 결 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숙고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남한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되어야 할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방안으로써 민족적-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통일이라는 목표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간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그만큼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이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통일노력 상황을 배제한 채 남한 사회의 내부적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들어낸 점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남한 사회는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만큼 안정된 사회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한 국민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비교적 많은 부문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북한에 자신있게 내놓을 체제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에서 제기한 민족적-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그 실천사항으로 평화통일의 4가지 조건을 남한 사회 내부에서 준비하고 성숙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는 모든 정치세력에 제한없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민주적 결정이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는 경제구조의 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있는 데 이는 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므로 경제정책을 분배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으로 남한 내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셋째는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 군사정책을 수정하고 포괄적인 평화군축안을 제

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군축체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축적된 적대감이나 불신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교류와 접촉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남한 사회 내부에서의 시들어가는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차원 높은 통일교육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면 통일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기 안에 반드시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이 모든 통일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한민족의 제2의 중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세계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서)

1) 논문

- 권순원, “소득 및 부의 재분배현상과 분배구조 개선 방안”, 『경제운용 과정에 관한 단기정책 연구』 (서울 : 한국개발원, 1991. 7)
- 김강녕, “통일 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92북한, 통일연구 논문집(1)-통일환경·남북한 관계 분야』 (서울 : 통일원, 1992)
- 김상태, “통독이 남긴 교훈과 우리의 통일 과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 91 자유논단 논문집』 (서울 : 한국자유총연맹, 1991)
- 김영희, “평화의 제언”, 『평화연구 제3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1978. 4)
- 김호진,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민주화 전망”, 『한국정치의 민주화 통일방안』 (서울 : 한국정치학회편, 을유문화사, 1990)
- 노동일, “한국민주화의 과제와 방향”, 『평화연구 제15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1990)
- 박동운,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북한 경제연구 제5호, 1994』 (서울 : 한국 북방경제 학회, 1994)
- 박종철, “민족주의 개념 및 한국민족주의 특성”,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서울 : 민족 통일 연구원, 1993, 4. 8)
- 안병준,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 나남, 1992)
- 안병준, “통일정책의 기조와 관계”,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통일방안』 (서울 : 한국정치학회편, 을유문화사, 1990)
- 이봉철, “통일정책의 추진과 국민합의”,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 나남, 1993)
- 이상두,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 연구 제4집』 (서울 : 건국대부설 중국문제 연구소, 1986)

- 이상두, “남북 이질화의 해결책”, 『월간 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85, 4)
- 이상우, “하나의 한국을 향한 우리의 길: 과제와 성격과 정책방향”, 『통일한국의 이념모색-이념·환경과 정책적 노력』 (서울: 박영사, 1988)
- 최영, “군축협상의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 『새로운 정치문화 국민의식과 민족 통일방안』 (서울: 국제문화연구소, 동진문화사, 1991)
- 허만, “‘통합민족주의’이념으로 통일 구현”, 『월간 세계와 나』 (서울: 세계일보사, 1993, 5)

2) 단행본

- 김태경, 성경룡 공저,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2)
- 김성훈,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유럽 군비통제 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김용욱,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상권)』 (서울: 도서출판 통나무, 1994)
- 양호민외저, 『남과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 한림과학원 총서, 1992)
- 연하청, 『동북아 경제환경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이론과 실제』 (서울: 일신사, 1988)
- 이봉철, 『통일과 통일논의-구조와 자율성의 정치 동학』 (서울: 인간사랑, 1993)
- 이상우, 『함께하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 이호재, 『21세기를 향한 한국외교-이호재 외교 평론집 IV』 (서울: 화평사, 1990)
- 정용석, 『전환기의 통일논쟁』 (서울: 나남, 1989)
- 정용석, 『분단극 통일과 남북통일』 (서울: 도서출판 다나, 1992)
-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4)
-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서울: 통일연수원, 1994)
-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2)

3) 국내의 주요일간 신문 및 주간 신문

동아일보 (1994, 7. 16)

조선일보 (1994, 8. 16)

한겨레 신문 (1994, 7. 7)

한국일보 (1994, 6. 10)

연세춘추 (1981, 5. 24)

(외국서)

EIU, Korea's Coming Reunification : Another East Asian Super Power? (London :
EIU, 1992)

Michael, H., Korean Reunification : Alternative Pathways (New York, Praeger, 1989)

Young, Whan, Khi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 Regimes in Contest (Col-
orado, Westview press, 1984)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

배진우
(충남대 행정학과 4)

《 목 차 》

- I. 머리말
- II.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이념
- III. 통일 조국의 달성방안
- IV. 맺음말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남·북한이 분단된 지 반 세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한반도의 분단은 이미 현상으로 굳어졌으며, 통일의 노력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라 할지라도 현상을 타파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그러한 장애요인은 기본적으로 현상을 타파함으로써 생기는 안정과 평화의 파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4강대국의 현존질서를 깨뜨릴 수 있으며, 또 국내적으로는 통일이 남·북한의 현존 제도와 사회구조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기득권층에 위기감을 준다는 것이다.¹⁾

세계적인 탈냉전의 구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좀처럼 냉전구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90년대 들어 남북한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물인 '남북합의서'의 합리적 핵심들조차도 빈 종이쪽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회고해보면 남북한의 두체제가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면서 통일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이 미래의 전망 자체를 봉쇄할수는 없다. 하물며 통일문제가 단순히 대의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층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구체적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분단체제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정신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분단체제는 정치적으로 남북한에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동원체제가 제도화되게 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안보비용은 경제성장에 여전히 부담으로

1) 채 상병,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정책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년 2월.

작용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산업구조들간의 단절은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이산가족 문제등을 포함한 가족과 핏줄의 분단은 한민족의 정신구조에 존재하는 슬픔과 한의 거대한 발원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분단으로 인한 이러한 값비싼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을 앞당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김영삼정부는 구시대 정권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폭넓은 통일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새 정부의 문민적 정통성과 시민사회의 성장, 남한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대북경제우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 등으로 부터 확고하게 보장받고 있다. 통일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앞당겨야 할 지상목표일 뿐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현실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국의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논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통일논의가 통일과정과 방법에만 치우친 나머지 도외시 해온 통일이후의 모습을 그려보는데에도 비중을 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일의 목표와 방법이 구분되지 않는 통일논의는 논리상 모순이며, 결국 공허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라는 통일의 방법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전에, “한반도에 어떠한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 라는 통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왜냐하면, 목표에 따라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²⁾

또한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은 통일이 성취된 다음의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설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념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글을 전개해본다. 다음으로는 통일국가의 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2) 김 명, “통일한국의 미래상”, 최경환외 4인공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농업구조와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텔 재단, 1992), p.284.

통일국가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상에 대한 논의는 이념적 차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여러 상황과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인간 삶의 양식과 연결시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써 다원공동체를 설정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현실적 방안으로써 여러 주장을 검토해 본 후에 앞으로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Ⅱ.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이념

1. 이데올로기의 속성

이데올로기란 용어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드 트라시(Destutt De Tracy)에 의해 등장된 이래,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든 부정적으로 사용되든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이데올로기적 존재의 성격을 띠는 것은 인간 삶의 양식의 사회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이다.³⁾ 이데올로기를 이념과 때로는 같은 의미로 때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가치규범의 체계를 넓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었을 때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협의의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라 부른다.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인간과 세계의 상황에 대한 표상과 앞날에 대한 이상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실천방안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사회현실과 인간미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마련이고,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영합하고자 한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한계중의 하나로써,

3) 방 영준,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이념”, 『민족문화논총』 제4권 제6호, 민족문화추진회, 1993.

앞날에 대한 전망도 그것이 도식화되면 미래의 개방성을 배제하게 되고 반대로 도식화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통찰이 흐리게 되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이 환상일 수 있게 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2. 남북한 통일이념에 대한 그릇된 개념의 수정

남북한의 통일을 남한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의 통일로 표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의 정치이념은 민주주의이고 경제이념은 자본주의인데 반하여, 북한의 정치이념은 역시 민주주의이고 경제이념은 재산을 공유하자는 사상으로써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이 아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인 것이다.

위와 같이 그릇된 개념이 생기게 된 원인을 돌아보면, 6·25를 기점으로 하여 생긴 이데올로기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의 긴박성이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사태판단의 기준과 척도로 삼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비판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흑백논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현실 자체를 동일시하는 문화의 오류에 빠져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이 팽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우나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남북한이 제대로 실천도 못하면서 내걸은 정치적 명분의 성격이 강했기에 용어의 논쟁에 더욱 혼란과 공허감을 가중시켰다 하겠다. 이제 이러한 이분법적 용어에서 빠져나와야 만이 한국의 이념적 좌표 설정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 통일국가의 미래상 : 다원공동체

이데올로기의 여러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상과 이를 설

4) 채 상병, 위의 논문.

계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상을 그려보는 것은 통일 한국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나침반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써 다원공동체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인가. 이를 위해서는 다원공동체를 그려보고 정의하는 것 보다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써 이 용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다원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빠른 길이 될 것이다.⁵⁾

첫째,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시대로 불리우는 사회에서의 인간 삶의 양식과의 관련성에서 다원공동체를 생각해 본다. 지금 밀려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물결속에서 인간 삶의 양식에 대한 논의는 A. Toffler나 J. Naisbitt 등 일군의 미래학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양자택일의 사회에서 다원선택사회로, 위계사회에서 네트워크 수평사회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이행등을 들고 있다.

즉 이익사회적 능률성을 살리되 여기에 공동체적인 정서를 투입시켜서 공동사회적 유대를 근거로 하는 사회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작업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적 사회가 개방성을 띠면서 그 영역을 보다 넓은 사회속에 위치시키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체로서의 다원공동체이다.

민주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의하든 경험적으로 정의하든간에 민주주의가 표상하는 주도적 이념물인 자유, 평등, 권리, 자연관 등은 근대서구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유전통의 산물이다. 이에 갈등하고 해체되기 쉬운 무관계의 개체·개인주의적인 사유틀을 연결시킬 수 있는 끈으로써 민족주의를 제시한다. 민족주의의 음양을 이야기하기전에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인 정서는 매우 큰 것으로 단일민족으로서 분단된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다원공동체와 우리의 전통사상의 연계에 대한 가능성의 고려이다.

한국사상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천지인의 합일성, 전체와 개체를 조화시키는 원용

5) 방 영준, 위의 논문

회통사상과 중도사상, 이기이원론적 일원론, 공동체의식 등과의 연계가능성이다.

넷째,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틀에 관한 논의이다.

시민사회는 문화적 유대에 따라 조직되는 공동체와 경제적 교환에 따라 조직되는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틀지어 지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회질서의 조직유형이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택은 항상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국가 또는 양자의 불완전한 결합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시장과 국가외에 다른 대안적인 사회질서는 없는가 하는 논의가 제기된다.

결사체 모델에 기초한 신조합주의와 협의주의는 오늘날 여러 선진산업국가들의 경험에서 안정적 민주주의 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제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결사체 모델은 다원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이데올로기적 흡수 통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흡수 통일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더라도 이념적으로는 새로운 좌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은 유럽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투쟁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조화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 통일이념의 정립방향

여기서는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원 공동체’를 어떤 이념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대한 기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⁶⁾

6) 방영준, 위의 논문.

(1) 서구 인간주의 속의 당파성·계급성 극복

서구의 인간주의가 지니고 있는 당파성, 계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 사상의 원류로 평가되고 있는 상생, 중도, 조화등의 윤리적 가치를 통일이념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서구적 관념에서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가치 개념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결이 가능하다. 자유와 평등은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대립적 의미로 부각되었는 바, 자유는 개인적 성격의 것이고 평등은 사회적 성격이라 한다면 자유와 평등은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사회는 스스로의 완성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함께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단일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민족주의

공동체는 조그마한 단위에서 보다 큰 단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태적인 집합개념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큰 단위를 기초로 한다. 여기에 민족주의의 문제점이 야기되며, 오히려 민족주의가 다원공동체를 붕괴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가장 호소력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민족주의를 냉엄하게 진단하고 한국 민족주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다원’이라는 접두어의 의미가 제기된다. 개개 민족구성원의 자유와 자율의 구현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공동체, 즉 ‘다원공동체’이다. 또한 우리 민족주의가 옛부터 지녀온 홍익인간 등 인간주의적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통일국가의 민족주의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재 국제사회의 한 조류를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⁷⁾ 국제화라는 원심력적 작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단위의 위력의 복권이다. 독일통일이나 소련의 해체, 유고내전(다민족주의 신화의 붕괴), 영국에서의 분리독립 움직임 등이 보여주듯이 현대세계에서는 국제화과

7) 황병덕, ‘통일 조국의 이념’. 『통일한국』 94년 5월

정속에서 민족단위로의 재편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화추세 속에서 역설적이지만 민족단위의 '생활력'이 급격히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화는 개별 민족국가들에게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지키는 문제를 또 다른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자체가 민족국가 부활 경향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민족단위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국제주의는 파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열린 민족주의'는 기존의 국제주의만을 고수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태동중인 신국제주의 형성에 일조를 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는 한편, 한국적 특수성을 보편주의로 승화시키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3)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칼과 같아서 어머니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고,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 이데올로기라는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이데올로기를 민주주의라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정치상의 원칙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론에서는 이러한 방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목적상의 원칙에 강조를 둬으로써 결국 독재정치를 민주주의와 혼동케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찌즘과 파시즘의 민주주의론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란 정치의 유효성을 본질적 기준으로 삼는 정치 형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정치에는 효율성에 있어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한 국민 공통의 이익이나 행복의 실현이 혹시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합친 가정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정치적 자기결정이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치는 어디까지나 국민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다.

(4) 복지의 실현

복지와 다원공동체간의 논의가 있어야겠다.

정치제도와 경제체제는 직접적으로는 서로 무관하고, 그 사이에 본질적인 또는 필연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제도의 차이는 사회질서를 정하고(입법), 그것을 적용하는(행정)절차나 방법의 차이인 반면, 경제체제의 차이는 그 사회질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일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만 가능하다든지, 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만 가능하다든지 하는 논리는 부당하다 하겠다. 이는 정치와 경제와의 관련에 있어 경제에 우위를 두고 있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데, 어느 경제체제가 풍요롭고 공정성있는 경제체제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실험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의 모색은 직접, 간접적으로 공동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발적 연대성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냐의 문제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해외의존적인 소규모 경제를 갖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개발, 발전되고 있는 신조합주의 복지체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상기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통일이념의 정립방향은 민족적 복지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복지 민족주의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통일국가의 달성방안

1. 통일정책형성을 위한 기본 전제⁸⁾

(1) 장기적 목표와 구체적 현실의 동시 고려

다원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 실천방안은 반드시 현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대결과 경쟁의식이 내재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통일의 상을 그린다면 이는 다분히 감상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현재 각기 다른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체제 등을 다른 조건속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이질적 역사 경로는 우리가 독일통일과정에서도 보듯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령론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체제에 살았던 북한주민들의 사고체계를 고려할 때 물질적 통합의 과제만큼이나 정신적 통합의 과제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구체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고려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적 제약과 선택가능한 행위간의 고려

통일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을 고려할 때 국제정치적 구조나 북한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일의 유리한 국제정치적 배경의 조성이나 동독인들이 장벽을 넘어 몰밀듯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8) 김 연철, “구체적이고 전망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통일한국』 1994년 3월.

는 급속한 통일의 후유증이 아무리 심대하다고 해도 통일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구조적 제약조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통일한국에 이르는 길은 무수한 주요 결정상황들이 주어지며, 이 과정에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이 통일의 방향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하면서도 각각의 단기적이고 시급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선택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통일이후의 관점 고려

통일이후에도 그 통일국가가 얼마나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분배의 불평등 혹은 불평등의 분배구조에 있어서의 심화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오히려 베트남의 경우에 있어서 통일된 후에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전쟁상태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일 후에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을 이룩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한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접근 해야 하고, 무력의 우월성 보다는 정권이나 사회 자체가 건강하고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2. 통합이론 :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적용의 필요성

독일의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독일인들은 통일이 어렵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실천이 가능한 동·서독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⁹⁾

9) 정 용길, “독일통일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과 한계”, 『민족지성』 1990년 8월호, P.46.

이러한 공존관계를 취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공존을 강요당하는 일면이 있었고, 또 다른 이유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통일에 연연하기 보다는 분단으로 인한 통일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보려는 독일인 특유의 이성과 실리추구정신이 작용한 결과였다. 통일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통합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이란 일반적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¹⁰⁾

이러한 통합의 개념은 통일의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데, 통합이란 용어는 무력이나 폭력과 같은 강압적 수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통일은 그 방법이나 수단의 선택이 임의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통합이론은 크게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연방주의적 통합이론과 커뮤니케이션 및 거래이론이 포함된다.¹¹⁾

우리 한국은 그 동안 이러한 통합이론을 바탕으로한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도입해서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호교류를 다각도로 모색 실시해 왔다.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한 부분의 교류와 기능적 통합은 확산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분야의 교류와 기능적 통합을 유도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체통합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그 예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공동체로 발전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능주의 이론이 허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이라는 확산효과(SPILL-OVER)는 정치적 타결이 따르지 않을 경우 역류효과(SPILL-BACK)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신기능주의는 확산효과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정치적 문제의 의식적인 해결을 통한 확산효과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신기능주의 이론에서 강조한 것은 경제교류가 정치적 통합까지 이르게 되면 확산효과 만으로는 안 되며,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결노력,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0) 최 중기, 『현대국제관계론』 박영사, 1983, P.110.

11) 구 영록, “통합이론에 관한 연구 : 통합의 유형과 갈등”, pp.5~6.

3. 통일형태에 대한 분석

통일조국의 기본적 삶의 양식은 남북한의 통일시기와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통일방식은 ①북한체제의 남한체제로의 편입 ②남한체제의 북한체제로의 편입 ③협상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④점진적 통일국가 형성 등으로 구분된다.¹²⁾

이 중에서 ①②번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과 북한의 자체붕괴에 의한 남한체제로의 결과적 흡수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은 곧 민족적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적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이 전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의 조성을 정책적으로 배제해 나가는 방안이 덧붙여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독일식 통일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통일을 이룩했지만 통독이후 다양한 후유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급격한 통일방식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흡수통일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한당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의 상실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미래상을 그린다면 현재 독일통일이후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의 논의 방법은 양 제도들의 수렴적 통합이 아니라 남한의 제도들이 어떻게 북한의 현실을 포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통일방식 중에서도 ④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남북한 통일과정 및 이후 시기에서의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진화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경제통합, 사회통합 및 정치통합을 통한 파급효과 과정을 중시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¹³⁾ 이는 통일의 당위성

12) 이 상우,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 통일시나리오 ; 2000년 경제통합, 2010년 정치통합, 2020년 통일공화국 수립”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18~38.

13) 정 용길, “독일의 통일환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1, pp. 18~38.

에만 집착한 나머지 통일이후의 갈등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있는 독일의 상황에서 그 실증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막약 우리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형태를 상정한다면 각각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통일한국의 완성된 형태까지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동서독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

독일의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조약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그 통일조약에 명시한대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였다.¹⁴⁾ 그러나, 통일의 대동독 흡수통합정책은 동·서독사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안정화를 이루는데 있어 동독인들의 금전적 요구충족 요청으로 정치·경제·사회통합에서 통일의 후유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증가되는 통일비용으로 인한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압박과 투자의 한계성 그리고 서독 민간으로부터의 거액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과도한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서독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은 독일통일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¹⁵⁾

또한 동독지역의 구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서독인 소수와 규합하여 자기들이 소외되고 권익을 찾지 못한다고 하여 이념적 계 3당을 창립하여 정치세력을 동서독으로 분열시키려는 것은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다.¹⁶⁾

따라서 비록 우리와 똑같은 상황하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4)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분단국 통일문제', 국토 통일원, 1990, pp.6~47.

15) 황 병직, "통일독일이후의 사회경제적 문제들", 『한국사회과학회보』 제2권, 한국사회과학회, 1992.

16) 김 택환, "독일통일후 정치경제사회 통합의 애로가 한국통일에 줄 교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논총』 제9집 제1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대학원, 1993, pp.115~116.

5. 남북한의 통일정책

(1) 남한의 통일정책

한국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통정부이고, 북한은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불법집단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정권의 존재가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점차 그 존재를 인정하고 협상을 통하여 일단 공존을 제도화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적 통일의 기초를 닦는다는 데 중점을 두는 현실적 정책으로 발전해왔다.

(2)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체제의 최고규범인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통일관과 통일노선이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¹⁷⁾

따라서, 북한의 통일노력은 “전반반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불변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정책추진의 능력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차례 전술변화를 겪어왔다.

즉, 북한정권의 통일정책은 처음에는 ‘남북연방제’였다가 ‘고려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제’로 변천된 것이다.

6. 북한의 인식에 대한 제고¹⁸⁾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 통일을 논의하는

17) 이 홍구 외 공저,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9, p.172.

18) 유 영욱,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통일한국』 1993년 11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어느 일방이 아닌 양쪽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 있지만, 통일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하는 쪽이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야말로 감상적인 통일지상론을 극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듯이, 북한 역시 오랜 세월동안 남한의 적대적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바른 진단과 대책이 나올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무엇이 실상이며 무엇이 허상인지 북한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상징들의 작용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특히 일반국민의 대북인식은 정부의 대북태도와 상징조작에 따라 크게 변천되어 왔다. 북한이나 공산권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의 대북인식과 통일의식은 정부의 대 국민홍보 및 교육정책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혈통과 언어 및 역사를 공유한 한민족의 일원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정치이념적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우리와 대립된 이념과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공산주의 집단인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상과 현실속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항상 이중적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우리민족의 지상과제라고 할때, 북한을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존공영해 나갈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불변의 대북관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통일정책은 ‘냉전적 통일관’을 토대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북한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냉전적 현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때 냉전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정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을 지나치게 냉전적 내지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감상적 내지 진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다. 북한이 과거와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초시대적·초현실적 낙관론을 펴는 것은 금물이다.

한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가까와 오는 현 시점에서 통일이 민족 최대과제임에 틀림없지만, 성급한 마음으로 감상적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할 수는 없다. 통일을 위한 길은 북한을 감정적 내지 감상적으로 인식하기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이면서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라는 이중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일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구시대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정통성을 갖지 못했던 구정권의 통일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 정권의 통일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중요한 몇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⁹⁾

(1) 제안경쟁적 통일정책

구시대의 잘못된 통일정책 중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면서 제시하는 ‘제안경쟁적 통일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수없이 남북간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제의들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를 통해 내부의 정치

19) 이종석, “새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통일 한국』 1993년 11월.

적 위기상황을 호도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를 무시한 이러한 제안경쟁은 결국 통일정책을 빙자한 반통일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태우 전대통령의 7·20특별선언이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제안 경쟁은 국민에게 통일환상을 심어놓은 뒤, 결과의 무책임 속에서 국민에게 오히려 통일에 대한 절망감과 통일회의론만 남겨 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제안경쟁은 남북간의 불신감을 상승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경쟁은 국민기만이자 민족기만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새정부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성과를 못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한편 제안경쟁은 아니지만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의 구체적인 실천결여 역시 구시대 통일정책의 중요한 폐단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내용에 대한 실천결여의 모습은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합의서에 대한 미온적인 실행에서 잘 보여졌다.

(2) 실천보다 언어의 유희에 치중

구시대의 통일정책은 대부분 실천보다는 언어의 유희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언어의 유희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적 통일방안’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고려민주연방제안에 국가연합적 요소를 가미시키고 남한이 체제연합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연방제-국가연합이라는 고답적인 이론의 틀에 묶여서 이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풀기보다는 그 차별성만을 강조하는 언어의 유희에 빠졌다.

(3) 정권안보 수단화로의 악용

통일 문제의 정권안보 수단화를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민적 정통성을 상실한 역대 정권은 자신의 정권안정화 수단으로 통일문제를 악용하였고 이로 인해

서 '통일정책의 반통일지향'이라는 역설적인 현상까지 낳았다.

(4) 국민배제

국민배제로 일과한 통일 정책이 전개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구시대의 통일 정책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국민을 그 주체로 상정하고 국민의 통일열기를 통일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을 거부, 국민을 통일문제의 계도대상으로 설정하고 몇몇 엘리트의 자의적인 밀실접촉과 즉흥정책이 주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국민배제의 통일정책은 국민적 지지기반의 결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국제역량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율적인 폭을 넓히려는 노력보다는 애초부터 대미종속적 상황에 자족하고 사대적 자세로 일관하도록 만들었다.

8. 통일 정책의 방향과 과제

새 정부는 통일을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3단계·3기조」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적실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덧붙여 보완해야할 사항과 남북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새로운 통일 방안의 모색 필요

민족성원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6공시절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남한의 통일 방안은 지나치게 능동주의적 통합원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 방안은 너무 관계적인 측면에 치우친 탈변증법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방제방안의 경우 주권의 일원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족적 구

심력이 강한 우리민족의 특성으로 볼 때, 그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세인 체제(북한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의도하지 않은 흡수통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가 흡수통일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전쟁위험성, 통일비용, 사회혼란 등)을 피하면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일 1단계로서의 국가연합방안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연합 후에는 최종적인 체제통합을 위해서 연방제라는 완충기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한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연합 ⇒ 연방 ⇒ 완성된 통일국가(체제통합)의 수순을 밟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²⁰⁾

(2) 남북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남북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군비의 민족경제 부흥으로의 전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 군비의 즉각적인 현상동결을 제안하고(군비축소는 어려워도 현상동결은 명분상 어느쪽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로부터 남는 재원을 남북한 통합을 위한 민족경제 부흥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비전을 갖는 남북한 호혜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의 모색도 필요하다.

(3) 남북교류에 민간단체에 많은 권한 부여

사회·문화·스포츠등 남북교류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북한이 획일사회라고 해서 우리정부도 정부제일주의나 창구단일화만을 요구할 때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개인과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에 기초해서 정부가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통일정책의 수행에 활동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의 활동을 통해서 성

20) 이종석, 위의 논문.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상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정부는 정책적 수준에서 당국자간 남북교류와 접촉을 수행하고 민간통일운동은 저변에서 남북교류를 통한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와 통일기반 마련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쟁억지력 유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붕기 그리고 도발적인 행위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북한이 '남반부 해방'이라는 환상을 하루 빨리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북한이 우리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한 무력에 의한 해방의 꿈을 버리기가 어렵다. 북한에게 이런 미련을 버리게 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남한에서 친북한혁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총련의 주사파 지도부는 종전보다 한층더 노골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의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위기상황과 더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체제가 버젓이 우리 사회안에서 지하투쟁, 반합법투쟁, 합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정부차원에서의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²¹⁾

(5) 북한 핵문제

북한 핵문제는 지금 남북대화 더 나아가서 통일을 가로막는 현안중의 최대 현안 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²²⁾ 첫째, 한국은 북한·미국 그리고 IAEA에 같은 수준의 핵저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이 삼각관계에서 한국이 소외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팀스피리트 훈련중지·한국내 핵기지 공개·상호사찰 수용 등 직접 일괄교섭을 연구

21) 조선일보, 1994년 6월 1일.

22) 민병용, '남북한 현안문제, 어떤것부터 풀어야 하는가', 『통일한국』 1993년 11월.

할 수도 있다. 한국도 비핵화에 서명했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IAEA·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방안보다 대화와 설득카드로써 북한에 있는 두 곳의 핵폐기장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도록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한국이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유보해서는 안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문제가 제기되는 동안에도 경제협력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좋다.

둘째, 한국 스스로 고유의 장단기 핵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단기계획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시하는 국제사찰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핵통제위원회의 회담등 대화창구를 항상 열어놓는 것이 좋다. 마지막 해결은 남북한이 직접하는 것이 좋다. 중기계획으로는 한국 스스로가 핵처리 시설을 보유하는 소위 핵무기 생산이 아닌 핵주권론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계획으로는 북한에 경수로지원 등 남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통일후에는 결국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통일이 이룩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북측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남북간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남북투자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과감한 투자나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바로 북한내 온건파의 입지를 높여주는 성과를 얻게 된다. 지금 북한도 핵문제 때문에 강경파가 기선을 잡고 있다. 실용주의자 및 개혁파의 입지를 살려 길을 더욱 열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북한 투자에의 정경분리 원칙

북한투자에는 정경분리원칙이 크게 고려 되었으면 한다. 원칙론(핵무기개발 반대)과 현실론(북한투자 및 교역)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의 접목으로 이상적인 민족경제권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여러번 강조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북측의 집권층과 일반대중에 대하여 우리는 이 두 집단을 혼동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측의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김일성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유경쟁 시장경제”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나은 것인지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경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²³⁾ 종래 정부의 입장은 북측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해온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하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킨다고 하여 북한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측의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어 놓는 결과가 되어 북의 집권층과 피지배계층을 하나로 단결시켜 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 국제관계

한반도의 분단의 과정과 지속이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고 주변강국들의 뜻과 이익에 맞추어 벌어진 파워게임에 기인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제2차대전 후의 국제정치를 지배해온 동서대립이란 냉전구조에 말려들어 대리전쟁의 동족상잔까지 겪어야 했음은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매듭을 짓지 못하고 국제연합과 참전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진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혹은 현실적인 사항만 보아도 한반도 통일의 달성은 주변국의 이해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무시하고는 논의도 추진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시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달성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임을 한시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주변국의 역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

23) 김민하, ‘통일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합의 기반 조성방안’, 『통일한국』 1993년 7월.

될 수 있으며, 이 원칙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과 조건의 조성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²⁴⁾

이를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의 입장과 관련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이 북한의 국제화와 민주화임을 생각할 때, 미국과 북한의 국가관계의 수립과 여러 방면의 교류를 한반도의 남북대화촉진과 병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주변국 중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일본은 한·소 관계의 급진전을 견제하고 북한을 원조하여 남북을 이간시키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의 번영이 이웃 일본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계속 남북한을 견제하고, 한편으로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경우 즉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을 바랄 수 있다면 냉전구조가 무너진 오늘, 분단과 지배의 논리에서 어부지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즉 북한과의 국가관계를 수립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국제화와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고 평화공존의 확립과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치중하면서도 북한과의 동맹관계는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막고,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조심스레 지켜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통일은 민족의 자주, 자조적인 노력으로 추진하고 달성할 과제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역할도 민족내부의 노력, 즉 남북한의 의사와 태도에 따라서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기도 할 수 있다.

주변 각국이 극동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자기국가 이익에 비추어서 대 한반도 정

24) 김동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통일한국』 1993년 11월.

책을 취하고 있다는 기본인식 아래 남북한 당국도 무엇이 우리민족의 항구적인 이익이며, 어떠한 통일이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통일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익의 견지는 단순히 정부수준의 대외관계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통일논의에 대한 전국민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부족한 강대국간의 관계능력을 국민적 열망과 동력에 의해서 보완받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는 통일 대외관계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이나 반외세 시위 등을 대외관계에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합치면 수백만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과 이 주변 각국의 역할을 생각할 때 수많은 해외국민 혹은 해외동포의 존재가 그 나라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며, 주변국의 역할과 동시에 주변국에 거주하는 민족의 역할도 아끼고 활용하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8) 이산가족문제

분단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산가족이다. 생사확인조차 못한채 오늘도 한많은 삶을 마감하는 월남가족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산가족의 상봉)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문제는 바로 이산가족간의 서신교환 생사확인 고향방문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이산가족이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가족의 생사확인을 하는 행위를 초법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한다. 핏줄을 찾으려는 순수한 그 충정이 냉전시대의 사고로서 벽안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 재상봉을 위해서 다른 어떤 조건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이산가족의 비극은 위정자의 초법적인 결단으로서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산가족에게는 민족통일의 기여자, 화해자 그리고 북한을 위한 개방자라는 책임이 따름도 분명하다.

(9) 정보교류문제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정보의 교류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교류채널로서는 TV, 라디오 등을 들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보교류로 인한 효과로서는 남북한간의 동질성회복, 남북한간의 분단의 구조적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IV. 맺 음 말

오늘날 북한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것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에 직면하여 폐쇄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딜레마이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과 위기의식이 NPT탈퇴선언과 사생결단의 무력대결 불사태도로까지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평화통일을 표방하면서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는데,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낙관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변화는 크게 체제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범위·속도·방향 등을 변수로 한다. 북한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불변을 토대로 하면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강화 및 김정일 후계체제로의 구축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제반정책도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이라는 전략적 기본틀 속에서 전술적 방법의 변화만을 보여 왔다. 북한은 아직도 남북대화를 화해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대남정치투쟁의 한 방식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대결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폐쇄체제로서 실패한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의 낡은 외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화제외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동시가입과 같이 큰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듯이 국제환경과 국내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의 체제내적 모순이 더욱 누적되어 개혁주의자의 공공연한 개혁의지가 표출되는 한편,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김일성이 사망하는 경우 구체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가능한한 빨리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한국창조의 궁극적 지향점인 통일된 조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내외 해외에 있는 우리민족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서)

1) 논문

- 김택환, “통일 독일후 정치·경제·사회통합의 애로가 한국통일에 줄 교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9집 제1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 방영준,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이념”, 『민족문화 논총』 제4권 제6호, 민족문화추진회, 1993.
- 정용길, “독일의 통일환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1.
- 황병직, “통일 독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문제들”, 『한국사회과학회보』 제2권, 한국사회과학회, 1992.
- 정용길, “독일통일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과 한계”, 『민족지성』, 1990년 8월.
- 최경환 외 4인 공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농업구조와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1992.
- 채상병,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정책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년 2월.

2) 단행본

- 이흥구 외 공저,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9.
- 최종기, 『현대국제 관계론』, 박영사, 1983.
- 국토통일원 통일 연구원, 『분단국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1990.
- 대통령 자문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민족통일 연구원, 1993.

3) 기타

김민하, '통일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기반조성방안', 『통일한국』, 1993년 7월.

이종석, '새정부의 통일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통일한국』, 1993년 11월.

유영옥,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통일한국』, 1993년 11월.

김동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통일한국』, 1993년 11월.

민병용, '남북한 현안문제,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하는가', 『통일한국』, 1993년 11월.

한완상, '새정부의 통일정책과 우리의 과제', 『통일한국』, 1994년 1월.

김연철, '구체적이고 전망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통일한국』, 1994년 3월.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한국』, 1994년 5월.

조선일보, 1994년 6월 1일.

통일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 인 경
(서울교대 윤리교육과4)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통일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 IV. 김일성사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 V.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를 전후하여 지구촌은 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들 변화중에 특기할 것은 기존의 동서 냉전구조를 이루고 있던 미국과 소련 및 주변 동구국가들이 붕괴되고 그 여파로 동서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 독일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제 세계는 무엇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경제의 힘을 중시하고 국익우선의 원칙을 국제교류에 적용하며 블록화 현상이 대두되는 혼란과 질서의 교차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으며, 국내에서는 민주화 및 통일의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특히 6·25남침의 주인공인 북한 김일성의 사망은 핵문제로 걱정하는 세계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예상치 못한 이 사망은 앞으로 국내 및 국제관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 그의 사망은 우리에게 안도와 불안과 기대를 함께 안겨준 엄청난 거 큰 사건이었으며 통일의 여러 장애물 중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김일성은 6·25남침전쟁을 도발, 수백만의 동족을 희생시킨 장본인이고 북한 땅에 장기세습독재 체제를 구축, 49년간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과 철권통치를 하는 한편, 대남폭력 적화통일을 추진해온 사람이다. 그는 또 최근에는 핵무기개발의혹을 통해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국제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사망은 분단 한반도의 북한땅에서 일단 대남폭력혁명 및 인권탄압과 세습독재체제의 으뜸가는 상징과 원천의 소멸로 볼 수 있다.

그의 사망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은 긴장과 불안속에서 불화유지와 국익우선이라는 사고로 북한과의 외교를 진행중이다. 이 나라들은 북한의 안정을 바탕으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이러한 여건을 살피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은 그 분단의 역사적 유구성과 북한 집단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어 기존의 통일 형태와는 다른 특수

성을 지닌 것으로 단순한 정치, 경제적인 제도나 구조의 통합만이 아니라 가치관 생활양식의 통합까지도 대비하여 외형적으로만 이루어진 체제통합이 아닌, 남북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로 어울어져 자유와 평등, 평화와 복지의 조화속에서 고도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체제융합의 진정한 통일을 의미한다.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형성된 이질문화를 극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통합과정에서와 통합이후의 체제내적인 갈등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그 중요한 수단이 교육이다. 민족의 동질성과 체제융합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인간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수행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촌 사회변화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이 시기에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4대강국의 변화추세와 함께 모색함은 불안과 혼란속에 서있는 국민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의의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지시키는 바탕으로, 교사들에겐 현재 세계의 변화를 인지시켜 지도에 있어 일관성있는 신념을 지니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요약하여 그 연구목적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역사적 전개과정을 시대적 요인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통일교육의 바탕이 되는 통일상황을 체제내-외적으로 살펴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전제 및 교육이념과 목표, 내용을 현 교육법 및 교육과정을 통해 정리해본다.

넷째, 현 통일교육인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측면에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몇가지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과거 통일교육의 전개과정과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한다. 특히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김일성사망이 가져

을 국제정세를 살핌으로 혼란에 있는 교육의 방향을 재가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러한 목적의 본 논문은 통일을 다룬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입장에서 서술할 것이며, 조급하고 급진적인 제안보다는 기존의 교육방향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첨가될 부분이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방법에 의해

2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론적 배경

3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4장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5장에서는, 결론의 순으로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7천만민족의 숙원이며 절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회복은 통일의 당위성을 위한 우선과제이며, 교육은 대량사회인 현대에 있어 사회화의 중요한 기관임으로 동질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선택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선택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통일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함이 옳다. 또한 통일교육의 전개가 통일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됨을 인정하고 본 논문은 김일성사후에 한반도변화를 살펴 통일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방향을 찾음을 주요범위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통일의 개념과 성격

한반도의 분단은 2차 대전 이후 미소간의 냉전이 한반도에 투영되어 긴장이 고

조되고, 동족간의 유혈전쟁으로 정착되었다¹⁾.

즉, 한반도의 분단은 단지 강대국들의 합의에 의해 분할되는 국제형 분단요소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분쟁이 분단을 더욱 고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쟁형 분단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²⁾.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통일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이후 지구상에는 11개 지역에서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분단국가(Divided Nation)와 분열국가(Partitioned Nation)의 두 형태로 분류되었다. 분단국가는 법이론상 분단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원천국가(Gesamt Staat)가 대표권을 두고 경쟁하며, 제3국으로부터 원천국가의 단독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두개의 부분국가로 분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반면 분열국가는 과거의 원천국가는 이미 소멸되고 두개의 부분국가가 각각 분리 독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국가들 중에서 통일문제가 제기된 나라는 한국, 독일, 중국 등이다.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등의 여러 국가들은 분열국가(Partitioned Nation)의 상황이므로 통일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³⁾

통일의 의미는 이러한 분단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정치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개념이 규정되기도 한다. 각 측면에 관련하여 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분단은 ‘단일생활권 지역의 국민이 분할된 것’, 즉 국토 분할을 의미하며, 통일은 ‘분단전의 국토생활권영역으로 단일화(통합)되는 것’, 즉 국토통일을 의미한다.⁴⁾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단은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던 곳에 복수의 통치권이 존재하게 된 것’, 즉 국권분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단일정권에 의한 한반도통치, 즉 단일정부화를 의미한다.

1) 이용필, 『남북한 통합론』 (서울 : 인간사랑, 1992), pp.31-32

2) 김학준, “분단사의 재조명”, 이흥구,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 : 박영사, 1984), pp.25-31.

3)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서울 : 회성출판사, 1989), pp.21-22

4) 민병철, 『신통일론』 (서울 : 고려원, 1992), pp.11-14.

세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분단은 다른 체제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생활과 의식상의 분열에 의한 사회문화의 이질화, 즉 민족분열을 의미하며, 통일은 생활양식과 의식의 동질화, 즉 민족화합을 의미한다.

이 중 특히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통일은 과거의 군주제등 비민주적인 통일이나 식민지 문화의 제도로서의 동질화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권으로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의 원류를 근거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적 동질화를 의미한다. 결국 통일이란 국토분할과 국권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문화적 요소까지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되는 국토통일, 국권통일, 국민통합과 더불어 가치, 의식의 융합을 달성, 새로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까지도 융화가 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까지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의 진정한 통일은 체제통합을 넘어 체제융합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제융합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방안이 남한과 북한이 달랐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정치통합 우선론을 주장해왔고, 한국은 민족통일 우선론을 주장해 왔다. 즉, 북한의 논리는 먼저 남-북한에 걸쳐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정부의 지도 아래 경제통합, 문화통합, 그리고 생활공간의 통합을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은 상이한 이념을 신봉하는 남-북한간의 정치통합 자체를 불가능하다 여기며 정치적 통합에 앞서서 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 '하나의 민족'이 되면 언제라도 정치통합은 가능한데,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민족의 분열이 더 심화되어 결국 분단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본다면 민족은 영원한 것이고 정치는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 한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에 주력해야 하며, 정치통합은 무리없이 이룰 수 있을 때까지는 미루어도 좋다는 것이 한국측의 생각이다⁵⁾.

그런데 이런 남·북한 정부당국의 인식차이는 '기본 합의서'채택이후, 실천속에서

도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민족의 자유로운 삶을 민족공동체속에서의 이룸’이라 할때, 이는 평화적인 방법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고 만민 평등의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체제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함께 사는 통일”, “공존의 통일”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통일은 과거에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의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미래지향적이며, 함께 사는 공존적 성격을 지니는 통일이며, 이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연속적인 창조작업인 것이다.

2. 통일교육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우리가 말하는 통일교육이란 분단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은 통일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 의식, 태도, 행위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⁵⁾ 이렇게 ‘통일’이라는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접근 관점에 따라, 통일의 의미에 따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통일교육은 광복 이후 정부에서 시행해온 북한 및 공산주의와 관련해서는 방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등이 그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정신교육이라는 명칭하에서 대북한 및 대공산주의의 교육이 그 일부로서 전개되기도

5) 양호민외, 『통일문제이해』 (서울 : 나남, 1993), pp. 20-21

6) 박용현, “정치교육의 성격과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 『정치교육』, (서울 : 형설출판사, 1984), pp.18-19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관련개념을 사용치 않고, 그 개념이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모든 이념이나 북한의 현실에 대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그들이 통일에 대하여 진지한 합리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되(통일의 측면), 우리의 체제, 생존, 그리고 통일의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도록(안보측면)교육하는 것임을 뜻한다.⁷⁾

통일교육이란 통일대비 및 통일이후의 교육을 통합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남북분단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찾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즉, 통일국가를 대비하고 완성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 능력배양, 행위규범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하게 하는 학교 및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⁸⁾.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 분석을 정리해보면, 통일교육이란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기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런 통일교육은 여타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목표, 내용, 방법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는 교육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그 자체만이 가지는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7) 통일원, “통일교육 지도자료”, 1990년, p.30.

8) 배종억,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방향 탐색”,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992, 봄호, pp.197-205.

9) 윤진영, 『남북한교유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서울: 서울대학출판부), pp400-403.

첫째,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 통일은 모든 국민이 포함되고 영향을 받는 민족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종합학문적인 속성이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어느 한 분야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모든 학문이 관련되며, 통일교육 자체도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연구는 정치학이나 교육학의 어느 한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등이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연구되는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은 적용학문적 속성이 있다. 통일교육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예로 국제정치에서의 종합이론을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적용시켜야 하며,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정책이론과 통일의 당위적 논리를 조화시키는 적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시공간적 제한을 받는 속성이 있다. 통일교육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민족내부의 특수한 경우를 가르치는 것이다.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을때 통일교육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상황적이고 과정적인 속성이 있다.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만들어진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적인 것이다.

여섯째,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속성이 있다. 통일은 장차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우리가 달성해야 할 미래적인 것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세계속의 한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곱째, 통일교육은 정치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순수 학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국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문제는 이념과 관념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에 바탕을 두고 주도적인 세력에 의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기능

1) 개인 능력 배양 기능

우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능력 배양, 체제 역량 강화, 통일문화 창조, 체제융합등의 기능을 해야 한다.

먼저 개인능력 배양 기능은 통일교육이 달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남북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의 이해와 장래가 관련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 정권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¹⁰⁾.

장차 남북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과 기능주의적인 통합의 단계가 구체화되면, 중요한 통일정책이나 국가의 미래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결국 투표를 통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자란 남북한이 통합되면서 나타날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도 국민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통일비용도 국민의 협동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민주적 시민 의식기능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통일에 관해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¹¹⁾.

2) 체제 역량 강화 기능

남북한의 통일은 그 당위성이나 이상적인 원칙의 제시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통일은 40여년 동안 이질적인 체제의 대립과 경쟁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체제가 성취한 바에 충분한 자신감을 지니고

10) 통일원,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1992, p.14.

11) 상계서, p.58.

있는 정권이 수립되지 않고는 통일논의가 진지해 질 수 없다¹²⁾.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통일비용등 각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제의 가동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체제 역량이 무엇인가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체제역량이란 체제가 체제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체제 자체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요시에는 체제를 확장하거나 변환을 할 수 있는 체제 환원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체제 자체적인 지지 산출 극대화과 환류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³⁾.

이러한 체제역량은 파슨즈의 AGIL모델에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잠재적 유형유지기능을 하는 하위체계들이 내적 균형과 상호 보완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체제의 역량은 통합능력, 규제능력, 상징능력, 안보능력, 분배능력, 유출능력, 혁신능력, 관용능력, 반응능력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⁴⁾.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체제간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체제 역량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기능주의적 통합 방식으로 체제간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서 다른 체제의 요소보다 능력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통합이 진행되어 분기점을 넘게 되면서 나타나는 통합 과정의 통일비용 해결을 위해서 체제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3) 통일문화 창조 기능

통일교육이 추구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는 자본주의문화와 공산주의문화로 대립되어 있다¹⁵⁾. 현재 남북한

12) 하용출, 『남북한 분단상황 극복방안 연구』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p221.

13) David Easter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University of Chicago, 1979). 이용필역, 정치구조분석(서울 : 인간사랑, 1991), pp.119-125.

14)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1990, pp. 50-52.

15) 고역복, “남북한 이질문화의 극복을 위하여”, 『민족지성』, 1983년 4월호. p.225

은 지난 40여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이루어 놓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분단문화’의 소산이 깔려있다. 이러한 분단상태의 문화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통일문화’는 남북통일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다¹⁶⁾. 여기에서 통일문화란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일지향적인 가치관 및 그러한 의식과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또한 문화란 것이 문화 일반에 대한 하위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와 같은 상관개념을 뜻하고 그러므로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가치지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통일문화란 통일지향적 가치정향이라 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통일문화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습득해야 될 지식, 신념, 도덕, 법, 습관 등 무형의 모든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¹⁸⁾.

4) 체제 융합기능

우리가 남북통일 문제를 거론할 때 그 이론적 근거로 체제융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으나, 체제융합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독일의 통일문제를 거론하면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의 이질화된 사고방식 및 언어, 생활양식, 문화, 교육 등 상호 동질성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¹⁹⁾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신의 통합이 없이는 물질적 통합의 실현은 실현시키기도 어려우며, 인위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성취하였다해도 정신적 원심력의 작용때문에 참다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재분단의 길로

16) 김경웅, 『북한의 문학-예술』(서울 : 통일연수원, 19920, p.8

17) 한국국민윤리학회, “개방화시대의 국민윤리교육”, 1988. 5. 28. 세미나 자료, p.23

18) 상계논문, pp.33-36.

19) 교육정책자문회의, ‘민족동질성회복 교육대책’, 1991. 10. p.2.

나갈 수 있다”²⁰⁾.

“통일이후 독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진통은 체제변혁에 따른 개개인의 인간변혁을 이루는 문제이다. 동서독인들이 동일한 생활관, 가치관을 가진 민족으로 융합할 때까지는 2세대가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²¹⁾

“동독 청소년들의 인생목표는 서독 청소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결국 동독 청소년들이 통일독일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가능성은 그들이 과연 얼마만에 그들의 목표를 실현한 후 대등한 독일인이라고 느끼게 될런지 여부에 달려 있다”²²⁾. 이러한 융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녹아서 하나로 합침, 융모충 아래의 원생통작에서 두 개체가 합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현상, 둘 이상의 자극물이 섞여서 합성된 지각이 생기는 일”²³⁾”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개체가 하나로 되면서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말하는 체제융합의 의미는 남북한이 통합이 되어서도 갈등이나 이질감에 의한 사회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분단상태에서 보다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체제나 구조의 통합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까지도 이질감을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형성하여 더욱 살기좋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체제융합의 문제가 통일교육에서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남북한의 인적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각종 사회문화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상호 화해와 협력이 증진되어 남북통합의 단계가 성숙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될 문제이다.

통일후의 독일에서 이러한 융합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인위적인 두체제의 통합은 오히려 갈등과 사회문제만을 증폭시킨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체제융합에 관련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

20) 김신일,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1991. 1.월호, 43.

21) 박성조,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통일연수원, 1992), p.89.

22) 주독대사관, 『독일통일소사전』1992, p.500.

23) 신기철, 신용철, 『우리말 큰사전』(서울: 어문각), p.2620.

어졌을때, 제도적 구조적 통합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그동안 형성된 통일문화의 기반위에서 실시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주민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등이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 집단심리학 등의 응용이 지도자를 위한 통일교육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대비하는 위기관리논등의 교육도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가지의 통일교육 기능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능력배양과 체제 역량 강화는 통일을 대비하는 매개변수, 체제 융합 기능은 통합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Ⅲ. 통일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통일의 의미에 따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광복이후 정부에서 시행해온 북한 및 공산주의와 관련된 교육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 왔는데, 승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국제안보교육, 이데올로기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민정신교육이라는 명칭하에서 대북한 및 대공산주의의 교육이 그 일부로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시기와 상황의 통일정책에 따른 그 동안의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해방직후의 통일은 외세에 의해 그어진 경계선을 철폐하는 것,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자주권 회복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남북한의 정부 수립이후 통일은 단순한 외세의 배척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권을 타도하는 무력해방의 의미가 되었다. 1960년대는 새로운 통일의식이 배태되는 시기였고, 1970년대에 통일은 국제적 환경 차원에서 민족내부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남북한이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1990년대의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건설,

체제경쟁이나 대결의 차원을 넘어서 상호이익의 도모는 물론 영토적, 체제적 통일 논의의 지양하고 역사적, 문화적 통일체의 유대감형성을 의미하게 되었다²⁴⁾.

이제 우리는 통일교육의 과거 변천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방이 되고 남북으로 갈라진 양체제가 굳어짐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방향도 변화시켰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통일대비교육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과정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윤리도덕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윤리 도덕 교육과정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50-80년대의 반공교육기

이 시기는 미군정기로부터 제4차교육과정기까지를 말한다(1948-1980년대 중반), 여기에서 반공교육의 의미를 조명해 보면 통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구분해서 설명해 보면,

첫째, 미군정기에는 군정처학무국이 ‘일반명령제4호’에 따라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시달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일제시대의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설치하여, 국가애, 민족애, 국가발전 협력요소를 강조했을 뿐 반공에 관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둘째, 교수요목기에는 남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수복지구인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하면서 반공교육을 했으나 6.25전쟁을 치르고 난뒤 체험적인 반공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쟁이후 붕괴된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과 이념대립과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반공교육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조되었으며, 이로부터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내용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고, 반공교육

24) 조정원, 남북한통합론(서울 : 회성출판사, 1989), pp.23-26.

이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째, 1차교육과정기의, ‘도의 교육 요항’에 반공·반일의 항목이 구체화 되었다.

넷째, 2차교육과정기의 초등에서는 반공·도덕생활이 교육과정으로 신설되어 교육과정의 영역의 교육활동, 반공, 도덕생활, 특별활동 등 셋으로 구분되었다. 이 시기의 반공교육의 일반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이다.

다섯째, 3차교육과정기에는 도덕교육과 반공·도덕생활을 분류하여 실시하여 왔던 것을 정식으로 ‘도덕과’로 개칭된 새로운 독립된 교과를 설치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공교육이 도덕, 국민윤리교과의 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섯째, 4차교육과정기에는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반공생활영역이 확대되었고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상의 반공교육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 보다는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수세적인 입장의 통일론을 기본으로 교육했기에 여기서 중요시된 국민정신은 통일의 의지보다는 안보와 적대적인 반공의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공교육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공산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계심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성적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합리적 비판능력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둘째, 반공교육은 대북한 관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고 대북한 관계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통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공에 대한 강조는 통일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하였다. 즉, 남북한 관계를 다름에 있어 핵심적 가치여야 할 통일이 방어적 개념이자 현실수호적 개념인 반공에 의해 대치되고 하위개념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국제관계의 변화는 이념적 대결을 넘어 자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추구를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게 함으로써 서방측 국가와 공산권과의 교류 협력을 가능케 하였다. 반공교육은 이러

한 시대상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내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과 기피의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교육으로 변화해 갔다. 이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것이 통일안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시작된 제5차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통일안보교육기의 통일교육과 그 내용을 분석해보자.

2. 1980년대의 통일안보교육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반공생활영역의 내용은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도록 바뀌어졌다. 또한 교육내용도 민주시민 정신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장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서 같이 살아야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관이 변하게 되어 이에 따라 반공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서의 서술방향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연 대	북 한 관	교과서 서술방향
1950	적대관계 유지	적개심 고취 내용의 선정
1960	대결의 상대로 인식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
1970	대결과 대화의 상대	대화쪽으로 시간전환
1980	대화화 대결의 상대	양자의 조화 모색

〈표-1〉 통일교육 내용의 시대적 변천과정²⁶⁾

1955-1962	1963-1972	1973-1981	1982-1988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 • 북한의 6.25남침과 죄악상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 비교 • 국군과 유엔군의 비교 • 원호정신 • 세계 여러 나라의 반공투쟁 • 북한의 죄참상 • 국군과 공산군의 비교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반공정신강화 	1955 - 1962 년 의 내용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위한 노력 삭제 • 이산가족상봉 • 귀향의 기쁨 • 공산군 섬멸각오 • 북한동포구출 	1963-1972의 주요내용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공비의 만행 • 공산당의 종교탄압 • KAL여객기 납북 • 방위성금모금의 필요성 참여 • 상비군, 민방위의 필요성과 활동 • 국가의 중요성 인식 등이 추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에 감사 • 원호정신 • 세계 여러 나라의 반공운동과 반공투쟁 • 간첩에 대한 경각심 • 유신정신의 고양 (위의 6개항 삭제) • 공산주의 이론 모순이해 •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사건 • 북한공산집단의 속셈이해 및 거짓선전경계 • 일당독재 김일성우상화정책 남북분단인식들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공민족통일 위주의 분단현실과 북한실상 바르게 알리고 만족동질성 회복 내용

26) 안영호, 격동기의 통일안보교육(서울 : 한국교원단체연합회, 1990), pp.47-49.

따라서, 통일·안보교육기의 교육내용을 분석해 보면 반공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하면서도 ‘통일’과 ‘안보’라는 측면이 이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 ‘안보’라는 자칫 충돌하기 쉬운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주안점이 되었고, ‘교육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3. 1990년대의 통일교육기(1960-현재)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7.7선언을 출발점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의 과정속에서 통일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부터이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의 통일, 한·중수교, 남한체제의 경제력 향상과 정치적 민주화로 인하여 북한보다 우월한 체제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북한 통일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갖게되었다. 특히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쌍방이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공동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앞으로 통일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제 통일문제는 우리 한민족공동체의 현실적 당면과제로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Ⅳ. 김일성사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1.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에 의해 단행되었고 굳어졌다면 통일의 실마리 또한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김일성 사망은 한반도

27) 안병준, “김일성사후 4강의 한반도 정책,” 김일성사후 한반도 정세 전망,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1994, p.5.

를 둘러싼 4강의 움직임이 통일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여겨지며, 여기서는 김일성 사망이후 4강의 한반도정책을 살펴보겠다.

(1) 국제환경

1) 미국²⁷⁾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4년 5월 3일 CNN이 마련한 텔레비전 공개토론회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세기등은 안보, 번영,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 등이라고 밝혔다. 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도 이런 정책의 구체화에 다름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밝힌 동아시아 및 한반도정책의 기초 역시 안보,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가치의 옹호와 확산이었다. 안보의 기등에는 일본 및 한국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공약, 핵확산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 공동의 안보 과제에 관한 새로운 지역대화,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와 보다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고 했다²⁸⁾. 경제적 번영에는 시장경제의 확산도 당연히 포함된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대북한 및 대남한정책)은 이상 말한 클린턴대통령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기조와의 일치와 연장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1994년 5월 3일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여러분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의 대북 고립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공약 이행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²⁹⁾

김일성 사망후 미국의 대북한 신지도부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이런 외교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에서 비롯된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일성 사망소식이 있는 직후 북한당국에 깊은 애도표시를 한 후 조문사절 파견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북한측이 제네바에 와 있던 미국의 대표단

28) Donald Zagoria, “클린턴대통령의 아시아정책”, 시평, 주한미국공보원, 1994년 23호, pp.36-45.

29) 상계논문, pp.34-35.

들이 귀국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데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칼루치 미국 핵전담수석대표도 제네바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김일성 사망에 대한 정중한 조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런 대북자세는 적극적인 대북한 미소외교로서 전례 없던 일이었다.

미국은 김정일후계정권이 핵개발을 동결키로 한 김일성의 약속이 계속 지켜질 것과 장례식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기를 북한측에 요망했으며 북한은 이를 수락, 8월5일 회담이 재개 되었다. 미국은 김일성사망후 북한 내에서 아무런 혼란 없이 후계정권이 권력승계를 하기를 바랐다. 클린턴대통령과 미국고위 외교당국자들이 김일성사망직후 잇달아 북한에 애도표시를 한 것은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불확실성을 보다 확실하게 도와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로 김일성 사후 북한내부가 권력투쟁으로 혼란이 생기면 시한폭탄과도 같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타결지을 상대가 불분명해지고 마침내 북핵문제는 공중에 뜨고 만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시 바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반드시 매듭짓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도 핵문제를 대미관계개선과 일괄타결지어 김정일 신정권의 국제위상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는 목적에서 3단계회담 재개를 원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미국은 중국의 대북영향력확대를 견제하고 북한지역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확대하고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넓은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 개혁 개방노선을 선택토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바로 클린턴이 밝힌 미국의 외교정책과 대한반도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의 권력교체기에 생길지도 모를 혼란이 자칫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기와 목적은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 행동일치를 보였다.

요컨대 미국은 김정일후계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서 어떤

30) 안병준, 전계논문, 1994, p.6.

혼란이 벌어져서는 미국에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³⁰⁾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와 입술의 관계로 표현되어 왔다.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평화5원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전방위외교정책을 구사,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우호 선린관계를 맺고 있다³¹⁾.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다. 그러면서 북한지역에 자본주의 세력, 특히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의 진입과 적대세력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부단히 한반도에서 영향력증대를 피하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북한과는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다져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²⁾.

김일성 사망후 중국의 김정일 후계정권의 평가도 중국의 이런 대 한반도 정책 기조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김일성 사후 등소평과 강택민, 이붕 등 모든 최고위당국자들이 조의를 표하고 즉시 김정일체제를 사실상 승인했다³³⁾. 중국은 4강중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분명하게 북한의 새로운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강택민 국가주석의 이름으로 김정일 당비서에게 조기에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장정연 주한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한국정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조기개최를 설득, 주변국들이 김정일체제를 승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중국은 또 김일성 추도대회날인 7월 20일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집무실을 비롯

3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2월, pp.6-10. 평화5원칙은 1954년 중국 인도 버마 등 3국이 공동선언한 외교 원칙으로서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불침략, 내정불간섭, 상호평등 호혜, 평화공존 등을 말한다.

32) 상계논문, pp. 9-10.

33) 한겨레신문, 『주변 4강 조문외교』, 1994년 7월 14일, p.3.

전국에 걸쳐 반기를 게양하고 전국에서 라디오 텔레비전의 오락프로까지 중단하는 등 외국인수의 죽음에 대해 전례없는 특별조의를 표했다. 중국은 또 김일성 사망당 일 3명의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경제개혁과 비핵화 등 6대 정책의 추진도 권고 했다고 한다³⁴⁾.

이상사실을 통해 중국은 순망치한의 지도관계인 북한에서 돌발사건 없이 권력승계가 이뤄져 김정일 정권이 안정되고 공고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승계가 제대로 안되고 혼란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가 발생한다면 그 영향이 중국에까지 비화, 중국의 경제개발과 임박한 등소평사후 중국의 사회 혼란으로 연결되지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후계체제를 조기 승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이 중국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지만 역시 김정일 후계체제의 출범과 존속성을 불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는 입장이다.

3) 일본³⁵⁾

일본도 이번에 신중하지만 치밀한 계산아래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김일성사망후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애도를 표시한데 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사회당 위원장 이름으로 애도전문을 보냈다.

일본은 또 북한상황을 지켜본뒤 북-일 수교협상을 재개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북-미 수교협상은 1992년 11월 8차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었다. 일본은 북-미 회담이 수교로 연결될 경우 북-일 수교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북한 새 지도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의 김정일 후계정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일본은 방위계획서에서 과거 러시아대신 북한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으며 김일성 사후 <1994년도 방위 및 경비계획>의 수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김정

34) 조선일보, 『북에 개혁, 비핵화등 6대정책 제시』, 1995년 7월 22일, p.5.

35) 안병준, 전계논문, 1994, p.7.

일정권의 존속성에 대해 강한 회의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³⁶⁾.

일본은 또 김일성 사망후 지난 7월 9일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을 우려해서 동해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국민의 67%는 북한의 김정일체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김일성 사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³⁷⁾.

요컨대 일본은 김정일 새지도부에 대해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개발 등과 군부의 갈등 및 분열 때문에 안정성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은 일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 러시아³⁸⁾

러시아는 4강중 김일성 사후 북한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북한도 러시아를 냉대하는 입장이다. 김일성사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난 1990년 한국과의 수교후 많이 잃었던 대북영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당분간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사실은 이번 김일성 사망후 러시아와 대통령은 북한에 정중한 조전을 보냈으나 북한측은 중국 미국국가원수의 조전과는 달리 이를 보도하지 않고, 묵살해 버렸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수교후 지난 4년간 국가원수 상호 방문, 한국의 대러시아 30억달러 차관공여, 활발한 경제 및 정치, 군사외교협력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 시켰다. 그러다보니 러시아의 대북관계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었다.

36) 조선일보, 『日, 방위계획 수정 착수』, 1994년 7월 26일, p.2.

방위청은 김정일후계체제의 북한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판단, 이 작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군인들의 망명대책을 중심으로 제검토를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청간부들은 앞으로 가장 경계가 필요한 부문으로 군사경계서 주변의 분쟁상태 보다는 북한군내부의 대립과 반란을 꼽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인민군들이 일본에 망명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이 방위계획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망명자 대책, 대량난민대책, 부유기퇴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37) 동아일보, 『일본국민 67% 김정일체제 불안감』, 1994년 7월 22일, p.2.

38) 상계신문, p.7.

그뿐 아니라 지난 6월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때 엘친대통령이 전달한 김일성의 6.25남침도발에 관한 역사문서는 김일성의 6.25죄과를 단죄하는데 결정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이 문서를 김일성 추도대회날 공개해서 김일성의 6.25남침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³⁹⁾. 북한은 러시아가 이 역사문서를 대결관계에 있는 남한에 제공했다는 사실자체를 아주 증오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김일성사망으로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자, 러시아는 ‘이때다’하고 그동안 멀어졌던 대북관계를 회복시켜 대북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남진정책에다,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이 성공한후 대북 경수로 공급때 크게 한몫 기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⁰⁾.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러시아에 우호적이고 나머지 미·일·중등 3국의 세력을 견제 할 수 있는 정권이 통일을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¹⁾.

(2) 국내환경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주는 체제내적인 주요변수는 체제의 성격, 경제분야에서의 성과와 엘리트의 결의와 단합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내적 주요변수의 정의를 내려보면 체제의 성격이란 ‘정권이 대중들로부터 합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정치적인 면으로 그것은 ‘정권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적 성장이나 규모뿐만이 아니라 부의 분배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엘리트의 결의와 단합은 ‘엘리트간의 정책결정과 수행에 어느정도 합의가 존재하느냐’

39) 조선일보,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한국전쟁 비밀문서, 6.25진상』, 1994년 7월 21일, pp.12-13.

40) 한겨레신문, 『주변 4강 조문외교, 한반도 주도권 겨냥』, 1994년 7월 14일, p.3.

41) 민족통일연구원, “러시아 연방의 대북한정책”, 1993년 12월, pp.10-12.

의 문제이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체제내적인 주요변수의 측면에서 현상항과 그 발전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남한의 체제성격은 정치적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번 있었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한 민주화와 개혁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그 동안 해소되었고, 엘리트와 대중의 타협과 양보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발전에 따라 정부의 통일 정책도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적이고 신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대해 북한 체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김일성사망이후 체제의 불안을 최선으로 막기위해 빠른 김정일로의 권력계승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체제안정을 위해 지금 북한의 당면문제를 빠른 시일에 안정시켜, 정권을 유지시켜야만 한다. 단기적으로 김정일체제는 체제유지를 현상유지 할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외면적으로 받들어 내부결속을 다질 것이다. 김일성이 마치 유언처럼 남긴 '남북정상회담'은 장례식이 끝나고 김정일체제가 공식출범하면, 북한 제1인자로서의 공인을 받기 위해 남한에 협의를 요청해올 것이다. 이미 북측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정상회담은 사정상 연기하되 정상회담개최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핵문제는 김일성이 이미 약속한대로 '핵동결'을 지켜주는 척 하면서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 그들이 노리는 '미, 북 정치수교', '경수로지원 보장', '미국의 대북 핵위협등 제반위협중지'등을 일괄타결로 받아내는 외교용 카드로써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핵투명성', 'NPT완전복귀'를 장기적 정치 지렛대로 남기려는 북한의 속셈과 핵완전투명성 보장 없이는 수교를 보류하려는 서방국가들간의 실랑이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본다.

장기적으로 김정일은 그의 권력승계기반이 끝난후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 새로운 카드란 정경분리원칙에 기초하여 '경제난 극복을 통한 체제유지'이다. 이는 서방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방과 개혁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김일성주의의 교조적 답습은 개방을 권고하는 북한의 유일한 보호막인 중국도 허용치않는다. 이전과 달리 김정일은 김일성만큼 등

소평의 권고를 거부할만한 협상력과 카리스마도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감안, 북한은 ‘체제붕괴예방장치’를 완벽히 갖춘 제한적 개방을 할 것이고 체제존립을 위해서도 체제의 민주성을 조심스럽게 높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개방정책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경우 김정일은 나중에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더라도, 개발독재를 통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경제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김일성만큼의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에 대한 북한체제 내부에서의 도전은 예측불허이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김정일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다음으로 남한의 경제적 성장과 잠재력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남한의 경제적인 성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북한과의 통일과정에서 기능주의적인 통합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이러한 남한의 경제적 성장에 비해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공산주의 체제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고, 특히 동구 공산국가의 체제변혁과 소련의 붕괴는 경제적 지원과 수출시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기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북한 내부의 경제약화는 남북교류의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리트의 결의와 단합을 살펴보면, 이는 ‘엘리트간의 정책결정과 수행에 대한 합의’로서, 우리 정부의 결속력 혹은 협동심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 정치의 심각한 비민주성, 국민의 신뢰성없는 정권수립이 가장 큰 난관이 되어 여, 야의 유치한 국회싸움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이 민주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이상, 우리 정치문화 또한 국민의 신뢰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보다 성숙한 국민의 정치문화속에서 이는 원동력으로 자랄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이 죽은 지금 정치엘리트인들은 긴장속에서 국민의 안정을 최선의 목표로 협동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다 큰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될것이다.

(3) 통일환경

체제간의 대립이나 경쟁에서 체제내적 역량은 통일정책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체제내적인 역량이 우수하다는 자신감만으로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체제간의 인식정도의 체제 상대적인 힘의 우열이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것은 남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북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각 정부를 불법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적대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 모두 자신들의 헌법에 각각 상대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거대상으로만 보았기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방법에 의한 제거를 통일전략의 중요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적대적 통일전략은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한기본합의서 체결과 발표에 의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김일성사망이후 북한이 체제유지를 급선의 목표로 상정한다고 할때 앞으로 북한은 체제인정을 대남관계 및 국제관계의 과제로 가져갈 것이다. 즉 김정일 정권의 대표단들이 각종 협상창구에서 활동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을 묵인하려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 북한 제1인자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해 올 것이다. 이것을 볼때, 상대체제에 대한 이미지의 결정적 요소는 상대적인 역학관계와 상호신뢰의 문제이고 이것으로 통일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1) 기본전제

그동안의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교육은 때로는 통일을 위한 것보다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 차원에서 실시되기도 하였고,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는 통일보다는 안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통일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그 과정에서 통일교육은 몇가지 기본전제를 고려해야 한다.

통일원에서 발간한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전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⁴²⁾,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당위와 목표 바람직한 통일상이 개개인의 의식속에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인식하고, 서로 다른 통일의 방법과 내용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때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도 가능해진다.

둘째, 통일의 주체는 7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되어야 하고, 민족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 복지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남북통일문제는 우리민족 모두의 이해뿐만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성원 일부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들 일부를 포함하는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라는 것이 개별성원 모두가 통일문제를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통일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민족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가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추진해야할 실천과제라는 것이 전제된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남북통일은 분단과 대결로 소모되는 민족의 잠재력을 집결시켜 우리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고려한 교육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주장과 논의는 개방되고 다양할 수는 있으나 민주주의

42) 통일원,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1992, pp.6-7.

체제의 기본가치와 규범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하는 독선론, 감상적 비현실적인 논의와 무책임한 주장, 흑백논리나 극단논리, 위장된 통일논의 등은 항상 경계하고 배재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⁴³⁾

결국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이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남북한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보다 더 살기좋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법규상의 교육이념과 국민교육헌장에 담겨진 내용에서 규명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적 이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표 1〉통일교육에 관련된 국가적 이념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흥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현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방법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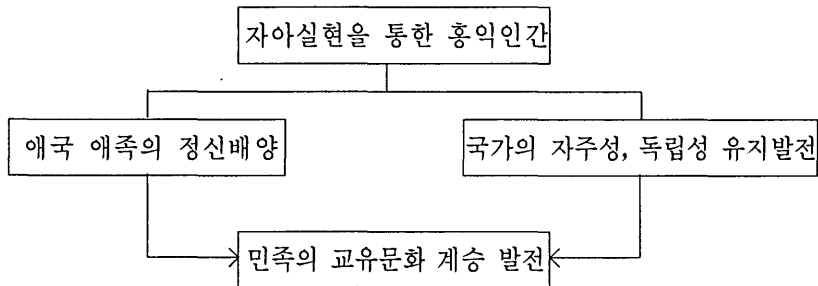
43) 상계서, pp.22-23.

구현사항

1.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며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 양양하도록 하게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법적 우리의 국가이념은 [홍익인간]이란 최상위 개념아래 애국, 애족하는 국민정신을 배양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 발전하게 하는 한편 민족의 승고한 고유문화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건국 당시부터 표방한 민주적 민족주의라는 국가이념 또는 정치이념과 일치하며, 또 전통적 가치에 기초를 두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지니는 고유의 발전가능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능력을 배양하여 각자의 고유한 방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표 2〉통일교육 이념교육 내용



이러한 교육이념 아래 통일교육의 이념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여 더 살기좋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념은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남북한 통일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지가 보장된 민주체제로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로부터 통

일교육의 이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념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며 여기에서 ‘자주’란 ‘남북 쌍방이 당사자로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고, ‘평화’는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북간 평화상태로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은 수평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은 ‘통일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기초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이러한 통일이념에 따라서 민주주의, 민족주의, 복지주의를 포함하고 우리 전통사상에서 통일교육의 이념을 도출해 내서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삼는다.

(3) 목표

1) 개인능력배양기능

투철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민주적 자아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통일을 낳아 의지를 고취한다.

2) 체제역량강화

민주체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통일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내적 문제 해결과 남북한 체제간의 체제전환 능력강화를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3) 통일문화창조

통일문화창조는 통일을 촉진하고 원만한 통합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하므로 민족 동질서의 회복과 이질성의 극복을 위해 전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한다.

4) 체제융합

통일 후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제기될 문제해결에 관계된 교육이 실시되어 통합이

44)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1992, p.38.

후의 갈등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대비책도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내용

1) 내용선정의 원칙

첫째, 일반적인 교육내용 선정의 기준을 준수한다.

이 때 일반적인 교육내용선정의 기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선정하는 타당성과 학습자의 발달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의미성, 학습자의 흥미와 지적 도전을 유발하는 흥미성, 그리고 교육내용과 학습결과가 내면화 될 수 있는 학습가능성을 말한다.

둘째, 선정된 내용의 조직원리에는 ① 중요한 원리, 사실 등의 학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도록 하는 계속성의 원리, ② 선수학습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경험이나 내용이 점차 깊이를 더해가는 계열성의 원리, ③ 한 영역의 한 가지 내용이나 경험, 능력들이 다른 영역들과 상호관련을 맺도록 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통합성의 원리 등이 있는데⁴⁵⁾ 통일교육의 내용 조직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셋째, 남북통일문제는 과정적이고 정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폐쇄적인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선정된 교육내용은 논리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한 것이어야 하고 가치면에서 옳은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에서 제시되는 통일방안은 합리성, 현실성, 국민적 합의성, 민족적 적당성의 기준에서 비교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조직해야 한다.

여섯째, 특정단체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매개되지 않고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강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5) 신정현외,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탐구당, 1987), pp. 104-109.

2) 내용선정

위와같은 내용선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능력배양을 위한 내용

인간존중, 민주적 생활습관과 규범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비판적 사고능력고양, 사회적-정치적 참여 기능향상

② 체제역량강화를 위한 내용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이념교육, 공동체 삶의 생활윤리, 사회윤리에 대한 인식, 민족자주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역량, 안보와 자주국방,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북한체제의 특징과 실상의 구별, 올바른 통일관 정립, 통일방안의 이해와 신념, 남북통일정책 상호비교, 통일비용,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교육운동, 통일비용인식, 경제력 향상의 필요성인식

③ 통일문화창조 위한 내용

남북한 생활상 비교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 북한사회제도와 생활 가운데 장단점의 이해와 수용하는 개발적인 태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의 통일, 이질화 국복을 위한 이해와 신념, 우리 고유 언어의 발굴 및 발전, 우리고유의 민족정신, 정통문화, 관습등에 대한 이해

④ 체제융합을 위한 내용

사회갈등의 성숙한 해결, 민족내부 갈등해소 방안의 이해 및 태도, 삶의 질 향상 수단으로서의 통일에 관련된 내용

여기에 첨가하여 통일국가를 이룩한 국가의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통일국가가 추구해야할 국가이념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구상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다. 위에 제기된 내용을 모두 같은 비중을 두고 통일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 변화에 따라 체제역량강화→통일문화창조→체제융합기능을 더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 변화과정중에 기본적으로 개인능력배양을 하여 통일추진의 원동력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3. 현 통일교육에 대한 제언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에 의한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근거하여 나타났으며, 통일이 되어 안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존재케 되는 국민정신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제까지의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모든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개인주의와 신세대풍조등과 같은 현대 세대속에서 통일교육의 불명확한 ‘공동체의식고취’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교육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보다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 여기서는 몇가지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려한다.

(1) 학교통일교육

1) 체계⁴⁶⁾

학교 통일·안보 교육의 법규상의 체계는 헌법-교육법-교육과정령의 위계로 이루어진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있음(전문)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제4조)’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시행키 위하여 제정한 교육법에는 통일 또는 반공에 대한 지침이 없다. 다만 “민주 국가 발전에의 봉사”(제1조),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 발전”(제2조),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제105조)등의 일반적 지침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육법의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령은 문교부 장관의 고시로 발효되는 것으로 각급 학교에서 가르칠 교과목, 기준시간, 가르칠 내용과 방법 등을 담고 있어서 학교 수업 활동의 실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령이다. 따라서 학

46)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방향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 통일교육지도자료, 1988, pp.18-21.

교 통일·안보 교육의 기본 골격은 이곳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이제 1986-1987년에 걸쳐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령)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안보 교육 체제의 골격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교과목 구조상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다루어지는 교과는 초·중학교 “바른생활”, “도덕”과 고등학교의 “국민윤리”교과이다, 그 밖에 사회와 교련교과에서도 통일관련 또는 북한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도덕, 국민윤리의 교육 내용은 크게 순수도덕, 윤리 부분과 통일·안보 부분으로 대별된다. 초·중학교의 도덕은 이 두 부분의 비중이 4:1이며, 국민윤리의 경우에는 5:1정도이다.

국민학교의 도덕은 1,2학년의 바른생활과 3, 4, 5, 6학년의 도덕으로 나뉜다. 바른생활과 도덕, 그리고 국민윤리의 통일 안보 영역의 교과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바른 생활

공동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1학년]

: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나라와 겨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2학년]

“가정, 학교, 고장, 나라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싹트게 한다.”

② 국민학교 도덕

“국토 분단의 현실과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한 민국의 정통성 및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3학년]

“북한 주민의 생활상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5학년]

“남북 분단의 문제점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인식

하여, 민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6학년]

“북한 공산 체제의 문제점과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자주 국방 의식을 높이고 민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③ 중학교 도덕

“국토 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 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1학년]

“국토 분단의 비극 및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과 북한의 현식을 바르게 파악하여,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깨닫고, 민주적 평화 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다.”

[2학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문제를 깨닫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3학년]

“공산주의의 본질과 공산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민주 사회의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④ 고등학교 국민윤리

“현대 여러 이데올로기의 본질과 그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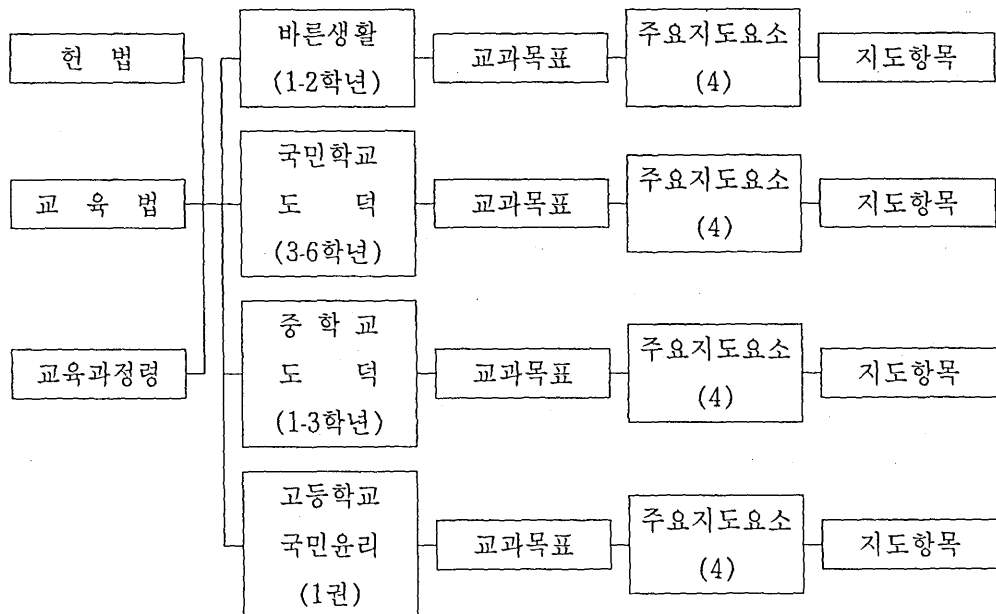
“조국 통일의 당위성과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 체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민주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교과는 학년별로 가르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교육과정 중의 ‘지도 요소’라고 부르는 바 이것은 크게 4가지의 주요지도 요소로 범주화된다(〈표 3〉참조).

〈표 3〉 통일 교육의 지도 요소의 수

주요 요소	지도요소		지 도 요 소										
	교과서	학년	바른생활		국민학교 도덕				중학교 도덕			국민 윤리	
			1	2	3	4	5	6	1	2	3		
1. 남북의분단 상황 인식과 관련된 지도 요소						1	1					1	
2. 북한의 현실 이해와 관련된 지도 요소	1	2	1	1	1	1			2			1	
3.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 이해에 관련된 지도 요소			1	1	1	2		1	2			2	
4. 통일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태도와 관련된 지도요소			1	1				4				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안보 교육체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 문제점

교육과정은 법규의 형식으로 편찬된 교육 지침이다. 따라서 다른 교과와의 일관성, 분량의 제한, 기술 형식의 규격화 등의 규제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덕·국민윤리 교육과정이 교육 일선의 궁금증과 구체적 교육 지침을 시사하기에는 불충분하게 기술된 점이 있다. 이곳에서는 제5차 도덕·국민윤리 교육과정의 통일·안보 교육 부분의 이와 같은 불충분한 점을 몇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상에는 통일·안보·교육의 각 지도 항목을 해석하는 관점과 원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 절에서 소개된 교육과정령상의 통일 교육 체제는 이것이 실제 수업 운영상의 구체적 지침이 되기에는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 즉,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지도 항목은 교사가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제목’은 시사하지만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 가르쳐야 할 소재나 내용에 대한 언급을 분명하나, 이 소재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관점 제시의 결여는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자의 창의와 자율성이 개재될 여유를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여러 지도 항목들을 일관하는 관점을 찾고 수업에서 이를 수미일관하게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과에 제시된 33개의 지도 항목을 꿰뚫는 관점이나 원리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나 원리는 때에 따라서는 획일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획일화할만한 원리가 있는데도 교육과정 운영자의 자율성과 창의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관점이나 원리가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해석의 관점이나 원리가 획일화되어도 좋을 만큼 범국민적 혹은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아직은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이 두 이유가 모두 해당되어 관점의 제시가 생략된 듯하다. 추측컨대 도덕과의 경우, 특히 반공 영역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된 바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에 자율성의 폭은 크게 넓혀 주는 일의 중

요함이 고려된게 아닐까 생각된다. 예컨대, 지공인가 반공인가 하는 반공 교육의 대립적 관점이 있는 바 특정 지도 항목을 어느 관점에서 가르치는게 좋은지 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따라서 도덕과의 지도 항목들은 흡사 아직 팔려지지 않은 원목처럼 교사등 수업운영의 직접적 당사자의 손길에 내맡겨져진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석의 관점이 유보된 교육과정상의 지도 항목은 자기 관점을 가진 교사에 의해서는 그 취지가 100% 살려지지만 일관성 자기 관점이 없거나 불완전한 교사에게 있어서는 그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이 중요하게 된다. 교사가 자기 관점이나 원리에 따라 지도 항목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그런 교사는 교과서 대로만 가르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도덕 교과서는 어느 한 집필자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항목 간의 일관된 관점이나 원리가 적용되기가 매우어렵다.

예를 들면 6·25를 1,2학년의 바른생활에서 다룰 때와 3-6학년의 도덕에서 다룰 때 집필자가 다르므로 그 다루는 관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집필자는 6·25를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의 고취 수단으로 다룰 수도 있고, 또 어떤 집필자는 6·25를 남과 북 모두에게의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여, 두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6·25를 어떤 원리와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지를 집필자들에게만 미루어 둘 수도 없고, 또 교사들에게만 미루어 둘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지도 항목을 다루는 관점이 문제는 도덕과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교육과정상에 명시하는 일은 다른 교과목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둘째, 교육과정상에는 통일·안보 교육의 기본 메세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통일 교육은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측면에 덧붙여 가치, 태도, 동기 등의 정의적 측면의 변화도 중요시되는 교육이다.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지식의 양과 기능의 숙달 정도가 교육 받은 정도를 나타내 주지만 가치, 태도, 동기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형성될 가치 판단이나 태도나 동기의 지향 방향이 중요하게 된다. 이 방향성은 예컨대, 북한 공산주의 등등에 대한 좋고-나쁨의 감정이나 인상의 긍정-부정으로 판정된다.

통일·안보 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의 머리 속에 앙금으로 남게 될 기본 감정이나, 인상, 정성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재의 교육과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만큼 각 지도 항목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또 교과 목표들도 이러한 교육 결과 상태에 대한 “그림(picture)”으로 두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통일·안보 교육을 가장 잘 받은 상태란 과연 어떤 것인가? 교육 과정상에 명시된 바 대로 잘 교육 받은 젊은이의 북한과 공산권에 대한 생각,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 국방과 안보관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현재의 교육과정은 충분한 “그림”을 주지 못한다.

셋째, 교육과정상에는 학교급별 그리고 학년별 지도 항목의 연계 체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통일·교육과정상에는 학교급별 그리고 학년별 지도 항목의 연계 체계가 분명히 드러나있지 않다. 통일·안보 교육은 국민학교 1학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이르는 거의 12년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과업이다. 예컨대, 국민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사이의 통일·안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수학이나 과학의 경우 국민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지도 내용과 방법이 달라야 할 점은 매우 명백히 객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안보 교육의 경우는 그렇게 명백하지 못하다. 6·25에 대한 지도내용과 방법이 국민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에서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리라는 추측과 기대를 우리는 갖는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의 교육과정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상에서 지적한 세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된 문제는 실상 1954년 이래 우리나라의 반공 및 통일 안보 교육과정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조금 부연하면 이제까지의 전통적 교육과정에서는 그 지도 내용이 교과서 목차의 나열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목차에 제시된 내용을 다루는 관점과 원리의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 교육의 전개를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과 원리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일이 된다.

3)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제언

① 수업담당 교사에게의 제언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상의 지도요소에 대한 지도의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교사=854는 교육과정상의 지도 요소별로 그 내용을 지도하되 각각의 지도 요소를 일관하는 원리 또는 관점을 설정하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지도한다. 한두가지로 요소에 대한 해석의 관점만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북한에 대한 지도 관점 예시”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중적 실체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즉, 북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형제이며, 언젠가는 한 나라로 통일을 이루어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적 체제와 생존 방식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중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형제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 위협자의 측면이 악화되기 마련이고, 위협자의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형제적 인식의 소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실 우리는 그간 너무 위협자의 측면을 강조해온 면이 있다. 즉 북한의 이와 같은 두 측면을 그대로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즉 북한에 대한 공평한 기술은 바로 북한이 우리에게 갖는 이중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 하는 것이다.

“6.25전쟁에 대한 지도 관점 예시”

6.25전쟁은 분단을 실질적으로 고착화시킨 우리 역사 이래의 가장 핵심적 사건이므로 학생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6·25와 관련해서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47)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방향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통일교육지도자료, p.27.

- ①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 ② 두번 다시 이 한반도 땅 위에 이와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 ③ 어떤 명분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
- ④ 6·25는 우리민족이 겪은 가장 처참하고 희생이 큰 전쟁이었다.
- ⑤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약화시킬 수 없는 위정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북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시키되 6·25전쟁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쟁 극복의 소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6·25와 결부된 현충일, 국립묘지 등에 대한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두 개념에서 예시해본 것처럼 대북한, 대공산주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나 요소들을 수업 담당 교사가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지를 분명히 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두 개념 이외에도 이러한 관점 제시가 필요한 개념은 예컨대, “국방·안보” “통일 국가”, “일본·미국·중국·소련등의 주변 국가에 대한 해석”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관점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통일·안보 관련 서적과 정부 또는 연구 기관의 자료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부지런히 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관점을 교사 스스로 형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주관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이 사회가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바르게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올바른 관점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그 해설서 및 관계기관(문교부, 교육위원회, 통일원)의 각종 자료와 지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유관 기관에의 제언

교육은 선천적인 능력의 '개화'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학교교육은 후자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 많은 학습자의 환경요인을 개발한다. 이에 학교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서는 유관기관의 역할을 제안해 보려한다. 즉 통일 교육 담당 교사들이 앞에서 권고한 반대로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관 기관의 협조가 요청된다.

첫째, 교사들로 하여금 북한 및 통일 관계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논의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북한 공산권 자료 열람 허용
- 해외시찰 주선(공산권 포함)
- 특별 연수 실시

둘째, 통일·안보 교육 자료의 개발과 수업 방법 개선을 주관하는 전문 연구팀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북한이나 통일·안보 교육과 관련된 '교육할 거리'에 대한 해석의 관점과 원리를 개발하고 학교 일선에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각 유관 기관에서 발간되는 통일·안보 관련 책자는 우선 먼저 학교 교사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 및 학생들이 북한 및 통일 문제의 논의에 실제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참여 경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의 건설이 요구된다.

예) 휴전선 부근에 대규모의 캠핑장 및 수학여행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및 일반에 공개, 대규모 학습자료 센터를 설치하여 통일 의지의 꿈을 키우는 산실이 되게 한다.

다섯째, 북한 및 동구권 또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overview가 가능하도록 책이나 VTR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 예) -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가

(2) 사회통일교육

1) 사회교육현황⁴⁸⁾

사회교육이란 학교이외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교육은 이른바 비제도적 교육으로 학교와 같은 체계없이 설립목적, 운영방식, 교육내용, 수강생 등이 매우 다양하며,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도 감독 또한 학교처럼 문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않고, 문교부를 포함하여 상공부, 보사부, 문화부, 노동부, 총무처, 내무부 등 설립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 귀속되어 있다.

사회교육기관은 최근평생교육의 시대적 추세따라 계속 확대일로에 있으며 교육내용역시 더욱 다양하다. 그러한 사회교육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 교육기관
- 기업연수원
- 직업훈련기관
- 대학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 사설학원
- 문화센터 및 사회단체
- 농어민교육원
- 청소년단체

이상의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사회교육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교육을 중요한 기능으로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체의연수기능은 최근에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는 문화센터와 각종 사회단체의 교양강좌도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대학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48) 국토개발원,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하여”, 통일교육지도자료, 1990, pp.37-39.

머지않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개방대학을 통하여 성인교육을 실시할 전망이다. 사회교육은 그내용에 따라 교양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기술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기능향상연수와 기술훈련도 그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의 전부를 구성하지는 않고 약간의 교양과정을 포함한다. 종전에는 국민정신교육을 모든 연수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시간의 국민정신교육 내용을 필수화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그러한 필수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사회교육의 거의 모든 교육과정에 약간의 교양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있다.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양교육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 또는 국민교육이다. 한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며,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시민교육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는 한국의 사회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통일문제처럼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도 없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여 모든 교육에서 통일문제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교육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가 방대하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사회교육도 학교 이후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므로 그 규모는 학교교육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회교육의 비제도성과 비체계성으로 인하여 기관수와 학습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관장하는 부처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짧은 것은 3시간의 교양강좌에서부터 긴 것은 1년 또는 2년간의 전문자격연수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학교 학생처럼 인원수의 계산도 간단하지 않다. 아직 사회교육통계가 제대로 누계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여러 자료로 미루어 보건데 사회교육의 규모는 엄청나다.

사회교육기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를 들어 봄으로써 사회교육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

(1989. 12 현재)

주요사회교육기관	기관수, 과정수	수강생수(년간)
공 무 원 훈 련 기 관	44개	
주 부 교 실	239개	181,333명
교 원 연 수	49개	59,107명
사 설 학 원	23,190개	1,489,013명
청 소 년 단 체	30개	4,282,042명
직 업 훈 련	314개	55,385명

이상의 기관들의 수강생만도 줄잡아 670만에 가깝다. 이밖에 이미 큰 규모로 확대되었고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체의 연수와 훈련이 있다. 대규모 기업들은 모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들은 모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가 입수된 몇 기관의 교육생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은 예시일뿐 기업체연수의 전모는 물론 아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그 나름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기업연수생의 규모는 대소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인원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의 취업자수는 1,500만명을 넘는다. 이 엄청난 수의 대부분이 사회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교육의 속성상 이들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므로 1명의 직장인이 1년간 2-3회의 사회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사회교육의 특성 및 문제점

① 성인학습자의 특성⁴⁹⁾

성인학습자는 아동 및 청소년학습자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49) 상계서, pp.44-45.

첫째, 지적능력이다. 지적능력의 총량에 있어서는 성인과 아동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아동은 유동적 지능이 중심을 이루는 반면, 성인은 결정체적 지능이 중심을 이룬다. 유동적지능은 타고난 지능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퇴하지만 결정체적 지능은 학습자 경험의 축적에 의하여 발달하므로 일반적으로 연령의 상승에 따라 높아진다.

전자는 주로 암기력, 반응의 민첩성 등과 관계되고 후자는 종합적 판단능력, 평가 능력등과 관계되므로, 성인들은 암기력에 주로 의존하는 학교와 같은 전통적 교육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 있어서는 아동보다 성인 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의 학습능력이 아동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통념은 암기중심교육에 해당되는 말이고,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성인이 더 강하다.

둘째, 학습의 독립성이다. 성인은 이미 각자 나름의 주관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입식 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감정에 호소하여 감명을 주는 교육보다는 지적 논의를 통한 설득이 효과적이다. 과거의 새마을연수식 감정적 호소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인 듯하면서도 사고방식과 태도에 지속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성인학습자들의 높은 독립성 때문이다. 인지적 불일치 이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식과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동기이다. 통념적으로 성인은 학습동기가 낮은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학습동기는 성인들이 더 높다. 다만, 강제력에 의한 일방적 주입교육에 있어서는 성인의 학습동기가 유발되기 어렵다. 그 면에 있어서는 성인들이 아동보다 폐쇄적이다. 성인들은 자신의 생활과 직결된 지식의 흡수에는 적극적이며 학습동기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일지라도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연결시켜야 한다.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넷째, 경험의 축적이다. 학습자로서 성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은 연령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과정에서 획득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이 성인학습의 특징을 이룬다.

경험은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서적 속의 지식보다는,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 표출된 현상과 잠재적 현상세계의 차이 등에 대한 인식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 경험과 일치하는 내용의 학습이 용이하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학습은 대다수의 성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지식체계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교육은 아동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성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성인들은 새로운 지식의 학습시에 과거의 경험 및 지식과 연관지워 해석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일방적 설명식 교육보다는 토론과 대화식 교육이 효과적이다.

② 사회교육의 문제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여러 특성으로 학교교육과는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회교육기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학교와 대비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체계성이다. 사회교육은 학교와 같은 초등·중등·고등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년도 없다. 교사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등록과 탈퇴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1주일간 연속되는 통일교육은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비현실적이다. 학교의 경우와 같이 1학기와 2학기로 내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

비체계성으로 인하여 행정적 지시와 감독이 학교와 다르다. 각 사회교육기관의 관장 부처가 노동부, 문화부, 상공부 등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경우와 같이 문교부의 협조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방식이 사회교육에는 통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각 사회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처의 협조를 얻어 반강제로 통일교육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교육프로그램을 훌륭하게 만들어 각 사회교육기관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련 행정부처의 협조를 얻는 경우에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다

른 것에 비하여 뚜렷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양성이다. 사회교육기관은 설립목적, 교육생의 집단별 특성, 교육기관, 교육여건, 교육방법 등이 극히 다양하다. 학교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사회교육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교육생의 특성도 서로 다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훈련생에 비하여 각종 연수참가자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각종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교육수준은 넓게 분산되어 있다.

〈수강생의 교육수준〉⁵⁰⁾

(단위 : %)

교육수준	기 술	연 수	영 능	교 양	전 체
국졸이하	7.3	5.7	19.9	19.0	14.3
중 졸	33.1	44.2	32.2	61.3	44.2
고 졸	55.5	38.3	38.0	12.4	26.0
대졸이상	4.1	11.8	9.9	7.3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성별 연령분포〉⁵¹⁾

(단위 : %)

연 령	기 술	연 수	영 능	교 양	전 체
20세미만	33.4	17.9	15.8	77.7	57.9
20-29세	46.0	27.9	55.3	11.5	19.9
30-39세	13.2	26.6	19.1	6.6	12.2
40-49세	6.4	19.3	8.5	3.5	7.5
50세이상	1.0	8.3	1.3	0.7	2.5
계	100%	100%	100%	100%	100%

50) 국토개발원,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하여”, 통일교육지도자료, 1990, p.46.

51) 상계서, p.47.

뿐만 아니라 수상생의 연령분포도 사회교육기관에 따라 다른데 교양교육을 제외하면 20대와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양교육 부문에 20세 미만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공단의 교양강좌에 10대 청소년 근로자들이 많이 참가하고, 그 밖의 문화원, 각종 사회단체의 교양강좌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연수부문의 연령은 기술훈련부문의 연령에 비하여 뚜렷이 높다. 이처럼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학력배경과 연령에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분절성이다. 사회교육은 단기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간에는 분절되었다. 기업체의 체계적 연수과정일지라도 1-5주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한 개인이 기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단계의 연수를 받게 되지만 각 단계의 연수사이에 연계성은 낮다. 예컨대 한 대기업체의 연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H 그룹연수원의 계층별 교육구조〉⁵²⁾

과 정	대 상	기 간
최 고 경 영 자 과 정	전무이상	2일
	이상이상	4일
	이사대우	4일
기 본 교 육	대 리	1주
	과 장	1주
	차 장	4일
	부 장	4일
승 진 사 교 육	대 리	1주
	과 장	1주
	차 장	4일
	부 장	4일
대 졸 신 입 사 원 교 육	신입사원	3주

52) 상계서, p.48.

이 그룹은 계층별 교육 이외에도 전문실무교육을 담당업무 분야별로 실시하며, 전체 사원들에게 영어와 일본어 교육을 각 8주씩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연수프로그램이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각 과정이 연속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신입 사원 교육을 받은 몇년 후에 대리승진자 교육을 받고, 다시 몇년 뒤에 과장교육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교육사이에 어떤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통일교육을 예로 들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교육에 차이를 두기보다는 신입사원교육, 승진교육, 기본교육, 최고경영자교육 등에 차이를 두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넷째, 현장성이다. 사회교육이 학교교육과 다른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현장성이다. 학교교육은 문자화된 지식을 증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동시에 학교는 아동, 청소년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사회교육은 생활현장과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생활 또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같은 현장성이 강한 교육상황에 현장과 관계가 먼 교육을 삽입시키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장의 실제적 교육에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인 교육내용이 섞이면 오히려 거부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사회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통일이 생활현장 및 직업현장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직결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분단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단이 국토의 이용에 작용하는 문제 등과 연결지워 통일교육에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또는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의문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좋다. 여하튼 통일문제를 무미건조한 지식의 하나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영세성이다. 사회교육기관 가운데에는 개기업의 종합연수원처럼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교육전담직원을 갖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재정도 취약하다. 교육전담직원도 사회교육전문가로 훈련받은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통일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면 “통일교육을 해주세요”라는 요청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교안이 제공되어야 하고, 많은 경우에는 강사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는 통일교육을 교과서에 포함시키지만

하면 그 나머지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하여 학습한뒤에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통일교육을 담당할 직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강사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즉 교육프로그램과 담당강사를 한 ‘팩키지(package)’로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제언

① 이슈별 내용조직

사회교육의 속성상 통일교육을 하나의 체계 아래 큰 덩어리로 조직해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모든 교육내용은 1시간 내지 2시간 단위로 조직하되 각 단위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2단위 또는 3단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교육이 대체로 단기교육이고 상호연관없이 분산 실시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학교교육처럼 7-8시간을 한 다원으로 묶어 실시할 수는 없다.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내용조직은 1시간을 한 단위로 하여, 1단위를 벽돌 1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각 벽돌은 그 자체로 도입, 본론과 종결을 갖춘 완성된 내용단위를 이룬다. 1개의 벽돌은 완성된 내용단위이지만 각 벽돌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통일교육 내용을 이슈별로 세분하여 각 단위내용은 1개의 교안이 되는 셈이다.

이슈별 교안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교육 목표상의 위계에 따라, 네가지 차원으로 수준을 구분하고서 각 수준내에서 내용을 단위별로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

-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수준
- 책임의식과 역할인식
- 합리적 사고와 건전한 논의방식
- 국민적 공감체 형성

② 집단별 특성 유의

사회교육의 대상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각 집단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다르므로 의식도 다르다. 성인대상의 교육에 항상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지만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단순한 사실의 제시와 사실의 분석적 제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졸업의 젊은 세대들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선호하므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훨씬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나 매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③ 토의중심의 수업 전개

통일교육의 성공을 위하여는 교육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방적 강의는 가능한 한 피하고 질의응답식이나 토론식 수업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질의응답과 토론을 개방적으로 진행하면 지리멸렬해질 우려가 있다. 그 시간의 주제(1개 이슈)를 정해놓고 그 한계내에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응답과 토론식 수업일수록 그 수업시간의 주제를 분명히 정하고 주제 밖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컨대 “분단과정에 미친 미국과 소련의 역할”,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등 어느 한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한하여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통일에 관한 의문의 수집

성인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다. 교육대상자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학습의 시작이므로 의문내용의 수집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상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도 의문내용의 수집이 필요하지만, 매시간 시작전에 그들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하여 그 가운데 강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⑤ 강사훈련

사회교육기관은 자체의 교육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통일교육과 같은 특수교육 분야를 자신있게 담당할 전임교육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선 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강사의 양성에 있어서는 미리 작성해 놓은 이슈별 단위 교육내용을 다수 소화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사회교육 강사는 학교교사에 비하여 훨씬 융통성과 임기응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통일교육이면 아무것이나 다루는 전천후 강사가 아니라 각자 나름의 전문영역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생활”, “분단 및 통일의 경제적 측면”, “분단 및 통일과 국제정치”등 강사의 학문적 배경 또는 경험에 따라 각기 전문영역을 담당시켜야 효과적인 것이다.

⑥ 강사의 풀(poop)제

통일교육을 위한 강사가 무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통일교육강사풀”을 운영하여야 한다. 통일연수원이나 어느 기관이 통일교육 강사에 관한 기록을 전산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교육기관과 강사를 신속히 연결시켜 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강사에 대한 기록을 전산입력시켜야 한다. “통일교육강사풀”은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수한 강사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의 강사가 지방에도 나가야 하겠지만 지방별 강사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⑦ 교육대상자의 반복성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자와 강사가 다른 교육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흔하다.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교육대상자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강사로부터 반복하여 듣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낮을 뿐더러 교육진행에도 애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강사가 자신의 담당주제(레파토리)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강사들은 적어도 1년을 단위로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일교육 담당기관이 계속하여 이슈별단위 교육내용(교안)을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강사들은 1년마다 ‘통일교육 전문위

원 연수'를 받고, 그 때마다 새로운 강의주제를 택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강사연수는 통일교육 주관기관과 교육요원들이 접촉하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충분한 사전계획으로 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2박3일 정도의 체계적으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결 론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교육현상들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특성상 사회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육 또한 변화되며, 때론 반대로 바람직한 사회의 도래를 위해 사회혁신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의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은 제체 적인 측면과 체제발전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또한 국민 정신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남과북의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즉,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에 기반을 두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반공교육의 강조시대로부터 통일-안보교육의 시대로 전환 발전되어왔고, 이제 그 양상을 달리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왜냐하면 남과북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특히 남한의 체제역량이 강화되었기에 그 관계는 이전보다 확고해졌고, 국제환경의 변화로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이로 인한 사회주의권내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6·25전쟁의 주범인 김일성의 사망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의 제거라는 측면속에 한반도내에 새로운 변화징조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은 그의 죽음이후 긴장과 불안속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살피고 있으며, 빠른 북한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다. 냉전체제이후의 자국이익우선원칙에 따른 실리외교는 북한의 움직임을 주관하면서 민감한 북한의 핵문제의 조기타결과 이에 따른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4강이 보인 대북 태도에서는 첫째, 후계정권이 안정을 되찾아 김일성이 깔아놓은 대화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둘째, 북한이 영변핵시설의 안전성을 지속하며, 셋째,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쪽으로 끌어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며, 넷째,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당분간 현상유지를 기조로 삼겠다는 목표가 나타났다. 4강은 또 북한의 후계정권이 장차 핵문제와 남북한문제 등을 북-미 3단계회담과 남북대화(정상회담포함)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일제히 권고했다.

이런 4강의 움직임속에 한국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입장과 '인권보호'라는 주장으로 남북회담 및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려 하고 있다.

이에 통일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이념은 다른 모든 교육의 이념이 국가의 이념과 일치해야 하듯이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의 이념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의 이념에 그 기초를 두는 통일교육은 기본전제로서, '통일의 당위성과 목표 및 바람직한 통일상이 개개인의 의식속에 확고히 정립되어 국민 모두가 통일을 이룩해 내는 고통을 수반하여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로 지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통일논의를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기본전제와 이념아래 통일 미래상에 의해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고, 네가지 통일교육기능에 따른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 통일교육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배양기능, 둘째, 체제역량강화기능, 셋째, 통일문화창조기능, 넷째, 체제융합기능 등이며, 이들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며,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능력배양을 위한 내용……인간존중, 민주적 생활습관과 규범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비판적 사고능력고양, 사회적-정치적 참여 기능향상
- ② 체제역량강화를 위한 내용……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이념교육, 공동체 삶의 생활윤리, 사회윤리에 대한 인식,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역량, 안보와 자주국방,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북한체제의 특징과 실상의 구별, 올바른 통일관 정립, 통일방안의 이해와 신념, 남북통일정책 상호비교, 통일비교, 통일비용,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교육운동, 통일비용인식, 경제력 향상에 필요성 인식

③ 통일문화창조를 위한 내용……남북한 생활상 비교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 북한사회제도와 생활 가운데 장단점의 이해와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의 통일, 이질화 극복을 위한 이해와 신념, 우리 고유언어의 발굴 및 발전, 우리고유의 민족정신, 전통문화, 관습등에 대한 이해

④ 체제융합을 위한 내용……사회갈등의 성숙한 해결, 민족내부 갈등해소 방안의 이해 및 태도, 삶의 질 향상수단으로서의 통일에 관련된 내용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실행은 학교에만 그치며,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의 생활화 등은 통일교육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고로 지금까지 학교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양하며,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및 학교, 사회통일교육의 연계성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본론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으나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제언에 있어서도 필자가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몇가지를 충분한 근거없이 제시한 미숙함을 보였다.

그러나 본 논문이 체계적이지 못하더라도 최근 김일성 사망이후의 남한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학생, 교사에게 혼란없는 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요약적 결론은 마치고,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교육전반에 관한 몇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본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통일을 이룩해냄에 있어 이미 통일을 달성해낸 독일의 경우를 참고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독일통일의 과정을 살펴볼때, 특히 우리나라 통일교육에의 시사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을 제시하자면 '사회교육의 실시'라고 할 수 있겠다. 현존의 통일교육을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 즉, 초등교육 6년, 중-고등교육 6년을 통해서만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전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임으로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통일의 미래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나라 전체의 통일분위기 형성을 위해 각 산업단체에서의 사회교육을 의무화시키고, 그 내용에 통일교육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교육은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통일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질적인 사회통일교육의 실현을 위해선, 첫째 사회교육조직의 체계성, 둘째 이슈별 내용조직, 셋째 집단별 특성 유의, 넷째 토의중심의 수업, 다섯째 교사훈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정부관료체제 측면에서 통일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그 참여도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정책의 제안을 위해서도 민간인 수준의 통일에 대한 연구 단체나 조직의 결성이 자유롭고 다양해져야만 한다. 또한 이렇게 조직된 각 단체마다에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자료나 안건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자를 두어 대표자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셋째, 학교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별도의 특별과목으로 설정하여 그 논의와 토의가 활발히 진행될때, 남북의 통일은 우리와 가깝게 될 것이고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두 측면에서 방황하면서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는가하는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학교통일교육은 교육과정상 교육내용에 관련된 지도요점 및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바탕으로 교사의 최신정보와의 접촉을 최대화시키도록 해야한다. 유관기관 또한

이를 위해 자료와 정보 및 교사연수를 강화시키며, 특히 교육연수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전 국민이 '통일'의 그 날까지 '한민족'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다. 그러하기에 통일교육은 생활교육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존재해야 한다. 이런 통일교육이 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에 내면화될 때, 통일의 그날은 곧 올 것이다.

통일! 그날을 열망하며…….

〈참 고 문 헌〉

〈단행본〉

1. 교육부, 『초·중·고교 교과서의 통일·안보교육내용』, 990.
 2. 교육정책자문회의, 『민족동질성회복 교육대책』, 1991. 10.
 3. 국토통일원, 『통일교육자료—새로운 방향 정립 위해』, 1990.
 4. 김동규, 『통일을 대비하는 학교교육』, 통일한국(평화문제연구소), 1993.
 5. 민병천, 『신통일론』, 서울: 고려원, 1992.
 6. 민족통일 연구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현황과 전망』, 1994.
 7. _____, 『러시아 연방의 대북한정책』, 1993.
 8. _____, 『중국의 대북한정책: 현황과 전망』, 1994.
 9. 문교부, 『통일-안보교육 지도자료』, 1989.
 10. 박용현, 『남북통일의 전망과 교육통합』, 서울: 민주문화아카데미, 1993.
 11. 신기철, 신용철,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12. 신정현외,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13. 양호민외, 『통일문제이해』, 서울: 나남, 1993.
 14.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15. _____외,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 박영사, 1988.
 16. 이용필, 『남북한 통합론』, 서울: 인간사랑, 1992.
 17. _____역, 『정치구조분석』, 서울: 인간사랑, 1991.
- David Easter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University of Chicago, 1979).
18. 임용순, 『신국제질서와 한반도통일』, 성대출판부, 1993.
 19. 정세구, 『국민정신교육이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3.
 20.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서울: 희성출판사, 1989.

21. 주독대사관, 『독일통일소사전』, 1992.
22.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1992.
23. _____,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1992.
24. _____,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1990.
25. _____, 『통일교육 지도자료』, 1990.
26. _____, 『통일문제연구 4권』, 1992.
27. _____,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1993.
28.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문답식으로 풀어본 격동기의 통일-안보교육』, 1990.
29.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교사를 위한 참고자료』, 1988.
30. _____,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통일교육 방향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1988.
31. _____, 『학교통일-안보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안)』, 도덕교육 연구실, 1988.
32. 한국국민윤리학회, 『개방화시대의 국민윤리교육』, 1988.
33. _____,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교육』, 서울 : 형설, 1992.
34. _____, 『사상과 윤리』, 서울 : 형설, 1992.
35. 한국정신교육추진위원회, 『1980년대 국민정신교육 기본지침』, 1988.

〈논문 및 정기간행물〉

1. 고영복, “남북한 이질문화의 극복을 위하여,” 『민족지성』 4월호, 1988.
2. 김경웅, “북한의 문학-예술”, 통일연수원, 1992.
3. 김경환, “민족사적 정통성과 평화통일”, 국민대학교대학원, 1983.
4. 김신일,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1991.
5. 김학동, “교사들의 통일안보의지에 대한 조사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1990.

6. 김학준, “분단사의 재조명”, 이흥구,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1984.
7. 김학룡, “교사들의 통일안보의지에 대한 조사연구”, 국민대학교석사논문, 1990.
8. 박노식,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통일안보교육의 연계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9. 박문갑, “도덕과교육에의 통일교육방안 모색”, 한국교육논총 5집, 1992.
10. 박성조,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통일연수원, 1992.
11. 박용현, “정치교육의 성격과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편, 『정치교육』, 형설출판사, 1984.
12. 백종억,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방향 탐색”,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992, 봄호.
13. 손우정, “국민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비판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14. 신순길,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1991.
15. 신술철,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1990.
16. 안병준, “김일성사후 4강의 한반도 정책-김일성사후 한반도 정세 전망”, 아시아 사회과학 연구원, 1994.
17. 안영호, “격동기의 통일안보교육”, 한국교원단체연합회, 1990.
18. 유병숙,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19. 유석렬, “남북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안”, 서울대학논문집.
20. 윤건영, “남북한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1. 이상재, “통일교육에의 한국사상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
22. 임영길, “한국국민정신교육의 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5.
23. 임영철, “한국국민정신교육의 사적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5.
24. 조병준, “통일교육의 시각에서...”, 강원대학교 대학원, 1990.
25. 클린턴대통령, “미국의교정책”, 『시평』, 주한미국공보원, 1994, 제3호.

26. 하용출, “남북한 분단상황 극복방안 연구”, 국토통일원, 1988.
27. 한정도, “90년대 통일교육의 방향”, 공주대학교대학원, 1990.
28. 홍성기, “국민학교도덕과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
29. 홍순식, “국민학교 도덕교과서에...”, 경희대학교대학원, 1989.
30. 황인선, “반공교육이 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1990.
31. 황영철, “북한 인민 학교의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92.
32. Donald Zagoria, “클린턴대통령의 아시아정책”, 『시평』, 주한미국공보원, 1994, 제3호.
33. 동아일보, “7% 김정일체제 불안감”, 1994, 7. 22.
34. 조선일보, “일, 방위계획 수정 착수”, 1994, 7. 26.
35. _____,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한국전쟁 비밀문서, 6.25진상”, 1994, 7. 21.
36. _____, “북에 개혁, 비핵화 등 6대정책 제시”, 1994, 7. 22.
37. 한겨레신문, “조문의교, 한반도 주도권 겨냥”, 1994, 7. 14.
38. _____, “주변 4강 조문의료”, 1994, 7. 14.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권 해 숙
(충남대 생화학과 4)

《 목 차 》

- I. 서론
- II. 통일교육의 변천과 성격
- III. 통일대비교육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 IV. 통일을 대비한 민족정신교육의 방향
- V. 결론

I. 서 론

1. 연구 목적

해방 전까지 단일민족국가였던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남북 분단을 체험하였다. 분단 이후 반세기는 남·북간 이질화, 이데올로기 경쟁의 강화, 적대 관계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반통일적인 교육만이 강화,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동시 UN 가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등장은 냉전시대의 종말을 비로소 선언하는 것으로 이제는 남, 북 간의 평화 공존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인 “선언”하에서 남은 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남북 간의 이질성을 좁혀나갈 것이며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통일은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양 체제 간의 의식 가치관의 통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¹⁾이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 이후의 혼란상만 감안하여도 이러한 필요성은, 부연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통일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기 보다는 남북대치상황에서의 국가안보 수호라는 명제에 훨씬 더 큰 비중이 두어지는 안보 수호의 수단적 가치 또는 부차적 수단으로 통일교육이 활용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전시대 논리의 산물이 이와 같은 ‘분단고착화’적인 반공일변도체제의 통일교육은 결코 오늘의 통일환경에 있어 통일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교육의 결과들은 철저한 통일 저해 의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

1) 백종억,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방향 탐구”,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2) p. 196

고 냉전구조 속에서 형성된 경직된 논리들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합리성과 같은 가치들이 강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²⁾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등에도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과거와 같은 명칭만 달리한 반공일변도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시키고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시킨다는 측면에서, 분단 이후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시대에 맞는 통일대비교육의 방향을 지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은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분단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전개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통일대비교육의 필요성을 독일의 통일대비교육을 예로 들면서 살펴보고, 통일대비교육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 IV 장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교육의 방향을,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제 V 장의 결론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II. 통일교육의 변천과 성격

통일 관련 교육은 대체로, 정책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여 달라져 왔다. 즉,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통일교육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으며, 통일교육은 이에 따라 방향을 옮겨 왔다는 것이다. 용어의 사용 역시 이같은 정책 변화, 특히 대북관의 변

2) 대통령자문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서울: 동아일보사, 1993), p. 106~107

화에 따라 “반공 교육”, “통일·안보 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달라져 왔다.

1. 반공 교육기(1948~1983)

(1) 반공 교육의 전개 과정

반공교육은 19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50년의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을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반공 교육을 강조케 한 독특한 역사적 체험을 갖게 된 것이다.

1954년 정부는 “반공, 항일 교육 요점”의 문교시책을 발표, 그 실천에 주력하였다. 1955년에 제정된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는 반공 교육의 필요성이 사회과에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³⁾ 1961년 5. 16 혁명은 반공교육의 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군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채택하여 용공 및 중립주의를 배격하고 반공 및 국방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교부도 1962년 초, 중, 고 각급 학교에 “반공 도덕” 시간을 두고 교과서를 개편하여 공산주의의 성격과 침략상을 소개하였다.⁴⁾ 1963년에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반공도덕은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 분리되었으며,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와 더불어 교과 명칭을 “반공 및 국민윤리”로 하고 이를 중시하였다. 또, 1971년에는 고등학교에 “국민윤리”를 독립된 교과로 설정하였다. 1973년의 “10월 유신”은 반공 교육의 국면을 다시 전환시킨 사건이었다. 10월 유신과 함께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도덕”을 독립된 교과로 신설, 양립 교과로 하고 국민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어 1974년에 개정된 국민윤리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발표는 반공 교육의 초점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⁵⁾

3) 신상조,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제11권 3호 (교육부 1992), p. 41

4) 이영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전편)”, 『북한』 제256호 (서울:북한연구소, 1993), p. 186~187

5)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나남, 1992) p. 482~483

요컨대, 위에 열거된 반공 교육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흐름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 수립 5·16까지로, 이 기간에는 국제정세, 특히 6·25를 체험함으로써 반공 교육이 시작될 단서가 마련되었다. 둘째, 5·16~10월 유신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이후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평화적 “통일”교육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의 “방공” 교육이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셋째, 10월 유신~1984년(제5차 교육과정)까지의 기간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종전의 소극적, 방어적인 방공 교육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데로 중점을 두게 되었다.

(2) 반공 교육의 성격과 문제점

반공 교육의 성격은 폐쇄적인 이념 주입의 교육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반공 교육의 목표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바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공 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각도에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공산주의나 북에 대한 지적 탐구(Intellectual Inquiry)와 신봉 행위(Believing Involvement)는 매우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이 반공 교육에서는 공산주의를 알려는 것 자체를 애초에 차단함으로써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반공은 공산주의적인 것은 모두 나쁘다는 선입견과 편견이 내재되어 있어 이긴 후의 전망을 주지 않는 개념이다.

과거 반공 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반공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적절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대북 경계심과 통일 의지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셋째, 북한과 공산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의 변화 양상에 적절히 대응치 못했고; 넷째, 현실 문제에 집착한 결과 과정상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북한의 실체를 도외시하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였다는 등 네가지를 지적하고 있다.⁶⁾

6) 백중억, 1992 p. 197

2. 통일·안보 교육기(1984~1992)

(1) 통일·안보 교육의 전개 과정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 논의가 다양화되고 반공 이념의 시대적,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됨에 따라, 반공 교육의 개선 요구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통일 의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국민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6년부터는 통일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의 발표라 할 수 있다. 1984년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종래의 반공교육(또는 반공 안보 교육)을 버리고 “통일·안보 교육”을 채택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용어에서 “구태여” 안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종래의 반공교육이 통일, 국방, 안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으므로 통일만 앞세울 경우 국방 안보의 면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통일을 강조하되, 안보와 경계를 종전보다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통일·안보 교육의 성격 및 문제점

이같은 통일·안보 교육의 의미는 첫째, 통일을 이루겠다는 노력의 실제와 기운을 “통일교육”이라는 말이 “반공 교육”이라는 말보다 더 잘 부각시킬 수 있었다.

둘째,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반공 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부담을 삭감시킬 수 있었다. 셋째,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말을 반공 교육이 갖는 함의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긍정과 친밀감 및 언젠가는 합쳐야 할 반쪽”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었다. 넷째, 반공 교육이라는 말이 남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과 달리 통일·안보 교육은 남, 북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토록 유도한다는 데서 포괄적이다. 다섯째, 반공이 북한과

공산주의와의 관계에만 한정된다는 것과 달리 통일 안보라는 말은 국체와 생존 및 통일을 위협하는 것 일체에 대한 경계를 뜻하므로 더 포괄적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⁷⁾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반공 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족으로서의 북한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일·안보 교육”도 최근의 남, 북한 UN 동시가입, 합의서 채택 및 발효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통일현실을 수용하는 데는 미흡하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통일교육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⁸⁾

3. 통일교육의 성격과 지향점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성격과 지향점 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반공 교육, 통일·안보 교육 등의 통일교육은 “분단 지향적인 모습의 통일에 관한 교육”이었지 “통일을 위한 교육”은 될 수 없었다.⁹⁾ 새로이 제시되는 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을 위한 교육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개념은 정세를 비롯한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통일 대비 교육과 통일 이후 교육으로 이분해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통일 대비 교육은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 공존 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 때까지 필요한 범국민적 교육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 및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에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 규범 등을 습득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통일 이후 교육은 통일을 이룩한 이후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화에

7) 교육개발원, 1988 p. 15

8) 백종억, 1992 p. 198

9) 김문환, 1991 p. 245~252

10) 백종억, 1992 p. 200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학교 및 시민 교육이다. 이같은 구분에 따라 양자는 다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대비 교육이나 통일 이후 교육은 적용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는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념화 내용 주입으로 전락된 통일교육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타당한 교육 내용, 방법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일 교육관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목표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통일교육은 명확한 목표 제시의 결핍, 미비로 인해 비자율적, 수단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해 화합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행동인 등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보충적이며,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천부적 권리이므로 각 개인의 주체적 판단이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의 원리가 결정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념과 체제의 이상으로 함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이념과 체제의 지향성에 따라,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의 실질적 주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민주시민 교육은 구성원의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의 생활화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¹¹⁾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통일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도덕 원리에 바탕을 둔 가치판단력으로 자신에 대한 신념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래야만, 통일교육은 정치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은 대부분 당위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또한 그 내용은 우리의 통일 방안만이 우수하다는 일방적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그 나름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같이 수행해 왔다고 본다. 여기서 순기능은 반공,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의 이데올로기가 집권층의 의도대로 전국민에게 무리없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역기능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야기된 통일교육의 내적 모순, 즉 반통일적 사고의 형성을 촉진시켰다는 점이다. 이같은 통일교육의 내용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통일교육의 기본 관점이 이른바 “분단지향적인 교육”의 모습을 띤 “통일에 관한 교육”이었지 “통일을 위한 교육”은 아니었다. 둘째, 교과 내용의 반통일성으로, 교과서상의 북한 주민의 생활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이념과 내용의 분리인데, 통일교육의 이념이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면 내용구성도 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추상적인 이념과 원리를 선언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스코프(scope)와 시퀀스(sequence)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즉, 통일교육의 내용을 교육목표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부합시키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방법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통일교육의 방법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주입 또는 설득 위주의 방법상의 문제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감정과 정의만을 강조하고 교사 중심의 주입, 암기 위주의 교수, 학습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거부감과 불신감만을 심어주는 역기능을 심화시켜 왔다. 대학생이 되면 “데모

12) 김문환, 1991 p. 245~252

꾼”으로 급변하는 현실을 물고 온 것이다. 이는 가치의 주입, 설득이라는 방법 자체를 반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치의 부입, 설득이 결국에는 학습자에 의해 거부되고 만다는 상식적 귀결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를 탐구하며 스스로 “자기 원리하”에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결정하며 판단할 수 있는 가치판단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적 지식과 행동의 문제, 즉, 지행합의이다. 통일교육은 “정책 교과”로서 통일정책 등의 지식을 홍보하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가치, 태도를 형성할 때 장차 통일의 주체들에게 논리적, 판단적, 창조적 사회인식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될 것이다.

셋째, 남, 북간에 서로 흑백 논리 위주의 체제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비교하고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즈음 흑백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각박한 사회 현실을 낳고 말았다. 남을 생각하는 인간 교육이 바탕이 되어 대화와 화합의 논리가 강조되는 의사결정 과정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컨대 집단토의법에 의한 객관적 지식성장의 성과와 과정을 학습, 또는 포퍼¹³⁾의 “설명과정”으로써의 교수, 학습 과정이 요구된다. 교회와 같이 어떤 절대적이고 이미 결정된 가치를 주입하려 하지 않고 또한 “과학적 지식의 소비”로 갱생하지도 않으며, 대립하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점에 더해 자기의 합리적인 가치판단으로 선택과 결단을 하여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의사결정 과정의 수업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어야 한다. 예컨대, 집단토의법을 통하여 민주 의식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학습 풍토가 민주적이어야 하고 학생 자신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인가를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이 경험에 보고 참여하여 자기 원리를 구축하는 방법만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없다.

13) Popper, 1979

(4) 통일 교육관의 전환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의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교육 조건의 조성이 급선무인데 교육의 자주성 문제로서 교육주체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주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실시해 왔던 반통일적 교육 내용을 척결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자료를 제시하여 우선 “북한을 바로 알기”¹⁴⁾ 운동을 전개하고 객관적인 토대에 근거한 통일 논의를 통해서 통일교육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여, 온 국민이 통일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길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가 동시에 고려된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의 전개에서 찾아야 하겠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어야 한다.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대결의 논리에서 화합의 논리로 전환하여 잦은 교류를 통해 통일 문화를 창조하는 데 노력하는 민주시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지식과 균형 있는 사고 및 논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방법은 통일의 당위성을 국민 각자가 스스로 체득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통일의 당위성 교육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판단 하에 내면화, 가치화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감정적 대립을 해소시키는데 정신적 가교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이질화된 문화체계의 동질화를 모색하는 대화와 화합의 이론과 기술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4) 정세구, 1990

넷째, 통일교육은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갖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통일교육은 다분히 교화나 도야론에 가까웠으며 조금 반전적인 형태가 가치명료화 전략이었다. 미래의 통일교육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명료화를 추구하는 “의사결정형”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Ⅲ. 통일대비교육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1. 통일대비교육의 필요성

(1) 통일대비 교육의 의미

통일대비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다.¹⁵⁾ 다시 말해서 통일대비교육이란 지난 48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찾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대비하고 완성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능력 배양, 행위규범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학교 및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합리적, 객관적 사고와 진지한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한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15)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993)

16) 백중억,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방향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2. 봄) p. 201

통일대비교육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성취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 독일의 통일대비교육

독일은 1978년 11월 23일 독일 연방공화국 주 문교장관 상설회의에서 학교에서의 독일 문제에 관한 교육 지침을 결정하여 발표한 이후부터¹⁷⁾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국사와 지리교사, 교과서의 저자, 출판계 대표를 위한 세미나를 1백여회 개최하였고 '동일의 영광'이라는 교육용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영하여 '독일은 하나다.'라는 민족동질성 조성교육을 실시해왔다.¹⁸⁾

또한 여러 기관을 통하여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단된 양쪽에 살고 있는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서독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내독관계성'의 활동과 사전 출판회사 '두덴'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내독관계성에서는 독일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시 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 출판하거나 또는 외부의 저작활동을 지원하였다. 또 동독의 실상황에 관한 필름의 대여, 동독 방문의 기회 확대, 서독의 시민들에게 개개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조언 및 도움을 제공했다.¹⁹⁾

사전 출판 회사 두덴은 2차 세계대전 이전 동부 도시인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두

17) 김송일, "독일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 『교육학 연구』 제28권 3호(한국 교육학회, 1990) p. 32

18) 최인화, p. 364

19) 김효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교육의 발전적 방향", 『대학생통일논문집』 (통일 원, 1992), p. 83~84

고 있었으나 종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자, 서독 지역의 만하임에 새로운 두덴출판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동서독에 각각 나누어 있어 두덴출판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다시 합쳐져 동독에서만 쓰던 6천여 단어를 수용하여 11만 5천여 단어에 달하는 통합 독일어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켰다.²⁰⁾

이외에 각 정당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자민당의 에버트 재단, 기사당의 자이델 재단등도 동독 관계의 연구소를 두어 많은 통일교육 자료를 출판, 홍보, 배포하였다.²¹⁾

이렇게 볼 때 독일의 통일대비교육은 우리와는 달리 민족 교육의 차원에서 분단의 실체를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이해시키며, 민주주의와 그들의 사회복지 제도란 생활 양식에 대해서 확신과 긍지를 갖도록 교육함으로써 통일을 준비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민족교육이 원동력이 되어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2. 통일대비 교육의 실행 방안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통일대비교육은 모든 교육기관, 즉 유아기, 초, 중, 고, 대학교를 통해서 시도되어야 하되,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에 있는 젊은이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교육도 개선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지만, 이 둘은 긴밀히 연계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

(1) 통일을 대비한 학교교육

1990년대에 들어 점차적으로 통일교육 분야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중시하고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UN동시가입등 급

20) 전수태, “남북한 언어의 통합”, 『한국대학신보』 1992년 3월 9일자

21) 신용철, “독일의 통일교육과 교육 통합 정책” 『교육월보』 제11권 3호 (교육부, 1992), p. 67

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부분 수정을 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이념 지향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통일 대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표심리학적 차원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기에, 각 학교 급별로 통일교육 실행 방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학교에서는 남북한의 지리적, 역사적 사실만을 비교해 주고 이념적 가치판단을 교육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는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피아제트(piaget)의 발달 심리학²²⁾에서 보듯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의 부여를 통해 그들이 구체적, 조직적 사고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국민학교 교육에서는 효과적이다.

둘째, 중학교에서는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단계이므로 이에 알맞은 내용 배열이 점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²³⁾ 주로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생활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그 자체의 교육이 남한의 우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참고 서적으로는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과 귀순한 사람들의 북한 생활편을 읽도록 하여 학생들이 토론하도록 하는 교육방식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 비교방식으로 취하여 남북한의 관계개선 방향과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까지도 심화하여 실시하여, 두 통일방안의 통합방안을 토론토록하여 통일국가의 참다운 미래상을 그려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은 교수학습 방법이나 지도 과정에서도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주입식교육이 아

22) 여기서 Piaget이론은 인지 또는 지적 발달 단계의 설명에 핵심을 두는 바, 그 단계는 감각 운동(물체영속성의 발전을 중요시함)로부터 출발해서 전조작기(상징을 이용하기 시작함), 구체적 조작기(보존개념발달)를 거쳐 형식적 조작기로 발달(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정이 체계적으로 검토된다.)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23) William, Grain, Theories of Development : Concepts and Applications(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80), p. 75 infra

닌 탐구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간접적 경험의 기회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많이 부여하고 가급적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교에서는 통일국가 건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토록 함으로써, 통일의 장애물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의 제거를 위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통일 교육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진지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있는 통일 안목의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행 남북한의 학교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목표와 정책, 제도에는 그 상반성과 이질성이 너무나 많으므로 만일 갑작스런 통일이 닥쳐온다면 오늘날 동서독의 혼란과 갈등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에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은 조속히 통일대비와 통일 후의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연구기구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²⁴⁾

(2) 통일을 대비한 사회교육

통일을 대비한 사회교육의 목표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을 고양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인식을 고취하며, 개개인에게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의 논의태도 및 규범을 습득케하고, 이상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시켜 나가는데 있다²⁵⁾

24) 김동규, “다가오는 통일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에 대비한 학교교육,” 『통일한국』 통권 제113호(서울: 평화 문제연구소, 1993. 5), p. 30~31

25) 통일원 p. 108

성인에 대한 통일대비교육은 관련문제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수하고 바람직한 토론태도와 행위규범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균형적으로 교수하되, 기성세대로서의 통일성취에 대한 공동책임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사회교육은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의도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²⁶⁾ 따라서 통일대비교육이 추구하는 성취목표와 내용을 상세화하여, 교육자가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안의 준비와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선정 조직된 교육내용은 결론을 담고 있기 보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나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통일대비교육은 특정 교육, 연수 기관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문, 라디오, TV 등 모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및 대중조직, 박물관, 전시관등 사회공동시설물과 환경물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사회화의 매체들에 의해서도 통일대비교육이 기능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교육은 해외 동포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여 세계속의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새로운 생활 공동체에 대한 전망과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주고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통일대비교육은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실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²⁷⁾ 그리고 모든 사회교육의 주관기관은 새로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26) 통일원 p. 109

27) 최인화 p. 368

Ⅳ. 통일을 대비한 민족정신교육의 방향

1.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

(1) 통일대비교육의 기본 전제

통일대비교육은 한민족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세계 속에서 자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통합의식 고취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며 통일된 조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통일대비교육의 기본 전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대비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남북한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스스로 체득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대비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통일의 당위성 교육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여기서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요청, 인도주의적인 요청, 민족국가 발전을 위한 요청, 국제정치적 요청이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셋째, 통일대비교육은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통일국가 및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관해서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지식과 균형있는 사고 및 논의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통일대비교육은 과거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의 개념 및 내용, 체제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통일국가 및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구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일대비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정신적 교류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이질화된 문화체제의 동질화를 모색하는 이론과 기술이 포

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대비교육은 민족주의이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남북한간에 일체의 무력행위를 배제하는 평화적 접근 방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대비교육은 비교적 현재의 이념적 갈등이나 대립과 관련이 적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인 실용적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일곱째, 통일대비교육은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현실적 상이성에 관한 교육 못지 않게, 윤택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전후세대에 맞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째, 통일대비교육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갖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2)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신사고 조성을 위한 교육

통일대비교육의 출발은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신사고 조성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²⁸⁾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반공일변도의 교육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음은 물론 북한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감을 계속 누적, 강화시키고 결국 그로인해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신사고란 막연히 규범적 차원이나 감상적 차원에서의 통일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며 복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제시되고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은 과거와 같은 편향적인 통일교육의 잔재를 일소하고 보다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의식을 전 국민에서 확산, 보급하기 위한 통일교육이념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모든 유형의 교육기관과 그들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통일대비교육은 동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남북한

28) 『동아일보』 1993년 3월 17일자, 2면

간의 진정한 공존적, 동반자적 균형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피교육자가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전향적인 통일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인모를 대남선전, 선동 및 체제유지의 호재로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인모 문제를 다른 남북간 현안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무조건의 인도주의’ 실현에 입각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신병을 북한에 인계하기로 합의한 점²⁹⁾과 김영삼 정부가 민족복리, 공존공영, 국민합의 등을 기조로 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인모의 무조건 방북을 허용한다는 단안을 내리게 된 것³⁰⁾은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신사고 구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통일대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반세기에 가까운 남북의 분단상태에서 심화되어 온 ‘민족이질화의 해소문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한 이질화의 정도는 이제 민족의 공동유산인 일상 언어생활에까지 침투된 상태이며, 그로 인한 용어와 개념의 혼란이 가중되고 나아가 왜곡된 민족관, 통일관등의 문제까지 겹쳐 이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곧 ‘동질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전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남북간에 상당히 진전된 이질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며 더 이상의 이질화를 막고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본다.³¹⁾

29) 『조선일보』 1993년 4월 5일자, 7면

30) 김종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신보』 1990년 12월 1일자

31) 이윤식, “남북한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북한연구』 제4권 1호

(1)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

민족동질성 회복의 최우선 과제는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이다.³²⁾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최상의 존경과 동등한 존엄성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우열관계, 문화적인 차이에 기초해서 공동체적 애정과 연대는 파괴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 기초한 통일은 더욱 심각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³³⁾ 여기서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기본적 이념을 민족성원으로 하여금 민족의 자기결정성에 입각한 주체적인 독립국가의 완성,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정의로운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상을 육성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의 이익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장기적 이익의 추구가 남북한 간의 분단에 기초한 체제대결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간의 경제적 긴장이 어느때 보다도 치열해지고 지역별 경제블럭화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성을 위한 노력도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진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표현된 것처럼 ‘민족공동체’의 원칙에 충실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결의식보다는 공동체적 애정을 앞세우는 자세로 통일정책 및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이 상이한 정치, 경제체제와 이념을 가진 채 40여년이 지났으나 결국은 게르만, 독일민족 의식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은 민족주의야말로 그 어떤 인위적인 정치체제나 이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³⁴⁾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대방에 대한 적

32) 손학규, “남북한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의 의의: 평가와 전망』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통일문제세미나 발표논문집, 1992, 9. 4), p. 44

33) 최인화, p. 350

34) 광태환, “남북합의서 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8권 제2호 (1992년 가을호), p. 318

대의식 또는 ‘악마적 인식’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³⁵⁾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민족적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에서는 한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 간직한 독특하고 동질적인 문화, 전통, 언어, 민족정신 등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내용이 지도되어야 한다.³⁶⁾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시민상은 한마디로 바람직한 ‘통일조국의 이념’이나 그 선행 단계로서의 ‘민족공동체 이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대비교육이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을 조장하고 촉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둘 때, 민족동질성 회복의 날이 빨리 올 것이기 때문이다.

(2)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

같은 핏줄을 가진 민족이 함께 협력하고 화합하여 공존공영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동질의 문화를 지니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해 민족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질의 문화를 사전에 형성할 수 있는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통일대비교육에서는 통일문화의 창조를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³⁷⁾

여기서 통일문화 창조를 통한 남북한 동질화의 가능성은 대체로 다음 몇가지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이 다같이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한이 통일문제나 대내 통치면에서 다같이 민족 내지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복지사회로의 지향이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만인평등 이상을 실현시

35) 한명희,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1992, 3), p. 38

36) 한명희, p. 38

37) 임채욱,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의 정책방향,” 『통일로』 통권 58호 (서울: 안보문제연구원, 1993, 7), p. 75~77

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름아닌 복지사회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동질성의 확립과 그로 인한 통일문화의 창조는 감정적이고 전통적인 옛 5000년 민족문화의 재현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장차 통일 이후의 사회의 복지사회, 민주사회,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문화양식을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는 통일대비교육의 과제는 맹목적인 전통의 고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민족동질성 개발이 선택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통일대비교육의 내용은 남북한 사회가 모두 그 성원들의 경제적 풍요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 변화와 조건에 충족되는 문화내용의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통일대비교육의 전과정에서 민족동질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일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유념해야 될 것인가?

우선 5000년에 걸친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함은 물론 그 창조적 발달까지도 도모하며,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이념을 합리적으로 발현시키며,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실용적, 현실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화는 남북한 상대방에게 각기 타당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합리성을 구비하고, 국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함이 효율적이다. 또한 통일문화는 남북한의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번영과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여야 하고, 남북한 상대방에게 정치이데올로기의 강요나 설득을 지양하며 오로지 민족공영을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실체를 대등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대결의 논리에서 화합의 논리로 전환하여 민족통합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의 공동문화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부터 잦은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민정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통일문화 창조의 행동주체는 민족성원 개인이므로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38) 양호민 외, p. 353

참여해서 통일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통일대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통일이후의 삶을 대비한 교육

통일이 되기도 전에, 통일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결코 아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더욱 격상된 삶을 보장할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런데 통일과 더불어 이런 격상된 삶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³⁹⁾

(1) 통일비용 감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비록 현재 남북한 간에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의 진전은 통일비용의 축소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촉구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은 1970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후에, 20여년간 동독을 돕기 위한 돈으로 약 600억 마르크 정도를 썼다. 1년에 평균해서 1조 2천억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⁴⁰⁾ 그리고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향후 10년간 모두 8천억달러에서 1조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통일독일정부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통일과정이 의외로 신속하게 진행되자 통일정부는 통일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업, 주택, 환경, 에너지, 농업, 통신, 교육, 문화 등 거의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예기

39) 신창섭 『분단보다 통일비용이 싸다』 (서울: 열음사, 1990), p. 136

40) 안정수, “통독 이후 2년-현장르뵐: 독일,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자유공론』 제3000호 (성루: 자유공론사, 1992, 3) p. 265~270

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⁴¹⁾ 이외에도 통일 후 구 동, 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오랜 분단상황하에 축적되어 온 상이한 경험과 사고방식, 생활방식 및 상대방에 대한 편견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독일은 정부 각 기관이 교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왔고, 통일문제 연구학자 만해도 3천여명에 달해 신속한 제반 조치가 가능했다고 한다.⁴²⁾

통일 전 독일과 남북한은 유사성만큼 차이점도 많다. 동, 서독은 한국과 달리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국가간의 공적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최소한 연락과 서신왕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서 남, 북한은 처절한 전쟁을 치렀고 약간의 고식적인 접촉을 제외하곤 국민간의 접촉은 거의 허용되지 않아 왔다.

인구면에서도 남한은 북한의 2배인 데 반해 서독은 동독의 4배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남한의 16% 수준에 불과한 반면 동독의 1인당 GDP는 25%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통일독일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볼 때, 한국의 통일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⁴³⁾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남북경제 통합비용은 통일시나리오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2천억-4천억달러가 소요될 것⁴⁴⁾이며 독일식 단기흡수통합인 경우에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⁵⁾

41) 김용재, “통일 2주년-현장르뵐: 독일, 예멘을 가다,” 『자유공론』 제306호 (서울: 자유공론사, 1992, 9), p. 1158~1159

42) 헬무트 슈미트, “통일은 점진적 방식으로, 시간과, 투자에 인색치 말아야” 『통일』 제142호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3, 7), p. 51

43) 영국 EIU연구소, “2천년내 한반도 통일된다.” 『자유공론』 제304호 (서울: 자유공론사, 1992, 7), p. 210~213

44) 박홍규, “남북한관계 변화와 국민의식,” 『통일문제연구』 제4권 4호(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2, 겨울) p. 113~114

45)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p. 104

그러나 남한이 엄청난 통일비용을 포함해 과연 통일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분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로 우리 민족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고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온 자신감이 있다. 둘째로 동서독 선례를 교훈삼아 시행착오를 회피할 수 있다.

셋째로 자유방임주의 원칙 하에서 무계획적으로 통일을 이룬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계획에 의한 통일 처리가 가능하다.

넷째로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 초기에 공산주의 체제에서보다 일시적으로 생활이 더 악화될 수 있었으나 북한은 생활수준이 너무 낮아서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 없기에 통일될 때, 즉시 북한의 뚜렷한 생활수준 개선이 가능하다.

다섯째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적 유대는 가난한 북한 친척에게 식량지원 등을 할 것이고, 남한 인구의 4분의 1을 점하는 교회가 강력한 힘으로 북한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기에 정부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로 통일에 대한 목적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비용부담에 따른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로 인한 국민감정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독일 통일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일비용감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남북의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교육

분단상황이 종식되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을 갖고 있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문제는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지느냐 또는 오랜기간에 걸친 양측의 자기수정과 교류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문제의 심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양측 주민 사이에 이질감의

극복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극히 어렵게 이루어지거나 간에 바로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독일의 예를 보면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방송의 상호수신, 상호방문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교류를 시행했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후 많은 독일인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록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 독일인 간의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및 세계 인구현황”이란 자료에 의하면 1992년 현재 남북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출생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0.6%에 달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남북인구의 2/3를 육박하고 있다.⁴⁷⁾ 이는 남북 인구의 대다수가 각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하에서 성장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런 대비없이 급격한 통일은 전혀 다른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살게 됨으로 해서 매우 심각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준비는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한국의 단일 생활권내에서 생활하면서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없애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입장이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으로 해서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해 내는, 즉 남북의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케 하는 것이다.⁴⁸⁾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될 시민의 자질과 삶의 방식에 대한 교육을 지금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46)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p. 105

47)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p. 102

V. 결 론

지금까지 과거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과 문제점, 통일대비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통일교육은 체제수호를 위한 반공교육이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라 그 명칭만을 달리하여 실시되어 왔을 뿐,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시키는 교육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반공중심 교육의 실시가 6·25를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여겨질런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민족통일을 이루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민족이질화와 통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대비교육은 독일의 통일대비교육을 교훈삼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 둘은 유기적 연관관계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대비교육은 우리 민족의 소망된 통일국가의 실현에 기여하고, 새롭게 통일되는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주도록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국가의 필요성, 즉 주권과 국체의 존중과 생존과 복지의 중요성 및 국가 유지의 제반 현실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전향적 사고와 창의력의 발휘를 북돋울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통일국가 및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구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창조해야 할 새로운 한국이란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된 조국이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의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임과 동시에,⁴⁹⁾ 김일성 주석이 최고 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⁵⁰⁾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연구소가 1992년 4월에 발표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이 2천년내 이룩될 것이라는 각계의 전망이 요즘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⁵¹⁾ 김영삼 대통령도 그의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금세기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천년내 통일의 가능성을 내비치었다. 한반도의 통일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이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북한 양측 지도자들이 밝힌 것처럼 통일문제가 더 이상 정치활동의 불모가 아니고 진정한 민족자존의 번영을 위한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면, 시대에 맞는 통일 대비교육이 전국민 차원에서 착실하게 꾸준히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49) 『동아일보』 1993년 2월 25일자, 1면

50) 신복룡, “통일시대의 한국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서울: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봄), p. 44

51) 영국 EIU연구소, p. 19

〈참 고 문 헌〉

- 곽태환, “남북합의서 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8권 제2호
(1992년 가을, 겨울호)
- 김동규, “다가오는 통일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에 대비한 학교교육”, 『통일한
국』 통권 제113호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3. 5)
- 김송일, “독일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 『교육학 연구』 제28권 3호
(한국교육학회, 1990)
- 김용재, “통일 2주년 - 현장르뵈 : 독일, 예멘을 가다”, 『교육학 연구』 제28권 3호
(한국교육학회, 1990)
- 김용재, “통일2주년 - 현장르뵈 : 독일, 예멘을 가다”, 『자유공론』 제306호 (서울 : 자
유공론사, 1992, 9)
- 김종철,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신보』 1990년 12월 1일자
- 김태완, “남북한 교육 교류, 협력의 방향”,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1992)
- 김태완,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월보』 제11권 14호 (교육부, 1992)
- 김효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적 방향”, 『대학생통일논문집』
(통일원, 1992)
- 박흥규, “남북관계 변화와 국민의식” 『통일문제연구』 제4권 4호 (서울 : 통일원 교
육홍보국, 1992, 겨울)
- 백종역,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방향 탐구”,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서울 :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2, 봄)
- 손학규, “남북한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
택의 의의 : 평가와 전망』 (서울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통일문제세미나 발
표 논문집, 1992, 9, 4)
- 신복룡, “통일 시대의 한국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 (서울 : 통일원

- 교육홍보국, 1993, 봄)
- 신상조,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제11권 3호 (교육부, 1991)
- 신용철, “독일의 통일교육과 교육 통합 정책”, 『교육월보』 제11권 3호 (교육부, 1992)
- 신창섭, 『분단보다 통일 비용이 싸다.』 (서울 : 열음사, 1990)
- 안정수, “통독 그후 2년-현장르뵈 : 독일,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자유공론』 제 300호 (서울 : 자유공론사, 1992, 3)
-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 : 나남, 1992)
- 유석인, “독일의 교육제도”,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1992)
- 유재현, “현시기 통일논의의 재조명”,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 (서울 :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봄)
- 이영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 (전편)”, 『북한』 제256호 (서울 : 북한 연구소, 1993)
- 이윤식, “남북한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북한연구』 제4권 1호 (서울 : 대륙연구소, 1993, 봄)
- 임채욱,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의 정책방향”, 『통일로』 통권 59호 (서울 : 안보문제연구원, 1993, 7)
- 전수태, “남북한 언어의 통일”, 『한국대학신보』 1992년 3월 9일자
- 최운실, “다가오는 통일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민주시민’ 자질 함양에 역점” 『통일한국』 통권 제113호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3, 5)
- 최인화,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서울 :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1, 봄)
- 한명희,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1992. 3)
- 헬무트 슈미트, “통일은 점진적 방식으로, 시간, 투자에 인색치 말아야”, 『통일』 제 142호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3. 7)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 동아일보사, 1993)
영국 EIU연구소, “2천년 내 한반도 통일된다.” 『자유공론』 제304호 (서울 : 자유공
론사, 1992. 7)

『동아일보』 1993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1993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 1993년 4월 5일자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법적 근거와 독일사례 중심으로—

이 창 숙

(충북대 정치외교학과3)

《 목 차 》

- I. 서론
- II.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법적근거
- III.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협력
- IV. 이산가족 재결합의 저해요인
- V. 독일 이산가족 재결합 방안
- VI.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실천방안
- VII. 결론

I. 서 론

1. 연구목적

한민족이 분단 된지 올해로 49년이 되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는 44년이 되었다. 이런 민족분단의 불우한 역사는 많은 이산가족들을 만들었음은 물론 남북으로 분단된 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산가족에게 이산의 아픔을 겪게 하였다.¹⁾

최근 동서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이데올로기를 떠나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이나, 구소련 지역, 또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조국을 방문할 기회가 증가하여 빈번한 왕래를 하고 있는 반면 남북 이산가족들만이 아직도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이미 이산1세대들의 차연수명은 한계에 다다랐으나 이산으로 인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이산1세대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북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재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필자는 이산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이산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주선해 주고, 가능하다면 한가족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서 그동안 방송매체나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다. TV를 통해 이산가족의 재회를 추진하였고, 적십자사에서는 북한을 협상을 위한 자리로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72년부터 시작한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대화가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85년 9월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151명의 교환이 양측이 합의한 최초의 공식적

1) 이산가족에는 일제 36년 동안 징병, 징용 등의 명분으로 끌려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해외 이산가족들도 포함된다.

이산가족 상호방문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20여년이 넘게 추진되어 온 남북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한간의 대화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남북대화를 처음 시작하던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고, 또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세가 역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남북대화 방식을 고수하거나, 순수하게 이산가족의 문제를 협의하는데 중점을 두지않고 다른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남북대화를 변질시켜서는 안되겠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되어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90년 10월 통일되었다. 필자는 통일을 이룬 독일의 선례가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연구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정책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한 양측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미비하나마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논문을 작성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논하기 위하여 다양한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하였다. 서적이거나 논문, 신문, 잡지 등을 참조한 문헌적 연구방법을 주축으로 하였지만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헌들을 다각도에서 비교, 분석하는 비교, 분석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과 비교, 분석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고 있고, 남북한에게 공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

서들을 토대로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이미 통일된 독일의 선례와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노력의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를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정의하고,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시대적 요인을 들어 구분하였다. 또한 다양한 협정서들 속에 이산가족의 재회를 보장하고 있는 조항들을 제시하여,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덧붙여 왜 이러한 다양한 법적 근거들이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가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제3장은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한의 기존 노력들을 살펴보았는데, 일단 각종 남북한간의 대화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까지의 남북 인적교류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수치상으로 나타난 남북이산가족의 교류실태를 다른 교류들과 비교해 보았다.

제4장은 남북한간의 담보적인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대화나 정책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게임이론에 적용시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제5장은 이 논문의 가장 많은 부분에 걸쳐 언급되어지는 사항인데 이미 통일된 독일의 선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독일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그들의 통일을 위한 노력 중, 특히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양독간의 노력과 결실로 맺어진 협정이나 실천사항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총체적으로 남북한 상황에 그러한 독일의 통일의 선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비교하여 언급하였다.

제6장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방안의 원칙과 전제조건 및 구체적 방안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산가족 재회 사업 추진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며 결론을 맺었다.

II.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법적근거

1. 이산가족의 개념

이산가족의 개념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결합 대상의 범위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의 제4협약, 즉 「전략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및 1977년 12월 13일의 제1추가협정서에서는 이산가족의 개념을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충돌당사국은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이 서로 연락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가족의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수색을 용이케 해야한다. 각 충돌당사국은 특히 이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 대해 허용될 수 있고 또한 안전장치에 순응할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활동을 조장해야 한다.(제26조)

체결국 및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의 결과 이산된 가족의 재회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용이케 하고, 특히 제협약 및 이 의정서 그리고 자국의 안전상의 규칙에 따라 이 임무에 종사하는 인도적 단체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²⁾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산가족을 발생케 한 요인으로 “무력충돌과 전쟁”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members of families dispersed owing to the war)과 「무력충돌의 결과 이산된 가족」(families dispersed as a result of armed conflicts)만을 이산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³⁾

그러나 1983년 2월 9일 결성된 일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의 발기취지서에서 규정한 이산가족의 개념은 전자와는 상이하다.

비운의 국토분단과 민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인하여 이땅에는 일천만에 이르는

2) 김찬규, “남북협정서의 이산가족”, 『인도법논총』 제13호(대한적십자사, 1993), p.144

3) 상계논문 p.144

사람들이 혈내간에 서로 인위적으로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⁴⁾

이들 단체에서는 “이산”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무력충돌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특수한 경험인 국토분단, 즉 38선 설정으로 인해 파생된 경우 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분단이나 6·25전쟁 이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강제로 상대측에 억류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1992년 7월 7일 「이산가족 귀환, 정착사업의 실시」를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에 의한 우리측 피납자 278명의 명단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이산’의 개념에는 국토분단과 6·25전쟁 이외에도 인위적인 피납에 의한 강제피납의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산가족의 발생원인

이산가족이 발생된 근대역사적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에 의해서 한반도가 강점 당했던 36년간의 식민 통치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현재 사할린이나, 중국의 연변 등의 해외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해외 거주 이산가족을 발생케 했던 시기이다.

둘째, 8·15해방과 함께 인위적으로 책정되었던 3·8선이 또 다시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해방이후 1949년 8월 25일까지 남하한 피난민의 수는 3,283,000명으로 당시 월평균 3,000명이 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6·25 직전까지 북한에서 남하한 피난민의 총수를 3,50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셋째, 1950년에 발발했던 6·25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들의 이동이 가장 급증하는 시기로 1950년 12월과 1·4후퇴 직전에 남하한 피난민의 수는 1,000,000명에 합하게 되면 6·25를 전후해서 남하한 인구만도 약 5,000,000명으로 추정되어진다.⁵⁾

4) 상계논문 p.145

5) 이성희,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2.9), p.8

1993년 9월까지 집계된 남북이산가족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 신 지 역	이 산 가 족 수
함 경 북 도	577,000명
함 경 남 도	1,206,000명
평 안 북 도	843,000명
평 안 남 도	1,133,000명
황 해 도	1,365,000명
군 사 분 계 선 이 북	100,000명
강 원 도	
계	5,224,000명

6)

3.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법적근거

(1) 휴전협정

1) 규정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Korea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제3조 제59항은 실항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이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치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과 확정

6) 송한호, “남북한 이산가족의 교류방안”, 『통일로』(1993.9), p.52

된 군사분계선이남에 거주한 전체 이민에 대하여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령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협조한다.

2) 이행보장

“휴전협정”은 그의 시행을 위해 총사령관이외에 “정전위원회”를 두어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19항과 제24항에서 각각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산가족재결합을 위한 동협정 제59조의 시행을 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요컨대, 쌍방 사령관은 직접적 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지역에 있는 이산가족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남북한에 대한 법적 효력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일방은 “국제연합”이고 타방은 “한국과 중국”이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휴전협정” 제59항을 근거로 실향민의 귀향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오직 국제연합의 이름만으로 그것으로 가능하다.

(2) 제네바 제4협약

1) 규정

1949년 8월 13일의 “제네바 제4협약”(Geneva Convention 4) 제26조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충돌당사자는 전쟁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합을 회복하고, 될 수 있으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서 행하는 조회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충돌당사자들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려는 법체가 자국에서 각인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의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2) 이행보장

“제네바협약”은 그의 이행보장을 위해 이익보호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충돌당사자의 이익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보호국의 협조(cooperation)와 보호(security)하에 적용된다.”(제1협약 제8조, 제4협약, 제9조). 따라서 남북한은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익보호국의 보호와 협조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제네바 제4협약” 제26조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촉구할 수 있다.

3) 남북한에 대한 법적 효력

대한민국은 1966년 8월 16일에, 북한은 1957년 8월 27일에 “제네바 제4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동협약의 효력은 남북한에 미친다. 따라서 남북한은 각기 동협조에 의거하여 이산의 재결합을 위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정서

1) 규정

1977년 6월 8일의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정서”(Additional Protocol 1 to the Geneva Convention)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결자 및 충돌당사자는 무력충돌의 결과로 이산된 가족들의 재결합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며, 특히 제협력 및 본 협정서에 의하여 그리고 각기 자국위안전보장규칙에 따라 이러한 위임에 종사하는 인도적 단체들의 사업을 장려한다.

2) 이행보장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정서”는 동협정서의 시행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인도적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관계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충돌성자들을 위한 기타의 모든 인도적 활동을 수행한다.”(제81조 제1항). 따라서 북한의 동협정서에 가입한 후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관한 동협정서에 가입한 후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에게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관한 동의정서 제74조의 의무의 이행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뢰하여 촉구할 수 있다. 또한 동의정서는 “국제사실조사위원회”(International Fact-Finding Commission)을 설치하고 있

으며 (제90조 제1항), 동위원회는 동위원회의 기능을 수락한 의정서 당사자간에 동 의정서의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다.(제90조 제2항) 따라서 남북한이 모두 수락선언을 할 경우 이산가족재결합문제는 동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된다.

3) 남북한에 대한 법적 효력

대한민국은 1978년 12월 7일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정서에 서명했으며, 1982년 1월 15일 비준서를 기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동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한 바 없다. 따라서 동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4) 국제인권규약

1) 규약

1966년 12월 6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는 주거이전의 자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합법적으로 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이전하고 자유롭게 거주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 기타 어떤 나라에서도 퇴거할 자유를 갖는다.

③ 어느 누구도 타의로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이행보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동규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제28조) 인권위원회는 동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하는 선언을 한 양국 중 일국에 타국이 동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남북한의 경우 대한민국은 이 규약의 가입과 동시에 이 선언을 하였으나, 북한은 아직 이 선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북한을

인권위원회에 통보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5) 세계인권선언

1) 규정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국내에서 이전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 ②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서든지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2) 이행보장

“세계인권선언” 자체국내에 이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장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남북한이 국제연합가맹국이므로 상기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3) 남북한에 대한 법적 효력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며,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아니다. 그러나 동선언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당시의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해서는 이후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금반서의 원칙”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후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제연합에 가입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선언은 남북한에도 구속력이 있다.

(6) 남북기본합의서

1) 규정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지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이행보장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산가족재결합에 관해 남북한 두 당사자가 체결한 유일한 조약이다. 그러나 그 자체내에 동합의서상 당사국의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동합의서의 실천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이사회, 국제동법재판소 등 국제연합에 의해 관련에서 동합의서를 채용할 수 있다.

3) 법적근거에 의한 이산가족의 재결합 이행상의 문제점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이므로 그의 법적 구속력이 남북한에 미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⁷⁾

4. 법적근거에 의한 이산가족의 재결합 이행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한 국제 조약이나 선언, 또는 남북한 쌍방간에 체결한 조약들에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한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와 같은 여러 조약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는 남북한간의 구체적인 조약이나 합의사항이 없는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조약에 의해 남북한 쌍방이 당사국이 되어 맺은 협정일지라도 어느

7) 김명기, “남북 이산가족의 재결합”, 『인도법논총』 제13호, (대한적십자사, 1993.11), pp.170~176

한쪽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만한 조치도 이를 추진할 만한 초국가적 힘을 가진 추제도 없다.

둘째, 남북한간에 체결된 가장 중요한 남북합의서를 볼 때, 이 합의서는 남북한 쌍방이 주체적으로 합의한 것이기에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실천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런 합의서에서도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안, 또는 쌍방간의 실행을 위한 한정된 기간이 없이 단지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막연한 합의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셋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그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어졌다. 물론 이산가족의 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인도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남북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⁸⁾

III.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

1. 남북적십자회담

(1) 1970년대 적십자회담의 전개와 평가

1971년 8월 12일 남한적십자사의 고 최두희 총재가 북한측에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산가족 찾기운동을 위해 남북적십자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개최할

8) 78년 3월과 86월 1월 각각 남북적십자사측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적십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시킨다고 비난하면서 대화를 중단하였다. 또한 90년 11월 8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제8차 실무자접촉은 북한의 혁명가극공연 고수와 방문단 공연 후 본회담 개최주장으로 인해 역시 중단되었다. 최근에는 남한이 북한의 IAEA사찰과 남북한 동시사찰 수락을 남북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의 문제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85년 9월 20일 '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동시교역방문'이나 94년 이인모 노인의 조건없는 북송은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한 선례가 되었다.

것을 제외하고,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25차례의 예비회담을 통해 본회담 개최 장소⁹⁾ 와 아래와 같은 본회담 의제 5개항에 합의하였다.

본회담 의제¹⁰⁾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사상에 의한 재결합 문제
-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70년대의 적십자회담 과정에서 남한측은 이산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생사와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측에 대해 쌍방 적십자의 주관하에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시발로 그들의 서신교환, 자유방문 및 상봉, 재결합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자유왕래”를 주장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만 실현되면 생사와 주소확인, 서신교환방문 및 상봉 등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반공단체와 기관들의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전면적으로 폐지, 해산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이른바 남조선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쌍방이 합의한 의제를 제쳐놓고 남북적십자회

9) 본회담은 7차례 걸쳐서 실시되었고, 장소는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본회담은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었고, 제7차 본회담이 1973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10)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 p.284

담에서 이들 문제를 먼저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¹¹⁾

70년대 적십자회담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적십자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여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이후 남북한간에 개최되는 회담의 시발점이 되었다.

둘째, 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 출발했던 적십자회담이었지만 북한측이 남한측에 무리한 전제조건¹²⁾을 내세웠기 때문에 회담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1978년 3월 19일 북한적십자는 탐스피리트훈련이 적십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시킨다고 비난하면서 대화를 중단시켰다.¹³⁾

셋째, 남한측의 태도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이었다.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주장하는 북측의 입장에서 지극히 절차를 중시하여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먼저 교환하고, 이를 통해 생사 및 주소확인을 한후 자유방문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2) 1980~90년대 적십자회담의 전개와 평가

북한측은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중단¹⁴⁾이후 1978년부터 1983년 사이에 한 해도 거

-
- 11) 송한호,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추진 방안”(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1993), pp.6~7
- 12) 북한은 ‘김영주 성명’에서 ①한국이 6·23선언을 철회하고, ②반국가 보안사범들의 처벌을 중지하여 그들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며, ③형집행 중에 있는 반국가 보안사범들을 석방하고, ④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공위원장을 교체하며, ⑤동위원회에 각 정당, 사회단체와 각 계각층의 인민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3) 이창현, “남북대화 20년의 회고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12호(통일원,91), p.33
- 14) 1974년 7월 10일 제1차 실무회의부터 1977년 12월 9일의 제25차 실무회의까지 북측은 남북간의 인도주의 회담이야말로 평화통일의 시금석이며,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임을 강조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간의 신속조성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남한측과는 달리 시종 일관 실무회의 교착요인은 대한민국측에서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원칙을 유린하고 「인권강압」, 「전쟁정책」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25차 실무회담이 끝나는 날까지도 ①「외세 의존 정책」포기, ②「인권강압」중지, ③「반공 대결 정책」철회, ④「전쟁정책」포기 및 무력증강 중지, ⑤「2개 조선정책」철회 등의 문제 등 정책적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그들이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여 아무런 합의점 없이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가 중단 되었다.

르지 않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온 대한적십자사의 성의있는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

1984년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유창순 총재는 북한적십자사의 수해몰자 인도책 임자를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서한을 송부하였다. 이 제의에 북한측이 동의해 옴으로써 1985년 5월 서울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¹⁵⁾

제8차 본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하여, 85년 9월 20일 쌍방 적십자 총재를 단장으로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기자 및 수행원 50명 등 각기 151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제한된 숫자이지만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1985년 8월 개최된 제9차 본회담에서 남한의 획기적인 양보¹⁶⁾로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10차 본회담에서는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 실시에 관한 합의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3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방도들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86년 1월 20일 남북회담 대표단 공동성명을 통해 남한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인 ‘팀스피리트 86’을 구실로 남북대화의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 89년 9월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과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개최하는데 호응함으로써 남북적십자사는 198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판문점에서 가진 7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에서 제11차 본회담을 1989년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과 이에 앞서 제2차 「남북이산가족

15) 송한호,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추진 방안”,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1993), P. 7

16) 남한측은 85년 8월에 개최된 제9차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및 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자유왕래를 통해서 실시할 수도 있되,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고자 제의하였다. 이같은 제의는 북한측이 그동안 고집하던 자유왕래를 통한 사업 실시를 사실상 수용한 획기적인 양보조치인 것이다.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을 12월 18일에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예술공연단의 공연내용은 순수한 것으로 한다”는 쌍방 합의사항을 저버리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실무대표 접촉은 결렬되었으며 본회담 개최 이전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먼저 교환되어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으로 결국 제11차 본회담도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기본합의서」이행에 대한 첫번째 시범 사업으로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상호 교환하기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기간(8.25~28), 방문단 규모(24명), 공연횟수(2회)등에 합의하였으나, 92년 7월 8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대표접촉에서 북측의 “남한당국이 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방문단 교환예정일인 8월 25일 이전에 이인모를 송환하지 않은 한 방문단 교환사업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결의문이 7월 7일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통보되었다. 또한 한, 미간의 「포커스 렌즈」 군사훈련 증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노부모방문단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80년대의 남북적십자회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85년 9월 20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은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일부나마 직접 가족, 친지들과 상봉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피는 이념보다 더 우선하며, 진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한민족 공동체”의식의 일면이었다.

둘째, 남북이산가족의 재회가 자기측에 유리한 국제적 입지나 국내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성이 많이 띄었다.¹⁷⁾ 셋째, 적십자회담은 국제적십자

17) 북한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부터 회담이 결렬되는 제5차 회담때까지 이인모 노인의 송환 문제를 남북대화 때마다 거론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진전속도를 조절하고 나아가서는 남북대화가 부진하면 그 대화부진의 책임을 한국쪽에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또한 국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날로 가중되는 「핵사찰」 압력과 북한 자체의 심각한 경제난 등에 따른 체제 불안 요인과 북한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덜어보려는 생각에서 이인모를 「통일애국자」로 선전하기 위해 이미 합의되었던 「8·15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빌미로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추측을 낳게 했다. 이대욱, “이산가족 고향방문 이렇게 추진한다”, 월간동화 7월호(92), p. 82

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적십자회담은 인도적인 성격의 문제만을 다루는 독자적 회담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회담 개최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넷째, 남북한 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단지 남북한에 관련되는 요인들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에 관련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요구했던 남한의 비핵화 선언, 남한이 요구하는 북한의 IAEA의 핵사찰 수락과 남·북한 동시 사찰 등이다.

2.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개와 평가

남북적십자회담에서와 같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한측은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고통의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한측은 제1차 회담에서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완전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60세 이상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단 교환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단되니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방문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도출을 위한 토의 과정에서 남한측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한데 반하여 북한측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식의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은 제5차 회담의 「기본합의서」 제18조에서 “남과 북은 흩어진 가

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면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6조에는 이미 진행되어 오던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도 노부모 방문단 문제가 결과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이인모 송환과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차례(92년 10월 1일, 10월 5일)의 고위급회담 대표 접촉을 별도로 가졌다. 대표접촉에서 남한측은 이인모 送還과 함께 노부모 방문단 교환, 이산가족고향방문의 정예화,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동진호 피납선원 12명 송환 등을 병행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전망이 없었다.¹⁸⁾ 남북고위급회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고위급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적십자회담 이외의 회담에서도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산가족 문제 협상을 위한 루트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합의서’에서와 같이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이것 또한 원칙적 합의만을 되풀이 했을 뿐이고, 이산가족 재회의 절차, 기간, 방법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셋째, 적십자회담과는 다르게 고위급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양측의 총리급을 주축으로 하는 영향력 있는 정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더 클 수도 있으나, 반면 관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획일적 원칙에 의해서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요소에 의해 이산가족 재회 협상이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8) 송한호, 전개논문, pp.9~10

3. 남북이산가족의 교류 실적

〈표 1〉 북한방문

명/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 (1)	1 (1)	1 (1)
1990	199 (7)	187 (6)	183 (3)
1991	244(12)	243(11)	237(10)
1992	303(17)	257 (8)	257 (8)
1993	21 (6)	19 (5)	18 (4)
1994	1 (1)	1 (1)	-
계	769(44)	708(32)	696(26)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1989년 6월 12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인적 교류의 경우를 보면, 1989년에는 북한 방문 신청이 단 1건(1명)뿐이었으나, 1990년에는 7건(199명)으로 확대되었다. 그후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기본합의서 채택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나 예상했던 것만큼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표 1, 2참조〉

7월중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총 125건으로 94년 1월부터 6월간 월평균 신청건수 75건에 비해 대폭 증가(60%)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된 가장 큰 원인은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 추진합의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 해서 7월 25일로 예상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기한없이 유보됨에 따라 북한주민과의 접촉 신청건수가 정상회담 개최합의 이전의 상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2〉 남한방문

명/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	—	—
1990	306(5)	306(5)	291(4)
1991	175(3)	175(3)	175(3)
1992	113(4)	103(3)	103(3)
1993	6 (2)	6 (2)	6 (2)
1994	—	—	—
계	1,566(4,336)	1,375(3,657)	412(1,770)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4년 7월 31일까지 북한주민 접촉신청 건수는 총 3,572건 (9,106명)이었고, 이 가운데 3,331건(8,547명)이 승인되었다. 승인된 사항중 북한주민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993건(3,679명)이었다. 〈표 3참조〉 분야별로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상봉을 위한 신청 1,601건(1,746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분야 899건 (2,420명), 학술분야 312건(1,703명) 등의 순서로 접촉 신청이 많았다. 〈표 4참조〉

〈표 3〉 남북주민간접촉(총괄)

명/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 (70)	21 (22)	—
1990	235 (687)	206 (652)	54 (377)
1991	753 (2,195)	685 (2,047)	244 (1,173)
1992	801 (2,420)	744 (2,250)	238 (1,015)
1993	1,172 (2,220)	1,148 (2,182)	313 (707)
1994	575 (1,514)	527 (1,394)	114 (407)
계	3,572 (9,106)	3,331 (8,547)	993 (3,679)

〈표 4〉 남북주민간접촉(분야별)

명/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이 산 가 족	1,601 (1,746)	1,582 (1,727)	598 (669)
학 술	312 (1,703)	289 (1,661)	65 (893)
문 화	169 (803)	136 (499)	16 (361)
종 교	138 (554)	113 (499)	26 (259)
체 육	80 (218)	73 (193)	13 (58)
경 제	899 (2,420)	839 (2,252)	197 (580)
언론·출판	105 (336)	82 (278)	22 (87)
관광·교통	83 (276)	76 (235)	18 (69)
기 타	185 (1,050)	141 (963)	38 (703)
계	3,572 (9,106)	3,331 (8,547)	993 (3,679)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7호, 1994.7.1~7.31)

만약 예정대로 7월 25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경우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룰 의제가 바로 이산가족의 문제이었다. 이러한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양정상간에 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비록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유보되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이산가족 재결합의 저해요인

1. 양측의 우위전략

남북한은 지금 2인제로-섬게임(Two-person zerosum game)¹⁹⁾과 비협력 게임²⁰⁾을 하고 있다.

		B	
		b1	b2
A	a1	-5 +5	-7 +7
	a2	+8 -8	+1 -1

21)

여기서 A는 B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a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B는 b2를 택하는 것이 b1을 선택했을 때보다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A의 선택 여부에 따라 +7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A에게는 a2가 B에게는 b2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방의 전략 선택 관련없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전략선택과 관련없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우위전략(dominant strategy)라고 부른다.

남북한한 상황에서도 이 우위전략의 적용이 가능한데, 북한측에서 보면 적십자

19) 2인제로-섬 게임은 참가자가 서로 적대하는 2인이고, 각 참가자는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게임 결과로써 이득은 두 참가자 간에 상반되어 일방의 이득이 타방에게는 같은 크기의 손실로 간주되는 게임이다.

dltkddn, "Game theory", 『국제관계이론』 (박영사,1991), pp. 22-283

20) 비협력 게임(Non-cooperative game)은 사전협약이 불가능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게임을 할 경우이다. 상계서, p. 281

21) 상계서, p. 275

회담을 제의한 남한측의 과연 어떠한 카드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회담을 제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북한측에서는 남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동요시키고자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조한 이산가족 재회 전략을 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북한측에서는 남한이 얻은 이득만큼의 손실을 보게된다. 따라서 북한측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상대방 전략에 모험을 걸기 보다는 차라리 회담을 거부하여 쌍방간에 아무런 손실과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비협조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적십자회담’이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라는 협조적 행위를 통해 남한의 전략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우위전략을 취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측이 주로 회담 거부라는 비협조적인 행위를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한측에서 제의하는 회담들이 북한측의 우위전략인 ‘남조선 혁명’ 전략을 좌절시키고,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남한측의 대북 우위전략, 즉 중국식 표현대로 한다면 평화연변 전략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월남자들과 그 잔유가족은 ‘반혁명 분자’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남한측이 ‘1천만 이산가족’이라고 부르는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월남자들의 가족상봉 제의를 결초 우호적으로 간주할 입장에 있지 않다.

반대로 회담 제의를 수락하는 협조 행위로 전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측이 회담과정을 통해 의도한 것은 남한에서의 혁명적 대중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조직의 출현과 그 활성화였다. 즉, 북측은 적십자회담을 통한 북한정권과 남한 인민의 접근, 또는 대남 혁명전략에 의한 남한 인민의 색인이라는 관점에서 이산가족 찾기의 정치적 효용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둘째, 적십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남한의 반공 정책 포기를 논의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²²⁾

22) 류근일, “이산가족 재회 추진 방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 10~1992.6), pp. 86~88

2. 우위전략의 쟁점

남북한의 상호우위전략은 적십자회담의 장을 이산가족 문제 이외의 것들을 놓고 다투는 곳으로 변형시켰다.

북한측은 적십자회담을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주한미군 철수, 팀스프리트 훈련 중단, 남한 시국사범 석방요구, 혁명 가극 공연요구, 자유왕래 실시, 친우 방문의 자유등을 선전하는 통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우위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북한 우위전략은 커다란 실효를 거두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시되었던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이외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고, 남북 고위급회담과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접촉 형식들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남한측의 비정치적 요소의 통합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요소의 통합을 이루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이었다. 한반도 상황이 내포한 포괄적 정치성과 葛藤구조를 상기할 때 지나치게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결국 남북은 서로 적십자회담을 상위명제를 도출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였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북한측의 우위전략의 최종, 목표는 적십자 회담을 대남 혁명 전략의 하위체제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²³⁾를 도출하는데 우위전략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었다.

비록 양측의 우위전략은 달랐지만 적십자회담을 하위체제로 생각하였던 것은 공통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포괄적인 남북한의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회담 형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70년대에는 적십자회담이라는 단일한 남북접촉 창구만이 있었으나 1980~90년에 있어서 남북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는 다양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과 북의 우위전략이 적십자회담에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과적

23) 남측은 전문과 기본사항 10개 항의 ‘기본합의서’를 내놓았으며 그중 4항에 이산가족 문제를 규정했다.

으로 북측의 우위전략 보다는 남한측의 우위전략이 한단계 우위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측의 위와 같은 우위전략을 흡수하여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북측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남한의 우위전략이 적실성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2인제로-섬 게임과 비협력 게임의 극복방안

(1) 시장 메카니즘 방식

남북간의 협상을 더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극복의 탈출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2인제로-섬 게임을 악순환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건(status quo)을 변경시켜 협상 성공의 가능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가능조건을 남북한은 각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남북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의 형식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의 또한 2인제로-섬 게임에 빠지고 말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남북한이 고위급회담에서 이상의 두 제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5차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메커니즘 방식에 의한 회담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시장 메커니즘 방식을 추구하려면 협상과 회담의 경우, 남한은 적십자 회담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 사안의 의제로 전개될 때에는 그 부분을 즉각 다른 회담의 의제로 흡수해 들임으로써 적십자 회담의 교착을 방지하고 그 본래의 의제인 이산가족 찾기를 계속 보존시켜 회담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십자 회담의 진척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2) 국가개입 방식

지금으로서 남북간의 문제와 관련한 국가 공권력으로서의 정상회담을 상정할 수

있다.²⁴⁾ 정상간의 합의야말로 남북 실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국가공권력 개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간의 합의는 가능한 사항의 사전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의 어려움이 정상회담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²⁵⁾ 이러한 이유를 돌아볼 때 국가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2인제로-섬 게임 극복도 용이한 것은 못된다.

국가개입 방식을 추구하려면 정상회담에 의한 하향성 일괄타결을 추구하거나, 그것이 실현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산가족 찾기가 각자의 우세전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공동체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

남북의 주민들이 고루 참여하는 많은 소공동체 사업을 벌이고, 그 대표들도 더 상위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경제특구 구상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그러나 이 이러한 방식이 적십자 회담이나 이산가족 문제 자체와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동체의 공동체 형성방식을 추구할 경우에는 예컨대 경제특구에서 합작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서신왕래 및 만남을 위한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사업의 경험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평화구역의 설치와 그 운영의 기술을 축적하도록 해야한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일차적으로 개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측간의 우세

24) 남북간의 갈등을 강제력으로 해소시킬 국가권력은 물론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화 정상회담에서의 원칙적인 합의는 그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5) 북한은 불가침선언의 수용을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시사한바 있고, 남한은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한은 정상회담의 가능조건을 탐색하는 일부 동향을 보이고 있다.

26) 현재 북한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경제개방의 점진적 추구라는 사실이 그쪽의 경제악화를 근거로 해서 감지되고 있으므로, 남한측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방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현장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그 경위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의 게임이 완전히 종식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남한측은 지속적으로 적십자 회담에서의 북한측의 정치화된 제의들을 신속하게 다른 회담으로 위임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찾기 실천방안의 정치적 충격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²⁷⁾

V. 독일 이산가족 재결합 방안

1. 독일의 이산가족 재결합 추진과정

(1) 독일에서의 이산가족의 발생시기

독일에서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1961년 8월 13일 동베를린을 재봉쇄하고, 8월 22일에 동베를린 경계선에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물론 독일이 분단된 것은 1949년 이고, 1955년 양정부가 각각 바르샤바와 나토조약 기구에 가입하면서 양국 주민들간에 법적 보장은 없었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초 국제적 긴장으로 인해²⁸⁾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인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동독인들의 서독이주는 동독측에서 보면 국가의 존립기반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큰 출혈이었다.²⁹⁾

27) 류근일, “이산가족 재회의 추진 방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 10~1992.6), pp. 91~93

28) 1960년 5월 16일 4대국 파정상회담에서 소련이 미국에게 영공침공사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정상회담을 6~8개월간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에는 긴장이 조성됐다. 서방측 3대국 정부수반은 회담속계에 전력했으나, 17일의 회담에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이데 서방측은 분개했다. 독일문제에 관한 회담은 내용에 관한 토의도 하기전에 결렬 되었다. 1961년 6월 4일 빈에서도 신임 미국대통령 Jhon. Kennedy와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미·소간 견해의 접근점을 찾지 못했다.

29) 1961년 당시 동베를린 인구는 1,710만이었으나 1949년이래 1961년까지 총 260만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들중 반이 25세이하고, 60%는 생업종사가 가능한 인구이고, 단지 10%인 연금수혜자 또한 고급인력이었다.

1961년 8월의 베를린장벽 설치의 서독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주자들의 자녀들이 동독지역에 남아 있었기에 이러한 갑작스런 사태는 곧 서독으로의 이주자에게는 동독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벽설치후 모든 서독행 이주신청서는 거절되었다.³⁰⁾

(2) 1960년대의 노력

1961년 11월말 서베를린의회는 서독적십자사에게 양독적십자사를 통해 인적왕래를 위해 협상할 것을 동베를린 해당기관에 통고하였다. 동베를린 경찰총장 「아이케마이어」(Fritz Elkimeier)는 이에 대해 적십자사를 통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은 서베를린의회와 동독정부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신을 보냈다.³¹⁾

이후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와의 여러번 협상을 시도한 결과 예외적으로 1962년 전반기 이산가족 재결합의 일환으로 몇백명의 연금수혜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가 서독으로 여행을 허용받았다.³²⁾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양독간의 왕래를 위한 협상은 1963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제1차 「통과사증협정」에의 합의였다.

1) 통행증 약정(1963.12.17 체결)

「Erich Wendt」 동독문화수상과 「Horst Korber」서베를린시의회의원은 196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7차례의 회합을 갖고, 1963년 12월 18일부터 1964년 1월 5일까지 사이에 서베를린 시민이 동베를린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통행증 발급에 관해 논의했다.

쌍방은 정치적, 법적인 입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도

30)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 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 제13호(대한적십자사, 1993. 11), pp. 149~150

31) 중앙정보부, “상호교통왕래”, 동서독자료집 2권(중앙정보부, 1974), p. 54

32)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 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 제13호(대한적십자사, 1993. 11), p. 150

적인 요청을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였다. 쌍방은 서베를린을 번갈아가며 계속한 회담결과로 아래의 부록에서의 정한 바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서부록 1〉

- ①통행증을 소지한 서베를린시민은 1963.12.19 부터 964.1.5까지 동베를린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다.
- ②친척방문에 해당하는 방문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숙모 및 백모, 숙부 및 백부, 조카, 조카딸 그리고 그들이 남편과 부인 또는 부부끼리의 방문들이다.
- ③「Wendt」부상은 신청자가 동독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방문허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33)

당시 동독의 공식집계에 의하면 총 1,318,59개 사증이 발급되어, 그 중 1,242,819개로 사증이 실제로 이용되었다고 한다.³⁴⁾

2) 통행증 약정(1964.9.24 체결)

1963년 12월 17일자 통행증약정의 시행으로 큰 성과를 거둔 이후 「Horst Korber」의장과 「Erich Wendt」부상은 1964년 1월 10일부터 1964년 9월 23일까지 모두 28차례의 회담을 열어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의 친척을 방문하려는 서베를린시민들에게 또다시 통행증을 발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쌍방은 1963년 12월 17일의 통행증협정에서처럼 정치적, 법적인 입장을 각각 달리고 있음³⁵⁾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도적인 요청을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였다. 회담을 통해 쌍방은 1963년 12월 17일자 통행증약정을 광대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록으로 첨부한 바와 같이 합의에 도달했다.

33) 중앙정보부, “교통, 체신, 교류관계”, 동서독자료집 3권(중앙정보부, 1974), p.225

34)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 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 제13호(대한적십자, 1993. 11), p. 152

35) 동독은 양독간에 맺어진 협정을 국가 대 국가간의 협정으로 보며, 또한 이것을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문제와 결부시키려 하였으나,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 협정을 단지 양독간의 행정적 합의라고 주장하였다.

1. a) 통행증을 발급받은 서베를린시민은 1964.10.31부터 1964.11.12까지 -1964.12.19부터 1965.1.5일까지-1965년의 부활절과 성신강림제기간에 각각 14일간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 b) 각각의 방문기간내에서 지정된 하루동안 방문이 허락된다. 1964.12.19부터 1965.1.3일까지의 방문기간 동안에는 1964년 12월 24일을 포함한 평일에 두번째의 방문을 할 수 있다.
 - c)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숙부 및 백부, 숙모 및 백모, 조카와 조카딸을 그리고 이들의 남편과 부인, 별거생활을 하는 남편과 부인이다.
2. a) 본약정의 유효기간 중에 서베를린시민은 1964.10.1부터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에 사는 그의 가까운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 b) 동베를린에서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동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편이나 부인을 동베를린에 두고 있는 서베를린시민들은 10월 1일부터 가족동거를 위한 통거를 위한 통행증을 발급받아 동베를린의 남편이나 부인을 방문할 수 있다.
 - c) a), b)에 따른 방문은 4기로 된 방문기문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실현될 수 있다.
4. 「Wendt」부상은 신청자가 동독법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방문허가의 사전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³⁶⁾

위의 절박한 가족문제에는 출산, 결혼, 생명이 위급한 질병, 그리고 사망이 포함되었다.

36) 중앙정보부, pp.228~229

이 통과사증협회의 후속협정이 1965년 11월 25일, 1966년 3월 7일 체결돼 1966년까지 시한부로 계속되었다. 매년 협상때마다 동독은 이미 보장된 인간적 고통의 경감에 대해 정치적 대가를 점점 높여갔다. 처음에는 국가승인문제를 배제했지만, 추후 동독은 협정체결전에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방측이 이것을 거절하자, 위의 절박한 가족문제로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방문자들은 1971년 9월 3일 4개국 협정체결까지 동서독 경계선에서 차단당했다.³⁷⁾

3) 국적법

1949년 동독헌법 제1조는 오직 하나의 독일국적(Enin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1967년 2월 20일 독일인민의회가 동독의 국적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까지는 동서독에는 하나의 독일국적(과거 독일제국 국적)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법률 통과후 독일시민은 서독과 별개로 독일국적(eine DDR-Staatsbürgerschaft)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동독은 기본조약 서명전인 1972년 10월 16일 또 다시 「국적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다시 제정해,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떠나 거주지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와 그 자손은 본 발효 후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서독은 국적개념에 1973년 12월 31일 당시 국경선 영토안에 아직도 독일 제국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속 하나의 독일국적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시까지 고수했다. 1972년 기본조약체결후에도 서독은 독일시민들은 “동독시민권”외에 서독의 국적이기도 한 “공통”의 국적인 하나의 독일국적(Enin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을 갖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국적개념에 힘입어 서독은 1989년 동독개방시 동독의 이민이 제3국에 있다는 서독공관에 망명을 신청했을때, 당당하게 외교적 보호권행사를 하여 독일의 평화적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 사람을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³⁸⁾

37) 이장희, 전개논문 pp. 152~153

38) 상계논문, pp. 163~164

(3) 1970년의 노력

1971년 12월 17일 양독은 1971.9.3일자 미, 영, 불, 소 4대국 베를린협정³⁹⁾ 의거, 서독과 동베를린간에 왕래하는 민간인들 및 민간물자가 도로, 철도, 수로를 통해 동독영토를 경유할 수 있는 통행시행세칙협정에 조인하였다.

같은 해 12월 30일 양독(서베를린시당국과 동독)은 1971년 9월 3일자 미, 영, 불, 소 4대국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시민들이 1년에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30일 한도내에서 방문을 목적으로 서베를린에 인접한 지역과 인접지역이 아닌 동독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통행시행세칙 협정에 조인하였다.⁴⁰⁾

1) 통행협정시행세칙

제1조

- (1) 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시민들은 1년에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30일 한도내에서 방문을 목적으로 서베를린에 인접한 지역과 인접지역이 아닌 동독내의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 (2) 1항의 여행은 그 여행사유가 인도적, 가족적, 문화적, 관광의 동기일 때 허가된다.

제2조

- (1) 서베를린 상주자가 동독 및 동베를린으로 들어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통행증이 필요하며 서베를린으로 귀환할 때는 동독발급의 귀환증이 필요하다. 필요한 증명서는 동독이 지정한 해당장소에 신청한다.

제4조

- (1) 긴급한 국가적인 용무나 인도적인 동기가 있을 때, 서베를린 상주자는 비록 1조에서 허가한 방문허용기간이 이미 완전히 소진되었을 경우라도

39) 1971년 9월 3일 미, 영, 불, 소는 독일에서의 긴장완화가 구주평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4국대사회담을 70년 3월부터 17개월간 지속한 결과로 동협정가조인은 성공하게 되었고, 동협정으로 소련으로부터 23년만에 베를린 자유통행을 허용받게 되었다.

40) 중앙정보부, “상호교통왕래”, p.94

동베를린으로 여행할 수 있다.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는 관청에서 확인한 전보를 근거로 하여 접경지역검문소에서 발급한다.

(2) 1조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사회적, 학술적, 경제적, 상업적, 문화적 용무가 있을 때도 여행이 허가된다.

(3) 1항에서 기술한 여행은 동독의 여러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차례 나누어 실시할 여행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⁴¹⁾

2) 동서독 기본조약(1972년 12월 21일 체결)

동서독 기본조약의 골자는 내용상 그케 3그룹의 범문서들로 분류된다.

제1그룹은 1972년 12월 21일 날짜로 서명된 본조약이며, 제2그룹은 국제기구 가입문제를 다룬 것이다. 마지막 제3그룹은 인간적 고통의 경감(menschliche Erleichterung)문제를 다룬 것들이다.

이산가족재결합의 문제는 제1그룹의 기본조약본문 전문의 「인간의 복지를 위한 협력(Zum Wohl der Menschen)」, 제7조의 「실질적 인도적 문제(praktische und humanitare Fragen)」에서, 그리고 제3그룹인 인간적 고통의 경감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첫째, 인간의 복지를 위한 협력(제1그룹 전문)이다.

전문은 “.....역사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민족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기본문제들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독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협력을 전제조건을 충만시키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합의이다”로 끝맺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첫째는 민족문제이고, 둘째는 복지향상이다.

첫째의 민족문제는 동서독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였다. 분단 이전 독일제국이라는 공통된 국가의 현실을 갖고 있으나, 양독은 민족문제나 통일정책에

41) 중앙정보부, “상호교통왕래”, p.94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동독은 “2민족 2국가”이념을 주장하면서 통일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서독과는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독의회에서 통과되었던 국적법을 이해할 수 있겠다. 반면 서독은 “1민족 1국가”이념을 내세워 양독의 통일을 위한 실마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양독 정부간에 이러한 민족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양독주민의 복지향상과 인간적 고통경감을 위해 협력한다는 이 기본조약의 정신이 밝히고 있다.

둘째, 실질적 인도적 고통이다.

제7조는 실질적 인도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관계정당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안도적 문제들(Praktische und humanitare Fragen)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양국은 이 조약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학문, 기술, 통행, 법률 분야의 교류,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력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가 의정서로 정한다”

제7조의 첫째 문장은 타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실질적인 인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 ‘실질적’이란 말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도적’이란 말을 첨가해 뜻을 박았다. 이렇게 인도적이란 말을 첨가한 것은 문제의 통용범위를 좁히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특히 개인의 해외여행허가나 개별적 형사범죄자의 사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것은 인도적이란 단어를 협의로 해석할 때 해당된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문제’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삶속에 관여하는 모든 문제를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7조 첫구절은 이들 문제들이 언제 타결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들 문제의 타결이 전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독’에서의 인간복지를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인도적 문제에는 이산가족재결합과 그것을 위한 서언교류와 해외자유여행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부부의 재회, 자식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자식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의 이사가 허용되며, 그리고 결혼을 위해 동독에 거주하는 약혼자의 해외여행 허가 등이다. 이 기본조약으로 동독은 서독에 대해 법적으로 이산가족문제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저촉도하는 국내법 개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1973년 이주허가를 받으면 동독시민권은 상실되었다. 그 다음 제7조의 둘째, 셋째 귀절은 이러한 실질적인 인도적 문제들이 어떻게 타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시켰다. 둘째 문장은 양국의 협력분야를 열거하고, 이 협력으로 양측이 서로 이익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협정체결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협정의 상세한 내용은 추가협정서(Zuastaprotokoll)에서 규정될 것임을 명시했다.

셋째, 인간적 고통의 경감이다.

기본조약의 제3그룹인 인간적 고통의 경감은 1)언론인 활동에 관한 서언교환 및 동서정서(1972.11.8), 2)이산가족 재회, 여행자유화, 비영리적 물품거래선에 관한 서언교환 및 동서명서(1972.12.21)4개의 새로운 국경통과로 개통에 대한 서언교환(1972.12.21)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적 고통경감의 핵심은 이산가족의 재결합이다. 이것은 위의 2)항인 이산가족재회, 여행자유화, 비영리적 물품거래선에 관한 1972년 12월 21일의 교환서언 및 동서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동서교환문서는 「독일민주공화국은 기본조약발효 후 관계에서 정상회담과정에서 다음의 문제를 타결하는데 진전을 도모할 것이다. 1. 가족의 이산에서 생기는 문제, 2.여행자유화문제, 3.비사업적 물품거래의 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서교환서언도 관계정상화의 우선 전제조건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라고 서두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관계정상화를 바라는 동독은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독에게 협조해야함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동독측에서 보면 서독측으로의 모든 여행 허가가 단순히 시민의 유출만이

아니라 동독 사회를 동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이미 50년대에 서독으로의 노동 인구나 고급인력의 대량 유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행 대상자 선정에 고심하였다.

동독측에서는 첫째로, 생산직에 종사할 수 없는 사회부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여행을 허가하였다. 둘째로, 동독에서는 조속한 결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여행 허가대상자가 되었다. 셋째, 어린이는 여행 허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른 전체주의 국가에서처럼 동독에서도 청년층을 매우 중요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서독으로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양친의 특별한 노력(양육비를 동독측이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제3그룹의 2)항의 동설명서는 이산가족재결합의 해결의 내용이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산가족이 재결합에는 부부(Ehegatten)의 재회, 단지 한쪽 양친만이 생존하여 자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모의 이사, 단지 한쪽 조부모만이 생존하여 손자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조부모의 이사 등도 포함됐다. 특별한 예외로 결혼(Eheschließung)의 허가⁴²⁾를 받은 경우도 이산가족의 결합으로 인정됐다. 여기서도 어린이 및 청년의 여행허가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⁴³⁾

(4) 1980년대의 노력

1) 절박한 가족문제에 대한 여행자 주거에 관한 동독규정(1982. 2. 15체결)

1982년 2월 15일 동독시민은 절박한 가족문제가 있을시 비사회주의 국가와 서베를린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동독 내무부의 제안으로 동독각료이사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동규정 제1조는 동독시민은 친척의 초대를 근거로 절박한 가족문제가 있을시 동

42) 동독시민은 외국인(서독인도 마찬가지)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식 거행시 즉시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동독당국은 이 허가를 이용해 동독시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결혼의 범위를 매우 제한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43) 이장희, 전계논문, pp154~157

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출국이 허가될 수 있다. 여기서 절박한 가족문제란 출산, 성년식, 견진성사, 첫영성체, 결혼 25, 50,60, 65주년 결혼기념일, 60, 65, 70,75세 생일, 생명이 위독한 병환과 사망 등이 포함된다.

출산의 경우 조산목적의 예정출산일 1달전 또는 출산후 3개월까지 여행이 허가되고 유아세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 사망이후 3개월까지 허가된다.

상기와 같은 절박한 가족문제 발생시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들, 형제자매(이복형제 포함)에게 여행이 허가된다.

제2조는 연금해당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동독시민들의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의 친척방문을 위한 출국이 제1조의 사유발생시에 허가된다고 규정하였다. 또 출국은 연 30일 범위내에서 1회 또는 회수에 나눠 가능하며, 유럽 이외의 국가로 여행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허가된다.

동독의 내독성은 1982년 2월 25일 이러한 긴급한 가족문제로 인한 동독의 여행 완화조치결정을 환영했다. 이 결정으로 긴급한 가사의 경우 연금생활자가 아닌 연령의 동독의 시민들도 서독으로 여행하는 길이 열렸다.

2. 통일독일의 사례와 남북한의 비교

첫째, 협상주체들간의 상대방에 대한 승인의 차이이다. 서독은 60년대초 동독과의 이산가족 문제를 협상함에 있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⁴⁴⁾ 그러나 양국이 73년 UN에 동시가입한 이후 “1민족 2국가”라는 특수한 형태를 인정하면서 동독을 모든 통일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보았다. 반면 남북한은 상대방을 자신들이 회복해야 할 영토에 수립된 인정할 수 없는 정권으로 인식하였기

44) 통행사증협정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동독은 이 협정을 국제법적 조약으로 보려했고, 서독은 단지 하나의 행정합의로 보았다. 서독연방정부와 서베를린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이 협정을 통해 베를린의 법적지위는 변함이 없으며, 서독의 종전의 동독에 대한 불승인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에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해서도 적극정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1963년 12월 제1차 통행증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의 주체는 Horst Korber 서베를린 의회의장과 Erich Wendt 동독문화부수상이었다. 이러한 협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협정은 서독 정부의 이름으로 시작한 협정이 아니라 서베를린 의회의장의 이름으로 체결되었기에 양독 정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협정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서베를린의회가 협정의 주체가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서독연방 정부가 있었기에 국제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원하는 동독의 욕구를 일부 수용해 줄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될 우리 나라에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독간에 맺어진 통행사증이나 기본조약 등은 치밀할 정도로 상세하다. 예를 들면 방문기간, 횟수, 방문자와 대상자, 그리고 재협상 날짜까지 문서상에 언급해 놓은 철저함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70년대초부터 접식자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을 수없이 개최하였지만 통일의 사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었다. 또한 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조차도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지들이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이라는 원칙적 문구에만 합의를 하였을 뿐 다른 상세한 언급은 없다.

넷째, 서독은 양독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협상과 합의안을 동독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독에 차관을 제공하였다.⁴⁵⁾ 서독의 차관은 같은 민족을 원조한다는 인도적 입장뿐만 아니라 협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남북한간에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체제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차관이나 기타 교역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조

45) 서독은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동독에게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독일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다. 따라서 서독은 총 24억불의 차관을 동독에 제공하면서 주로 인적교류 시정의 수화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인적교류 진작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 『통일문제연구』 제4권(대한적십자사,1992)

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서독은 “1민족 2국가”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날까지 하나의 독일국적을 고수하였다. 이것의 의미는 동독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동독인도 자국국민과 동일시 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째, 양독이 이산가족 문제를 통일의 단계로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 고통의 경감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듯이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을 위한 중간 매개체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재회나 왕래로 인해 체제 불안요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나 왕래를 어떠한 정치적 이슈와도 관련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일곱째, 1963년 동서독간의 통행사증협정은 이산가족 재회의 범위를 공간적으로는 동베를린, 시간적으로는 15일간, 인적으로는 친척방문에 한정시켰다. 이는 체제의 개방을 두려워하는 동독이 이러한 한정된 이산가족의 재회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를 남북한에 적용할 때, 지리적으로 서울과 평양, 시간적으로 일정기간, 인적으로 부모, 형제로 한정하여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통행사증협정체결을 남북한간에 추진해 볼 수 있다.

여덟째, 독일 이산가족재회의 요건은 단순히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가족행사문제 까지도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폭의 서독인들의 동독방문 기회는 동독이 서독에게 동독이 협정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협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다.

아홉째, 전체주의 사회주의국가로서 동독도 이산가족 재결합을 통한 인적교류가 가져오는 체제위협을 의식하여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허용대상자도 생산능력이 없는 연금자 연령이나 동독에서 결혼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주로 했다. 이러한 독일의 선례는 남북한 이산가족 대상자 선정시에 초기단계에 북한의 체제위협을 덜 주는 대상자 선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열번째, 양독간 이산가족문제와 같은 인적교류에 대한 동독의 소극적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유럽의 각국 등이 참여했던 CSCE라는 다자간 협력체가 큰 역할을 하였다. CSCE에서 결의하였던 인도적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들은 동독에게는 구속력을 갖는 것들이기에 동독은 점차 그 결의사항을 실천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재회 이행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서도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자간의 협력체제의 창설이 평화통일의 국제적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Ⅵ.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실천 방안

1.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실천 방안

(1) 원칙과 조건

첫째, 이산가족 재회의 방법과 수단은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피해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피해최소화의 원칙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은 폐쇄된 경제, 정치체제를 인수하고 있는데,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통해 북한사회는 외부로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체제까지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민주화 및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개인의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그같은 기본적인 체제성격은 퇴색되어서 급기야는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된 정치체제로 변질된 상태가 과거 5공화국까지 지속되어 왔다.

셋째, 형평적 또는 균형적 상호주의원칙하 성립되어야 한다. 교류 뿐만 아니라, 협상도 상호의존적 또는 공존적 작용이므로 남북한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손실이 지

방에도 똑같은 정도의 손실을 주는 철저한 상호주의원칙하에서 성립되어야 비로서 협력다운 협력을 이룰 수 있다.

넷째, 쌍방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교류 및 협력은 제도 형성적, 또는 제도 조직적인 작용이므로 지속적인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각국의 제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⁴⁶⁾

다섯째, 이산가족 재회사업을 위한 방안의 차원이 이양화되어야 한다. 관료적이고 단편적 방안을 탈피하여 TV, RADIO, 신문 기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사용해야 한다.⁴⁷⁾

여섯째,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사업은 다른 군사적, 정치적 문제들과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적인 사업이므로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되어 고유영역을 개척해야 한다.⁴⁸⁾

(2) 추진방향

이산가족재회는 결코 어느 한가지 방안에 의존하는 단선적인 접근방법 대신 ‘정치적·비정치적’ 접근방식, ‘직접적·간접적’ 접근방식 등을 모두 동원하는 ‘종합방식’을 취해야 한다.

1)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

남과 북은 지난 91년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그러므로 공히 양측 모두 UN회원국간의 모든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세계는 이념을 떠나서 동서화해의 무드로

46) 이윤식, “남북한 교류, 협력확대방안”, 숭실대학교 논문집(통일연구 제1호, 1993), pp.9~10

47) 이러한 수단동원은 반드시 창구 일원화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창구 일원화의 원칙 하에서도 상호합의된 한계내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사실상 기술적인 실무작업을 모두 당국의 행정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48) 류근일, “이산가족 재회 추진 방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 10 ~1992.6), p. 94

흐르고, 북한은 더 이상 그들의 경제난을 은닉할 수 없다. 북한은 이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서방의 자본이나, 기술을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제3국을 통한 북한의 설득작업은 물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UN의 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 북한 정치범들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0년까지 확인된 49명의 명단과 함께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및 구금 건물의 도면까지 기술하고 있다.⁴⁹⁾ 그 명단에는 지난 79년 해외연수중 오슬로에서 피랍된 전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8월 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에 정부 대표를 참석시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고씨의 송환을 위한 여론을 조성했음을 물론, 대한적십자도 고씨의 송환을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가능한 경로를 통해 북측에 촉구했다.⁵⁰⁾

비단 고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납북인사들은 물론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 우리는 UN인권 기구에 호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이용해야 할 것이다.

2) 동서독 방식의 수용

동서독 방식을 우리의 모델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 이미 90년 10월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분단된 상태인 우리에게서는 동서독의 모델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양독은 비록 이념은 달리하여 분단되었지만 양독 주민간의 교류는 공식,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통독의 그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양독간에 72년 5월 12월에 맺어진 ‘교류조건’과 ‘기본조약’이 인적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연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친지나 가족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었다. 양독간의 인적교류는 서독인들이 동독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동독을 방문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주로 “연금자 연령”에 해당하는 노인들이었다. 젊은층이 방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위독, 자녀결혼 등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는 젊은층의 방문을 허용

49) 동아일보, 1994년 7월 21일자 1면

50) 동아일보, 1994년 8월 2일 1면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독 이산가족의 교류는 단지 인도적 견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일까?

서독은 인적교류증진을 통해 동독에게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독일민족의식'을 고양시킴은 물론 인적교류규정의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인적교류 진작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독은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적교류에 임한 것 같다. 실제로 동독은 인도주의적 사항에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타 문제에 대한 대서독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여 서독으로부터 획득하는 경제이득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서독 양국은 분단국으로서 '이산체제속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산가족 재회 문제를 쉽게 풀어나갔다.

이와 같은 동서독간의 인적교류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상황에 있어 한국과 서독, 북한과 동독이 유사하므로 서독의 협상방법과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며 원용함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⁵¹⁾

2.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다음에 제시되는 방안의 순서는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1) 생사 및 주소확인

이산가족의 재회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먼저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은 남북공동사무소 같은 기구를 매개로한 당국자, 또는 적십자사간의 행정적 절차와 작업에

51) 이재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 통일문제연구 제4권(대한적십자사,1992),p. 145

위임되어야 하지만, 이들 당국자나 적십자사에만 위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함은 물론 제한된 인원의 공직자들이 처리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물량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사업에 특정의 공공기구나 비정부 단체를 참여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비정부 단체라함은 이산가족재회 추진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각종 복수의 비영리 시민단체, 또는 민간 단체들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직능별 사회단체들, 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연예계, 자연과학계 등이 북한의 해당 직능별 단체들과 이산가족의 명단을 교환할 수 있는 역할을 위임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와 같은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사업추진 주체의 다양화와 병행하여 남북은 영상매체과 활자매체들을 상호 홍보 및 광고의 전달수단으로 동원해야 한다. 적십자사 공동사무소는 명단을 신청받아 서로 교환한 직후 그것이 남북 영상매체와 활자매체에 의해 널리 홍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은, 이같은 다차원적 찾기 창구에 등록되거나, 상대방 창구들로부터 제공받은 명단들을 종합적으로 입력시킨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이며, 이용자 누구나가 단말기로 자기가 찾는 상대방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상봉

1) 면회소 설치, 운영

면회소 설치, 운영방법은 자유롭고, 합법적인 왕래가(통행협정 체결시)가 가능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다같이 유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면회소는 남북한의 체제를 교란하지 않거나,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고립된 특별지대이기 때문이다. 면회소의 규모는 대단위 도시형 시설을 갖추어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⁵²⁾ 이산 1세대의 자연 수명이 한계에 다다

52) 면회소는 숙박시설, 면회장소,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홍보자료실, 안내부서, 방송실, 통신수단, 교통수단, 의료실, 경비부서 등이 갖춰져야 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분야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또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로한 특별구역의 내부와 외부는 철저히 단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남북한은 다른 의제와는 별도의 회담을 개최해도 좋다.

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면회소 설치, 운영을 추진하여 지역별이나 신청순서대로 부분적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제3국에서의 상봉

제3국에서의 상봉은, 특히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남북체제에 대한 충격을 극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 적합한 곳으로 제3국 지역은 중국의 연변일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을 신임하고 있기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상봉을 허용할 경우, 자기측 이산가족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중국, 북한, 남한이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절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내에서의 상봉을 전제로 한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다.

아직은 남북한 어느 지역에서도 상봉은 것이기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북한측 이산가족의 제3국으로의 방문을 허용하고, 남한의 가족들이 여비를 부담하여 상봉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3) 상호방문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 남북간에 인적교류의 통행협정이 체결돼서 누구라도 원하는 자는 모두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최선의 방식이 될 것이다.

(3) 고령자 우선 방안

이산가족의 상봉은 현재 자연수명이 한계에 다다른 이산 1세대의 시급한 재회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한낱 위선적인 게임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재회 사업추진의 우선 대상자는 물론 이산으로 인한 직접 피해당사자인 이산 1세대, 그 중에서도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겠다.

첫째,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제3국을 경유해 단기간 입북하여 상봉하는 방식이다.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사증 문제나, 방문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북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방문자들의 무사귀환을 북한 당국이 책임질 수 없다면,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고령자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북한의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방법이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자 중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3단계로 그들의 이산가족 중 대표를 초청하는 길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특별지역에 상봉장소를 설치해서 만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제3국에서 만날 경우, 북한의 이산가족의 여행 경비까지 남한의 가족들이 부담하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관혼상제와 임종 및 성묘

생존이 확인된 이산가족과 그 후예들이 관혼상제와 임종 및 성묘의 계기가 생겼을 때도 이산가족들은 상대편 지역으로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생사확인과 통신수단의 설치(우편, 전보등)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고려될 사항이나, 남북한은 이런 국면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관혼상제중에서도 임종과 장례의 경우를 최우선시하여 그 다음에 성묘, 혼인, 제사의 순서로 사업을 진척시키면 될 것이다.

임종의 위험이 현저할 때 현지의 가족이 남북공동 우편국을 경유하여 전보를 발송하면 상대편 지역의 가족이나 상주가 즉각 항공기 편으로 그곳에 당도 할 수 있도록 남북은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편을 확보해 두는 것과 또한 승용차 이용을 위해서는 특별히 발급된 표지판을 부착하고서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묘의 경우 사망이 확인되고, 묘소의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 제사와 경우도 생사의 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남쪽의 상주가 북쪽 친부모나 조부모의 묘소를 어떤 경위로든 확인했을 경우에는 제3국을 경유해서 단기간 입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남한당국은 이를 위한 대북제외도 해야하며, 남북인사들의 시신인수와 묘지이장 문제도 아울러 의제가 돼야 한다.

(5) 재결합

재결합 이산가족 문제의 최종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본 논문은 70세이상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결합의 유무와 재결합 지역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 항목에 관해서는 성급한 제의나 실현추구로 북한을 당혹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남한 측은 우선 생사확인과 안전한 상호만을 위해 전력해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⁵³⁾

제7장 결 론

이산가족의 문제는 정치이전의 사상이전의 제도이전의 천륜의 문제이며, 인도의 문제로서 정치문제에 앞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⁵⁴⁾ 지금까지 본 논문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90년 10월 통일된 독일의 이산가족 재결합 추진방안들을 토대로 남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물론 남북한의 경우와 통독이전의 양독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있다.

53) 류근일, “이산가족 재회 추진 방안”, 사회과학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10~1992.6)

54) 김영종,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방안”, 숭실대학교 논문집(통일연구 제1집, 1993), p. 6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나,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정치적 여건들이 그 동안의 남북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협상에 방해물이 되어왔다. 지난 7월 25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양정부 사이에는 아직도 남북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남북한 당사자들이 이러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위의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적 측면에서의 이산가족 재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우선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이산 1세대들의 자연수명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들의 고통은 모른체하고 이산 1세대들이 사라진뒤 통일로 인해 자유왕래가 가능해 지더라도 커다란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이산 1세대들이 이산의 고통을 모른체 하는 양측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도덕성을 가질 수 없다.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남북한 양측은 서로에게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남한의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민주화 및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한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개인의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정부수립후 외향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같은 기본적인 체제성격은 퇴색되어서 급기야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된 정치체제로 변질되고만 상태가 과거 최소한 5공화국까지는 지속되어 왔다. 비록 제6공화국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의 민주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리 만큼 크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북한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여 인간의 착취

가 없고 인간의 가치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계급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공언해 왔으며 지금도 그같은 목표를 내걸고 인민을 통치하고 있으나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를 고수함으로써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치체제로 변질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간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체제의 이질적인 속성이 동화될 수 있는 성격의 체제로 변신하지 않고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⁵⁵⁾

55) 이윤식, “남북한 교류 협력의 확대 방안”, 숭실대학교 논문집(통일연구 제1집, 1993) p. 9

참 고 문 헌

1. 김명기, “남북 이산가족의 재결합”, 인도법논총 제13호(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연구소, 93)
2.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 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 제13호(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93)
3. 이장희, “동서독 기본조약에 나타난 「인간적 고통경감」의 의미”, 인도법논총 제13호(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93)
4. 송한호, “남북한 이산가족의 교류방안”, 통일로(93)
5. 이장희, “동서독 통행협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5권(90)
6. 중앙정보부, “제4편 상호교통왕래”, 동서독자료집 2권(중앙정보부, 74)
7. 중앙정보부, “제9편 교통, 체신교환 관계”, 동서독자료집 3권
8. 여영무,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추진전망”, 통일(93)
9. 류근일, “이산가족 재회 추진 방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91~92)
10. 이은호, “1992년도의 남북한 교류협력”, 국제문화연구 제10편(청주대 국제문제연구소, 93)
11. 이재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 통일문제연구 제4권(92)
12. 이병용, “남북대화 및 교류에 관한 쌍방입장과 방향”, 통일한국(91)
13. 조룡남,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 통일문제연구 제3권(91)
14. 이창현, “남북대화 20년의 회고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통일원, 91)
15. 서병철,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 통일(92)
16. 이성희,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93)
17. 김영중,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방안”, 숭실대학교 논문집(통일연구 제1집, 93)
18. 이윤식, “남북한 교류, 협력확대방안”, 숭실대학교 논문집(통일연구 제1집, 93)
19. 김문환, “남북한 문화동질성 증대방안”, 통일로(94)

20. 통일문제연구 제3권(통일원, 91) 부록 “1991년 남북대화 관련 주요 일지”
21. 박봉식, “핵사찰 수용, 이산가족 재회의 길 터라”, 월간동화(91)
22. 김명기, “동·서독 모델의 남북한에의 적용”, 국제문제 제3호(90)
23. 국제문제 22권 2호 (91) 자료, “1990년 남북대화 교류일지”
24. 국제문제 22권 3호 (91) 자료, “독일통일관계조약”
25. 국제문제 21권 6호 (90) 자료, “남북대화의 현황과 전망”
26. 국제문제 21권 4호 (90) 자료, “남북한관계주요일지(1979~1989)”
27. 국제문제 21권 7호 (90) 자료, “남북한관계주요일지(1979~89)”
28.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91)
29. 송한호,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추진 방안”,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93)
30.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37회(통일원 교류협력국, 94)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정 승 래
(동국대 행정학과 3)

《 목 차 》

- I. 머리말
- II. 통일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
- III. 통일의 당위성
- IV. 독일의 통일과 교육
- V. 통일교육의 현주소
- VI. 통일교육의 방향
- VII. 맺음말

I. 머 리 말

오늘날처럼 통일교육이 요구되는 때는 없다. 통일교육이 남북 분단 이후 행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지난날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던 통일교육을 바로잡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며 다가서고 있는 통일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긴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정권안보논리에 바탕했고 냉전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 나라의 통일교육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권안보나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문민정부를 맞으며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적극 펼쳐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뜻하며,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성을 지닌 교육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문민시대의 체제적 특성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로 표현될 수 있다는 데서 보다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은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는 통일논의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이러한 통일논의는 자칫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필요치 않을 수 없다.

남북한 통일은 21세기로 넘어가면서 꿈이 아니요,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듯 싶다. 이미 동서독이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을 1990년에 이루었다는 데서 남북 통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공산중주국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살아남은 아시아의 공산국들도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해 오고 있음을 볼때, 북한 또한 그렇게 변질될 수 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치솟는다.

거기에 더하여 남북 분단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통일의 날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서는 듯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1) 조선일보 1994. 8. 2일자 신문 지상에서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두가지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대외 개방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내부체제의 동요를 막기위해 대외 개방의 빗장을 견고하게 걸어 잠글 것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통일관리능력을 계발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이나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전술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휴전선이 없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문민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통일교육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교육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Ⅱ. 통일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

통일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치와 경제 및 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술 및 종교, 학술등 문화에 관한 논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경제, 군사가 가장 큰 관심을 끈다.

교육은 통일논리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의 회담과 왕래가 다른 분야에서는 초보적 단계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분야는 회담도 교류도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교육은 통일문제와 직결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은 통일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다. 통일은 1차적으로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²⁾

우리는 2차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통일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부 분열과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현재도 여러 나라는 내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신생국들의 내부 분열과 대립은 외세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점령군들이 무력으로 분단하여 각각의 정부를 세워놓고 통합을 공식적

2)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 1991. 1. p.48

으로 가로막는 상황이 아니면, 내부 분열과 대결은 궁극적으로 양 집단의 민족통합 의식이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

민족통합 의식이 참으로 높다면 비록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조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일은 외세에 의한 분단이후 ‘독일은 하나다.’라는 의식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헌법(기본법)이나 국가 체제의 구상에도 이러한 신념을 정확히 반영하였다.³⁾

서독은 분단된 반쪽만의 지역에 헌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헌법이 아닌 기본법만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강한 단일민족의식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서독은 독일 전체가 아닌 반쪽일 뿐이며, 동독은 우리의 다른 반쪽이라는’ 의식을 부단히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렇게 유지되고 강화된 민족의식이 독일로 하여금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룩하도록 한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

만약, 서독과 동독이 각기 자라나는 세대와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가르치고,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요 반민족적 집단으로만 가르쳤다면 독일의 통일은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신의 통합이 없이는 물질적 통합은 실현시키기도 어려우며, 인위적으로 물질적 통합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정신적 원심력의 작용때문에 참다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재분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국가가 분열하는 사례를 역사는 얼마든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육이 뒷전에 머물러 있는 통일논의는 비현실적이다. 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교육이 구태의연하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데에만 열중한다면 교육은 오히려 통일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 물리

3) 서독인들은 분단후 국가의 수도 책정에 있어서도 Bonn을 임시 수도로 책정하고 통일 후 베를린을 다시 수도로 정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적 통일이 달성된다해도 오히려 반통일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연히 교육은 민족 통일의 구상과 통일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야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독일의 통일이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서독의 각급 학교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르치고 동독 주민들의 생활과 동독에 관한 제반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원만한 통일에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는 한편, 동독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높였다.

동독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치적 비판세력의 성장이 동독을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독의 내부 변화가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서독이 민족 통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축적해 온 교육적 노력이 없었더라면 통일이 반드시 가능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통일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큰 무리없이 이루어 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서독과 동독의 교육자들 사이에 직접 간접의 교류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교육자들이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상호간의 교육 이념이 다르고 교육 제도가 다르고 교육 내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이해의 일정한 폭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⁴⁾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간의 교육 교류는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남북간의 국회 회담, 체육 회담, 경제 회담, 문화 회담등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 회담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

양쪽의 교육자들과 교육정책 책임자들이 만나 자기쪽의 교육의 특징을 설명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각기 수정, 개선해야 할 항목을 토론하여 협의하고, 통일후에 갖게 될 새로운 교육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일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자들의 상호 방문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하루속히 실현시켜야 한다.

4) 신용철, “독일 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 문제 연구』, 1990. p.67~68

Ⅲ.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지는 분단이 주는 고통과 해악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때 우러나온다. 우리 민족은 지난 40여 년간의 생활 체험을 통해 남북이 갈라져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것은 분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논리나 감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민족, 국민의 현실적 삶의 문제로 통일을 민족의 절박한 당면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전후세대의 증가로 인한 분단에 대한 불감증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 때 우리에게 통일이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우리에게 전쟁의 위협대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휴전협정도 문자 그대로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며, 휴전선을 둘러싼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언제 다시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 히로시마 원폭의 1750배의 위력을 갖는 핵무기.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에 의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 200만에 가까운 병력의 군사적 대치 상황. 우리의 금수강산은 민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긋지긋한 핵 참화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통일 밖에 없다. 통일이 아닌 어떠한 조치도, 어떠한 국제관계의 변화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으며 오직 통일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경제는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이 왜곡되어 왔으며,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남북은 모두 생산력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 통일은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비 지출과 인력 자원의 낭비를 생산적인 경제 발전에 돌림으로써 남북한 국민의 복리를 크게 진전시킬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며, 남한의

경우 5인 가족당 거의 200만원 (GNP의 6%)에 가까운 돈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인구로 남한과 주한 미군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의 군사비 부담은 더욱 더 큰 것이 아닐 수 없다.⁵⁾

이와같이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막대한 경비를 비생산적인 부문에 소비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군사비에 충당되는 자금과 인력을 생산적 활동에 전용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통일은 땅에 떨어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미국의 노골적인 경제적 압력과 내정 개입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휴전상태를 빌미로 미국으로부터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각종 신형 무기의 반입이 구조화 됨에 따라 나라의 자주 국방은 멀기만 한 현실이다. 우리의 근대사 100년 동안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그동안 얼마나 침해받아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은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대표되는 자주성의 상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⁶⁾

네째, 통일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가져다 주고,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확대 시킨다. 지난날의 정권은 분단 상태를 악용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말 한 번 잘못했다 하여 어두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위협을 당해야 했고, 급기야는 최루탄에 죽고, 고문에 죽고, 이유없는 강제 연행과 검문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므로, 통일은 반민주적 상황을 몰아내고 그동안 무시당해 온 국민의 권리를 되찾게 해 줄 것이다.

다섯째,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닭은 민족의 분열과 국토의 분단이 지속된다면,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의 민족으

5) 김병오, 「민족 분단과 통일문제」 서울 : 대왕사, 1990. p.160

6) 김병오, 전계서. p.176~177

로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은 하나, 핏줄도 하나! 우리 민족은 결코 둘일 수 없다. 제 동포의 절반을 ‘때려잡고, 무찌르고, 쳐부수어야 할’ 적으로 만드는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쇠신하지 못한다면 전후세대에 까지 쌓이고 쌓인 이질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갈라설 수도 있다. 이와같은 사태가 심화되어 나타날 영구 분열의 위험을 막기위해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은 우리의 민족 문화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제겨레의 절반에 대한 증오심 대신 통일은 동포애를 심어 줄 것이며, 개인주의, 허무주의, 향락주의 대신 건전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분단이란 냉전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미국 승배의 승미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좁먹는 민족 자주의식을 회복할 길은 통일 밖에 없다. 또한 통일은 친일 친미 세력을 중심으로 서술된 우리의 역사를 대중과 민족 자주라는 찬란한 역사로 뒤바꿔 놓을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이 각기 발전시켜 온 경제, 과학, 문화의 성과를 서로 공유케 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분단은 이 땅의 수 많은 국민에게 혈육과 친지들간의 영원한 이별과 이산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남겨 주었다. 통일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분단 및 민족간의 대립으로 희생된 수 많은 영령들이 고이 잠들 수 있게 꿈 할 것이다.

이와같이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절박한 삶의 문제로 이해할 때에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가 나올 수 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족적 재난이다. 따라서 분단을 척결하는 통일이야 말로 우리 민족 앞에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Ⅳ. 독일의 통일과 교육

전후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 중에는 1990년 10월 3일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을 들 수 있다. 전후 세계사에 있어서 냉전시대와 이데올로기적 극한대립의 실제적이며 상징적 유물이었던 분단 독일의 역사적 통일은 전후 세계사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인 분단 한국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독일의 통일과 교육'에 대해 알아 봄으로써 타산지석의 지혜를 빌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일을 위한 교육방향의 진로를 어림잡을 수 있다고 본다.

1. 독일에서의 사회교육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확고하고 안전하게 뿌리내린 서독의 정치와 부유한 경제를 들고 있다. 우선 서독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 보장되는 데 있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 보장됨으로써 안정된 서독의 민주주의는 동독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이기에는 적당한 정치체제였다.

다음으로 서독의 경제체제는 사회보장과 능력별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사회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서독 국민에게 사회 복지와 부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서독의 부는 동독 국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러한 동독 국민들의 부에 대한 열망은 서독의 마르크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통일전, 그러니까 1990년 7월 1일에 도입된 서독의 마르크화로의 화폐 통일은 그런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면은 동독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의 빠른 지름길인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통일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통일에 대한 교육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교육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교육(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강화를 강조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과 사회는 상호 역학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와 딜데이(Dilthey)의 교육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통일을 이루게 한 민주적 정치와 부유한 경제를 교육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7) 교육 정책 자문회의,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1990. p.231~233

앞서 서술했듯이 통일의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선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정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각 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갖고 또 그런 자유와 권리가 타인에 의해, 나아가서는 타인의 집합체인 정치단체 체제에 의해 보장 존중되는 데서 가능하다.

즉 타인은, 나아가서 타인의 집합체인 정치단체, 체제는 다른 타인을 하나의 자유와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실제로 그래야만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안정된다 하겠다. 여기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의 ‘알아야 한다.’는 바로 교육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알아야 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기에 바로 그렇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자기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할 줄 아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⁸⁾

이렇게 타인을 자기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은 독일 가정사회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다. 독일의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목격될 수 있는 교육적 상황은 모든 가족들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들의 의견은 부모에 의해, 아내의 의견은 남편에 의해 존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강자 또는 권력자의 의견이 항상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약자 또는 비권력자의 의견도 지배적일 수 있다 하겠다. 이는 강자나 권력자는 자기이외의 가족 성원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약자 또는 비권력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갖는, 그럼으로써 존중되어야 할 타인으로 여기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가족 성원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갖는 개인으로 존중되는 것을 가정에서 자라오며 배우고 있다. 또한 가정 생활 속에서 배워온 민주주의적 사고와 행동은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일반 사회 생활에서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독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어디서나 소중히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빌려 쓴 물건은 깨끗이 닦아서

8)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 1991. 1. p.56~57

돌려 준다거나, 세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 집처럼 아끼고 가꾸며, 이사를 가게 될 때 고장난 곳이나 물건이 있으면 고쳐서 깨끗하게 해놓고 간다.

이는 타인에게 해를 안 끼치려는 의식이 강한데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생긴다 하겠다.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데 바로 이렇게 타인을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과 행동들이었다.

다음으로 독일 통일을 이루게 한 부유한 경제와 교육과는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서독은 석탄을 위주로 한 지하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중동이나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1차세계대전이 1919년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그로부터 20년 만인 1939년에 2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1960년대 중반 또는 70년대부터 서독이 또다시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서독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2차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한 마샬 경제 원조계획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특히 서독 국민들의 근면성, 정확성, 절약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겠다. 부유한 경제는 그 경제의 주인인 개개인이 근면하고, 정확하며, 절약할 줄 알아야 하는 데서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알게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라 볼 때, 이것 또한 교육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근면하고, 매사에 정확하고, 절약할 줄 아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독일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다.¹⁰⁾

그 예로서, 가정에서 부터 아이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 비천함이나 혐오감 등을 갖지 않도록 교육 받고 배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독일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 아이들이 가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장사하는, 즉 일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근면성에서 오는 것이다.

9) 유종렬, 「통일 교육의 현실과 방향」 서울 : 노원 문화사, 1985. p.212~215

10)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 1991. 1. p.57~58

그대로 두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을 다른 필요한 이에게 싼 값으로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어 용돈으로 쓸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버리는 것이 큰 낭비임을 깨닫는 물질에 대한 애착감, 즉 절약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또한 어느 가정, 직장을 가나 종이를 한 면만 쓰고 쉽게 버리지 않는다. 모아서 뒷면을 연습장으로 쓰고난 뒤에야 버린다. 독일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야 성냥불을 켜다는 일화는 독일 사람들의 절약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근면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절약하는 경제적 사고와 행동인 것이다.

위에서 독일의 통일과 교육을 논함에 있어 교육 기관외에서 행해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단지 독일 통일을 이루게 한 연유를 놓고 볼 때, 위에서 서술된 것 같은 넓은 의미의 교육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넓은 의미의 교육이 갖는 중요성 또한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으로 전락된 것을 볼 때 실제로 적지 않다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넓은 의미의 교육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야말로 산교육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심이 메마르고 안정되지도 부유하지도 못한 사회일수록 그런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서독의 정치교육

서독은 과거 나치정권의 등장을 허용하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국민의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크게 기인함을 반성하고 전후 국가의 건설과 더불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정신적,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서독의 경제적 재건과 정치적 성숙은 그 투자의 성과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수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연방 정치교육 센터'이다.¹¹⁾

11) 신용철, "독일 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 문제 연구」 1990. p.120~121

이 기관은 서독 국민에게 있어 정치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참여의 뜻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 과업으로 삼는다.

교육매체의 한 부분이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민주 헌장 국가에 있어서 정치교육이란 개인의 사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의 과업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지적, 도덕적 능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럼으로 해서 그것은 동시에 그 구성원의 정치적 정향의 성숙과 자아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서독은 이같은 의미의 정치교육이 건국 초부터 시행되어 왔고, 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연방 정치교육 센터의 통일 정책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 봄으로써 그러한 기관과 정치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해 줄 것이다.

서독의 연방 정치교육 센터는 양 독일의 통합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달성되기까지 수행한 교육사업은 주목할 만한 바가 있다.

교육사업의 대상은 옛 동독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 전개 및 현안의 통일 정책적 현황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분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의식하게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한 서독 국민들의 무관심 경향에 대처해 나갔다.

사업은 개별 강연, 일련의 연속 강연, 수일간 계속되는 세미나, 영화 관람,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독일의 통일에 관심을 가진 기관들은 모두 행사 경비의 일부분을 분담하여 이같은 프로그램 공급을 받아 들었다. 그러한 기관들을 예시해 보면 공민 대학, 각급 학교, 민간 단체, 예비군 단체, 대학생 조직등을 들 수 있다.¹²⁾

또한 현장교육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동베를린과 동독지역으로의

12) 신용철, 전게서. p123~124

수학 여행, 양 독일의 접경지역 견학이 이에 속한다. 이런 행사들은 학술적인 논의에 못지않게 의의가 있고 유익한 것이었다. 베를린 장벽과 접경 지역의 시설들을 직접 접해 보는 것은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분단이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중시된 교육 목표를 살펴 봄으로써 또한 우리는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나라의 기본법이다.

「민족적, 국가적 통일」, 「자결」, 「독일의 통일과 자유」와 같은 낱말이 전문에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 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언어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교육에서도 반영되어 교육 목표의 중심으로 설정되어 왔다.¹³⁾

이를테면, 1984년 3월 15일 헬무트 콜 총리는 의회에서 「분단 독일에 있어서의 민족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행하고 동서독 관계의 결과와 전망을 6가지 논점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첫째가 자유는 독일 문제(통일이란 민족 문제를 독일 사람들은 독일 문제라고 표현한다.)의 핵심이라는 것. 둘째가 독일 민족은 독일인의 의식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유안에서의 통일」을 주장하고 학부모, 교사, 모든 주의 학교 행정가와 문교 장관들에 대해 「민족의식의 강화를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주목할 점은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유럽 통합, 아프카니스탄과 아프리카 난민 구호사업등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며, 국제관계를 존중하고 타 민족의 고통을 분담할 줄 안다는 사실이다. 콜총리만 보아도 그가 서구 정치인 중 유럽 통합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민족’과 ‘조국’이란 낱말을 싫어하고 민족의식을 멀리한 녹색당 지도자들은 NATO로 부터의 탈퇴를 의치고 유럽 통합에의 정열이 부족하였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국제적인 테러사건에 관련된 인물도 있다. 이들은 인간에게 있어 고향과 조국이 정신적 지주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모른다.)¹⁴⁾

13) 신세호, “분단국의 교육 통합 정책”, 「교육 개발」 1991. p.61

14) 상계서, p.65~66

1983년 5월 17일에는 당시 바덴 뷔르템 베르크주의 문교 장관 마이어 포어 펠더는 동독에서의 민중 봉기 30주년을 한달 앞두고, 주의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공화국의 창건자들이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현해 놓고 있는 헌법(기본법)의 전문을 상기시키고 “독일 통일 문제가 수업과 학교 생활에서 각별하게 고려될 때만 우리는 성장세대에게 기본법의 주문에 대해 납득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학교 교육에서 독일 통일 문제를 다루기위한 시책을 밝혔다.¹⁵⁾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분명 우리 나라의 교육 진로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독일 문제는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 지리, 역사, 일반 사회, 국어등 관련 교과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될 것이다. 그 목표는 자기 결정에 따라 독일 민족을 통합하는 권리는 자유와 평화가 그 실질 내용임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서로 함께 속한다는 감정이 상호 결합을 위한 최선의 토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명료히 한다.

일반 사회 교과에서는 특히 국가의 법질서적 가치를 학생들이 통찰할 수 있게 하고, 분단되어 있는 양 지역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분단의 역사를 알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 언어, 문학, 문화에 있어서 독일의 공통성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에서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공히 분단 국가로 출발했음에도 서독은 민주 헌정 국가를 이론과 실천에 있어 제대로 형성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마침내 떨어져 살던 부분과의 통합도 이루었다. 그들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통일」과 같은 무의미한 구호의 남발로 인한 정치교육적 혼란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와 민족국가라는 이념을 한시도 잊

15) 상계서, p.70~72

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다름아닌 ‘자유안에서의 통일’이라는 원칙을 현실화하는 과정이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일단 ‘국가적 통일의 회복’을 이룬다음에 이제 인간적 통일의 길에 나서고 있다. ‘자유’와 ‘민족’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정치교육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정치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노력에는 정치교육 관련기관의 자기 향상과 정치교육 전달기관의 설립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일 전 서독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 노력

올바른 통일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독의 문교부가 역사적인 독일 통일을 이룩하기 전까지의 10여년간 그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9년 서독 문교부가 독일 통일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각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편집한 교육 지침서는 15개 항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¹⁶⁾

- 1) 독일 문제는 동시에 유럽적이다.
- 2) 독일 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 정책을 통하여서 달성될 수 있다.
- 3) 독일의 항구적인 분단은 여러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동의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16) 신세호, 전게서. p.110~112

-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인 의무이다.
- 10)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 13) 동독의 독일인들은 그들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다.
- 14) 독일의 통일은 확고한 우리의 목표이다.
- 15)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상기한 바 유의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독일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기 위하여 충분한 역사적 지식을 주려고 하였다. 그것도 독일 문제만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넓은 유럽 문제로써 다루게 하였고, 독일의 통일이 이웃 국가들과 어떤 함수관계,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분단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독일 통일의 문제를 평화 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 넣어 주려고 하였다. 동서독의 어느쪽도 상대방의 기본적인 이해가 포기되거나 종속되는 상황은 생각할 수 없고, 굴복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셋째, 민족의 개념을 통하여 독일 통일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하려고 하였다. 독일의 불행한 역사속에 등장하는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 개념을 종속적, 생물학적 의미에서 신화적인 의미로 높게 끌어 올리고, 국내 억압과 외부로의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데 오용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민족을 중심으로 개별적 구성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것이므로 민족 통일의 길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넷째, 인권의 존중을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이란 기본권으로서 그에 대한 요구는 국제법적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 국민의 인권을 요구한다 해도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유엔 헌장의 조약국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엄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섯째, 독일 분단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게함과 동시에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독만이 독일 전체가 아님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통일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파악하게 하고, 공산권에서 동독이 가장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한 점을 인정토록 하였다. 또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동독의 젊은이들과의 연대감 형성에 주력하였다.

V. 통일 교육의 현주소

1.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여건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하여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도 그 시대가 처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기복을 그리면서 다양한 모습의 통일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통일이 중요한 민족적 과제인 만큼, 통일과 관련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다.

국가 통일 정책은 결국 통일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통일 정책의 방향은 통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분단 이래 1960년대 말까지 우리의 통일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명분을 앞세운 소극적 통일 접근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¹⁷⁾

제1공화국 시기에는 유엔 감사하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논리와 더불어 남북협상의 시도가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북진통일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 북진 통일론이 강조되고, 남북협상이 배제된 가운데 반공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통일 논의가 금지되다시피 하였다.

제2공화국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무력 통일이 철회되면서 남북협상

17) 유경숙,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이화여대 석사논문(1985) p.7

론이 대두되었는데 대외적으로 미·소 냉전 체제의 약화, 비동맹 세력권의 형성으로 인하여 자주적 통일론이 제기되었다. 결국 통일 논의가 활발했으나, 정부의 공식 정책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론이었다.¹⁸⁾

제3공화국 시기에도 반공을 국시로 ‘선건설, 후통일’을 표방하고, 통일 논의를 위한 협상은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반공, 승공 교육이 강조되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그동안 배양된 통일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책 전환과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정책 기조 위해서 평화 통일 정책을 펴고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통일 정책의 비판과 우리의 통일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통일 교육이 실시되었다.¹⁹⁾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제5공화국 시기에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의 제시와 함께 남북 관계가 보다 발전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도 반공교육이 강조되고 북한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통일정책 홍보가 통일교육의 주류를 이루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교육 방침은 정부 수립 이후 반공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반공의 교육 기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온 셈이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위상의 향상, 통일 주도 역량의 확보등으로 남북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7·7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종래의 반공교육에서 통일, 안보교육으로 전환하고 통일과 안보의 균형적 시각을 길러주고, 통일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등 전향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같은 통일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정부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왔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그

18) 상계서, p. 8~9

19) 유종렬, 「통일 교육의 현실과 방향」 서울 : 노원문화사, 1985. p.61~62

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다.²⁰⁾

이러한 현상은 통일 문제와 연관된 학교 교육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심정적으로 통일을 희구하면서도 실제로 통일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해방 이후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을 살펴 볼 때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불투명한 인식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통일 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이었다기 보다는 형상을 유지하는, 분단을 지속시키는 나아가서는 통일에 역행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공으로 일관해 온 통일교육은 남한 내부의 국가적 결속은 강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북한을 통합하는 통일 지향의 교육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2. 통일교육의 현황

여기에서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에서 분단 현실을 다루는 방식과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전후세대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분단현실에 대한 불감증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통일후의 국가의 실질적인 국가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전후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의 전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 분단과 반복한 교육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분단의 원인을 북한과 관련시켜 볼 때 분단은 북한의 호전성에 기인한다고 서술한

20)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의외의 경직된 남북관계, 북한의 핵문제, 북한체제 변화의 미비, 남한 당국의 소극적 교섭 태도등으로 통일을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각종 대학 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 25%이상을 웃돌고 있다.

다. 2차세계대전에 구소련이 참전하고 구소련이 북한을 점령한 후, 구소련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로써 38선은 분단으로 확정되고 나아가 북한 공산 집단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야욕으로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었다고 한다.

“북한 공산 집단은 동족 상잔의 참극을 무릅쓰고라도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6·25남침이 그 예이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하여 수시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다. 또 그들은 남북대화를 멋대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위장 평화 공세를 전개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평화 통일과는 달리 무력 적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중학교 3 도덕)²¹⁾

다음으로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기만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공산 집단은 자신의 목표인 남한의 공산 혁명과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남한 당국에 대하여 거짓 선전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 공산 집단은 평화 통일을 내세우고 남북대화를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적화와 대한 민국 정부의 전복을 계속 꾀하여 왔다.”(중학교 3 도덕)²²⁾

북한의 기만성은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김일성 우상화와 북한의 정치 체제가 경직되고 독재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둘째, 북한은 공산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일률적인 사회이다. 셋째, 북한은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적 사회이다. 넷째, 북한 지도층의 주민 통제의 성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감을 갖게

21) 문교부 「중학교, 도덕」 1988. p.315

22) 문교부, 전제서. p.276

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비인간적, 호전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 또한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관은 분단 상황의 분열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으로서 이해하고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북한관은 민족의 분단을 지속시키는 내용이지 결코 민족의 통일을 촉진하는 내용은 아니다.

(2) 민족분단과 국제관계

민족 분단과 국제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분단 과정에서 미국과 구소련의 외국 세력의 영향력 둘째,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갖는 의미 이 두 가지이다.

첫째, 교과서에 의하면 민족 분단은 북한과 구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련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이 눈 앞에 보이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어 만주와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김일성 집단을 세움으로써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염원을 짓밟기 시작했다.”(고등학교, 사회)²³⁾ 따라서 민족 분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구소련과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번영을 지원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 억제나 평화 유지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을 응징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굳건한 의지...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평화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등학교, 교련)²⁴⁾ 이와 같이 미국은 자유 우방국으로서 공산 침략에 대항하여 한국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안정과 자유를 수호하였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정당화되고 있다.

23)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 1988. p.379

24) 문교부, 「고등학교, 교련」 1988. p.410

그러나, 분단의 원인을 국제 관계에서 찾는다면 미국이 최초로 38선에 의한 분할 점령을 제의한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하자마자 구소련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국은 구소련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구소련에 대하여 38선 분할 점령을 제의하였다. 이어 구소련이 38선 이북을 점령한 후 미국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들의 표현대로 '사실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게, 또는 구소련에게 동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쪽은 분단의 원흉으로, 다른 한쪽은 은혜의 나라로 칭송되는가? 그것은 냉전의 산물이다. 미·소에 의한 세계 냉전 체제 속에서 남북한 각 체제가 미·소의 분할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 지배 권력의 이해 관계가 미·소 분할 체제에 의한 이해와 결합됨으로써 대내적 냉전논리는 보다 완벽하게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학교 교육이 양체제에 의해 분할된 냉전논리에 침몰된다면, 또한 한쪽은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전적으로 그르다는 흑백논리에 의해 주도된다면, 그러한 논리에는 양자의 보완이나 통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끝없는 반목과 대결이 악순환만이 존재한다. 냉전논리와 흑백논리는 분단을 지속시키는 논리이며 결코 민족통일의 논리가 될 수 없다.

3. 분단 상황과 학교 교육의 문제

여기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교육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 내용, 교수 학습 과정, 교육 평화, 그리고 교육

경쟁의 문제를 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겠다.

(1) 국가 권력에 의한 강압적 통제

중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의 교과 목표 가운데 반공, 안보, 통일과 관련된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토 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깨달아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여 자유 민주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다지게 한다.”라고 제시되고 있다.²⁵⁾

즉, 도덕의 교과 목표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민주체제의 수호 두 가지의 목표에 집약되고 있다.

그런데 첫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평화 통일의 노력에는 전제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번째 목표인 자유 민주 체제의 수호는 남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수호를 말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 도덕, 윤리, 사회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위 반공 교육, 국민 정신 교육등의 이념 교육은 정치적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적 국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별반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분단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부당한 권력 집단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강압적 통제가 가해짐으로써 국민들은 타율적으로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 북한에 대한 증오심 고취

분단이 된 뒤에 양편의 교육은 상대편을 부정하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25)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 1991. p.67

이용 되었다. 남쪽은 반공산주의를, 북쪽은 반자본주의를 가르침으로써 항상 상대편을 비판하고 증오하는 자세를 갖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식보다는 적대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통일 안보의 이름 아래 시행된 교육은 남한 체제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체제의 잔혹성과 비민족성, 비인간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반공 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은 편파적으로 왜곡되고 북한 동포들은 비인간적 잔혹성으로 묘사되어 북한 동포를 인간이 아닌 짐승이나 빨달린 동물쯤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²⁶⁾

도덕 교육이 건전한 도덕성의 형성을 돕는 일이며 도덕성이 지적 도덕성과 실천적 도덕성으로 구성되고, 이 기준에 따라 합리성과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때 도덕 교과서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반공 교육은 결코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분단 상황과 교육의 현실이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덕 교육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동족을 신뢰할 수 있는 심성을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 교육은 인간을 증오하고 동족을 적대시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덕 교육 속에는 비인간화 교육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도덕적인 교육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반공 교육은 학생의 통일지향적 의식을 심어 주기에는 거리가 멀다.

(3) 편협된 획일적 사고의 형성

분단 상황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일방적 주입식과 무조건적 암기식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한 학습 평가는 양자택일 또는 사지 선다형에 의한 하나의 정답 알아 맞추기로 이루어진다.

분단 상황에서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 평가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26) 「새교육」 전계서, p.66~67

통일·안보 영역이다.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체제 중에서 북쪽은 무조건 흑이고, 남쪽은 무조건 백이라는 논리가 통일·안보 교육에서는 정당한 논리이다.

통일·안보 교육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되고 수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평양 거리를 보니까 의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 “북한의 TV 화면을 보니까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고층 건물도 참으로 잘 지었더라.” “사람의 일이란 100%라는 것이 없는데 공산주의란 100% 나쁜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합리적인 답을 교사가 제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공과 반북한에 관한 한 사회의 분위기나 도덕·윤리 교과서의 논리로는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권력 집단의 입장에서 흑백논리에 가까운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분단 상황에서의 학습과 학습 평가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특징지원진다. 학습은 사건과 사물에 대한 내용, 원인, 결과,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인 제시와 토론이 없이 주어진 내용에 대한 암기-주입식의 교육이 형식화되어 있고, 학습 평가는 논리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이루어 진다.²⁷⁾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해 온 일관된 방식은 O × 식과 4지 선다형식 시험 문제이다. 이런 평가 방법이 길러주는 사고 방식은 여러가지 현실적 조건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그르다고 생각하는 흑백론적 사고 방식이며, 자기가 선택한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독선주의인 것이다.

(4) 분단상황과 학교경쟁의 심화

분단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우선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하여

27) 유경숙, “통일교육의 변천과 문제점”,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p.36~37

정책적 실적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군사적인 것을 중심으로 민족 자주성을 측면으로하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은 학교 교육에서의 비인간적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누군가는 지적한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비교 우위를 끊임없이 강요하였다. 남한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면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는 인간주의 이념을 억제하고 경쟁 위주의 통제적인 교육을 유발하도록 하게 된다.

Ⅵ. 통일 교육의 방향

1. 통일 교육관의 정립

통일을 위한 교육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면서 여러 주장과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을 위한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등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것은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우월주의적 통일관이고, 다른 하나는 절충주의적 통일관이다.²⁸⁾

우월주의적 통일 교육관은 남한의 교육이 북한보다 우월하므로 남한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북한의 교육을 비판, 배척하자는 주장이다. 흔히 남과 북의 교육을 비교, 분석하면서 북한의 교육이 지니고 있는 비교육적 1인 숭배주의를 들어 마땅히 지워버려야하며, 남한의 교육은 자유주의와 인간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이것이 통일 한국의 교육이 되게 하자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반공 통일교육에 비하면 약간 융통성이 있지만, 기본적인 성

28)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 1991. p.32

격은 대동소이하다. 지난 1950년대 부터는 줄곧 학교는 반공 교육과 승공 교육으로 일관해 왔다. ‘때려잡자. 공산당!’ ‘승냥이 빨갱이’ 등이 모두 그러한 교육을 대변하는 구호들이며, ‘이승복의 반공정신’으로 멸공을 외치는 교육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상대 타도의 교육은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더욱 철저하였다. 그들은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교육, ‘남조선’ 적화통일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남과 북의 이와 같은 상대부정의 교육은 냉전체제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교육이 분단상황에 완전히 종속되어, 분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상대방에 대한 완전 승리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친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대의 철저한 비판과 부정만이 용납된다.

이러한 교육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며,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다. 오로지 상대를 압도적 힘으로 굴복시키는 통일론을 역설할 뿐, 상호 이해와 동질성의 확인과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40여년 가까이 이 땅을 지배해 온 이러한 통일교육은 이제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문교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 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과 거의 무제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소련과 국교를 수립하는 마당에 반공과 멸공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우월주의 통일교육관은 승공통일교육관 보다는 진일보 하였으나, 여전히 대결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으므로 체제경쟁교육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화해와 이해에 기초를 둔 새로운 통일국가의 건설보다는 상대에 대한 승리를 통한 통일을 함축하고 있다.²⁹⁾

두번째 관점인 절충주의적 통일교육관은, 남쪽과 북쪽의 교육에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면서 양자를 적절히 융합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한 개인적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기본철학과 강한 복지지향적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북쪽의 제도를 합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식이다. 또는 유아교육과 유치원교

29) 「새교육」 전계서. p.33~34

육을 보편화시킨 북쪽의 제도를 취하면서 남쪽의 지나친 입시경쟁제도는 버리는 것과 함께 북쪽의 이상화 교육은 버리고 남쪽의 개방적 고등교육제도를 취하자는 식이다.

이러한 절충주의적 통일교육론은 대결지향에서 벗어나 통합지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나,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제에 뿌리 박고 성장한 제도들에서 부분들만을 선택적으로 뽑아 하나로 융합시킨다는 것이, 말로는 그럴듯 할런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³⁰⁾

예컨대 유아교육과 유치원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단일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유아교육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 것이다. 남쪽이건 북쪽이건, 그리고 각각이 문제와 모순이 있건 없건간에 그것은 하나로 완성된 교육체계이므로 각각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인위적으로 남쪽의 이 부분과 북쪽의 이부분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통일된 하나의 교육체계로는 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절충주의 통일교육관은 남과북의 현재의 교육제도를 현실 그대로 긍정한다는 점에서 역사의식이 결여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남과 북의 교육은 어느쪽도 정당하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분단 하에서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좋은 것만 선택하여 합치면 될 만큼 우수한 교육체계는 더욱 아니다.³¹⁾

현재있는 그대로의 남한의 교육과 북한의 교육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가리는 것도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다. 각각의 교육제도, 교육이념, 교육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판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위의 교육이 개화기 이후로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바르게 파악하는 일이다.

19세기 말에 우리 민족은 근대화의 문턱에서 민족교육과 서구의 근대교육을 통합시키는 역사적인 개화운동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무력을 갖춘 일

30) 「새교육」, 전개서. p.35~36

31) 「새교육」, 전개서 p.37

본체국주의는 총칼로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국권은 탈취당하고, 교육은 역사적 유례가 드문 가혹한 식민지교육으로 전락하였다. 그것은 말이 교육이지 교육이 아니었다. 비교육과 반교육의 범벅이었다.

따라서 민족교육은 발달되고, 자생적으로 추진하던 교육의 근대화 작업은 단절되었고 오로지 식민지 통치자를 위한 훈련만,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어졌다. 36년간 민족교육의 전통과 자생적 근대화 역량이 철저히 파괴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은 되었으나, 이미 식민지 하에서 배태된 분열의 씨앗이 2차대전 후의 냉전 체제에 의하여 현실화되면서 민족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갈라지고, 교육은 분단체제에 완전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단하의 교육은 남이건 북이건 정상적 교육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즉 온전한 한국인의 교육이 아니고 반씩으로 갈라져서 투쟁하는 반동강이에 봉사하는 교육으로 각각 성장하였다.

이처럼 80여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정상적 민족교육을 가져보지 못하고, 식민지 교육과 분단 교육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 민족공동체의 교육이 아니었다. 왜곡되고 때로는 반교육적인 교육이었다. 도대체 우리는 80여년 동안 한번도 정상적으로 민족 공동체 교육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한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민족공동체 교육을 구상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21세기를 향한, 지구촌 활동의 중심을 한반도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교육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젠 더이상 '우리가 하나' 라는 이념을 등지고, 민족의 정서를 배반하는 교육이 아니고 세계의 역사속에 커다란 흐름으로 남을 수 있는, 한민족의 동질성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민족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교육을 말이다.

2. 통일 지향의 현실 인식

분단 상황에서의 민족현실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교육은 통일 지향의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통일 지향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고,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적 시각은 남북한 관계를 통합의 관점에서 남한의 정치, 사회 체제를 민족적 자주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사를 남한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남한은 분명 한민족의 반쪽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은 통일되어야 할 또다른 반쪽인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유엔 결의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 가운데 정부에 가담한 수는 이승만을 비롯하여 극히 소수이다.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마저 참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선 일제시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시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도 남한에서는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민족사의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 또한 좌익 중심, 특히 김일성 중심의 역사해석도 마찬가지로 반쪽의 역사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 즉, 미군정기에 있었던 우익과 좌익의 갈등, 이와 더불어 좌익과 우익의 협상 노력등이 학교 교육의 역사에서 사실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은 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소 양 진영의 한반도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여기에 민족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작용하여 분단 상황은 고착화 되었다. 분단 고착화의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자적 체제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이데올로기와 물리력에 의한 강압적 통제를 지속시켜 왔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간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오는 과정에서 남한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형성되었으며, 북한은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한 모두 민주화의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³²⁾

정치, 경제의 측면에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32) 민병천편, 「전환기의 통일문제」, 서울 : 대왕사, 1990. p.261

학교 교유를 통해서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 교육이 정치 권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교화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국민 대중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각성시켜주는 도장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와 국제관계는 민족 자주의 시각에서 조망해야 한다. 우선 분단의 현실은, 미·소 강대국의 대립과 이에 민족 내부의 분열이 더해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외세에 의한 분단의 발생과 동시에 분단 이후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외세의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을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로 미국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주입과 이제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외세를 어떻게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된다.

3. 민족적 화합을 위한 교육

현재의 남북한 반목과 대결 그리고 적대감, 증오심을 불식시키고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화합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재편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각종 활동이 개편되어야 한다.³³⁾

우선 남북한의 이질화를 조장하는 교육적 조치를 시정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 활동의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 내용에서의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 간의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수요건이다.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일이 우선적 요건이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도 우리와 화합하여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33) 이영덕, “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 연구」 1990. p.151~152

편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질화의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남북한간의 반목과 대결의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결국은 남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인식시켜주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주의하여 1995년도 6차 교육 개정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교육은 현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북한 관련 교육은 ‘북한 바로 알기’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매년 6월이면 반공에 관한 각종 행사가 있다. 예컨대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 반공 응변 대회, 반공 사진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 ‘북한 바로 알기’ 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 동포의 생활상, 북한에 있는 자연 경관, 북한의 고적지, 북한 품물 등에 관한 사진 자료 전시회를 개최해 볼 만하다.³⁴⁾

또한 외국기자 또는 해외동포의 ‘북한 방문기’를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외 동포들의 남북한 이해를 위한 노력은 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해외 동포들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국민이 서로 적이 아니고 한겨레이며 반드시 화해해야 할 동족이라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을 공정하게 평가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바로 알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 경직성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자료 가운데에는 북한 당국에 의해 선전용으로 의도적으로 미화한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려면 이러한 초보적 시도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화합을 위해서는, 어렸을적부터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고 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결점은 포용할 수 있는 아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 것은 모두 옳고 네 것은 모두 그르다는 비타협적 사고 방식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 가능한 한 상대를 이해하고 좋은 점은 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34) “통일 대비 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1992. p.56

지금까지의 윤리 도덕 교육은 이러한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북한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며, 북한 동포들 또한 모두가 흉악 무도하여 남한을 쳐부수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증오하고 적대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통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민족의 화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성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중등 단계에서의 교육 또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남한은 무조건 옳고, 북한은 모두 나쁘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논리적·비판적인 사고력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인지라 합리성을 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기 마련이다. 더우기 통일 정책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반공과 통일의 연계성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해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반공 교육 자체를 싫어하고 불신하는 등의 역기능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이러한 교육 내용은 철저히 개편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 교육 내용이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와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되 우리와 화합하여 공존 공영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정립시켜주는 방향에서 교육 내용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북한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다 많이 제시함으로써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대화할 수 있다는,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각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해 나 자신이 노력하겠다는 신념까지도 내면화하게끔 과감히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한의 체제, 정책, 삶의 방식은 모두 옳고 지선이며, 북한의 체제, 정책, 삶의 방식은 모두 옳지 않다는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상호 좋은 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5) 「교육월보」, 전계서. p.58~59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산주의 이론과 실체를 비판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내용을 첨가하여야 하며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현실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매우 주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남한의 체제와 삶의 방식만이 절대라는 생각은 우리 민족의 화합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인류 공영을 위해서도 한시 바빠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³⁶⁾

고전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야 자기들 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남한의 체제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두 진영이 상호간에 공동 이익을 위해 교류하면서 자체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대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삶의 질, 현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중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의 노예가 되어 종속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길도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공 일변도가 현실적으로 민족 화해를 저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협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료에 의한 천편 일률적인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만 제공하지 말고 오늘의 북한사회의 명암을 올바르게 보여 줄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에 의해 교육 내용이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확일적으로 북한이 옳지 않다는 결론만을 유도하지도 말고 이념과 체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음미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소지만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36) 통일 연수원, 「민주 통일론」 1991. p. 121~122

4. 토론을 통한 수업의 강화

윤리, 도덕 교과는 지식의 주입보다는 가치 판단과 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있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윤리, 도덕 교육 수업은 주입식 교육을 위주로 하여 강의법이 주로 활용됨으로써 올바른 가치 판단과 태도를 확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과밀학급에서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 많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법 때문에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없었으며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어려웠다.

민족 화합을 이끌수 있는 인간은 남북 이질화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소하여 나가야 할 것이므로 여러 사태에 적응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요구된다. 따라서 윤리, 도덕의 통일 관련 수업은 특히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사는 자료 제공자의 위치에 서서 학생이 탐구 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토론식 수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화와 문답, 그리고 토론을 거쳐 스스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절대 요구된다. 교사가 성급히 결론을 제시한다든지 모범답안을 제공하는 등의 과거의 방식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교사가 강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입한 지식 내용은 학생의 가치 판단을 돕지도 못하며 내면화도 시켜주지 못해 확고한 신념을 가질수도 없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은 새로운 사태에 처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⁷⁾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 방식이 또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이론이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쳐 실천으로 이루어질수 없다면 공리공론에 빠지게되어 사회 현실을 개선시켜 주지도 못한다. 우리 민족의 화

37)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 1991. p.43

함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이론 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 함으로써 행동화를 도와야 할 것이다.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 경험을 통하여 체험하는 방법은 기간의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이를 도서나 각종 정보 매체로 제작, 제공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5. 민족 문화의 동질성, 정통성 회복을 위한 교육

문화는 한 사회의 집단과 개인의 행동 방식을 규정짓고 이에 맞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규제함으로써 특정 사회를 존속시키고 통합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두 사회가 재통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는 직접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며 간접적으로는 그 사회가 처해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교육이 이의 형성과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³⁹⁾

그간 우리는 남북 분단 40여년 이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아래 상호 교류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남북한의 문화가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상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점이 많아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사고 방식도 각각 다르고 행동 방식도 매우 달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후들은 우리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설사 정치 협상을 통해 물리적 통일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행동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융화되기 어려울 것이며 민족 공동체로 화합되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8) “통일 대비 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1992. p.60~61

39) 강광식, 「통일 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22~23

따라서 서둘러 이러한 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는 전파나 문화 접촉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대분할 수 있다. 즉 두 사회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이웃 문화권으로부터 특정 문화를 전파받아 변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독립된 문화를 가진 두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은연중 변화하게 되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는 이 두 경우가 전연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과 동시에 이념과 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상호 융화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문화의 이질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호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 접변에 의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 전파에 의한 동질성 회복의 기회도 거의 없다. 이로 볼 때 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은 교육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모름지기 간접적 접촉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수용이 가능한 북한의 문화는 이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파시킴으로써 남북간 문화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만이 민족 화합이 대전제인 남북간 문화의 이질성도 극복되고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문화가 이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질성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합일점을 찾기도 어려우며 융화될 수도 없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민족 화합을 위한 통일이다. 우리 한 민족의 번영, 발전을 위한 화합이다. 인류 공영을 위한 민족의 화합이다. 따라서 동질성 회복의 기반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 그리고 미래 사회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분단 이후 추구하여 왔던 계급 투쟁의 관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결코 민족의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이념을 숭상해 오지 않았다. 일시적인 이념 추구의 현상은

40) 이영덕, 「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 연구』 1990. p.231~232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계속되지는 못한 예를 볼 때 교육의 진보만 보장된다면 이념 경쟁은 곧 끝을 맺을 것이다.

6. 민주 시민 교육

통일 교육은 민주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병행되어 가야 할 것이다. 통일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는 장차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거나 통일 조국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학습자가 그러한 미래 사회에서 충분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인간으로 육성되도록 교수-학습 전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의 하나로 시민성 교육, 법 교육, 경제 교육 등에 대한 배려를 하여 지적인 학습과 함께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태도, 규범 행위에 관한 기초 소양도 더 붙여 쌓도록 해야 한다.

즉,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약자의 보호와 소수 의견의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존중의 정신과 주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사회 윤리에 대한 의식, 민주적 절차에의 숙달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의 배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여야 한다. 이 때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은 통일교육의 장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탐구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서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결론과 해결책을 찾도록 조장시켜 주며 다른 사람과의 부단한 논의 과정을 통해 검증과 내면화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참다운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은 각 방면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정치의 민주화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국민 대중의 의사와 권익에 봉사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권익에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민주적 상황이 분단 상황에 기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상황의 극복은 비민주적 상황을 타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민주화의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은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다.⁴¹⁾

또한 통일 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통일 교육 센터를 확보하는 일이다. 통일 교육이 흥미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점은 교사 스스로가 이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통일문제 내지 북한 관계의 전문서적이거나 학습 자료들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북한 관련 간행물이나 통일문제 연구서들은 필자 부족, 정보 부족은 물론 정부의 통일 정책이 홍보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독자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통일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이같은 자료들의 연구, 개발, 보급 및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양성이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줄 믿는다. 주로 대학의 사회 교육과와 윤리 교육과 출신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의 추진도 고려해 볼 만하다.

VII. 맺 음 말

민족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과연 교육은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통일은 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남북 당사자간의 정치 협상을 우선해야 한다. 또는 현실적으로는 이념적으로 적대적이며, 상호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차원에서의 경제력과 국방력의 배양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또는 같은 핏줄을 지닌 동족이기에 상호 교류를 통해 쌓인 앙금을 해소하는 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물론 틀린 주장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과연 민족의 통

41) 고영복, 「민족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서울 : 한길사, 1986. p.265

일 나아가서 배달겨레의 화합이 진정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더우기 정복이나 물리적 통합이 아닌 민족의 화합 차원에서 성취되어야 할 통일인데 위의 조치로써 충분한 것인가?

빠른 정치적, 경제적인 통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 사람들은 분단 40여년 동안에 형성된 옛 동서독간의 문화적, 의식적인 이질감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의식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 요인이 교육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은 한 사회 및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의 실체이며, 내용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혁은 정치나 경제처럼 빠르거나 쉽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40여 년간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진 인간들이 어느 한순간의 역사적 조치로 형식적이며 물리적인 통일은 가능할 지 몰라도 진정한 민족 화합은 이루어 지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적, 적대적 관계는 통일교육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인이다. 그러므로 남북 관계의 개선은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상호 적대감의 상승 과정'을 겪어 왔다. 이제 상호 대결의 관계, 적대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의 과제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상호 교섭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 부문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연구와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교육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북한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현황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국민 대중의 정신적 성숙을 기하고 의식의 각성을 통하여 진정으로 국민 대중의 권익에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국민 대중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국민 대중을 억압하는 독재 체제와 지배 집단의 관점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또 교육은 외세의 지배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일 교육은 국민 대중의 통일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민족의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역사의 주체는 자연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다. 더우기 미래사회는 과학 문화의 발달로 물리적인 요인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심요소로 부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와 역사는 인간에 의해 가꾸어져 왔고, 내일도 또한 인간에 의해 창조되어 질 것이다. 그러면 인간을 역사적인 주체로 길러내며, 그 인간으로 하여금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오직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⁴²⁾

교육이 이질화된 민족이 화합할 수 있게끔 조직, 운영되고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면 분명히 통일의 기반은 확고히 다져지게 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통일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한 겨레로서 화합하여 번영을 구가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42) 교육정책 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1990. p.321

〈참 고 문 헌〉

- 교육 정책 자문 회의,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1990)
- 문용린,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교육체제”, 『통일한국』(서울 : 평화문제 연구소, 1990)
- 이영덕, “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 연구』 제28권3호(한국교육학회, 1990)
-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서울 : 회성 출판사, 1989)
- 국토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 방안』(1985)
- 김병오, 『민족 분단과 통일문제』(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0)
- 신용철, “독일 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 연구』 제2권4호(1990)
-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 문제』(서울 : 대왕사, 1990)
- 통일 연수원, 『민주 통일론』(1991)
- 신세호, “분단국의 교육통합 정책”, 『교육개발』 제13권 제4호(1991)
- 고영복, 『민족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서울 : 한길사, 1986)
- 문교부, 『통일안보 교육 지침서』(1989. 12)
- 문교부, 『중학교. 도덕』(1988)
-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1988)
- 문교부, 『고등학교. 교련』
-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
- 강광식,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85)
- 한석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연세27호』(1988)
- 유종렬, 『통일교육의 현실과 방향』(서울 : 노원 문화사, 1985)
- 유경숙,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이화여대 석사논문(1985)
- “통일대비 교육의 과제”, 『교육월보』(1992. 3)
- “통일로 가는 교육”, 『새교육』(1991.1)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

김 한 조

(인하대 정치외교학과4)

《 목 차 》

- I. 서론
- II. 독일통일의 교훈과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함의
- III.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
- IV. 통일국가 달성방안
- V.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80년대에 들어와서 동·서 detente 현상이 야기되고 냉전구조가 화해구조로 이완되면서 동구권의 탈 공산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의 채택, 소련체제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대한 통일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통일논의 속에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동반자(companion)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¹⁾.

이러한 활발한 통일논의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1000만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접수를 받는 등 통일에 대한 기대(anticipation)가 그 어느때보다 증폭되었으나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사망, 뒤이은 김정일 체제로의 권력이양의 불안전성, 북한의 핵 투명성이라는 문제로부터 제네바 북미합의로의 과정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우선’이라는 연계카드를 상실하게 되고 북한의 경수로 문제에 한국형 경수로라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등 북측이 냉각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 완화기에서 급작스런 냉각기로 함몰해버린 남북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방안과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해 봄으로써 작금의 혼란스런 통일논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금의 남북관계 생각이 자기체제의 이익을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상부구조에 두고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민족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탈 냉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문제는 동·서간의 대결에서 민족내부의

1) 장아람, “기본합의서 채택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대학생 통일 논문집』 (통일원, 1993), p.5.

문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으로 고찰하고 한민족주의와 남북한 관계 틀에서 대내외적 요인인 정치,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방안과 상이한 체제로부터의 산물인 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이의 전제적 조건으로 통일의 방법은 북한측에게 콜플렉스만 확대시키는 무의미한 흡수통일 논의는 배제하고 상호교류 및 신뢰구축을 통한 변형된 독일방식의 통일방법²⁾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후유증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을 거울삼아 우리 정치·경제를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국가상을 정립하고 통일이란 내적 긴장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일후의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데 본연구는 중점을 둘것이다.

본고는 크게 3가지 맥락으로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과 통일이 담고있는 함의에 대하여 2장에서 논해 본다. 이는 동·서독의 통일이 상이한 체제로부터의 통일이고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원동력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과 세계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을 거울삼아 우리 정치·경제들속에서의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장에서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바람직한 통일국가로의 실천방안으로서 교류·협력과 신뢰구축을 통해서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민족적 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적 방안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독일통일의 원동력과 남북통일 문제의 함의

1. 독일통일의 원동력

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지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지만 통

2) 『한국일보』 1994. 8. 15 49돌 특별좌담

일이라는 대과제를 성공적으로 도출해낸 독일의 잠재력과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것은 독일통일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되지만 ‘분단’이라는 장벽을 의연히 넘어선 독일의 통일은 현재의 많은 시행착오보다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지난 40년 가까이 지탱해 온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사례이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완할때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독일통일은 시작부터 우리와는 상이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다. 동서독간에는 국토가 분단된이래 교류가 완전히 두절된적이 없었다. 양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부터는 교류가 제도화되어 통일될 때까지 정치적 의미의 통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일된 상황에 도달한 정도였다. 물론 남북한 간에도 제한적이거나 상호물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일상황에 비해서는 너무 미비한 수준이다. 독일은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문화적으로 통일된 상황에 도달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통일자체에 극히 소극적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서독국민도 통일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실정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통일에 무관심했고 독일에 있어서 통일국가로의 시간적 존재기는 비스마르크때 이래 74년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통일관념이 희박했었고 동독의 경우도 1971년 집권한 호네커는 통일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1974년 헌법개정때 통독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분리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³⁾ 이때의 독일의 경제규모는 ① 동독가계의 평균실질소득은 서독에 비하여 반 정도 ② 화폐, 비 화폐 재산수준은 서독과 비교하면 1:3정도 ③ 서독 1인당 외국무역 수지는 동독과 비교하면 2배반 이상⁴⁾의 격차가 있었지만 서독의 경제규모를 전제로 할때 동독국민들이 당의 정책이 반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도 작용했지만 무리한 통일보다는 정치적으로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실리를 얻는

3) 서병철, “독일 정치통합의 과정과 원동력”, 『통일문제 연구』 1993 여름(통일원), P11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이 컸을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 있던 독일은 통일을 완성한 반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더욱 긴박하고 변화하는 세계정세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힘을 국토분단이라는 단절에 의해서 힘의 분산을 겪고 있고, 국민들의 희망도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독일의 통일과정은 우리의 통일 노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독일정치 통일과정과 원동력을 세밀히 분석하여 통일과업 성취라는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는 데 참고로 삼아야 할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의 통일논의가 급속히 냉각된 결정적 이유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고수와 '주체사상'을 통한 사상의 경직성이 남·북통합의 문제에 가장 큰 건림들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것이다.

독일이 통합을 하는 동서독간의 협상과 의견일치에 대한 연습은 이미 냉전때 시작이 되었다. 양독일 정부는 1951년 9월 경제에 관한 베를린 협정을 최초로 체결하여 양편간의 교역에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내유통과정과 같이 만들었으며 이 조치는 교역량 증대라는 경제적 이익과 양측이 통일되어야 할 잠정상태(modus vivendi)에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명목상의 이익도 함께 가져왔었다. 독일은 경제교류, 인적교류, 그리고 방송·통신교류를 통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왔으며 사회경제체제가 통일 직전 상당히 유사하게 접근해 사실상 민족통일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에서 국제정세의 변화⁵⁾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급작스런 흡수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막강한 경제력과 상호이해가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에 멀지않아 '라인강과 엘베강'의 통일독일은 세계최강의 경제로 다시 부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통일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통일독일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동부독일(구동독)의 경제수준을 서부독일

4) 경남대학 극동문제 연구소,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1991), P.59

5) 동·서독의 결탁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이 2+4형식의 독일통일에 결정적 매개변수라고 생각된다.

(구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이미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⁶⁾ 서유럽과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장점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도 러시(rush)를 이루고 있는 등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독일은 생생한 통일의 '학습장'이며 참고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다⁷⁾.

2.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

위에서 제기한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제도의 이완은 인간이 먼저 제도보다 우선순위에 위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과정과 주요 문제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콜수상정권의 신속한 정치적 결단이 통일독일을 실현시킨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통일비용 문제등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통일 후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도 통일독일이 가능했던 원동력이었던 경제교류·인적교류·열강과의 힘의 역관계 극복방안·통신수단의 교류등으로 인한 통일국가로의 건설과정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체제변환에 따르는 문제를 단기간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속도

6) 통일독일의 경제력 추이에 대해서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제력 추이

구		분	90년	91년	92년
국 민 총 생 산 10 억 마 르 크		서 부 독 일	2,333,353.2	2,521.0	2,678.2
		동 부 독 일	100.4*	198.3	247.2
		통 일 독 일	1,315.4*	2,719.3	2,926.4
통 독 의 무 역 규 모 백 만 마 르 크		수 출	680,857*	665,813	671,203
		수 입	573,479	643,914	637,546

remark : *표는 통일이전인 90년 하반기만의 자료를 근거

자료 : 한국일보 9월4일자 「엘베강의 기적」참조

7) 1994. 9. 4일자 한국일보 참조

와 범위, 그리고 토지와 재산의 소유권 및 사유화 방안, 기업의 민영화 방법, 통화 교환비율 등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⁸⁾.

넷째, 우리는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사회의 힘은 결국 민주화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김영삼 대통령도 강조하시는 것이지만 독일의 통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통일도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은 독일통일은 먼저 동독사람들이 공산지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 정권의 해체를 선언하고 총선을 통한 통일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독 국민들이 동독정권의 서독정권으로의 이완이 자주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 있고 서독은 이를 꾸준히 지원해 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통일로의 여정에 가장 커다란 전제 조건이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길을 열어 주는 첫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남한은 민주적인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도 이를 추진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이의 방법적인 측면은 4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남북한은 남북한 주민이 서로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한민족공동체’라는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상 정립을 통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월등한 체제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통일원동력이 어떤 정치적 의제의 타결로 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Ⅲ.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에 방법적 측면에 있

8) 박철순,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대학생 통일 논문집』 (통일원, 1993), P95

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도출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먼저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미래상의 정립을 위한 통일시나리오⁹⁾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통일의 의미와 바람직한 통일국가상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통일 시나리오

(1) 흡수통합의 방법

흡수통합의 시나리오는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통일,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과 같이 남북한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에 흡수통일 시나리오이다. 즉 이를 다시 환원해 보면 북한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 또다른 하나는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현 동구권의 몰락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현 북한체제가 나타내고 있는 모순들을 통해볼때 “순수가정적 모델에 불과하다”¹⁰⁾고 볼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일것이다.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모델의 경우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라는 측면에 따라 흡수통합이 상대적으로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다른하나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뒤 즉 장기적 내지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첫번째는 지금의 북한현실을 통해볼때 북한체제를 더욱 몰아 부치고 자체붕괴시킴으로써 북한을 흡수통합하자는 모형이다. 갑작스런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로의 정권이행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과 북한이 작금에 처해있는 기본 의식주 생필품 부족, 김정일 정권획득에 대한 북한진영에서의 반대파 등장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요인을 가속화 시킴으로써 흡수통합하자는 전략이다.

9) 손호철, “남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통일전망”, 『통일문제 연구』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P39-41

10) 위의논문, P.39

(2) 변형된 독일식 흡수통합

흡수통합의 또 다른 모형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통일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은 북한사회를 흡수통합하는 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short-term) 흡수통합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점진적 교류를 통한 북한체제를 남한자본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남한도 일방적인 북한체제를 흡수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한체제로 수렴시켜나가는 방안으로서 필자가 앞에서 논했던 변형된 독일통일방식으로 부르고 싶다. 즉 이 방식은 흡수통합의 논리와 수렴형 통일모델의 논리를 혼용한 통일논리라고 볼 수 있다. 단 남북한 신뢰구축이라는 전제를 달게 되지만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게 될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으로서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한교류를 통해서 통일의 물꼬를 트고 이의 완성을 의미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간에 속개 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해 나갈수만 있다면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의 방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

(3) 연방제 통일안모형

또 다른 통일 모형으로써 북한, 일부재야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는 민족통일과 체제통일을 이분법(dichotomy)적으로 나눔으로써 1국가2체제라는 모순적 결과를 잉태함으로써 통일국가에 상이한 체제가 존재한다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며 설사 연방제 형식의 통일을 이루더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두개의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세력간의 교류속에서 두사회가 체제간의 수렴이나 특정체제로의 흡수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초기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의미밖에 갖지못한다고 생각한다.¹¹⁾

따라서 바람직한 통일모형은 변형된 독일방식의 모형으로 밖에 될 수 없으며 여

11) 오승용,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대학생 통일 논문집』 (통일원, 1993) P.143참조

기에서의 문제는 양체제의 거리감에서 어떻게 북한의 신뢰구축¹²⁾을 통한 남한체제로의 수렴을 견인해 내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

2. 통일의 의의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돈스런 통일논의를 규정한 후에 미래상을 논하는 것이 논리적(logical)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통일은 분열된 세력이 통합되어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국가를 영위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은 재통일(reunification)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정권차원을 비롯하여 사회집단과 개인차원의 수많은 통일논의는 제기되어왔으며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주장되는 통일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¹³⁾에 대한 의미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전개하는데 필요조건이 되므로 기존의 통일논의들을 통해 나타나는 통일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기존의 통일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이는 다음 chapter에서 전개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통일국가 미래상의 정립의 방법적 토대가 이루어 진다고 본다.

첫째, 한반도내에 주권을 가진 국가 하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의 국민을 형성하고 주권행사에 있어서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전영토내에 걸쳐 거주이전 및 통행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12) 남북의 타협은 북한붕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민주화는 타협의 길로 나오는 것이며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서독의 타협과 동독의 내부붕괴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동독이 붕괴하게 됐고 동시에 붕괴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알수있다.

13) 민자당 국책연구,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1994), p. 30

14) 위의책, pp. 30~31

넷째, 통일된 국가는 단일 법체제 및 단일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즉 통일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각기 스스로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하면서 정통성 경쟁과 함께 지기체제 우월주의를 통한 통일정책을 전개해 온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사상으로 무장된 체제안정 지향적인 두정부의 어느 한쪽이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국가이익 중심의 정략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피할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detente분위기속에서 남한정부는 '선평화 후통일' 이라는 통일의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하였다. 즉 남북간에 불신과 반목을 제거하고 불가침을 약속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서 각자의 사회를 개방해 나가면서 민족적 신뢰회복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모색하며 통일의 3단계로 나아가자¹⁵⁾"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이에반해 북한의 통일목표는 그 목적을 한반도 전역에 공산화를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국제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같은 인식은 어느정도 변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국제질서의 변화, 북한 내부 사정의 악화, 남한의 경제·외교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열세등의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통일론은 생존차원의 수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는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합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데 까지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기존의 통일정책과는 상반되는 남북한 공존을 기초로 한, 두 자치 정부를 연합하는 통일국가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통일정책이 경직성을 탈피하여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1991. 12. 13)에서 채택, 서명되고 제 6차 남북고위급 회담(1992. 2. 19)에서 발표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이와 같은 남북 통일정책 경직성의 탈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북한은 기본 합의서상의 합의 내용의 실천에 있어서 당

15) 한국일보,「김대통령 광복 49주년 축하사」, 1994, 8, 15일자 1~2면

위적인 연구와 실행만을 제시 하였을 뿐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methodology)을 제시하지는 못해왔고¹⁶⁾ 또한 지금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의 혼란이 야기시킨 북한의 체제 보안적인 핵문제로 인해 기존의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대과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는하나 이런 걸림돌을 신뢰구축을 통한 북측의 개방과 남한의 도움이 전제만 된다면 이는 가능한 문제이며 통일국가 건설로 한 민족은 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적 측면들은 4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두가지 의미를 갖고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하나는 외형적으로 통일된 국가체제를 형성해야 할것이고, 둘째는 내면적으로 민족내의 갈등구조를 해소시키는 통일국가상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 역시 국가체제를 축으로하는 구조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의 양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럴때 만이 바람직한 통일국가 미래상이 의미를 가질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¹⁷⁾

(1) 정치모습

1) 이념적 모습

통일된 한국의 이념적 바탕은 넓은 가변성을 가진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알고있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 의미에서 이념은 진공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념과 현실의 적절한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이념적 현실의 틀이 진화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는 민주주의가

16) 장아람, 앞의 논문, pp.5~6

17)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정립해보기 위해서 이 글은 다음의 두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남북한은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한다는 전제이고, 둘째는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통일조국 미래상은 지양한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의 이념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⁸⁾ 또한 이와같은 다원적 민주주의 모델은 사회구조와 질서의 내용을 변형된 형태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허락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정치는 정부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제한되거나 탄압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모든국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고루 보장되고 누구나 자기의 주의와 주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¹⁹⁾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어디까지 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는 ‘진리는 하나’라는 절대주의의 가치관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의 주체로 내세우는 ‘인민’은 하나하나의 개인의 집합이라기보다 유기체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유일사상체계와 달리 가치의 상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이념이다. 즉 개개인의 주장들은 서로 다르다고 할수있을 뿐 누구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려면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만민평등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가 바로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정치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나 그 다양성 존중원칙에 위배되는 절대주의와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현재 남북한간의 이념적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남쪽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는 한, 북한이 절대주의, 집단주의를 포기하여야만 체제통합이 가능하다.²¹⁾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유일사상’을 버리고 다원주의를 그리고 북한지배체제의 정권의 도구로 쓰이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당지배체제를 버리고 다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고루 반영시켜 국민의 여론에 바탕을 둔 정치를

18) 김려수, “8·15 49돌 특별좌담”, 『한국일보』, 1994. 9. 15

19) 유석열, 『남북한통일론』 (법문사, 1994), P. 502

20) 이상우, 『통일목표와 추진시나리오의 평가』 (조선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P. 47

21) 위의 책, P. 48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이와같이 통일된 조국은 대내적으로 민족전체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보장해야 할 것이며 한편 대외적으로 한국은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투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²²⁾통일조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형태

정부형태를 내각제형으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회의체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 모델들의 장단점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갖게된다. 통일과정속에서 과도기적 단계인 연방제 단계에서는 내각제 형태가 양쪽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수렴가능 하므로 유리할수 있겠으나 통일국가에서는 단일국가체제하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통일국가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국가발전의 능률성 재고차원에서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북한의 주석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정치권력에 남북한 주민은 친숙해져 있으므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권력구조

단일국가 체제하의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구상해 보도록 하자²³⁾. 권력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기본 3개부분으로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하에 각 영역의 미래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 행정부의 모습을 상정해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반드시 직접 선출해야 한다. 집권자들의 집권찬탈의 편의나 정권확장을 위해서 간선제를 악용한 사례가 남북한 공히 존재하므로 국가 수장을 뽑는 직선은 통일헌법에 명시되는 강제규정이어야 한다. 미국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을 상정한 대통령제를 상정했으므로 국무총리나 정무원 총리는 필요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22)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pp. 502~503

23) 김동한,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통일한국』, 1994. 7, pp. 81~82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어서는 안될것이나 통일시의 내적혼란을 리더쉽을 통한 효율성차원에서 필요한 권한은 부여되어야 한다.²⁴⁾

둘째, 입법부의 구성 및 권한이다. 의회는 양원제가 좋으나 단원제가 좋으냐는 쟁점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나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단원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에서의 양원제는 의회의 비대화로 국정의 능률성을 저해하고 정국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상이한 체제로부터의 통일국가 건설이기 때문에 양원제로 국회를 건설하게 되면 국회가 정권투쟁화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다수당의 횡포가 초래되므로 정국의 안정과 국가정책의 계속성 보장의 측면, 소수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단원제를 채택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단원제는 정부와 국회의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로서의 의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며 모든 법률안을 의회입법하도록 하여 의회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것이다. 통일국가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비판·감시·여론수렴·정책반영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법부의 절대적 독립이 보장이 되어야 할것이다. 북에서의 사법부는 지배체제상의 제도적 예속과 절대권력의 시녀격으로서의 기능과, 남측에서의 사법부의 정치적 예속 등의 기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법관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법부의 절대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제도를 채택하여 법관의 오류를 최소화 시켜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법관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법관직급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이 승진이나 정치적 출세에 영합하여 판결을 그 발판으로 삼지 못하도록해야 할것이다.²⁵⁾ 그리고 대법원으로서의 권한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범조일원화나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나 국가예산 절약 등

24) 이의 예로서 국가원수의 권한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 국가 독립·영토의 안전유지,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대통령은 국회 및 법원과 동등한 지위(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의 고유한 권한)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5) 김동환, 앞의 글, 통일한국, P. 83

의 효과를 볼수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정치적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치와 관련된 미래상 구상자체가 정치는 ‘가능의 예술’이라는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위에 피력해본 정치적 통일미래상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기대치의 확산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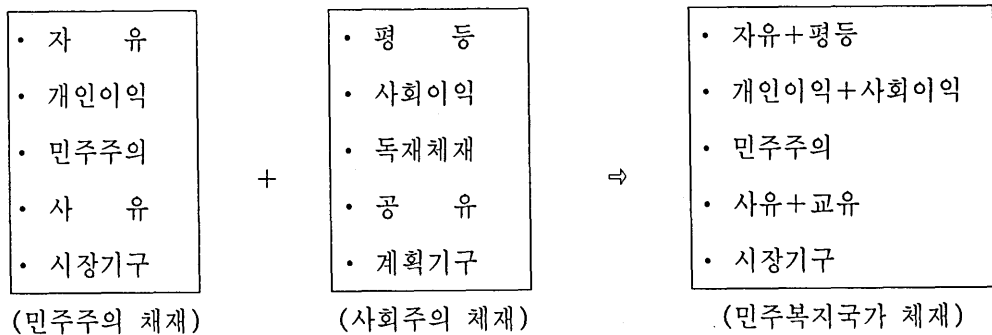
또한 통일후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단원제를 상정한 것은 이런 구도자체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2) 경제모습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충족면에 있어서 보아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논증할 필요도 없을것으로 본다. 풍요한 제품공급과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사회문제라고²⁶⁾ 주장하는 복지국가모델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모습을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렴의 형태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복지국가체제를 상정해 보도록 한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26) O.Schlecht, 『사회적 시장경제』, 안두순 외 역, (비봉출판사, 1993), 제2장

27) source : 박광순, 『비교경제체제론』, (유풍출판사), 1982, P. 86의 내용을 도식화한 홍상원의 통일원 논문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제체제 동질화 방안”으로 부터 재인용

여기에서 상정한 복지국가모델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필요원칙으로 보강된 공헌원칙

개인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사회보장 보험이 넓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의 생계를 보장해 줄수있는 정부의 사회적 정책 수단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²⁸⁾

2) 경제조정기구

통합으로 인해 점증하게되는 규모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를 주로하고 시장실패의 치유와 분배 형평성 재고등을 위해서 위의 표에서 도식화한 시장기구+계획기구의 조정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3) 소유형태

소유는 사적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주택, 국가기간산업, 공공재의 영역에선 국·공유화가 혼합된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중에서 특히 토지는 개인에게 필요이상으로 분배되지 않도록 국공유화가 이루어져야 될것이며 이는 통일조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라고 생각할수 있다.

4) 통일의 경제적 효과

물론 통일한국은 초기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시키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일의 역효과가 통일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문제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시각적으로 살펴보고, 통일국가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⁹⁾

28) 구영록·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P. 273

29) 자료 : 한국일보 1994. 8. 15일자, SIPRI 92년도 연감

〈표 1〉 남북한 GNP대비 국방비

단위 : 억원

구 분	GNP		국 방 비		비 율(%)	
	남	북	남	북	남	북
88	35조	10조 8천	2조 8백	2조 6천	6.0	15.5
89	105조 6천	16조 5천	5조 5천	3조 5천	5.2	18.0
90	152조 6천	18조 5천	6조 8천	4조	4.4	20.8
91	185조 7천	18조 3천	7조 4천	4조 1천	4.0	21.0
92	235조 8천	16조 8천	8조 4천	4조 3천	3.6	21.0
93	266조 5천	미정	8조 2천	4조 3천	3.5	

자료 : 한국일보 8. 15일자

〈표 2〉 남북한 무기구입 실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90	91	87~91	세계순위
북 한	612	151	4631	10
남 한	370	177	3551	15

자료 : 한국일보 1994. 8. 15일자

위의 2개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의 분단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위에 제시된 표를 통해 나타난 과도한 군사비 절약을 통한 통일후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본다면 첫째, 남북한은 군비를 절감하고, 물론 통일이 되었을시에도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라도 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노동전선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대중동원을 격감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둘째, 북의 지하자원과 남측의 공업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경제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지양함으로써 외교비용을 절감시키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국익우선의 경제외교를 추구할수 있을 것이다.

영국 리드 대학교 한국연구 프로젝트 단장인 포스터 카터교수는 「다가오는 한국의 통일 또 하나의 동아시아 초 강대국인가」라는 보고서에서 6500만명의 인구를 갖게 될 통일 한국은 GNP에서 1991년 기준으로 남북한 합쳐 300억\$에 달함으로써 인도, 중국과 같은 대열에 서게 될 것이며 통일 한국은 일본에 이어 이지역 두번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³⁰⁾.

따라서 당장 통일이 된다면 독일과 같이 많은 시행착오를 예상할 수 있으나 통일 후의 경제상황을 훨씬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남한은 분단상황속에서도 GNP가 266조 5천억원(전년도 액수)에 이르고 있는 점들을 통해서 볼 때 통일 후의 경제를 비롯한 타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방안을 통해 가변되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북한의 경제난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1인독재 우상화 체제 유지를 위해 비생산적인 개인 우상화물 축조와 대중동원, 그리고 대남혁명을 위한 준비증강 등으로 재정을 소모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북한은 생산설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하루빨리 대남공존노선으로 이완해야 할 것이며, 대남공존 노선으로의 견인방안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은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기르는 동시에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앞서서도 보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을 통한 민주복지국가건설을 지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체제의 특질은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구성원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고 빈부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면서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하며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3) 군사·외교모습

1) 군사모습

통일한국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여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고 세

30) source : "영국 경제정보단(EIU)보고서", 1992. 4. 21,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P. 504재인용

계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군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³¹⁾

통일한국의 군대는 외부로부터의 적을 외부와의 힘의 연계없이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하며 우리주변 4대열강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동북아 평화유지의 중추적·교량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1992년 현재 남북한의 총군사력은 영국국제전략문제 연구소가 발행하는 「군사균형 1992-93」에 의하면 남한이 63만 북한이 113만으로 총 176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²⁾ 이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군사력 집중지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백 55마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미군 4만여명을 포함한 1백 70여만명의 대병력이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군 3백여만명, 러시아 극동군 69여만명, 일본자위대 25만여명에 비교할때 22만평방 제곱미터의 좋은 땅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를 실감할수 있다.³³⁾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3단계 10만명 감축제외에 따른 20만수준(0.3%)은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4대 강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한반도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수준 예를 들어 일본 자위대의 군사비 증강으로 볼때 부족한 것이며 적어도 7000만인구의 1%정도가 정정수준이 될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수준에서 남북합의하에 136만명 정도는 신뢰를 기저에 깔아야만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감축된 인원은 통일 한국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기간산업건설등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군사비는 한국의 105.8억달러(92년도)와 북한의 54.5억달러(91년도)을 합친 160억 달러 3천만달러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감축된 군사비는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시설(SOC)확충이나 경제건설에 쓰이는 재원이 될수있을 것이다.³⁴⁾

31) 신정현, 앞의책, P. 401

32)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2

33) 한국일보 광복·분단 50년 특집기사(3)

34) source : 조선일보, 1992. 6. 1, 신정현, 앞의 책, P. 506재인용

따라서 통일한국 군대는 침략을 방어할수 있는 동맹체제 유지는 물론 첨단 군사장비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할것이다. 또한 주변 강대국이 다 핵보유국이므로 6공때 선언했던 비핵화 선언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이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는 데 우리만 핵 미보유국으로 남아있어서는 자주국방의 측면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핵 이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단순히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핵기술로부터의 ‘소외’를 피하자는 의미이며 우리도 주변국과의 힘의균형(balance of power)이라는 측면으로 부터 이를 다시 한번 ‘한반도 자체의 문제’로 재고해야 할것이라고 본다.

2) 국제외교 세계 열강과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위에서 다루었던 미래상은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다룬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통일국가의 미래상이란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했을 때의 열강과의 역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의 문제를 원활히 다루어낼때 바람직한 통일상이 정립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자체만의 역량과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분단 자체가 열강간의 힘의 균형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것이기 때문에 열강과의 힘의 역관계 분석을 통한 미래상 파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주변부 강대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외교상을 정립해 보도록 한다.

따라서 먼저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세계열강과의 관계를 지금 현상황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hot issue)’인 핵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질서 자체가 자국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남·북, 한미관계가 불편한 통일외교상을 정립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주변 4강대국은 모두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각국의 입장차이는 조금씩 존재하지만 모두 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대국의 입장³⁵⁾

구 분	미 국	일 본	러 시 아	중 국
군 사 적	핵패권주의	군사대국화야망	한반도비핵화	영향력 강화
정 치 적	일국체제구축	동북아영향력행사	평화공존	등거리 외교
경 제 적	자본주의확대	실리추구	경협확대	실리추구

위의 도표를 통해서 알수있지만 한반도는 주변 4국의 국익극대화라는 실리외교의 각축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의 예는 이번 8월 12일에 북·미관계정상화합의를 통한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비록 북측의 핵개발동결, 미 경수로 지원전제가 있었으나 북한이 영원한 제국주의적 침략자라고 규정지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시도는 국익우선추구라는 대세적 외교흐름에 북한도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를 통한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시도와 러시아도 북·미타결로 인해 도출된 북측의 경수로 건설을 계기로 그동안 배제된 한반도 영향력의 복원과 실리를 꾀하고 있는 인상이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전개과정속에서 국제정세는 실리외교 추구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 통일조국의 바람직한 외교상도 이를 잘 이용할수 있는 외교상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전개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외교상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의 세력관계를 잘 이용해 나가야 할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들의 지금까지 관계로 미루어 볼때 한반도의 어느 일부가 어느 동맹체제에 가입해 있으면 다른 일부는 불가피하게 다른 동맹세력에 의해 지원을 받게되어 분단이 타개될수 없었던 것을 거울삼아 통일한국은 과도한 대미·일 외교적 의존도에서 주변 4강 대국과의 외교채널 다변화를 이루어 넘으로써 국제정세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경제적 측면이외에 공동상호방위조약

35) 송정식,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대학생 통일 논문집』 (통일원, 1993), P. 135

체결³⁶⁾ 등으로 열강간의 힘의 역관계를 이용하는 측면이 통일한국에서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것이다.³⁷⁾

둘째, 통일 한국의 외교는 실리추구와 자주적 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다. 즉 분단의 고착도 열강간의 세력균형에서 기인한것이므로 이는 통일외교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주변열강의 간섭을 배제한 완전한 자주적 외교는 불가능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외교노선이어야 할것이다.

(4) 바람직한 통일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우리한국이 추구하는 통일 국가의 모습은 모든 한민족 개개인이 자유와 번영이 약속되는 체제, 민족 성원 모두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체제 그리고 민족 성원 모두가 안녕과 평안을 약속받는 복지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복지사회 이어야 할것³⁸⁾이라고 살펴보았다.

이와같이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자유·민주·복지국가로 설정한 것은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인 자유·인권은 획일화된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될 확률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는 통합과정을 지배하는 지역내의 특수성이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통합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과 다른면이 많이 있음을 직시하고 다국적과의 관계속에서 전개될 통일국가에서는 반세기에 걸쳐 깊어진 정치적 적대감·군사적 대치·경제적 격리·상호 외교적 고립·상호 심리적 불신 등 부정적 유산을 떨쳐버리는 전도유망한 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할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과의 동반자적

36) 현 단계에서 이의 시도로서는 한국의 한승주 외무부 장관이 제안한 '소-안보협의회(amini-CSCE)의 제안을 통한 6자회담 또는 '4+2'형태로의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제안이 있다. 한국외교협회, 앞의 책, P. 48. 참조

37) 이의 적절한 선례로서는 동서독이 NATO와 WPO(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최전방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전쟁을 피하고 통일을 갈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미·소간에 군축협상이 전개될 당시 감축무기 대부분이 동서독의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축협상에 처음부터 공동 참가하여 독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서 세계체제의 역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통일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8)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P. 401

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상호의존의 경제적 요구가 자국중심의 정치적 요구를 압도할 때 가능할 것이다.³⁹⁾ 즉, 국경없는 경제와 개방적 경제주의의 조류를 직시하는 시각을 정립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의 연결고리 이므로 통일한국은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 추구, EAEC·AFTA·APEC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한·미·일 등 반자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 전개되는 국제질서 개편의 메카니즘(mechanism)을 포착함으로써 국제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외교전문가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통일국가 달성방안

이상에서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남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였을 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통한 통일국가로의 전개는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가능하므로⁴⁰⁾ 이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통일국가 미래상의 달성방안에 대해 논해보고 이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1. 통일국가 달성방안—교류·협력 달성방안을 중심으로

(1) 경제부분

김일성 사망과 현 북한체제의 불안구조 속에서 교류·협력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39) 한국의교협회, 『외교』 제 29호, (1994. 3) P. 48참조

40)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은 기본 합의서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 기본합의서가 통일진출의 기본틀을 마련, 남북간의 자주적 합의, 북한의 혁명 전략 수정 및 개방 촉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의지의 구체화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것은 현 시점에서 보면 일종의 미로찾기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부조정기를 거치게 되면 인적·물적 교류를 작금의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으로는 교류·협력 활성화 이외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류·협력은 북한 체제 안정기에 들어서면 중국식 개방모델을 답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는 오랜 우방이며 자기체제를 달성·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대형적 입장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개방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우리식 사회주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여건의 미비등으로 인해 북한경제 개발정책의 목표를 대외개방과 사회주의 체제간의 조화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로 전환하였음을 다음의 예가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진·선봉등 자유무역지대의 조성, 한국업체와의 합작에 의한 가공무역, 의류나 북한의 특산품 수준(예를들면 북한으로 부터의 왕젓(로얄제리))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리고 해외건설 현장에 대한 인력 수출 등 개방정책의 도입이라는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개방정책은 때때로 중단되기도 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 북한의 현 실태를 토대로 하는 남·북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해보도록 한다.⁴¹⁾

남북교류·협력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죽음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혼돈으로 인해서 한동안 ‘소강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으로서는 우선 내부 결속에 주력해야 하며 향후 정책마련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할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 파악해 볼수 있는 경제교류 가능품목에는 단순임가공 등 초보적인 수준의 경험이 지속될 것으로 볼수있다. 즉 초기단계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파급효과가 크고 북한이 수용가능한 소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북한으로 부터의 호응을 얻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분제가 김정일로의 정권장악이 완수되면 양측은 경험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의 사전준비 작업으로 진행될

41) 매일경제신문, 1994. 7. 11일자 참조

것이다.⁴²⁾ 이를 통해 남한은 북한이 개방이나 체제개혁으로 나올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남한으로 부터의 흡수통합에 대한 의혹을 탐색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강기에서 '탐색기'로의 이완과정에서는 북한으로 부터의 위탁가공이 주류가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위탁가공이 올들어 5월말까지 9백62만달러로 지난해 1백48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나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⁴³⁾ 이 단계에서는 교역의 주체는 종합상사나 중소기업이 적당할 것이다. 이에 북한이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나진·선봉지구개발 사업이나 두만강지역 개발 등에도 주변국과 공동으로 적극참여 해서 본격적인 북한투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⁴⁴⁾ 이런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남북한은 '확장기'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남한의 기술, 북한의 값싼 노동력 등이 서로간의 비교우위의 결합을 통해 상승효과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범합작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활발한 논

42) 필자는 북한정권이 김일성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요사이 김정일의 건강악화설, 다당제 국가지배 체제설, 군분 쿠데타, 북한 외교 단지에 김정일타도 전단 등 무수한 추측이 만연하고 있으나 북한 지배체제의 성격상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확실시되며 김정일은 김일성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능력이 없고 현 경제난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험논의는 활발해 질 것이다.

43) 한국경제신문, 1994, 7. 12일자

44)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은 철광석·석탄·마그네 사이트, 도자기 원료 등의 지하자원과 목공 산업지구를 설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지역 개발사업에 적극참여 함으로써 본격적인 북한 투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들 자체가 핵문제로 인한 대결국면 속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의정서에 "나진·선봉 특구의 인원 및 화물 통행과 관련, 남조선을 포함한다"는 별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핵카드와는 별도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의 현재 국내경제적 모순은 개방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의자범령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조항을 많이 담고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단 남북의 교류가 달성되면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동개발을 통한 인적·물적교류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는 통일 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정부는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북한주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북한주민들을 대00로부터의 새로운 체제와의 접촉을 통제함으로써 절대권력 유지가 가능했으나 북한정부도 현 북한정세 속에서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는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연철, 경제특구와 경제개방, 통일한국, 1994. 7. P. 65~67참조

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동개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공동어로 수역설정, 시베리아 개발 공동진출,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산업기술 낙후로 인한 투자여건의 취약과 진출기업의 위험을 감안해 해외건설 공사의 북한인력 활용 등 해외공동 진출도 가능해 질수 있을 것이다. 교류확대에 맞춰 남북양측은 거래방식의 결정, 내국인간 거래인정, 통신통행협정의 추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⁴⁵⁾ 물론 지금까지 내가 논해온 경제교류·활성화 방안은 양측의 다른 사회·경제체제, 경제교류는 미묘한 '정치기류'에 영향을 받기쉽다는 점, 정보부재로 인한 직접교류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약요건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교류 협력이 소장기에 침체해 있는 이유는 정치적 기류가 경제적 영역에 너무많은 영역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대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수렴해 나가려는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은 지양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물적교류를 통한 인적교류, 이를 통한 체제수렴을 통한다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큰 진전을 볼수 있을 것이다.⁴⁶⁾

즉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소강→탐색→성숙의 단계식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이하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표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⁴⁷⁾

45) 남·북한간 무역을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무관세 등 특혜를 부여해야 하고 초기거래 단계에서는 간접무역을 활성화 하면서 상호보완적 품목에 대한 직교역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상사 등을 통한 남북한간의 기업접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호이익이해구조에 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할것이다. 무역방식에서는 북한의 외환사정상 구상무역 방식의 상계무역이 초기에는 적절한 것이며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청산결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새로운 결제통화, 무역신용공여제도(swing)등을 창출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편), 1993, P. 79~80참조

46) 연하청, 『동북아경제순환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13참조

47) 매일경제신문, 1994, 7.11일자 참조

〈표 4〉 투자방식별 접근단계⁴⁸⁾

구 분	분 류	형 태	진출기업	기 간
① 위탁가공	단순위탁가공, 설비 계몽형	합작/합영	중소기업	단기
② 공동개발	지역 : 관광지, 간석지, 대륙봉 자원 : 광물, 전력	합영	중소기업/대기업	단중기
③ 공단 건설	현지 조립공장 완성 공장	합영/투자		중장기
④ 시설투자	도로, 철도, 항 만, 통신	합영	컨소시엄 형성	장기

〈표 5〉 남북한 심화, 확산과정

① 간접교역		1단계 : ①
② 직 교역	remark : ①~③ : 교역	2단계 : ①+②
③ 단순임가공	③~④ : 임가공	3단계 : ①+②+③
④ 설비제공 임가공	④~⑤ : 투자	4단계 : ①+②+③+④
⑤ 직접투자(합영/투자)		5단계 : ①+②+③+④+⑤

48) 매일경제신문, 1994. 7. 11일자

(2)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북한사회 개방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간의 사회개방이 현실화 되려면 파급효과가 큰 방송과 서신과 전화등 정보의 개방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정보의 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가 먼저 정보 개방을 시행하고 점진적인 상호신뢰성 구축을 바탕으로 북한측의 개방을 유도해 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문화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통일이 가지는 의미가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북한사회는 외형상으로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계급없는 사회이며 개방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 그리고 철저한 폐쇄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통제와 계급차별이 심한 사회이다.⁴⁹⁾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사회는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에 맞도록 사회·문화 측면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체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편으로는 불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각종 통제 방법을 동원해서 획일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⁵⁰⁾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일고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와 서구사회의 자본주의적 사상이 유학생들이나 해외근로자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

49) 임중혁, “북한의 사회”, 『민주통일론(북한실태편)』 (통일연수원, 1993) P. 130

50)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 1990, P. 45참조

는 북한 별목공들의 남한으로서 귀순, 북한 권력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귀순등으로 연결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사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사회가 강력한 통제사회이며 여러가지 저해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나⁵¹⁾ 현 북한 정세의 개방으로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남북 한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문화 교류가 일어날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부 교류방안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한다.

1) 언론인·방송교류 분야

남북한간 언론인·방송교류는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정치·사회면에서 상호 비교·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문제인 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첫째, 북한의 현 체제를 고려하여 일방적인 개방 요구 및 개방조치를 지양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둘째, 언론·방송교류는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의 집약적 표현이므로 쌍방간의 프로그램 교환등은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간 현실로서는 상대측에 위협을 줄수 있으므로 비정치성이 강한 부분부터 추진해야 한다.⁵²⁾

셋째, 북한의 방송문화 미발달을 고려, 한국이 먼저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⁵³⁾

51) 북한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저해요소로 다음을 들수 있을 것이다.

- ① 이데올로기적인 주체사상이 전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 ② 개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상오염 막기위해 사상통제 및 사회전면 통제를 강화해야만 현 체제를 고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유입이 제한되어있다는 점
- ③ 동구에 비해 북한은 극도의 폐쇄사회 일뿐만 아니라 지역상으로나 역사·문화등 제반특질상 변화 개방의 요인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부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경직성을 고수하는 중국으로의 편향과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에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는점
- ④ 북한은 개방·개혁에 대한 요령을 알지 못하므로 이것을 시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으며 특히 기존집권 보수세력(예를 들면 군부)이 개방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등을 들수있다.

52) 이의 예로서는 스포츠경기, 관광지, 고적지 탐방, 각종 문화행사,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등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3) 북한의 TV방송은 1969년 부터야 5KW출력으로 정규 흑백방송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평양지방방송인 「만수대TV방송국」을 개국해서 현재 3개의 TV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으로서는 당 및 정부원을 대변하는 북한 유일의 「조선중앙통신소」가 있는 정도이다. 임종혁, 앞의 글, P. 129참조

넷째, 북한의 문화·정치·경제적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모든 대중단체가 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언론인의 상이한 가치관 및 보도자 세로 인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⁵⁴⁾

2) 문화·예술교류 분야

우리의 문예정책이 개개인의 내적욕구에 의한 미적가치의 창조, 예술적 정서생활을 통한 인간 삶의 질적향상, 민족문화와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발전등을 근본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상으로 하는 예술창조 지원, 국민의 문화생활 신장을 위한 고급문화의 대중화와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재 보호관리와 전승등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문예정책은 조선노동당이 규정, 제시하는 문예정책의 근본목표와 임무를 통해 알수 있듯이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사상적 통치 내지 권력세습을 위한 이상화 수단으로서의 존재의의가 더욱 강조되고있다.⁵⁵⁾ 따라서 이와같은 문예에 대한 상이한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긴장완화 및 민족동질성을 회복·발전시키고 단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며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⁵⁶⁾

3) 체육교류 분야

스포츠 교류는 비교적 정치적 마찰이 적은 분야로서 이미 국제적인 행사경험⁵⁷⁾으로 남북 인적교류를 선도·확대 및 공동체 의식을 갖는데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4) 윤양중, 북한개방 인도방향, 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집, 1993, P. 103참조

55) 김남범, “북한의문학·예술,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편)』, 1993, P. 171

56) 세부추진방안으로서는 각종 인적교류시 예술단 확대파견 추진, 문화행사 상호교환 추진(8·15광복절, 개천절), 국제 문화행사 공동참여 추진, 남북한 공동 유적 발굴조사, 고대유물, 고고학, 고전문학, 미술사 등 공동연구, 현재 북한에서 문화재 보관 기술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남한측의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57) 남북한은 남북통일축구대회 상호 교환경기,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 등 부분적인 종목에서 시행이 되었다.

따라서 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급적 상대방의 이념이나 체제를 자극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국기부착, 국호표시, 국가연주, 국기게양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⁵⁸⁾

둘째, 친선경기 교환 개최추진이나 이북 5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학생 교류 분야

현재의 남한에서의 주사파 논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물론 우리 지성인들이 현재 문민정부가 있게 한 민주화의 주체였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요사이 전개되고 있는 친북성향의 주사파들로 인해 우리 학생운동에 대한 조류가 폭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 부분은 요새 시국에서 볼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바람직한 학생교류방안에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남북한간 신뢰 및 민족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다각적인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통일독일도 청소년교류를 통해 통일민족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 할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치·군사·이념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류내용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생교류는 필요한 절차문제,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문제등에 대해서 쌍방향 협의와 합의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⁵⁹⁾

5) 통신교류 분야

남북한간 통신교류는 이질화된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체제노출을 두려워 하고있는 북한 현실을 감안할때 통신교류분야

58) 윤양중, 앞의 글, P. 112

59) 북학생 상호초청 추진이 정치적 문제가 아닌 순수 학생교류문제(예를들면 친선체육대회 개최, 학생문화·예술행사 교환 개최 추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들은 꼭 배제되면서 추진되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편물, 전화, 텔렉스)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산가족들 간의 서신왕래를 추진하여 이를 계기로 다방면에 걸쳐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가능한 한 북한의 경제성을 감안 비교대상이 되는 제품의 발송은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⁶⁰⁾

2. 신뢰구축 달성방안⁶¹⁾

(1) 신뢰교착 상태의 문제점과 원인

남·북한간에서 신뢰구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은 불신제거와 긴장완화를 뜻한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의 대결적

60) 통신교류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기존의 법이 남북한 간의 통신교류를 장려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남북한간에 통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한이 서로에게 제공할수 있는 통신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통신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통신체제와 통신망의 통합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류가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남북한간의 상이한 컴퓨터자판 배열에 대한 동질화에 힘써나가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자판의 이질화로 인해 pc통신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의 통합을 위해서 남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대한 통일을 유도해 내야 할것이다. 북한 컴퓨터 자판배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컴퓨터 자판의 배열

1 2 3 4 5 6 7 8 9 0(숫자단)
 바 지 다 기 사 키 T 키 | -(상1단)
 마 르 니 ㅇ 호 소 키 | -(기본단)
 키 트 표 차 ㅠ ㅍ ㅓ (하1단)

자료 : 한국일보 1994. 8. 24일자

자판의 이질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측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에서 「가」라는 문자를 두드릴경우 「가」를 인식하고 컴퓨터 기억장치에 「가」가 입력되지만 남측의 컴퓨터를 북측컴퓨터에 연결시켜 타이핑하면 전혀 다른 문자가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현대의 통신이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것이다.

61) 이 부분에서의 논의는 앞부분의 교류·협력 달성화를 통한 신뢰구축에 토대가 이루어진 이후부터의 논의가 추가된다. 물질·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신뢰의 토대가 구축이 되고 상호간의 신뢰의 구축은 통일의 필수적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앞의 교류·협력 방안은 물질인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졌고 이 부분에서는 의제가 갖는 성격상정치·외교적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 대남 전략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또 남한정부도 핵투명성 보장이 없이는 경수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등 현안문제 해결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서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⁶²⁾

첫째, 남북한 모두 상대방으로부터의 체제붕괴(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 남한으로의 북한의 흡수통합 위협)에 대한 위협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 붕괴 의식은 정치적 신뢰문제로 단기적으로 서울과 평양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장기적·민족적 차원에서 이와같은 입장은 통일 한국을 세우는 데 역효과를 초래한다.

둘째, 평양에서 느끼는 흡수통일 걱정은 평화체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즉 증폭하는 국내제반문제(식량난, 전력난...)의 혼돈속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남한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이 핵문제 인권문제 등을 구실로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제보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핵카드에 대해서 남한측의 핵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지원 제의와 한반도의 핵문제는 단지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가 북한의 흡수통일 콤플렉스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

셋째, 오랜 분단체제 속에서의 상호불신감의 팽배에 있다. 분단과 국가수립 이후 줄곧 남한은 북한이 노리는 혁명과 적화통일의 대상이었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란 기본목표를 이루기 위해 50년동안 군사우선 정책을 폈었다. 그들은 소련의 지원등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휴전뒤에도 대남우위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 준비를 추진해 왔다. 즉 전사회를 병영화 한다는 노선이였다. 여기에는 김일성 유질지배체제 보존과 부자세습체제 구축이라는 정권보안의 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체제와 사회구조는 북한에 대한 방어적 정신상태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분단 50년을 관통하며 권위주의 독재와 군

62) 김용제,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3겨울) pp.185~186

사정권을 정당화 시키는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군사공약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정치간섭과 미군의 주둔이 허용이 됐다. 그러나 갈수록 체제차이에서 오는 경제력의 차이는 최근 미사일과 화학무기의 집요한 개발을 초래했으며 이는 경제능력 저하에 따른 군비부담을 줄이면서 전력상승만은 유지하겠다는 교육지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수 있다. 최악의 경제상황속에서도 부자권력 승계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적 우위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전환기의 군사정책 대안으로 핵개발을 착수했다. 그래서 결코 핵을 쉽게 포기할수 없을 것이며 핵문제는 남한체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이기 때문에 남측이 북에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남측이 군비증강이나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강화 등으로 연결되면서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2) 신뢰구축의 해결책 - 북한정세와 핵문제를 중심으로

1) 주변강대국과의 역관계 이용

신뢰구축의 해결책은 민족적 함의 차원에서 북한으로 부터의 핵위협,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⁶³⁾ 이를위해서 현단계에서는 불안정한 북한 체제를 민족공동체라는 연대감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 있어서의 '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 상황하에서는 김정일 체제로의 권력연계를 지원해야 할것이라고 본다. 즉 남북관계 냉각기에서 핵문제 해결을 통한 관계정상화의 시도는 물과 기름을 분리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현 북한정세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대외개방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 자체도 이를 다분히 인정하고 있는듯 하다.⁶⁴⁾ 즉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점진적 개혁으로 개방을 모색하며 급진적인 개방

63) 김용제, 앞의글, p. 187

64) 김정일의 다음의 발언은 이를 다분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듯 하다.

“빈밥 그릇 놓고 사회주의적 애국사상은 불가능”, “사회주의 해보니 먹고 살려면 서방진출은 불가피하다”.

매일경제신문, 1994, 8, 5일자 4면

으로 부터의 방어용으로 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협을 경감할수 있도록 지원을 한후에 북핵을 공조유지를 통한 협상테이블로 인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북한체제 안정화를 일단 달성하고 난후에 '북핵'에 대해 다루어야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체제가 김정일 체제로 일단 성공적인 승계를 이룬 시점에서는 북한도 더 이상 핵카드를 통해 체제유지를 위해 폐쇄경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인간힘을 개방이라는 대 조류에 무력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남북한 신뢰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열강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실리적인 외교를 떠나가는 공조체제 유지에 힘써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의 북미합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북미 제네바 합의가 미국측의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가로서의 위치고수의 시도와 북측의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요청이 수렴되므로써 북·미 합의를 이루어냈으나 북측의 핵 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백지화가 될수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우선'이라는 연계카드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의 득과 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한다.⁶⁵⁾

이는 남국교류 물꼬를 트는데 현 시점에서 중요 사안으로 등장하는 한국형 경수로 대북제공이라는 측면과 연계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일이 될것이며 북측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불가라는 의사표명으로 다시 냉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우리가 아쉬워 할만한 점은 역시 북한이 우리가 아닌 미국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남북신뢰 구축이라는 지금의 논의에서 우리를 비제했다는 점이다. 미국또한 더 이상 남북관계개선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를 았았다. 이는 남북신뢰 구축이라는 측면이 남측의 단독적인 지원이나 신뢰구축 노력이 의미를 갖지 못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신뢰구축의 유용한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되버리고 말았다. 또한 북한이 이를 계기로 일본

65) 한국일보, 8.16일자, 4면 참조

등 우리 우방과 직거래를 할 경우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북한은 앞으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를 더욱 자주 제기하면서 한미관계를 교란함으로써 수세에 몰려오던 북한외교가 다시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금의 신뢰구축이라는 논의자체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번 합의로 북한핵문제에 돌파구가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때 극한상황까지 내몰리는 듯 했던 핵문제가 대화로 풀리게 된 사항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우리에게 일단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왔다는 사실도 바람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국제적 제도권으로 끌어냄으로써 개방과 개혁을 촉진한다는 우리의 전략에서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제네바협상 합의에서 남북한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물론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 의사 표명으로 북한핵을 둘러싼 해빙기류가 다시 냉각되고 있기는 하나 북미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형 경수로의 거부입장이 북한측의 공식 방침이라기보다는 향후 북미 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5MW급 원자로 재가동 위협과 함께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⁶⁶⁾는 미국측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측처럼 남북간의 경수로 시비는 북미 핵협상의 구도를 꺾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형 선호입장이 불변인 미국과 또한 북한의 경수로 전환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일본과의 역관계를 통하여 한국형 경수로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 물꼬를 틀수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정부투자의 효과-북한 핵경수로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북미 회담에서 합의된 경수로 지원여부에 따라 북한의 개방·남북한 인적교류·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향후 남북관계의 응어리를 풀수 있고 한국형 경수로를

66) 한국일보, 1994. 8. 30일자, 5면 참조

채택한 원전 1기의 건설에는 약 20억달러(1조6천억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미국·일본이 한국형 경수로 지원을 추진한것을 남한의 기술자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 정부측 의도와 40억달러에 달할것이므로 예상되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 경비중 일부를 한국측에 부담시킬수 있다는 미·일의 계산이 우리정부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비용이 들더라도 자연스럽게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터 통일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미·일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금부담을 덜자는 계산이다.⁶⁷⁾

3) 신뢰구축의 완성-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위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서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이 달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모든 현안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구축을 통해서 만이 정상회담이 가능하므로 일괄적 타결(batch compromisment)보다는 '만남'을 통한 '점진적 합의(gradually compromisment)'의 과정이어야 할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권력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북한권력은 김정일로의 승계가 확실히 되므로 김일성 주석의 죽음으로 인해 단절된 남·북 정상회담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3단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비롯한 미국·북한간의 현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므로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서 신뢰구축을 달성해야 할것이다.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할때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확인 경제협력, 이산가족 교류 등 비교적 다루기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경제협력의 연계원칙 속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상 성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남북경협의 기본목적은 장기적으로 민족간의 경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즉 체제를 달리하는 지역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인 접촉을 가질경우 정치적·이념적 제약을 벗어나 동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통

67) 한국일보, 1994. 8월 16일자, 11면 참조

독의 모습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대를 부풀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경제난등으로 인해서 경협이 본격화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몇가지 규칙을 만들어야 할것으로 본다.

첫째, 남북한 관계는 정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협의 속도와 범위를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의 정도에 따라 상호연계 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둘째, 이런 정치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거시적 목적과 경제주체들의 개별적 이윤동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할것이다.

셋째, 남북간 경협이 특수한 사안임을 감안할때 정부의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거 소련과의 경협과정에서 나타났던 무차별적인 원조와 이에따른 부작용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넷째, 위에서 살펴보았던 남한 경수로 지원을 비롯한 원조를 위한 경제공동위의 건설에는 가능한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는 양측의 공동인식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남한 민간기업들이 대북 투자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급선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원칙하에서 북한개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된 의제로 채택되어서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이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하는 상호불신의 제거로 인한 통일국가 형성에 필수적 과정이자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처해있는 극심한 경제난 해결·국제적인 고립감에서의 탈피를 위해서는 개방을 시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달성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 정상회담 개최시 다루어 져야 할 의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

(1) 핵문제

우리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준수가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선 북한핵투명성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킬 것이며 북측의 “지금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만들의사도 없다”라는 주장과 북한핵문제는 미국과 남한정부의 북한 말살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미국과 남한의 이런 정책이 철회되면 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게 될 것이므로 결국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의지의 구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찰제도의 확립, 북한체제의 개발, 핵 문제로 부터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근시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1) 경제교류 · 협력분야

북한경제의 특징이 ① 자력갱생원칙 추구 ② 정·경 분리원칙 ③ 최종생산품에 대해 질보다는 양적 증대추구 ④ 기간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중시 ⑤ 에너지 생산의 낙후성 ⑥ 군수산업 중시등으로 볼수있기 때문에 다음의 의제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 상이한 경제성장 격차 및 개발전략을 감안하는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부터 진협력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⁶⁸⁾

셋째, 현실적으로 상호보완 작용을 할수있는 자원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측에 풍부한 자연자원과 남측의 집적된 기술자원과의 교류를 추진시키는 과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8) 이의 구체적인 예로서 지적될 수 있는것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섬유 · 신발류 등 남한과의 기술격차가 심하지 않은 부분부터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상품에 우리의 상표를 붙이게 함으로써 북의 상품 국제신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공동·합작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로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1:1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한의 경쟁력이 상실된 의류·신발사업등은 남한기업으로서는 북한은 유용한 합작선이 될수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경제인접촉→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합작투자→경제통합의 형태 순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수로의 전환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제네바협정의 의 해 방향이 잡혀 졌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이 문제에 대한 남북양측의 입장은 천양지차이므로 깊이있게 논의되기는 힘든 의 제이지만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한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접근방법은 택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남북한 신뢰구축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이에대해서 신뢰구축단계, 군비제한단계, 군비축소단계 등으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먼저 신뢰구축 단계에서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문제, 상호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유지 관계문제, 분쟁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사회개방추진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군비제한단계에 가서는 군사기지에 상호감시반 상주 및 검증제도 마련, 병력규모 및 주요 공격무기 보유제한, 남북한 '핵무기개발 금지협정체결(미·소·중·일과·남북한으로 구성), 팀스피리트 훈련 축소 및 격년제 실시에 대한 논의, 공격전략 전술을 방어체제로 수정 등의 문제가 다루어 져야 하고 군비축소단계에 가서는 점진적 상호 균형감축, 기습공격무기, 감축, 생산금지라는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진행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소강기는 이를 단기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이산가족 문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의 고통을 겪은 우리민족은 이산이라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당연한 한민족의 염원이면서 이산가족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인도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과의 동일한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필요한 법적 재정비를 행하고 남북한 노부모 고향방문에 대해서 중점논의가 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북한정부도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인도적 측면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해 온 바와같이 북한의 현 체제는 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개방으로 인해 파생되는 주체사상의 붕괴 및 1인독재적 폐쇄사회 탄로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의 현재의 경제난 등으로 인한 개방에 대한 ‘딜레마(dilema)’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수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한민족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막연히 어느 시점에 가게되면 통일을 이룩하고 선진국이 되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즉 독일통일에서 볼수 있듯이 통일이란 지속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신뢰구축과 대외정세의 제약조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서 가능한 ‘민족공동체형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과정(process)’인 것이다. 따라서 분단 현실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정립과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즉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올 것이라는 낙천적 심리상태는 지양하고 먼 장래의 통일을 위해서 현재 서울과 평양지도자 들은 새로 태어나는 각오와 민족합의 앞에 대내외 정책을 희생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문제들, 핵문제에 기인한 교착 상태, 이산가족 교환방문 실패,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방 등의 문제는 민족공동체라는 대명제 앞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당위성에만 치우쳐 왔던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위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한요소인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교착상태를 타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선교류 협력의 방법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적인 측면으로 조사되었다.

지나친 법적 제제와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북한의 현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근거로 해서 대형적인 입장에서 현 어려움을 뚫고 나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할것이다. 또한 주변 강대국과의 힘의 균형을 통한 통일의 외적 변수의 충실을 기해야만 할것이다. 이런 통일의 내적변수와 외적변수의 문제가 남북통일 이라는 대과제 속에서 하나로 해결 될 때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제2의 도약을 맞이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복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족통일이 우리가 염원하는 중요한 목표라 할지라도 한 민족의 복지와 행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것이며 앞에서도 말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통한 통일이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달성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제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용석, 『분단국 통일과 남북정책』, (다나, 1992)
- 김용제, 『한반도 통일론』, (박영사, 1990)
-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 박성조·양성철, 『통일독일과 분단한국』,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1991)
- 구영록,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 민병천, 『전환기의 통일정책』, (대왕사, 1990)
- o.schlecht, 『사회적 시장경제』 안두순 외 역, (비봉출판사, 1993)
- 『통일문제연구』 제5권 4호, (통일원, 1993)
- 『대학생통일논문집』, (통일원, 1991. 1993)
- 『통일문제논문집』 제11집, (원광대 통일문제 연구소, 1991)
- 『통일문제연구』 제9집, (전남대 통일문제 연구소, 1993)
-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0)
- 『외교』 제29호, (한국외교협회, 1994. 3)
- 『민주통일론, 북한실태편』, (통일연수원, 1993)
- 오승용,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통일원, 1993)
- 송원희, “통일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통일』, 1993년 1월호
- 손호철, “새로운 세계질서와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2)
- 이삼성, “냉정시대의 미국외교와 세계질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7권 제2호, (경남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1991)
- 조정원, 『남북한 통일론』, (희성출판사, 1989)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87)
- 이병용 기조연설,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전남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1992)

박성조,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통일연수원, 1992)
 곽태환, 『남북합의서 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경남대, 1992)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 (국방부, 1991)
 이상우·하영선(공편), 『현대국제 정치학』, (나남, 1992)
 차기백, 『민족주의 원론』, (한길사, 1989)
 『민주통일론-통일문제편』, (통일연수원, 1993)
 정용길, 『통일환경론』, (고려원, 1990)
 진덕규, 『통일과 민족주의』, (통일연수원, 1993)
 통일원, 『김영삼 정부의 3단계3기조 통일정책』, (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김원수 외, 『남북한 비교론』, (문우사, 1986)
 이동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와 한국”, 『외교』 제19호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백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공감대적 가치질서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최 우 식

(숭실대 행정학과 4)

《 목 차 》

- I. 서론
- II. 남북한 통일논의의 비교
- III. 남북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 IV. 현 단계에서의 남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
- V. 신 통일교육 모형하의 통일교육의 방향
- VI. 결론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구소련에서 자국의 총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써 취해진 개혁의 열풍은 구소련의 붕괴, 동구권사회에서의 공산체제의 몰락, 동·서독의 통일 등 일련의 세계 정치질서의 대변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최근 남한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적개심과 증오의 대상국(?)이었던 공산권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세계정치질서의 변혁, 국제외교관계에서의 전환등은 양의 방향으로 진정되어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내부분제인 '통일'은 그야말로 '통일딜레마'에 빠져서 남·북상호간의 깊은 불신에 빠져 일종의 '내쉬균형'(nash-equilibrium)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 정체'현상은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통일관 및 통일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좌파적성향'의 부류들에게는 '왜곡된 통일관'을 형성하게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 왜곡된 통일관을 가지고 반체제적 성향을 가지는 좌파성향의 부류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라면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간 '교육계'에서의 '통일교육'은 그야말로 '책임회피'의 차원을 떠나서 '본질'을 도외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례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김일성의 아버지는 '마적단의 아편 밀수책', 김일성은 '마적단의 두목'이며 김일성은 진짜 김일성장군을 살해하고 '자칭 김일성장군'이 되었다는 등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개방화되고 보다 더많은 정보를 접하는 현대사회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실이 거짓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할때 '회의'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넘어가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학습체계를 서서히 불신하게 되고 '왜곡된 사고구조'에 편향되지 않으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자기화'시켜 더욱 더 불신의 길로 빠져들게되고 급기야는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만을 사유하다보니 반체제적성향으로 돌아서고, 그들나름대로의 투쟁의 일환으로 당당하게 좌경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부재현상으로 인해서 '왜곡된 통일관 및 사고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며 이 문제의 책임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교

육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계는 자기성찰적 계기로 삼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후~현재 까지 논의된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하고, 통일정책의 기초하에 이루어졌던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신통일교육’모형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통일교육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방법은 해방후~현재 까지 남북한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통일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도있는 내용분석하에 각 상황에 맞는 모형을 설정하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논의, 통일교육의 전개, 통일교육의 문제점, 신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연구범위는 남북한간에 지금까지 논의된 통일론, 통일교육 등이 주범위이며 통일교육의 구체적 방안의 수준까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정립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Ⅱ. 남북한의 통일논의의 비교

1. 남북한 통일논의의 변천

(1) 제1공화국 시기의 통일논의

1) 남한의 통일논의

해방직후 여운형을 중심으로한 거국적인 ‘건국준비위원회’는 출발 20일만에 사실상 와해되고, 정치권에서 중심축이 부재한 해방정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보수적·우파 중심의 정치세력이 중심이되어 단독정권을 출범시킨다. 건국과 동시에 이승만정

권의 통일에 대한 기본골격은 북한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병식의 통일방안’, 전자가 무산 될 경우에는 무력이라도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사를 정권수립부터 말기까지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한편 분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하려는 김구·김규식은 1948. 4. 19~23까지 남북협상을 하지만 북한측의 정치의도가 저변에 깔린 이 회담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1949. 5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철퇴를 맞은 후 전전까지의 통일의 기본골격은 앞서 기술한바와 같다. 전후에 있어서 이승만정권은 전전과 동일한 북진통일론, 북한만의 총선거안을 거듭해서 주장하였다. 1954. 4. 26일 개최된 ‘제네바회담’에서 이승만 정권은 종전의 내용과 별차이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성에 바탕을 두어 ‘평화통일안’을 제기한 조봉암을 ‘국시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진보당 자체를 해산시켰다. 따라서 이시기에 있어서 ‘평화통일론’은 절대적으로 논의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이승만정권이 ‘북진통일론’을 강경하게 주장하게 된 것은 국내적으로 정권유지의 역할, 국외적으로는 대미관계에 있어서 우호관계, 원조 및 내정불간섭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미 양동전술의 일환으로써¹⁾ 사실상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서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북한의 통일논의

해방직후 남한에서 정치·사회적 혼란과는 달리 북한지역의 전반적 분위기는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빨치산파, 국내파 공산주의, 조만식등의 민족주의들간의 협조가 인민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²⁾ 소련은 미국보다 한국의 내부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김일성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주었고 집중된 권력을 기반으로하여 급진적, 좌파적 정권을 창설 하였다. 이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통일논의는 한반도전체의 적화통일을 목표로하는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행정조직, 당, 군, 정등의 모든 권력적 기반을 구축한후 이에 따라 ‘인민전선노선’에 따른 ‘평화적 공세’를 1949. 7. 3에 7·3선언, 1950. 6. 7에 7·3선언의 재천

1) 박순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3), pp.45~47.

2) 박순성의 1명, 상계서, pp.45~47.

명, 1950. 6. 19에 남북한 국회합병론 등의 평화적 대공세를 취한후 해방직후부터 구상한 그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이며 최적의 대안이었던 ‘무력통일’의 야욕을 1950. 6. 25에 시도하게 되었다.

1953. 8. 5에 개최된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선건설후통일’의 체제경쟁에 돌입하고, 1954. 11에 ‘3대혁명역량 강화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이시기에 있어서 북한은 바로 이러한 기초하에 ‘평화적대공세’를 1954년부터 1957년에 걸쳐서 취하게 되는데 4·19의거후 남한에서 평화적통일론이 제기되는데 있어서 상당한 파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에 각기 상이한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로 쌍방은 이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추구했다. 해방정국에 있어서 논의된 통일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해방정국에서의 통일정부 수립전략의 제유형

	좌우합작파	반좌우합작파
후견적 신탁 임시정부 수립	여운형 - (김규식, 김일성)	박헌영
신탁반대 즉각독립	조만식 (후기김구)	김구, 이승만

선통일 후정부수립	선정부수립 후통일	인민혁명(민주·공산)
김구, 김규식	이승만, 김일성	여운형, 박헌영

자료 : 박성순외 1명, 전계서, pp.31~32.

(2) 제2공화국 시기의 통일논의

1) 남한의 통일논의

장면정권의 통일논의는 북진통일의 포기를 제외한다면 보수성과 소극성이라는 본

질에 있어서 제1공화국과 동질의 것으로써 남북협상은 물론 초보적인 단계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 조차 철저히 부정적인 자세로만 일관함으로써 대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취하지 못하고 말았다.³⁾ 그러나 4·19혁명이후에 등장한 혁신세력은 자주적·혁신적 입장에서 통일우선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의 특징은 첫째, 통일운동의 조직화, 둘째, 반미자주화 투쟁고양, 셋째, 통일운동의 대중화이다.

2) 북한의 통일논의

전후 김일성은 당내 반대 파벌을 숙청하여 정치적으로 단합을 구축하여 안정된 기반위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대남관계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하여 4·19의거후에 혼란에 빠진 남한당국에 연방제를 주장—상대방의 불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임의 법칙의 작용—하면서 남·북한 총선거를 자주적입장에서 추진하자는 논의와 경제력의 우위의 바탕하에 ‘기능론적인 접근’하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자는 「적극적 최대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한에의 친북성향의 창출과 혁신세력을 자극하는것으로써 ‘3대혁명역량강화’의 일환인 동시에 변화된 국제정세를 간파한후 외교적 강화를 추구하는 논리에서 제기된 것이다.⁴⁾

(3) 제3·4공화국 시기의 통일논의

1) 남한의 통일논의

1961. 5. 16. 군사정변시, 반공을 국시로하고 ‘선건설, 후통일’원칙아래 ‘반공체제 정비강화’를 최우선적 목표로한 군사정부는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반공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취지를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시기에 있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 할 수 없거니와, 심지어 기능주의적인 교류·협력조차도

3) 김학준, “남북한에 있어서 통일논의의 전개”, 송건호의 『한국민족주의론』(서울;창작과 비평사,1982),p.235

4)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서울;희성출판사,1989),p.84

급기시하여 ‘평화통일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7·4공동성명전까지 제3공화국의 통일론은, 제2공화국의 ‘선건설 후통일’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였을 따름이며, 차이점을 든다면 ‘반공주의적 제도강화’라 할 수 있다.⁵⁾ 1970년 이후에 있어서 국외환경이 ‘통일체제’에 있어서 대화투입에 대한 강력한 요구, 국내정치환경의 혼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경제력의 균형을 이룩한 시점부터의 대북 자신감은 서서히 남·북대화의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남·북한 상호간의 ‘비밀정치협상’에 의해서 마침내 역사적인 ‘7·4공동성명’으로 하나의 결실을 보게되지만 그 것은 본질적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체제 안정·강화’의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소모전식의 공허한 통일논의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시기에 있어서 통일논의의 특징은 경제력에 있어서 서서히 주도권이 남한으로 전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교호작용을 통한 통합촉진, 분지이론이 전제된 ‘기능주의론 입장’에서 교류·협력론이 제시되었다.

2) 북한의 통일논의

5.16 군사정변이후에 북한은 ‘극좌노선’을 추구하는 정치세력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어 평화통일론을 배제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기초한 5단계 혁명론에 입각하여 ‘민족해방투쟁노선’을 강화함과 동시에 1967년이후 ‘대남 무력침투 소요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것은 그 이전과는 달리 ‘선혁명 후통일’의 「패권전략」으로써 대남관계의 기본노선을 추구하게된 이유는 국내적으로 7개년계획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국외적으로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동북아 침략의 우려,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내세우는 군사정부의 출현에 대응하는 관계, 남한내에서의 6.3사태 및 통일혁명당 사건등으로 인하여 민족해방투쟁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⁶⁾ 이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무력적 도발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여 남한내에서 반공체제의 강화와 국방력강화를 가속화하게

5) 박순성, 전계서, pp.51~52.

6) 조정원, 전계서, pp.91~92.

하고,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측을 더욱더 불신하게 되고 경계대상으로 심화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세계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1970년 이후의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간파한후 이에 편승하여 북한측은 대강경노선에서 '평화적공세'로써 전환하였다. 남측과의 비밀정치협상의 결과인 7·4공동성명은 사실상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통일논의의 핵심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통일의 3대원칙'의 해석을 놓고 남·북한간에 첨예하게 대립한면에서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7·4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의 '연방제'를 그 통일논의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남한측의 기능론적 통합론에 맞서 '일괄타결'에 의한 '연방론'을 즐기치게 주장한다. 1973.8.23. 남북대화 단절후 북한은 한반도 상황을 '베트남형'으로 전환시키고자 다각적인 면에서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미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화'를 추구하게 되지만 북한도 사실상 공허한 '평화통일공세'만 하게 된다. 7·4 남·북공동성명이후, 남북한의 통일논의의 핵심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7·4공동성명이후~제5공화국전까지의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내용		구분	
		남한	북한
통합추진방법		기능론적 접근방법	일괄타결론
통일접근방식모형		동·서독 모형	베트남형
남·북대화의 추진방법		인도주의차원 우선	선정치적 문제타결후, 대화추진
통일국가형식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고려연방공화국론
U.N.가입		남·북한 동시가입	단일 국호하에 가입
7·4 공동성명의 해석	자주	주한미군철수	남·북간의 직접대화
	평화	남한의 군 현대화 중지	평화공존
	민족대단결	남·북한 제정당회의 및 정치적활동 자유보장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단결

7) 김학준, 「통일정책:지속성과 변화추세」, 이상우의 『북한40년』(서울;을유문화사,1989),pp.556~557.

(4) 제5공화국 시기의 통일논의

1) 남한의 통일논의

10·26사태이후 남·북한 사회에서는 신 정치질서가 형성되면서 통일에 관한 논의와 협상도 이전보다 신축성있게 전개된다. 70년대 평화체제의 정착과 교류의 확대가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하에 정치적 노력을 등한시켰던 남한정부는 비정치적 교류뿐만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의 ‘통합의지’가 통일에 중요한 요소라는 신기능주의적 인식⁸⁾하에 ‘정상회담제’ 및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안을 1982. 2. 1에 ‘20개 시범 실천사업’을 제안하게 되지만 북측의 정치적인 비난과 공세로 그 활로를 찾지 못했다. 북한은 1983. 10. 버마 랑군 테러사건으로 자신의 국제적 이미지가 악화일로에 있던 북한은 1984. 9. 남한의 ‘수재’를 기회로 삼아 일련의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활발한 남·북한간의 통일논의가 있었지만 2~3년 주기인 ‘평화사이클’의 극소점인 1986. 1. 20.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난하면서 대화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2) 북한의 통일논의

남한이 안개정국에 쌓인 최규하 정부시절, 북한은 일련의 남·북대화를 재개하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무산 되었다. 남한의 정치적재편과 관련해 북한은 1980. 10. 10 조선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을 공식적후계자로 지정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안하게 된다. 인구가 남한의 1/2, 경제력은 1/10밖에 안되는 북한이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연방제는 분명히 북한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북한이 제시한 ‘10대시정방침’도 북한에게 수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것이라는 기대치가 저변에 깔려 있다.⁹⁾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대한민국 반공체제의 철폐, 당시 전두환 정권의 퇴진후 민주세계의 정권획득후 대화

8) 박순성, 전게서,p.103

9) 고병철, 「남북한 통일방안의 절충가능성 모색」, 최명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p.232.

라는 남한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논리만을 전개해 이는 상황에 맞게 통일논의를 해온 북한의 ‘남한적화통일노선’일 따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해주는 것이다.

이후 남한과의 ‘통일설전’을 거듭해온 북한은 ‘버마 랑군 테러사건’으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술한 바와같은 논의를 하게되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6공화국 정부와 접하게 된다.

(5) 제6공화국 이후의 통일논의

1) 남한의 통일논의

경제·사회·외교적인 역량면에서 대북우위를 완전히 굳히게 되는 88년 이후, 남한의 통일논의는 이제와는 달리 수세에서 공세로(남한), 공세에서 수세로(북한)전이 되는 커다란 변곡점이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노태우정권은 국내의 ‘민주화·통일운동’을 어느정도 ‘제도권’에 반영하고 북방정책의 결실과 맞물려서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7·7선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하는 등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개방화·국제화를 지향하면서 활발한 통일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개방화된 자세에서 대북한과의 활발한 접촉을 전개하게되는데 ‘남북고위급회담’, ‘체육회담’, ‘경제회담’등 제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게된 결과 1991. 12월에 ‘남북한간에 대화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남·북한 관계가 급격히 경색화되어 1994. 6월에는 ‘전쟁위기론’까지 대두하였다가 미국의 특사가 남·북한을 경유하면서 북측의 정상회담제의 남측에게 전달한 결과 남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이 이루어졌다. 남·북이 긴장이 완화된고 통일의 초석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서, 김일성의 급사와 더불어 남한내에서의 ‘조문파동’은 다시 남·북 관계를 경색화 하기에 이르른다.

2) 북한의 통일논의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원조를 1991년부터 중단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사정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특히, 남한의 북방정책의 추진결과 구소련과 중국과의

단독외교관계수립은 북한에게 커다란 정치·경제적 위기의식을 주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통일되자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남·북공존’을 이시기에 있어서 매우 강조하게 되고, ‘고려민주연방국’안도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차원에서 ‘평화공존적’인 측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장으로 나오게 하여 전술한 바와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내용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불신의 게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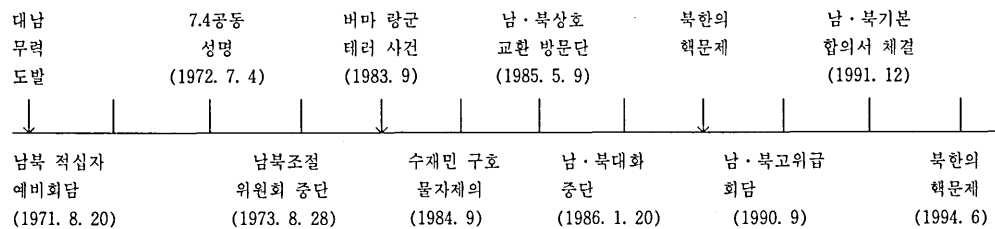
2. 남·북한 통일논의의 분석

남·북한간에 있어서 논의된 통일안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속 내용없는 것’을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그간에 있어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 통일론은 사실상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있을뿐 ‘숨은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해방직후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통일안을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1) 남북대화의 대화 사이클의 분석

7.4공동성명이후 시작된 남·북대화의 주기는 일종의 사이클(대화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 하자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남·북대화의 대화주기



1차주기의 시발은 북한이 60년대에 실추된 국제지위를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남북한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데(1971. 8. 20), 1973. 8. 28에 남한의 정치상황을 핑계로 1차주기가 종료된다. 2차주기의 시발은 '버마랑군 테러사건'으로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수재민 구호물자(1984. 9)를 제의하면서 시작되는데 극소점인 1986. 1. 20. 팀스피리트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금 남북대화가 단절 되었다. 3차주기의 시발은 북한의 핵문제가 서서히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1991. 12) 등의 극대점을 이루다가 1994. 6월을 전후하여 다시금 대화가 중단 되었다.

(2) 남북한 대화의 게임이론적 분석

이와같이 남·북대화가 추진되면 2~3년간의 일정한 '대화사이클'이 존재하다가 다시금 경색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게임전략에 입각하여 대화의 장에 나온 남·북한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를 참조로 하여 이러한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일전략의 보수행렬

경기자 2(북한)

		L	R
경기자 1(남한)	U	(2, 2)	(5, -1)
	B	(-1, 5)	(1, 1)

경기자1의 대화전략(U), 강경전략(B)

경기자2의 대화전략(L), 강경전략(R)

먼저, 경기자1이 U를 선택하여 경기자2에게 제시할 때 경기자2가 R의 전략을 택할 시 경기자1이 얻는 게임의 보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L의 전략을 취하게 되어 상호간의 대등한 UL의 보수행렬이 조합된다.(상호간의 부분적인 이익이 하비된 경

우 이므로 이때에는 대화사이클의 존재) 그러나, 경기자2가 이러한 합의점을 깰 경우 BL의 보수행렬이 조합되는데(예를 들자면, 한국전쟁전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 후 전쟁도발) 이때 경기자1이 단시간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게 되지만 경기자1이 신속하게 B의 전략을 취하게 되어 결국에는 BR의 대치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남·북한간 양쪽 지도자들사이에서 서로 담합하여 BR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비대화 국면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반복 되어온 것이 남북한간의 통일논의 인데 상호간의 암투를 벌리면서 일정한 대화 주기에 나서는 이유는 5의 보구값을 얻기 위한 양측의 은닉된 계산이 일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민족적 동질성에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필연적 과제를 설정하고 융화될 수 없는 남북한의 양극적 이념 체제상에서 솔한 통일논리를 제시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서로는 반대, 비난, 거부로 일관 해옴으로써 통일에 대한 시각의 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족적 이질성은 가중되어왔다¹⁰⁾

Ⅲ. 남·북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1. 남·북한의 통일교육의 변천

(1) 남한의 통일교육의 변천

1) 제1공화국의 통일교육

해방직후 좌·우익의 대립은 심각 할 정도 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반공정책을 펴지 않았으며 좌우정당의 난립을 인정하는 실정이었다. 심지어 미군정하에서 한국인 만

10) 신순철, “통일에 대한 인식 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51

으로 이루어진 한국교육위원회나 교육심의회에서도 대공이론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다.¹¹⁾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공산주의에 대하여 경계·주의 정도의 방어적 측면의 ‘반공교육’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어 반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서 앞에서 고찰 한 바와같이 ‘북진통일론’등의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수준의 통일교육이었으며 ‘평화통일교육’은 이 시기에 있어서 금기시 되었다.

2) 제2공화국의 통일교육

민주적 혁명에 의거하여 수립된 민주당 정권은 당시 재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통일론’을 적절하게 민주적절차에 의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종전과 다름없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을 교육 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반공교육’을 강화 하였다. 따라서 일반의 요구와 정부의 의사와는 심각한 괴리 현상이 발생 하여 ‘반공교육’은 사실상 무의미한 정도의 수준 이었다.

3) 제3·4공화국의 통일교육

반공정책을 국시로 내건 군사정권을 제2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적극화된 ‘반공교육정책’을 전개 하였다.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반공도덕 교육을 강화하였고, 동시에 초·중학교에서 교과교육과는 별도로 반공도덕 시간을 특설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의 「일반사회」와 「국민윤리」, 「정치·경제」에서 반공 도덕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반공교육과정이 처음으로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¹²⁾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절대적인 적대세력으로 간주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였으며 북한과의 대화상대로써 인정하지 않은 결과 평화 통일 논의 자체가 엄격하게 금기시 되었으며 오직 「선건설·후통일」의 원칙아래 경제적 역량으로 국민을 동원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였다. 1970년 이후 남북한간의 일련의

11) 정영수의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 (서울;한국교육개발원,1986),p.64

12) 정영수의, 전개서, p.65.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반공 안보 교육 강화의 고삐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1971년 12월 6일 이후 유신체제 출범후, 멸공 통일 교육으로 더욱더 압축된 반공교육은 3차 교육과정에서 이성적 차원을 떠나서 감정적 차원의 반공 교육을 하여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증오의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북한의 통일정책의 무조건적 비판, 남한의 통일정책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였다. 7.4공동성명의 발효를 국내·외에 발표하고서도 반공교육은 종전과 다름이없고 오히려 더욱 강화 하여야 한다는 당시 문교부 당국의 지시는 정형적인 책임자의 ‘자기 지키기’의 형태이며 당시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이익의 계산에 따른 ‘위기의식’의 조작에 불과하다는 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4) 제5공화국의 통일교육

신기능론적 시각하에 정치적 접근을 시도하였던 제5공화국 정부는 4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반공교육 일변도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해 통일·안보 교육으로써 외형상의 탈바꿈을 하였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시기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반공교육의 체계적인 지도를 강조하게 되어 교육내용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게 되어 기존의 적개적인 어휘를 상당히 순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 하였고, 북한에 대한 비판과 남한의 통일정책의 홍보등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국내정치의 혼란상황과 더불어 ‘신좌경세력’을 통일의 적으로 간주하여 내부적 위기감을 고조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5) 제6공화국의 통일교육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의 완전한 장악,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 남북 관계의 가히 획기적인 변화는 기존의 반공교육이 중심으로된 통일교육으로써는 탄력성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제6공화국 정부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4차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수정을 하게 되고 북한도 남한의 일부이며 한민족의 공존의 적대관계에서 ‘동반자적인 관계’로써 인정하여 활발한 교류·협력을 펼쳐 나가는 등 기능

론적인 접근을 계속하게 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기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기존의 분단지향적인 성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진보된 통일 지향 성격을 내포하는 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표4. 남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시기	구분	통일정책	목표 및 내용	개편과정상의 특징	시대상황
· 반공교육기(해방이후~60년대) -북한 불인정 -대화없는 대결		·북진에 의한 무력 통일정책 ·UN감시하 남북총선거 제의 ·신건설 후통일의 원칙	·반공·방일의 사상 함양 ·민족적 독립의식의 강조 ·별공구국 정신함양 ·반공의 제1의 국시로 함 ·도덕교과중 반공 교육 강화	·교수 요목기 -각 교과교수내요의 주 제만 열거 ·사회생활과 탄생 -防共教育期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중심 교육과정 -도덕교육강조 -별공통일기 ·제2차 교육과정기 -교과활동+반공도덕+특별활동 -반공교육기	·광복 (1945.8.15) ·한국전쟁 (1950.6.25) ·학생의거 (1960.4.19) ·반공교육공포 (1961.7.4)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8.12.5)
통일안보기(70년대) -북한인정 -대화있는 대결		·평화통일외교선언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개방) ·평화통일 3원칙 천명 (평화정착, 신뢰회복) ·단계적 점진적 통일정책	·소극적 반공교육에서 적극적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인식 ·국력배양과 총화 단결로 평화적 통일기반조성 ·안보교육	·제3차 교육과정기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도덕과 신설 -반공교육기	·남북공동성명 (1972) ·유신(1972.10.) ·평화통일외교선언 (1973.6.23) ·평화통일3원칙 (1974.8.15) ·10.26사건 (1979.10.26)
·통일·안보교육기 -공존, 동반자로 인정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7.7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교육 ·북한공산당 경계 ·민주주의 우월성 이해 ·국토분단과 북한 실상이해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 비판	·제4차 교육과정기 -국민정신교육 -평화통일교육기 ·제5차 교육과정기 -도덕과의 통일·안보교육영역의 설정 -통일·안보교육기 -통일교육을 지향함	·광주민주화항쟁 (1980) ·제5공화국 (1981) ·6.29선언 (1987.6.29) ·제6공화국 (1988)

자료 : 한정도, 「90년대 통일교육의 방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38~39.

(2) 북한의 통일교육의 변천

북한의 통일교육 변천은 북한의 로동당 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로동당 대회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통일교육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조선 로동당 창립이후 북한의 정치지도 이념 및 당면 목표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자면 표5와 같다.

1) 로동당 제1, 2차대회이후의 북한의 통일교육

로동당 제1차대회 이후의 북한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하는 정치사상을 표방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소련 사회주의를 모방하는 단계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는 문명퇴치와 식민지 교육의 잔재 숙청, 공산이론의 보급에 주요 목표나 내용을 두었으며¹³⁾ 또한 반미·반일 사상을 강화 하였다. 로동당 2차 대회 이후로도 실제적으로 1차대회이후의 교육정책과 대동소이 했으며 ‘무력적 화통일’이 당시의 주목표 였기 때문에 남한의 정권과 미국을 원수로 여기게 하여 집단 의식을 강화 하였던 시기이다.

표5. 북한 로동당의 지도이념 및 목표의 변천과정

규약	지도이념	당면목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46.8)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북조선로동당 2차대회(48.3)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조선로동당 3차대회(56.4)	마르크스-레닌주의+조선인민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전한반도)
조선로동당 4차대회(61.9)	마르크스-레닌주의+항일무장 투쟁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발전(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전한반도)
조선로동당 5차대회(70.11)	마르크스-레닌주의+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 승리(대내) ·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전한반도)
조선로동당 6차대회(80.10)	주체형 마르크스-레닌주의+김일성 혁명전통 +김일성 주체사상	·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 공산주의 사회건설

주 : 황정규외, op.cit,p.19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 하였음.

13)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서울;주류, 1988),p.388.

2)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의 북한의 통일교육

소련의 것을 철저히 모방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고취시켜 나갔으며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북한에 접목시켜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인민들의 사상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이다.¹⁴⁾

한편 당내 반대파 숙청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열린 노동당 3차대회에서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외에 조선인민의 혁명 전통사상을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선건설·후통일의 원칙하에 경제복구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반제·반봉건의 민주주의 혁명을 남한지역에 완수하기 위한 자책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에 따라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3) 로동당 제4차대회의 이후의 북한의 통일교육

제4차 로동당 대회에서 김일성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새로이 채택한 로동당은 북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육과 생산노동이 결합된 새 인간육성, 일반지식과 더불어 기술교육의 강화, 혁명 전통 교양의 강화, 문화혁명 수단으로써의 성인교육 강화,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천리마운동’의 강력한 추진과 학생 의무 노동제의 엄격한 준수, 그리고 학원에 대한 당 지도의 강화를 통한 교원 및 학생들의 당성 교양등을 채택하고 강화하였다.¹⁵⁾

4) 로동당 제5차 대회 이후의 북한의 통일교육

1970. 11월 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부각되기 시작 하였는데 이에 따른 교육의 기본원칙과 정책노선이 변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그들에게 감정적·비논리적인 교육을 시키고 특히, 남한에 대한 왜곡된 사실인식, 적개심을 고취하여 부자세습체제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로 만들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1977. 9월에 발효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주체사상의 교육이 더욱 체계화되고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최은수,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일에 단계적 과제”, 『숭실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편』 23편, 1993,p.275.

15) 안진태, “북한의 취학전 아동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pp.17-28.

5) 로동당 제6차 대회 이후의 북한의 통일교육

1980. 10월에 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된 조선 로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공식 선언 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이념임을 밝히고 있다.¹⁶⁾ 이대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혁명적 영수관이라는 후계이론과 더불어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 되면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김정일의 주도하에 통일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더욱더 강화된 폐쇄체제의 모습으로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남북한의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의 분석

이상과 같이 남북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양 체제의 이념과 이에 따른 정책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1) ‘제도화된 사고구조’내에서 통일 교육

교육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작업으로써 체제에 담을 내용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체제는 교육의 외적 환경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이때에 사회체제의 변화란 정치·행정체제, 경제·재정체제, 사회·문화체제 등을 포괄하는 뜻에서의 광범위한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¹⁷⁾ 남북한의 통일교육은 바로 이러한 체제의 변화속에서 변하지 않는 일종의 ‘제도화된 사고구조(institutionalized thought structure)’가 항상 존재하여 왔다. 여기서 ‘제도화된 사고구조’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가의 정책행위의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사고범주의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이념적 내지 철학적 사고의 틀을 말한다.”¹⁸⁾ 바로 이러한 ‘제도화된

16) 황정규외, 『북한교육의 조명』(서울;법문사, 1990),p.19

17) 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서울;교육과학사, 1989), p.825

사고구조'는 남한의 통일교육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수신의 국가관, 지피지기의 경제적 안보관 등 감정위주의 이념교육, 가치편향적인 반공교육등에서 인식할 수 있으며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의 혁명전사로서 양성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서 인식 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모두의 통일교육정책은 상호간의 경계심 고취와 자기가치의 우월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상호간에 민족동질성 의식을 파괴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이에 의한 통일, 북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상을 통일교육관에 투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표6과 같다.

(2) '딜레마'속에서의 통일교육

분단국가 성립후 남북한 모두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였고 그러한 통일교육을 받은자가 기성세대가 되어서 남·북한 사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현시기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으로써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오히려 불신·갈등·이질감의 파장이 훨씬 커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통일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민족동질성이 거의 파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도화된 사고구조와 갈등론적 상황을 헤치면서 통일교육을 해야만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표6. 남북한의 교육이념, 목적 및 목표비교

구분	남한	북한
교육이념	홍익인간	공산주의적 새인간
교육목적	·민주구가 발전의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사회의 실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의 양성
교육목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전인민의 혁명화 ·전인민의 노동계급화 ·전인민의 공산주의화

자료 : 윤성한, “통일, 그리고 통일안보교육” 『북한』, 1993, 1월호, p.125.

18) 최은수, 전계서, p.275

Ⅳ. 현 단계에서의 남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

1. 통일에 있어서 교육의 의의

분단 50년동안에 우리는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이면서도 머나먼 이국의 존재, 그리고 설새없는 적대감이 서로를 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독일이 통일전 20여년 전부터 상호교류하였으면서도 동서독간의 교육공동체 형성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해 통일 후 매우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 할 때, 우리가 통일 교육을 중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형성함과 동시에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고통과 갈등, 혼란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있다.¹⁹⁾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교육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기능을 배양하고, 민족 공동체의 공감대적 가치질서 의식을 고양하여 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혼란을 최소화 하여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총체적 국면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²⁰⁾

19) 추병완, “한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1992.6월호, 통권 452호,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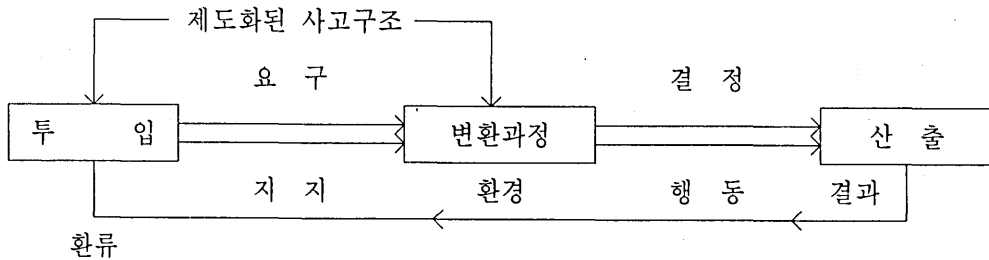
20) 통일원,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서울:통일원,1993),p.4.

2. 체제론적 접근 모형하에서 현 통일교육의 문제점

(1) 체제내적 측면의 문제점

1) 내적심리 측면의 문제점

그림2. 통일교육에 있어서 '제도화된 사고 구조'의 투입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통일교육체제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가 '제도화된 사고구조'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일종의 잠재적인 내면가치가 투여 되어 통일교육에 투사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체제론적에서 도식화 하자면 그림2와 같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체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지지와 요구만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사고의 한계등이 교육체제에 있어서 투입 그리고 전환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도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제도론적 측면의 문제점

남한의 정부가 통일에 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등의 일련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에 적합한 법·제도적인 측면은 반공이데올로기 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에 남·북 대립 구조 속에 있으므로 인해 일선 교사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사권의 위축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통일에 관한 공감대적 가치질서형성에 있어서 선불리 어떤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남한의 경우 북한과는 달리 세대간, 계층간에 매우 다양한 통일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룬 통일관의 도출을 위한 광범한 토론의 광장을 아직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주도로 결정되는 한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의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제시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¹⁾

(2) 체제외적 측면의 문제점

최근에 와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남한에게 많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작금에 와서 한반도 상황을 구한말에 비유하는 것은 그 만큼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외교정책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극적인 진전이 이루어 진다면, 그들의 명분이 퇴색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은 반일적 성향을 지니거나 경쟁국가로 될 가능성이 있는 통일 된 한국보다는 오히려 분단된 한반도가 일본 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한반도 사태의 현상유지를 암암리에 원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 통일을 그들의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계속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²⁾ 특히, 내적환경인 동시에 외적환경인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통일교육의 확실한 비전과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Alexandrian complex' 환자인 김정일은 자신에게 불리한 외교적 역량을 '핵무기 카드'로써 대응할 것이며, 자신의 전 시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예측불허의 대내외관계를 전개할 수도 있다.

(3) 현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체제 내외적 변화에 부응하여 전향적으로 통일, 안보 교육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러한 방침이 교육현장에서 실시 되기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

21) 정세구,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교육월보』 통권 123호 1992.3월호, p.29

22) 임용경, "함께 사는 통일을 위한 북한 교육", 『새교육』 통권476호, 1994.6월호, p.104.

고 있다고 생각한다.

1)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의 미설정

통일의 명확한 지침,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 교육의 지원 관리체제등이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²³⁾ 또는 통일 교육 과정자체의 체계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어있고,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침서의 내용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진행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다양하지만 주요한 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형성미흡
- ② 통일 교육의 체계적 연관성의 부족—유아기에 있어서 교육부재
- ③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만 부각—폐쇄적 통일 교육의 초래
- ④ 한정된 과목에서만 통일교육—반복학습에 의한 학습의욕, 상실 단기 암기 과목식의 교육방법
- ⑤ 통일 이후의 대비에 대한 무관심

2) 감정적 교육

기성세대의 자기 방어적 본능에서 형성된 반공 사상의 전달교육으로 일방적 적개심과 분노심 그리고 경계심을 유발 시키는 학습 방법이다. 호기심이 많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유발을 하지 못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파괴하고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 줌으로서 통일 교육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통일 저해의 독소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의 결여
- ② 통일 문제에 대한 반심과 통일 문제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적 사회적 기능의 도외시

23) 추병완, “학교 통일 교육의 개선 방향”, 『새교육』 통권 452호, 1992.6월호, p.174

- ③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
- ④ 민족적 동질성의 파괴 및 장애의 요인
- ⑤ 북한의 실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저해—동정심 유도 수준의 교육
- ⑥ 통일 교육이 반공 교육의 하위체제로 전락

3) 이분법적 통일 교육

통일 교육이 전개되지 못하고, 북한의 통일 정책, 안보 문제(반공, 승공, 멸공 교육), 북한의 실상만을 교육하다보니 정권 교체시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무조건 암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양심상 저촉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자니 실정법에 저촉됨으로써 우리의 통일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마저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다.²⁴⁾ 이러한 흑백논리적 교육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남한의 통일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교육—우월성의 논리→이질감의 형성화
- ② 이념 교육의 문제 무조건적 자유 민주주의 우월성 강조
- ③ 통일 교육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반공 교육논리의 견지
- ④ 동반자적 관계를 파괴하고 북한을 열등 관계로 인식하게 하면 부정적 경계의 대상으로 부각시킴

4) 객관성의 결여

과거 반공교육만을 강조했던 시기에는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하는 것이 주 목표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의 이용도 어느 정도 허용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의 정보 접근이 용이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관적이지 못함은, 특히 북한의 실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인 북

24) 추병완, 전계서, p.175

25) 추병완, 전계서, p.176

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저해
- ② 민족적 이질감의 심화
- ③ 통일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 및 불신야기
- ④ 왜곡된 통일관 및 통일국가에의 편승 위험
- ⑤ 통일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우려

5) 교원자질 향상의 문제

현실에 맞추어서 통일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때,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교사들이 소신있고 명확한 가치의식의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 질서하에 형성된 통일 논의의 부재, 통일교육 방향의 패러다임의 부재,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 활동의 부족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①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전달의 저해
- ② 형식적이고 단순한 통일교육
- ③ 교사들의 통일교육 의욕저해
- ④ 통일국가 형성과 통일 조국의 미래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의 미형성

6) 탄력성의 결여

통일을 둘러싼 체제 내외적 환경 변화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탄력적인 반면에 이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은 7, 80년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 협력의 시대에 있어서 비탄력적이다. 특히, 통일의 문제는 국제화, 다양화(다원화)의 차원에서 탄력성있게 대처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통일교육의 기저에는 냉전시대의 반공의식이 투사되고 있는 바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탄력성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3. 통일 전·후의 서독의 통일교육이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

구서독과 동독은 1973년 양독간 ‘기본조약을 맺어 상호교류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서독의 경우에 있어서 분단을 체험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간에 분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독일 문제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에서 기본조약, 베를린의 법적 지위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감정적인 반공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한 제반활동에의 참여의지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서독 정부는 민족분단의 실상과 동질성을 회복하여 이상과 분단을 극복하려는 구체적 노력이 교육을 통하여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실은 1978년 서독의 11개 주 문교장관들이 서독 연방정부의 교육, 학술부가 독일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서독이 이 조항에서 첫째, 독일 통일 문제를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넣어 주려고 하였다는 점, 둘째, 동서독의 어느 편도 상대자의 기본적인 이해가 포기되거나 종속되는 상황은 생각할 수 없고 굴복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점, 셋째, 민족의 개념을 통하여 독일 통일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한점, 마지막으로, 독일 분단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게 함과 동시에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독만이 독일 정체가 아님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통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²⁸⁾ 이러한 통일교육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가시적인 성과물이 뒤따랐다. 통일이후에도 구서독의 교육이념과 체제로서 통일독일의 교육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통일독일의 건설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V. 신 통일교육 모형하의 통일교육의 방향

이상과 같은 통일 교육의 문제점의 검토, 체제외적 환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정

26) 김태완, 전계서, p.42

27) 신동철, “독일의 통일교육과 교육통합 정책”, 『교육월보』 통권 제123호, 1992.3월호, p.66

28) 정세구, 전계서, pp.20-30.

책 시사점을 파악함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어느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신 통일 국가의 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방향 정립을 세우고, 이에 따른 통일 교육의 모형하에서 신 통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 통일국가의 방향

제Ⅱ장에서 남 북한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통일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명분론적 통일에 불과 하였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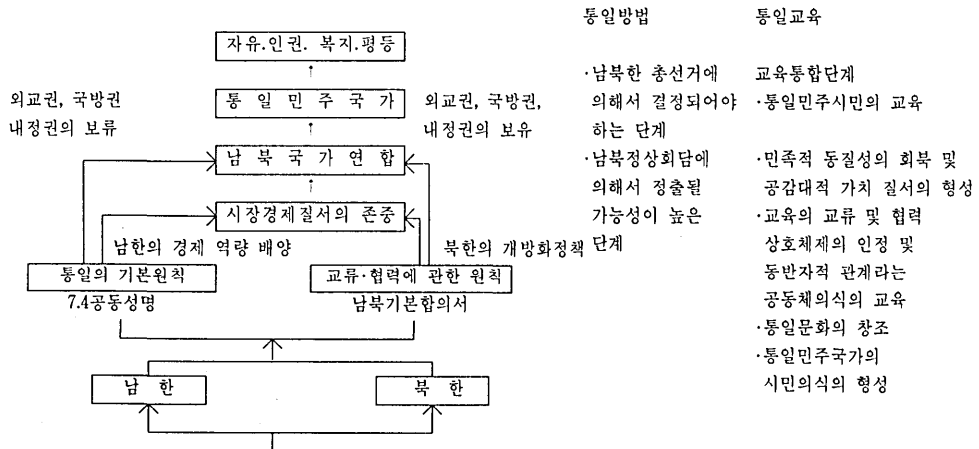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합의점을 도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적인 통일국가의 이념을 설정하여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기능론적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통일의 접근 난이도 실현도에 따른 통일국가의 모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부구조로부터 서서히 통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적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이과같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절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²⁹⁾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조종단계에 들어온후 그안이 구성하는 연방과 한민족 공동체안이 제시한 남북연합간의 거리가 현저하게 단축 되었으며 둘째,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절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에 와서 기본합의서 7.4공동성명등이 휴지처럼 되어버린 실정이다. 그러나, 이점은 통일의 실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국가의 모형을 제시 하자면 그림3과 같다.

지금까지의 남북의 관계가 단절 되어 왔지만 7.4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경제질서’-이 문제는 통일전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양자의 이익이 합치될 수 있는 공통분모이다. -를 교류·협력의 기반(경제적 접근의 수렴)으로 하여 남북한이 최근에 와서 그 견해가

29) 고병철, 전제서, P.242

수렴하는 방향이 남북국가연합의 방향으로 정치적접근이 수렴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유의 해야 할 것은 남북한 각각에게 외교권, 국방권, 내정권등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통일 의의 가시적인 형상을 구축한후 이에 따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그림3. 신 통일 국가의 모형



2. 신 통일교육의 모형

(1) 신 통일 교육의 일반적 개념의 정립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분단지향적'인 의미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통일추진에 있어서 역효과의 결과를 산출했다. 남한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소극적이면서도 자기방어적인 교육을 아직도 시행하는 것 같다. 따라서 향후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역할의 강조, 통일 조국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의 형성,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배양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개방적, 합리적, 평화적인 자세를 견지 할수 있는 가치관의 형성, 남북한을 단일권으로 하는 공동체적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형성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감대적 가치질서 파괴의 제반 현실적인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같은 일반적

개념의 모형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가시적인 효과/설득력)부터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하고 통일교육의 문제는 교육계에만 국한된 문제영역이 아니라 체제내·외적 환경에서 통일주체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 통일교육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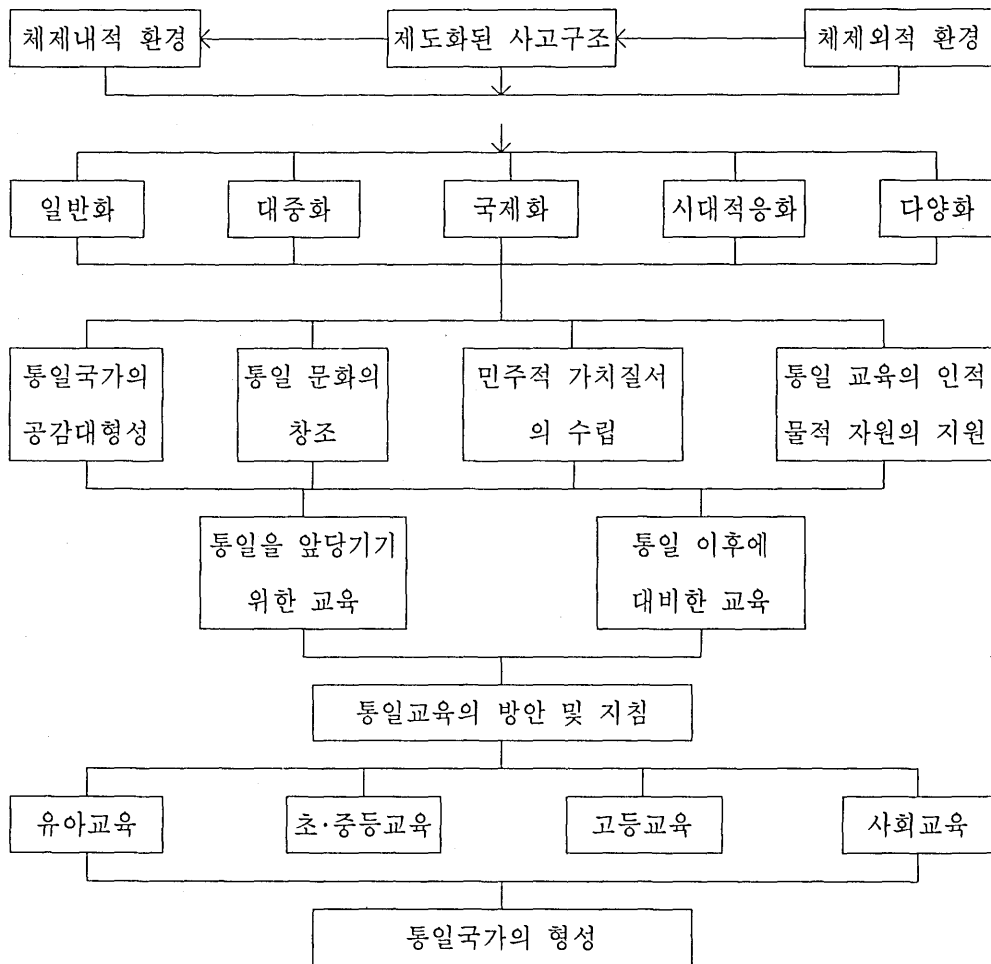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효과의 극대화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남북한 양자의 통일안의 절충가능성을 가정하여, 신 통일국가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신 교육통일 모형은 그림4와 같이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 통일교육 모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 양측의 통일론이 수렴 될 수 있는 국가연합단계—이 단계는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현재의 통일교육의 출발선인 동시에 형성과정이다.—로서 설정 할수 있는데 국가연합 단계에서 수행 하여야 할 주요과제는 ‘제도화된 사고구조’를 혁파하고 ‘민주시민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교육의 문제는 신뢰감의 회복, 통일준비 운영능력의 배양, 통일 조국의 건설능력의 배양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문화의 창조, 민주적 가치질서의 수립, 통일국가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형성, 통일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등을 거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밑거름 하에서 체제내·외적 환경에 유효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면은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일관적 이면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민족사회의 통합교육, 정치·경제 체제 등에 있어서 정치교육,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국제화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복지교육, 사회교육의 확대, 교육기회의 확대등의 제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남한내에서 먼저 성숙하게 정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인 지침하에 유아 교육에서 부터 통일교육을 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교육까지 연관성 있게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3. 신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는 첫째, 학교 통일

교육위 강화 둘째, 통일에 대비한 교육체제의 발전 세째,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의 추진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등이 주요한 정책적 과제이다³⁰⁾.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학교 통일 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토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4. 신 통일교육의 모형



30) 박재윤,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교육개발』 통권 82호, 1993, 2월호, PP.71~74.

미래지향적, 체계적인 논리가 바탕이된 통일교육으로써 통일의 준비과정에 있어서 동화·통합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거시적 측면의 고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은 동태적인 사회변화를 수용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의 배양, 민주적 가치질서 하의 민주통일시민이 될 수 있는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 국가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형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력병’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치질서인 통일관을 투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교육의 비왜곡적 현상도 문제이지만 분단의 고착화로 통일의 불필요성, 무감각의 형태도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저해요인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가치질서 추구의 동화과정의 교육

조국 분단 원인, 배경에 관하여 객관적 역사 사실에 입각하여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국제 이해 관계의 대립과 긴장관계의 이해의 토대하에 우리민족이 민족적 자결주의를 왜 추구해야만 하는지, 조국의현실을 직시한 후에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의 당위성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며 민족적 동질성 이외에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2) 가치질서 형성과정의 교육

객관적 조국현실의 이해하에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면 해방 직후 현재까지 논의된 통일정책의 허와실을 면밀히 파악한후에 통일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교육시켜 합리적 통일국가 형성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 이때에 다양한 통일논의를 비판적으로 수렴하여 통일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사고 교육이 필요하며 통일의 준비과정·통일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위기적 관리의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치질서의 외관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면 통일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통일국가

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 시켜야 한다.

(2) 통일 문화의 창조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려면 그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사회적계기'가 필요하다. 통일에 있어서도 하나의 문화적 가치질서의 수립이 긴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다. 통일문화의 창조는 통일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국가의 문화적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남북구성원이라는 공감대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계기

분단의 현실은 50년, 한민족의 문화의 현실은 5,000년 인 것을 감안 할 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전통·문화를 인식하여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민족적 공동체라는 의식이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교육시켰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조성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이라는 명칭하에 교육이라는 것을 시키고 있지만 비교우위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동일한 결과만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의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남북한이 같은 공동체적 사회에서 함께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임을 인식 시켜야 한다.

2) 남북한 문화의 동화적 계기

문화의 동화적 계기를 이룩하고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동화과정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문화적 동화과정은 점진적인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이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교육해야 한다. 문화적 동화과정의 궁극적인 가치는 자유, 인권, 복지, 평등의 보편 타당한 원칙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민주적 가치질서의 교육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할때, 남북한의 이질적인 가치구조 때문에 정책경

정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민족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는 절차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민주적인 생활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남한의 이데올로기와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후에 있어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해낼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질서의 동화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의 일반화 및 대중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면 통일교육에 있어서 수많은 민주적 동화과정을 통하여 ‘통일국가’라는 원대한 이상에 점진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다.

(4) 통일 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이상과 같이 통일교육의 방향에서 대해서 동화론적 의미에게 제시 하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향이 동화과정을 통해서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구체적 산출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 현장 교육에서 지도하는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연수와 동화적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사들이 교육의 현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학생들 대부분이 오디오, 비디오세대)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실습자재가 필요한데 예산배분에 있어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면이 이루어 지기 힘들었다. 입시위주의 주입식적교육,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굳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통일의 비용이 점점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결 론

‘갈등상황’에 있으면서 ‘자기위치’를 굳히려고 하는 남북한의 모습은 통일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있어서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궤도의 방향선택이 잘못 되어졌기 때문에 궤도이탈을 하여 ‘왜곡된 통일관 및 사고구조’에 편승된 부류들이 통일지상주의, 감상론적 통일론에 심취하여 객관적·합리적인 통일 추구보다는 급진적·감정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왜곡된 정치사고구조’에 기초를 두면서 통일을 추구 한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로한 왜곡된 성향의 책임은 그간 반공교육, 비교우위론적 체제 우월성 교육이 그 결과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교육이 역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라는 문제인식하에 교육계에 있어서 통일교육에 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 문제 인식의 출발 이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범위를 해방후 현재까지 이르는 남북한간에 논의된 통일론, 통일정책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통일교육을 고찰하고 체제 내·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신 통일교육의 방향을 전개 하고자 하였다. 우선 II 장에서는 해방후 현재까지 남북한간에 논의된 통일론을 공화국 시기별로 심도있게 고찰 하였는데, 이러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의 내막에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려는 ‘갈등론적 경쟁자’의 모습에서 그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대화주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인을 게임모형에 입각해서 분석하였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언급한 통일정책의 하부체제인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심도있게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변천의 과정에는 일종의 ‘제도화된 사고구조’범위내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결국 통일교육의 진정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이질감을 심화 시키고 민족적 동질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딜레마’에 빠진 통일교육의 형태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IV에서 체제론적 접근 모형하에서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체제 내적 측면의 문제, 체제외적 측면의 문제점을 조명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통일교육의 공통된 패러다임이 미설정되어서 초래된 문제점들 둘째, 감정적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들 셋째, 이분법적 통일교육에서 초래된 문제점들 넷째, 객관성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다섯째, 교원의 미흡한 자질에서 파생된 문제점들 까지

막으로 환경과 투입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과생된 탄력성의 결여의 문제점들을 세분화하여 고찰 하였다. 우리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타국에서 시행되었던 통일교육이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통하여 신 통일교육 모형 정립의 '인식의 틀'로서 준거 하였다. V에서는 우선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남북한의 통일논의에서 가장 근접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주의 연방 공화국의 1991년 수정안'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신 통일 국가의 모형을 설정 하였다. 이러한 국가모형의 점진적인 발전단계에 부합된 통일교육의 모형을 통하여 '제도화된 사고구조'를 배경하고 체제내·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모형하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먼저, 통일국가에 공감대 형성 둘째, 통일문화의 창조 셋째, 민주적 가치질서의 수립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인적·물적 자원들의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주맥은 갈등론적 상황의 측면에서 통일정책, 통일교육의 모형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구축 방향'으로써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남북한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통일'의 방향으로써 문제해결보다는 대결과 대립의 자세로서 정책이 형성 되어왔는데, 만형(남한)된 입장에서 동생(북한)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형태는 1990년 이후에 그나마 구축한 '통일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의 가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이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준비를 위한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수립이 길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준비를 위한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수립이 요청되는바, 그러한 가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것은 가치통합의 '사회적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국가의 가치질서의 모형수립 현상황에서 논의되는 통일론을 국민적 지지와 의견이 수렴된 통일국가 모형의 확정을 위해 국민투표 실시가 요구된다. 이와같이 설정된 가치질서로 교육대상을 동화론적 입장에서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인식하에 통일교육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형성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통합과 과정을 위해서 우리모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의 ‘공감대적가치질서’ 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 통일문화의 창조등의 방향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민주적 가치질서에 교육대상자를 동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못하면 그 어떠한 통일을 위한 논의가 제시되더라도 그 것은 또 하나의 통일을 저해하는 반가치질서임을 우리는 유의 해야한다.

大學生統一論文集

1994年 12月 23日 印刷

1994年 12月 30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印刷所 강문인쇄사

<非賣品>

